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문학박사 학위논문

점령기 미군정의 공보 활동과 선전 담론

-미군정 발행 주간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朴 修 賢

점령기 미군정의 공보 활동과 선전 담론

-미군정 발행 주간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鄭 容 郁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차 修 賢

朴修賢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 위 원 | · 장 · | H | 7 | (21) |
|-----|-------|-----|------|---------|
| 부위 | 원장 | To. | 要号 | (a) (b) |
| 위 | 원 | 9 | Limi | John F. |
| 위 | 원 | 1 E | 分 | (2) |
| 위 | 원 | 한모니 | 17 | |

점령기 미군정의 공보 활동과 선전 담론

-미군정 발행 주간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박수현

본고는 미군정기 점령 당국이 발행한 주간(週間) 신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군정청 공보부(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가 발행한 《주간신보》 와 《농민주보》,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이 발행한 《세계신보》가 미국의 대한(對韓)정책과 한국의 국가 수립 문제를 어떻게 선전했는지 그 선전 담론을 추적했다.

미군정기 공보 정책과 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국의 대한(對韓)공보정책이 미국의 대한정책과 밀접하게 조응하며 변화했고, 남한 현지 점령 당국의 공보 기구와 활동 또한 그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미군정 초기 미국의 대한공보정책은 포괄적인 지침에 머물렀기 때문에, 미군정청 공보부의 활동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홍보하기보다는 남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한국인의 여론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이 미소 협조를 폐기하고 한국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한미 군사령부에 공보원이 설치되었다. 공보원은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국에 관한 선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본고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가 미군정의 공보 정책과 공보 기구 및 공보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밝힌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공보 매체에 나타난 공보 메시지 즉, 선전 담론의 변화를 추적했다. 점령기 전(全) 시기를 통해 미군정이 발행한 신문들이 워싱턴의 정책과 남한 현실을 매개하며 미국의 대한정책을 어떻게 선전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군정이 해방 이후 식민지 잔재 청산과새 국가 건설을 열망하던 한국 사회의 여론을 냉전 인식과 냉전의논리로 재편해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직후의 과제가 탈식민 개혁과 통일국가 수립이라고 생각하던 한국인들이 어떻게 3년 뒤 미소 냉전 하 단독정부의 수립을 실현 가능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냉전'과 '냉전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공보 기구와 매체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개괄했고, 2장과 3장은 매체들에 나타난 공보메시지와 선전 담론을 분석했다. 1장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에따라 미군정의 공보기구가 1947년 5월 30일 이후 공보부와 공보원으로 이원화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1945년 9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 이래 공보·선전 분야에 지식이 없는 직업군인이 미군정의 공보활동을 주도했으나, 공보원이 설치된 후 국무부와 육군부의 정책 지침 아래 전쟁정보국(OWI)의 선전 전문가들이 미군정의 공보활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밝혔다.

1장에서는 공보 기구와 주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주간신보》 《농민주보》《세계신보》의 발행 목표, 독자층, 지면 구성, 발행량과 배포 범위, 기사 주제 등을 분석하여 점령 당국이 해당 신문을 발행한 의도와 매체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분석에 따르면《주 간신보》는 한국 신문들의 논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군정 비판에 대한 대항 논리를 적극적으로 선전함으로써, 도시 독자, 그 중에 서도 특히 서울의 독자들을 민간 신문의 담론으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맡았다. 농촌에 배포된 순한글 신문 《농민주보》는 현안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농가의 말단 농민에까지 전달하고, 농민 계몽에일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보부가 발행한 《주간신보》 《농민주보》가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과 현안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전달하고미군정을 비판하는 담론에 대항하는 성격의 매체였다면, 공보원이발행한 《세계신보》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국제적 대립 양상과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선전하며 독자가 이에 입각해서 한국 문제를해석하기를 유도했다.

2장은 공보부가 발행한 주간신문인 《주간신보》 《농민주보》의 선전 메시지와 선전 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부터 1946년 하반기까지 미군정은 미 국무부 정책과도 괴리를 보이며 점 령통치를 위한 선전에 집중했다는 것을 밝혔다. 1945년 12월 모스 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의 외상 회의는 조선임시정부의 수립과 미·영·중·소에 의한 최대 5개년간의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즉시 독립 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을 파악하고 있던 미군정은 모스크바 3상회 의의 결정을 국내에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이 소식이 남한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미군정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더 민감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정책에 관한 미군정 보도는 정부 수립의 단계와 절차에 대한 설명보다 한국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던 문제, 즉, 신탁통치 유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1946년 6월 미국은 남한 사회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정책을 수립하고 미군 정에게 이의 실행 및 홍보를 지시했으나, 미군정은 이에 대해 회의 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오히려 좌익에 대한 역선전을 강화했다. 점령 정책 자체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던 미군정은 군정에 비판 적인 의견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10월 항쟁은 미국 의 남한 사회개혁 정책을 따를 수 없었던 미군정의 입장, 조선공산 당의 신전술, 군정 정책 실패로 인한 남한 대중의 분노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었으나, 미군정은 자신을 비판하는 여 론을 모두 좌익, 북한, 소련과 연결하거나 악선전에 기만당한 것으 로 간주하는 선전 담론을 형성했다.

3장은 공보원이 발행한 주간신문인 《세계신보》의 선전 메시지 와 선전 담론을 분석했다. 이 시기 《주간신보》는 폐간되었고《농 민주보》는 격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세계신보》와 함께 《농민 주보》도 살펴보았다.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면서 《세계신보》 는 한국 문제를 전세계적 냉전의 맥락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여론조 사들은 한국인이 분단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가 남한지역에서만 제헌 국회의원 선거 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공보원은 남한만의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는 통일정부 수립의 첫 단계라는 것을 강조했다. 즉, 공보원은 향 후 예정된 선거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통일 정 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1948년 4월 남북협상의 실시로 대중들이 실제 통일정부 수립의 가능성에 기대를 갖자, 선거 의 명분은 소련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선거 를 반대하는 자는 소련의 위성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매국노라고 선 전했다. 즉, 1948년 5.10 선거를 앞두고 미군정이 선전한 민주주의 가 실제 의미하는 바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였다.

해방 직후 민주주의는 탈식민 국가·자주적 독립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민주주의는 소련식 민주주의나 미국식 민주주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령기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내용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반공주의 외에는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본고는 해방 직후 탈식민 국가와 자주적 독립국

가 수립의 과제가 대의제 민주주의와 반공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미군정기 점령당국의 매체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 이것을 미군정이 선전한 '냉전 인식'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냉전 인식 아 향후 남한 사회에서 반공과 결합한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을 시사하고자 했다.

주요어: 공보부, 공보원, 《주간신보》, 《농민주보》, 《세계신보》,

선전, 공보, 냉전, 냉전인식, 민주주의, 반공주의

학 번: 2009-30801

목 차

| 서 론 ··································· |
|---|
| 미군정기 공보 기구의 주간신문의 발행 ······ 26 |
| 1. 주한미군정청 공보부의 설립26 |
| 1) 미군의 남한 점령과 주한미군정청 공보부의 설립 26 |
| 2) 미군정의 언론통제 정책36 |
| 2. 공보부의 주간신문 발행46 |
| 1) 공보부의 《주간신보》《농민주보》 발행46 |
| 2) 《주간신보》《농민주보》의 성격60 |
| 3.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설립과 《세계신보》발행73 |
| 1)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설립 73 |
| 2) 공보원의 《세계신보》 발행과 매체의 성격83 |
| 二. 주한미군정청 공보부의 선전 담론99 |
| 1. 제1차 미소공위 전후 반탁·반소 선전 ······ 99 |
| 1)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반탁 선전99 |
| 2)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 결렬과 반소 선전 123 |
| 2.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좌익에 대한 공세135 |
| 1)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
| 좌우합작·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전 135 |

| 2) 미군정의 좌익 탄압과 선전 공세154 | |
|--|--|
| 3. 국제 냉전의 시작과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선전 | |
| 三.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선전 담론 | |
| 2. 1948년 5.10선거 선전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정당화 ····· 215 1) 유엔 소총회의 결정 이후 북한 체제 비난 ······ 215 2) 5.10 선거 선전과 분단의 정당화 ····· 220 | |
| 3. 반공주의 선전의 강화와 공보원의 기능 전환 모색 249 | |
| 결 론 ··································· | |
| 참고문헌268 | |
| Abstract279 | |

표 목차

| 표 1. 〈점령기 미군정의 주간신문별 발행 시기〉 2. |
|---|
| 표 2. 〈신탁통치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11년 (1946년 1월~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 휴회 이전) |
| 표 3. 〈미소공위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12.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 휴회~1946년 9월) |
| 표 4. 〈1946년 좌우합작·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 관한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 ························14. |
| 표 5. 〈10월 항쟁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 기사 목록〉16 |
| 표 6. 〈미군정의 미소공위 재개 노력에 관한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 ··································· |
| 표 7.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소공위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 (1947년 3월~1947년 5월)〉 18 |
| 그림 목차 |
| 그림 1. 〈1948년도 《세계신보》 발행 부수〉9. |
| 그림 2. 〈호박을 쓰고 도야지 굴로〉《조선신문》1948년 5월 6일 24 |
| 그림 3. 〈米國式 「자유」선거〉《조선신문》1948년 5월 8일 24 |

서론

일제가 패망한 지 약 3주 후인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상륙한 미군은 미국 대한정책의 실행자로서 한국인에게 조선의 독립이 지연된다는 사실, 즉, 국제적 합의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다. 또한 남한을 직접 통치하는 정부로서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한 한국인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 열망을 누그러뜨리고, 미군정과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진주 초기부터 미군정은 한국 사회의 여론을 예의 주시했고, 그것에 대응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했다. 미군정은 진주 직후부터 한국 언론과 일상적으로 접촉하였고, 공보 기구를 설치해서 한국 사회의 여론을 파악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활동을 펼쳤다.1)

미군정이 설치한 공보 기구들은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의 점령 통치를 동시에 홍보하였고, 공보 메시지는 미국의 대한정책, 미군정 점령정책, 한국 사회의 여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본 연 구는 이 세 가지 측면이 갖는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미군정이 활용 한 매체, 그 중에서도 공보 기구가 발행한 주간(週間)신문들인 《주

^{1) &#}x27;미군정기' 또는 '점령기'는 36년간 한반도를 통치했던 제국 일본이 패망하고, 남·북한에 각각 신생 독립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에 일촉즉발의불안정성을 띤 분단체제가 성립되기까지의 과도기에 해당한다. 미군정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의 약칭으로서 1945년 8월 해방 직후 미 육군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한 이래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한반도의 행정권, 치안권 등을 인수하여 한반도 38도선 이남을 통치했던 기구 또는 그 시기를 가리킨다.

간신보》, 《농민주보》, 《세계신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공보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이 신문들의 논조와 내용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식민지배 청산과 새 국가 건설 노력이 어떻게 냉전의 인식과 냉전의 논리로 전화 또는 대체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2)

²⁾ 공보는 "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Public Relation", "Civil Information"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미국의 선전기관들은 '선전 (Propaganda)'은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부정적 의미를 띤 용어로, '공 보'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미국의 공보정책 담당자들도 "선전"과 "공보"를 혼용했으며, 미군정 공보담당자도 "공보"는 "선전"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선전은 "개인, 단체, 정부가 자신의 시각을 대중이 수용하고, 반대파의 관점은 거부하 도록 언어·시각자료 또는 상징적인 방법을 이용한 조직적인 시도"로 정 의할 수 있다. 한편 선전과 비슷한 용어로 "심리전"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미 군부는 '심리전' 또는 '심리작전'을 선전, 비밀첩보활동, 게릴라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로 다양하게 정의했다. 즉, 심리 전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스커뮤니케 이션의 사용과 함께 폭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선전 의 종류는 선전 주체의 공개여부에 따라 흑색선전(black propaganda), 회색선전(gray propaganda), 백색선전(white propaganda)으로 나뉜다. 흑색선전은 은밀한(covert) 선전으로써, 선전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사설 조직, 민간인 등을 활용하기도 하며, 내용적으로 근심, 혼란, 테러 등을 강조한다. 백색선전은 명시적(covert) 선전으로써, 선전 주체를 공 개하며 선전 대상이 이를 진실되고 균형잡힌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 식하도록 고안된다. 정보를 조작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회색선전은 "백색"과 "흑색"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경쟁자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미 정부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하 는 것이 그 예이다. 미군정의 주간신문은 백색선전에 해당한다. 신문 발 행자가 점령당국인 점이 명시되었으며, 사실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한 다는 홍보정책 하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보 선전 활 동이 미군정의 정세개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미군정의 공보 활 동이 심리전의 정의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공보', '홍 보', '선전'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그러나 공보는 정부로서 미군정의 홍보 활동을, 홍보는 특정 사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선전은

1. 연구 동향

미국과 미군정의 공보정책과 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크게 나누어 공보정책, 기구, 매체, 수용자 위주로 전개되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미국 대한정책과 공보정책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일련의 연구들이다.

김민환, 장영민, 김균·원용진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미국 측 정책문서들을 활용하여 미국 대한(對韓)선전정책의 목표와 시기별 변화를 추적했다. 세 연구를 종합하면 미국의대한선전정책은 점령 초기 대한선전정책의 부재로부터 1946년 5월 1차 미소공위 결렬과 1946년 6월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남한과북한을 시찰한 폴리(E. Pauley)의 보고서 이후 민주주의 홍보 강화로, 또 1947년 5~6월 이후 미국의 단독정부 수립 정책과 공보원의선거 홍보로 이어지는 변화를 겪었다.3)4)

공보 주체의 목적을 드러내는 용어로 그 성격 구분이 가능하다. 심리전과 선전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심슨, 정용욱 역 2009 《강압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심리전, 1945~1960》 선인;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참고; 공보와 선전의 어의에 대해서는 졸고, 2010 〈미군정 공보기구 조직의 변천(1945.8-1948.5)〉 《한국사론》 5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368~369쪽 참고.

³⁾ 김민환, 1991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장영민, 2001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16, 한국근현대사학회; 김균·원용진, 2000 〈미군정기 대남한 공보정책 - "미국을 심어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김균, 2000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44-3

⁴⁾ 폴리 사절단은 1945년 5월부터 1946년 말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의 배상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절단에 합류했다. 1차 사절단은 주로 일본

이들 연구는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선전정책 변화의 축 또는 계기로 파악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그에 따라 선전 내용에 일정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파악한다. 선전 내용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논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폴리 사절단의 보고서 제출 이후로 '미국식민주주의', '반소반공 선전', '미국 이미지의 이식'을 강조했고, 공보원 설치 이후부터는 노골적인 정치적·이념적 선전이 강화되고, 단독정부 수립 홍보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위 연구들이 SWNCC 문서 등 미국의 대한정책 문서와 국무부와 군부 간의 서신 등 워싱턴의 정책 문서들을 활용하여 미군정 공보정책을 미국의 대한선전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한 것과 달리, 차재영은 미군정 활동보고서(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여론조사 보고서 등미군정이 생산한 문서들을 활용해서 미군정의 공보정책을 분석했다. 그는 미군정이 선전의 주체로서 한국인의 의식 세계를 변화시키기위해 수행한 일련의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그는 점령당국이 수행한선전 활동의 내용과 목표를 치안과 행정 확립, 자유민주주의 이념의유포, 미국 문화의 전파, 반공·반소의 '대항선전', 단정 수립 캠페인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연구는 미군정 공보 활동의 내용을 통해 공

내의 산업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고, 2차 사절단은 일본의 재외자산에 대해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과 만주 지역도 포함되었다. 사절단의 규모는 조사 활동이 진행될수록 커졌고, 세분화되었다. 사절단의 활동은 미 국무부의 주도 하에 재무부와 육군부 등 각 부처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고, 여러 기업인과 학자들이 참여했다. 사절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여론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선전 공보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성, 2019 〈미군정기 폴리사절단의 방한과 한국 관련 정책 제안〉《한국근현대사연구》 90, 한국근현대사학회 참고. 또 폴리 사절단에 대해서는 송병권, 2011 〈미군정기 폴리 배상 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제〉《史學硏究》 102 및 宋炳卷, 2015 《東アジア地域主義と韓日米關係》東京: クレイン 참고

보정책의 목표를 드러냈고, 미군정이 선전의 주체임을 강조했으며 국내 정세를 미군정 공보 활동의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했다.5)

이상의 연구들은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미군정 공보정책과 활동에 대한 선구적 연구들로,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 공보·선전정책의 연관성, 선전의 내용과 목표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제시했다. 또이 주제와 관련한 미국 측 문서들을 발굴하여 소개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그들이 제시한 선전의 내용과 목표가 남한 사회 내부의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또 선전 내용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 선전의 기제 등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해명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워싱턴의 대한선전정책 변화가 미군정 공보정책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차재영의연구가 암시하듯이 미군정 공보정책이 단순히 본국 선전정책을 현지 집행한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의 맥락에 따라 변용하거나 재해석했다면, 그러한 변용과 재해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어떤 내용적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연구들의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대한선전정책의 변화를 축으로 하여 미군정의 공보정책 및 활동 변화를 이해하고자 했다면, 미군정 공보 활동의 실제 전개 양상과 그 성격을 살펴본 연구들은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당시 남한 정세를 미군정 공보 활동의 성격이 나 변화의 주요 변수로 보았다.

정용욱은 1945년 12월 말 동아일보 등 남한 신문의 모스크바 3 상회의 결정 왜곡 보도와 그 이후 찬·반탁 정국의 도래에 미군정과 맥아더 사령부의 언론 공작이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밝힘으로

⁵⁾ Cha Jae Young, 《Media Control and Propaganda in Occupied Korea, 1945-1948: Toward an Origin of Cultural Imperialism, University of Illinois (Communication) 1994; 차재영, 1994〈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언론과 사회》 5

써 미군정이 남한 여론을 자신의 정치적 의도대로 조절하기 위해 공작 차원의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드러냈다.6) 이 연구는 미군정이 남한 여론을 예의 주시하였고, 언론을 활용하여 여론의 형성 또는 왜곡에 깊이 개입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미군정의 공보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정 -남한 언론-남한 정세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여야 함을 환기시켰다.

박수현은 미군정 공보 기구의 조직적 체계와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통해 미군정 공보 활동의 초점이 미군정 점령통 치 홍보에서 미국 대한정책 선전으로 점차 변화했음을 밝혔다.7)

2010년대에 들어 공보부의 여론조사 활동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미군정 공보 활동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미군정 공보 활동의 배경 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보미는 미군정 공보 기구의 여론조사 활동의 진행 양상과 실행 방식, 효과를 분석하여 미군정기 여론조사가 일정하게 선전의 목적 을 가졌음을 보여주었고, 미군정 3년을 남한 사회를 관리하고 권력 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치합리성이 등장한 시기로 파악했다. 또 미군정 여론조사와 한국인 민간기구의 여론조사 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인 점령자들과 한국인 피점령자들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경쟁했음을 밝혔다.8)

송재경은 미군정 공보부 여론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미군정에 대한 한국인 여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군정

⁶⁾ 정용욱, 2003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 미군 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2, 역사문제연구소

⁷⁾ 졸고, 2009 〈美 軍政 公報機構 조직의 변천 (1945. 8~1948. 5)〉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⁸⁾ 김보미, 2012 〈미군정기 여론조사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의 미곡정책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는 당시 한국인들의 여론 동향이 미국 대한정책과의 관련성보다는 미군정의 점령통치 내지 점령정책과 남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 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9)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조민지는 공보원이 1947년 7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한 지방 현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방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미군정의 식량공출 정책이었음을 밝혀냈다. 즉, 좌익 조직이 강하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미곡 생산 지역이면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심했으며, 좌익 조직이 영향력을 유지한 지역일지라도 미곡 반출 지역이 아니면 군정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군정 반대 여론이 좌익의 선전 탓이라는 미군정의 선전 논리를 실증적으로 반박했다.10)

미군정 공보 기구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미 군정이 생산한 각종 공보 매체에 대한 연구 또한 매체 분석을 통해 미군정 공보 활동의 의도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공보 매 체는 크게 신문, 영화, 라디오 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군정이 발행한 주간신문을 분석한 연구들은 신문 분석을 통해 미군정 공보 활동의 성격을 드러냈다. 정다운은 공보부 주간신문 《농민주보》의 발행, 편집, 보급체계, 내용을 분석하고, 《농민주보》가 민주주의를 홍보하기보다 지속적인 군정 미화와 정책 홍보를 실시했고, 궁극적으로 군정에 협조적인 농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평가했다. 장세진은 더 나아가 《농민주보》의 식량관련 기사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미군정이 농민을 도시에 쌀을 공급하는 존재로 규정했고, 《농민주보》의 금지, 위반, 처

⁹⁾ 송재경, 2014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 (1945~19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¹⁰⁾ 조민지, 2015 〈1947년 하반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현지조사와 지방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벌 관련 기사들로 농민을 통제하려 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농민주보》의 성격을 권력의 미디어, 치안으로서의 미디어로 파악 했다.11)

장영민은 미군정이 1948년 5·10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수 행한 공보 정책과 공보 활동의 전모를 《세계신보》 지면 분석을 통해서 밝혔다. 그는 《세계신보》에 수록된 총선거 관련 기사를 개 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세계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를 통해 미군정이 추구하는 선전 목표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분류 했다. 이 연구는 그간 공보원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언급되던 5·10 선거 홍보를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부조정위원회 (SANACC)의 정책문서, 공보원 활동보고서, 유엔조선임시위원단 관 계문서, 질레트 보고서 등 공보원의 5·10 선거 홍보와 관련된 자료 를 여러 문서철에서 새로이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 홍보에 관 한 국무부의 정책, 공보원의 정책과 메시지, 선거 홍보의 다양한 방 법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 연구는 분석 시기가 총선거 홍보 기 간에 한정되어서 총선거 선전의 중요성이 적시된 1948년 1월 사부 조정위원회(The State-Army-Navy-Air Coordinating Committee, 삼부조정위원회의 후신) 176/35 정책문서 이전 공보원의 정책과 활 동에 대한 분석을 추후의 과제로 남겼다. 공보원 수립을 전후한 1947년 5월부터 1948년 1월까지 공보원의 정책과 활동 역시 이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12)

영화는 최근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미군정 선전 매체 중 하나다. 미군정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군정과 미국 공보원의 영화

¹¹⁾ 정다운, 2005 〈주한미군의 선전활동과 「농민주보」〉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장세진, 2015〈치안과 정치 사이에서 - 해방기 빈곤 대중의 존재론〉《현대문학의 연구》 56호; 장세진 2018 《숨겨 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푸른역사

¹²⁾ 장영민, 2007 〈미국공보원의 5·10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한국 근현대사연구》 41

정책을 미국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리한 김려실의 연구,13) 공보부와 공보원이 제작·배급한 영화들의 내용과 편집방식을 분석한 김한상의 연구14) 등은 영화 주제들이 점령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에서 보편적이고 근대적인 가치로서의미국 홍보로 점차 옮아갔음을 지적한다. 〈해방뉴-스〉의 제작 주체를 추론한 조혜정의 연구는 미군정이 직접 제작한 뉴스 영화가 아니더라도 미군정의 정책적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15) 또 당시 극장의 재편과 운용 방식을 통해 미군정의 영화 정책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16)

미군정의 라디오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군정의 방송 운영방식과 그 유산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박용규는 미국 문서와 방송 관련주요 인물들의 회고록을 활용하여 라디오 방송의 국영화 과정과 방송 편성방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라디오가 미군정의 점령정책 수행을 위한 선전 매체였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당시 남한 정세가 미군정의 라디오 방송 운영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7) 한편 장영민은 라디오 방송 관련 미국 문서를종합하고, 선전 매체로서 라디오를 관리하기 위해 미군정이 구축한

¹³⁾ 김려실, 2019 《문화냉전》 현실문화연구

¹⁴⁾ 김한상, 2011 〈1945~48년 주한미군정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영화선 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미국사연구》 제34집; 김한상, 2013 〈주한미국공보원(USIS) 영화의 응시 메커니즘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와 가시화하는 힘의 과시-〉《역사문제연구》 30

¹⁵⁾ 조혜정, 2011 〈미군정기 뉴스영화의 관점과 이념적 기반 연구〉《한 국민족운동사연구》6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¹⁶⁾ 조혜정, 1998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 연구〉《영화연구》14호; 문 원립, 2002 〈해방 직후 한국의 미국영화의 시장규모에 관한 소고〉 《영화연구》 18호

¹⁷⁾ 박용규, 2000 〈한국 초기 방송의 국영화 과정에 관한 연구〉《한국 언론학보》 44-2; 박용규, 2005 〈미군정기 방송의 구조와 역할〉 한 국언론학회 광복6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방송관리 체제 전반을 정리했다.18) 미군정의 방송 정책과 그 성격은 관련 인물의 회고록과 미국 측 문서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라디오 선전 메시지 분석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의 미군정의 신문, 영화, 라디오 방송 분석이 미군정이 남한 점령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매체운용 방식을 결정하고 선전 메시지를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다면, 김영희는 한국인들의 미군정 공보매체 수용 양상을 분석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는 미군정기 신문과라디오가 서울에 편중해서 보급되어서 서울 외 지역의 한국인은 미디어에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보았다. 또한 높은 문맹률과 교통·우편체계의 낙후로 인해 한국인이 미군정의 주간신문을 보기 어려웠으며, 이는 결국 미군정이 설정한 의제가 한국인에게 수용되지 못하는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19)

미군정은 신문, 영화, 라디오 방송 등을 제작함으로써 선전 메시지를 배포하는 한편, 진주 직후부터 한국 언론의 동향과 신문들의 논조를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즉, 미군정의 공보·선전정책 및 활동과 미군정의 언론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은 미군정기 공보·선전정책 및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미군정의 언론정책 연구는 미군정의 언론통제 정책의 의도와 양상, 그리고 그것이 한국 언론구조에 미친 영향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박용규는 미군정의 언론통제 양상에 대한 해명을 통해미군정의 언론 정책이 당시 남한 언론의 존재 형태와 물적 기반에

¹⁸⁾ 장영민, 2018 〈미군정의 라디오 방송관리〉《한국근현대사연구》87, 한국근현대사학회

¹⁹⁾ 김영희, 2005 〈미군정기 미디어 접촉의 성격과 영향〉, 한국언론학회 광복60주년 기념 학술회의; 김영희, 2005 〈미군정기 농촌주민의 미디어 접촉 양상〉《한국언론학보》49권 1호; 김영희, 2010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커뮤니케이션북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해방 직후 다양한 신문들이 좌익계, 중도계, 우익계로 나뉘어 존재했으나, 미군정이 점령기간 동안 법령 제정, 귀속재산 처리 등을 통해 좌익계 신문을 강력히 통제했고, 결국 단독정부 수립 전후 대부분의 좌익계 신문들이사라지고 단선 단정에 비판적인 중도계 또는 우익계 신문들도 그는조를 전환하게 되었음을 해명하였다. 또한 미군정의 언론구조 재편에 따라 신문기자 단체들도 재편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논지를 뒷받침했다. 20) 김민환 역시 각종 법령과 귀속재산 처리 등이 미군정의 중요한 남한 언론 통제 방법이었음을 지적했다. 21)

이상에서 미국의 대한선전쟁책, 미군정의 공보정책과 활동, 미군정 공보 매체, 미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시간적으로 미국의 대한선전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군정의 공보 정책·활동과 매체 분석으로 점차 연구가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소공위를 매개로 한 미·소 간 협상이나 폴리 사절단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것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의 대한선전정책이 미국의대한정책과 연계되어 변화하였다면, 미군정의 공보 정책과 활동의실제 전개 양상은 점령지 남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군정이 발간한 주간신문이나 영화, 라디오 방송 등 선전 매체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체의 생산, 유통 제도와 운영 방식을 주로 분석하고 있고, 매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시하거나, 한정된 시기 내에서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해해당 매체가 수행한 역할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²⁰⁾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용규, 2007 〈미군정기 언론인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²¹⁾ 김민환, 1995 〈미군정의 언론정책〉《언론과 사회》 8; 김민환, 2001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 22쪽 참고.

요컨대 1990년대 이래 미군정 공보 연구는 공보정책, 기구, 매체, 수용자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미군정 공보정책과 활동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여전히보다 심층적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예컨대미군정이 미국의 대한정책 및 대한선전정책 변화를 수용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남한 현지의 사정이 미친 영향, 그리고 점령기 전체를거쳐 미군정이 국가 수립 과제를 선전하는 방식과 그것이 단독정부수립으로 귀결되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냉전 또는 냉전 인식이 어떻게 소개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게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2. 분석 방법과 분석 대상

이상의 연구 경향을 살펴볼 때, 미군정의 공보정책과 활동은 미국의 대한정책 및 대한선전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분석되거나 군정의 점령통치를 위한 공보로 한정되어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르면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미군정의 공보정책과 활동은 문화냉전의 전사(前史)로 규정되며,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문화 전파 내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한다.22)

그러나 미군정기는 해방 직후의 탈식민 개혁·통일독립국가 수립을 당연한 과제로 생각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상상 밖의 일로 여기던 대중들이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현실을 실현 가능한 일로 생각하게

²²⁾ 대표적으로 허은, 2004 〈미국의 대한(對韓) 문화 활동과 한국 사회의 반응〉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및 장영민, 2004 〈정부 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한국근현대사연구》 31 참고.

되는 인식의 급격한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미군정기 3년은 문 화냉전의 전사(前史)로만 규정하기에는 탈식민에서 냉전으로의 급격 한 이행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시기였던 것이다. 즉 '문화냉전의 전 사(前史)' 또는 '조기냉전'이라는 '명명(命名)'을 넘어. 미군정의 공보 정책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한국 인들의 인식 속에 냉전 인식이 형성되어 갔는지를 규명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의 냉전, 한국인의 냉전 인식의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고는 미군정의 주간 신문에 나타난 선전 메시지,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한정책과 국가 수 립 과제와 관련한 기사들에 나타난 선전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결국 미군정 공보정책과 활동의 역사적 성격 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 시기 미군정의 공보 활동을 한국 내 부의 상황과 당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해외의 냉전문화 연구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냉전의 지구적 전개와 지역별, 국가별 수행 양상, 그리고 냉전문화의 국가별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확산 되면서, 2차 대전 종전 이후 한국전쟁 사이 기간 동안의 각국의 정 치적, 문화적 동향에 대한 이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각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동향 은 사후적으로 확립된 냉전의 논리에 지배되었다기보다 2차 대전 종전으로 드러난 각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현안들의 해결을 둘러 싼 해당 사회 내부의 논란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전후 문제 해결을 둘러싼 논의가 각국의 사상·문화적 동향과 대중들 의 심리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23)

²³⁾ 냉전의 지구적 전개 양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로는 웨스타드의 아래 두 권의 저서가 유용하다.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및 Odd Arne Westad, 《The

예를 들어 마스다 하지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 속에서 '냉전'은 이미 존재했던 현실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담론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냉전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에등장한 각국내의 사회적 불안 요소를 잠재우는데 활용되는 측면이강했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는 풀뿌리(grassroot) 보수주의자들이 냉전 논리를 사용해 전후변화를 억누르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냉전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사람은 없었지만, 냉전 논리는 국가별로 사회적 안정을유지하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유용했고, 냉전 담론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계의 현실'로 받아들여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소는 2차 대전의 기억과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마스다의 연구는 냉전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사이의 기간을 분석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사후적이고 결과론적인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해당 시기 국가별, 지역별 동향 연구에서 냉전의 영향보다는 2차 대전의 기억이 보다 중요했고, 종전 이후 부 상한 전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본고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담론으로서의 냉전에 주목한 그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그가 구사한 자료와 자료 분석 방법이다. 그는 당대에 나온 신문과 잡지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신문과 잡지의 성향 차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대중들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여 '실체'(reality)로 인식해가는지 그 구성적 성격(constructed nature)을 살피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Cold War: A World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7 참고. 또 1945년과 1950년 사이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동향에 대한 소개로 는 Masuda Hajimu,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가 유용하다.

마스다의 이러한 분석 방법과 자료 활용은 점령기 미군정의 공보 정책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사를 준다. 본고는 미군정 발행 주간신문을 분석의 주된 소재로 삼아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현실이 미군정의 정책 논리와 결합하며 당국자들에 의해 어떻게 재 구성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렇게 재구성된 현실(constructed reality)이 어떻게 미군정의 정책 논리와 결합하여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전략적 목표를 남한 사회에 전파하고, 결국에는 냉전이데올 로기로 치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미군정이 재구성한 현실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미군정 주간신문과 한국 신문 들의 논조, 북한의 신문 및 선전 자료 논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해볼 것이다.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미군정의 주간신문은 주한미군정청 공 보부가 발행한 《주간신보》, 《농민주보》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 원이 발행한 《세계신보》이다. 점령기 미군정이 발행한 세 신문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여타의 매체와 달리 신문 기사의 내용과 논리는 해당 국면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정 주간신문 논조 분석은 미군정 공보정책과 국내정세와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주간신문 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내부 정세와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들 매체가 수행한 역할과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간신문의 내용 변화를 통해 미군정 공보정책의 변화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미국의 대한정책 문서를 기준으로 공보정책과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워싱턴의 정책과 남한 현지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점령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현지화하는 미군정 공보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했다. 즉, 미군정의 공보 활

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싱턴에서 생산한 정책문서와 워싱턴과 서울을 왕복한 문서들 이외의 자료 발굴이 필요한데, 미군 정이 생산한 각종 공보 수단이나 매체가 자료적 공백을 메꿀 수 있 는 유용한 자료원(資料源)이 될 수 있다. 미군정이 생산한 공보 매 체 가운데 영화나 라디오 방송은 점령기 전 시기를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미군정이 발행한 주간신문은 점령기 전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미군정의 공보정책과 활동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셋째, 미군정은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상위 정책의 틀 속에서 남한 현지의 정세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간신문 기사 내용 분석은 미군정이 남한 현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미국의 대한정책 선전 메시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보여준다. 즉, 주간신문은 워싱턴의 정책적 의도와 남한의 현실을 매개하면서 미군정이 자신의 의도대로 나름대로 재구성한 실체를 보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넷째, 주간신문 내용 분석은 미군정기 한국 신문의 역할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군정이 한국 언론 구도를 우익 주도로 재편해가는 상황과 미군정의 주간신문 배포를 동시에 시야에 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신문과 미군정 신문의 논조를 함께 살핀다면 미군정기 언론 구조와 각 신문별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과 미군정 주간신문 분석의 의의를 바탕으로, 1장에서는 미군정 공보 기구와 각 기구가 발행한 주간신문의역할과 성격에 대해 개괄하고, 2장과 3장에서는 미군정 주간신문들이 미국의 대한정책과 자주 독립 국가 수립에 대해 어떠한 선전 메시지와 선전 담론을 펼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장은 공보부의 주간신문을, 3장은 공보원의 주간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 활용 자료

1) 미국의 대한정책, 대한공보정책 관련 자료

미국의 대한정책·대한공보정책은 미국외교문서(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와 삼부조정위원회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SWNCC)의 정 책문서를 이용했다. 이 중 FRUS는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원문과 번역문을 활용했고, SWNCC 정책문서는 FRUS와 관련 문서들을 영인한 자료집에 수록된 것을 활용했다.²⁴⁾

2) 미군정 공보기구의 공보 정책과 활동 관련 자료

공보부의 정책과 활동 분석은 미국 국립문서관의 극동군사령부·연합군총사령부·유엔군사령부 문서(RG 554)로 이전된 주한미24군단정보참모부 군사실문서철의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과 육군참모부 문서(RG319)의 Historical Manuscript Files, 1943 - 1948 [Entry NM3 488]시리즈에 있는 〈Public Information Section〉 사료철을 활용했다.

전자는 1948년에 주한미군의 남한 점령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공보부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후자도 주한미군사실이 공보부사 집필에 사용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으로, 1945년 9월 22일경부터 1945년 12월 11일까지 공보부의 주간 활동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보부 초기 조직인 정보과(KRAI, I&I)와 공보과(Public Information Section)의 활동보고서들로, 미군정 공보기구의 초기 활동들을 자세히 보여준다. 이 자료들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가 미 국립문서관에서 수집하여 전자사료관에서 제공하는 문서

²⁴⁾ 정용욱, 이길상 편, 1995《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4, 다 락방

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활용 시 국사편찬위원회가 권고 하는 자료인용방식을 따랐다.

공보원의 정책과 활동 분석은 극동군사령부·연합군총사령부·유엔 군사령부 문서(RG 554)로 이전된 주한미24군단 정보참모부 군사실 문서철의 두 문서에 크게 의지했다. 하나는 1948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이다. 공보원의 창설부터 1948년 5.10 선거 직후까지의 공보원의 정책과활동에 관한 방대한 서술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문서들을 15개의 부록 문서로 포함했다.

다른 하나는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으로, 총 11개의 부록 문서를 포함했다. 이 중에는 1947년 10월부터 1948년 6월까지의 공보원의월간 활동보고서들이 있다. 이 활동보고서들은 미국의 대한정책이단독정부 수립으로 옮아가면서 공보원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기록물 중 부관부문서철(RG407)의 해외점령지역 보고서철(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시리즈 하 '18. Military Government - Korea, Office of Civil Information' 파일에는 공보원의 7월 활동 보고서와 8월 활동 보고서가 있다. 또한 이 파일에는 1948년 6월 10일~11일 양일간 개최된 공보원 지부장들의 회의 녹취록이 존재하여 5.10 선거이후 활동 방향에 대한 공보원의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

공보원 문서들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미 국립문서관에서 수집 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을 활용하였다. 인용 시 국립중앙도서 관의 문서 분류 체계에 따라, RG, 시리즈, 파일명, 문서정보 순으로 표기했다. 위의 문서들은 미군정 공보 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파악하게 해준다. 그러나 시기별 공보주제, 공보방법 등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미군정 공보 기구의 구체적인정책 결정 과정은 사실상 공보 매체에 나타난 내용과 그 논리 변화를 보면서 역 추적할 수밖에 없다.

미군정 공보부의 핵심 인물인 아다 리크(Ada E. Leeke, 1919. 8. 9~1988. 7. 9)의 미발표 원고 《When Americans Came to Korea》는 미군정 공보기구의 실제 운영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25) 그녀의 아버지는 1910년 탄광사업을 위해 식민지 조선으로 왔고, 그녀는 1914년 8월 9일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43년 미국 조지아 Fort Oglethorpe에서 소위로 임관하여 공보장교로 부임했고 1944년 버지니아 대학교의 군정학교에 최초로 입대한 네 명의 여군들 중 한명이었다. 이후 스탠포드 대학교 민정학교를 거쳐 Civil Affairs Staging Area에서 Post Newspaper의 부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녀는 한국 거주 경험과 저널리즘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녀는 1945년 10월 27일 한국에 부임하여 1946년 2월까지 미군정 공보부 정치분석가로, 1946년 2월부터 7월까지는 러취 군정장관의 연락장교로 일했다. 이 시기 그녀는 점령 직후 미군정이 선정한 한국인 고문들이 친일파들이라는 인민공화국의 전단에 대응하고, 이들이 진짜 친일파인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한국 정치가들을 인터뷰하고 모든 정치적 집회에 참가하며 급변하는 정세에대한 정보를 미군 사령부에 제공하는 임무, 그리고 한국인 정치가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의 요청이었을 시에는 특정 정치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했는데,

²⁵⁾ Ada E. Leeke, 《When Americans Came to Korea》 Pine Hill Press, 1991

결국 하지가 알고자 한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인가 여부였다고 한다. 1946년 여름 그녀는 《주간신보》 편집자가 되었고, 1947년 3월부터 8월까지 《농민주보》 편집자를 맡았으며, 1947년 7월부터 1948년 8월까지 공보부가 발행하는 모든 신문, 잡지, 전단 등을 포함한 출판물들을 책임지는 출판과장을 역임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군정청을 해산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다. 공보부의 마지막 남은 미국인으로서 1947년 7월 군사관들이 작성하는 역사서술과 합치기 위한 공보부의 역사를 서술할 임무를 맡았다. 앞서 본고가 활용할 자료들 중에 포함된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이 바로 그녀가 작성한 공보부 역사이다. 이 문서는 필자가 남아있지 않는데, 공보부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그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 문서와 일치하며, 이 문서와 《When Americans Came to Korea》의 내용과문구들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이 문서를 작성했음이 틀림 없다.

그녀의 이력과 행적을 볼 때, 그녀는 미군정 공보정책과 공보부의 주간신문 발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이루어졌는지 내부인으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녀의 미발표 원고 《When Americans Came to Korea》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공보부의 정책결정이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 군정장관 아놀드, 공보부장 뉴먼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뉴먼에 의해 공보부의 공보 활동이 어떻게 통제되었는지 서술되어 있다. 또한 《주간신보》가 작성되고 배포되기까지의 과정, 한국인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적고 있다. 이는 공식 문서에 나오지 않는 공보정책 결정의 실제 과정과 《주간신보》의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기존 자료들의 한계를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미발표 원고와 관련자료들은 현재 하와이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에 기증되어 "Ada. E. Leeke 콜렉션"으로 소장되어 있다.

3) 매체 관련 자료

본 연구의 핵심 자료는 미군정청 공보부가 발행한 《주간신보》와 《농민주보》,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이 발행한 《세계신 보》이다. 이 신문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산되 어 있는데, 본고는 이를 종합하여 최대한 복원하고자 했다.²⁶⁾

^{26) 《}농민주보》의 1945년 12월부터 1947년 12월까지의 발행 호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 및 디지털화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1948년 1월부터 6월까지 발행된 호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기 록물중에서 부관부문서철(RG407) 중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시리즈 하의 〈7 Public Press - Korea, "Farmers' Weekly"〉 파일에 있다. 《주간신보》는 《농민주보》와 같은 문서군, 시리즈 하에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기록물 중에서 〈2 Public Press "Farmers Weekly" 1947 <농민주보> (1946. 8/31, 12/7, 12/28, 1947. 1/4, 1/8, 1/25, 2/1, 2/8, 2/22, 3/1, 3/8, 3/15, 3/22, 3/29, 4/5, 4/12, 4/19, 4/26), <주간신보>(1946, 8/14, 8/21, 11/13, 11/20, 11/27, 12/20, 12/27, 1947, 1/20, 2/14, 2/21, 2/28, 3/7, 3/14, 3/21, 4/1), 세계신기록의 서 선수, 뽀스톤 마라손 대회에서 우승 외〉파일에 있다. 또한 같은 시리즈 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사료관 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때 수집사료번호는 AUS037_02_03C0070이다. 두 기관 중 한 곳만 소장한 호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보았다. 《세계신보》는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중에서 극동군사령 부·연합군총사령부·유엔군사령부 문서(RG 554)의 주한미24군단 정보참 모부 군사실문서철 중 〈Newspaper: "The World News" (in Korean w/translations), June - Dec. 1947〉 파일과 부관부문서철(RG407)의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시리즈 하 〈11 World News -Korea〉에 소장되어있다. 한국어판은 39호까지 있으며, 41호부터는 영 문판만이 남아있다. 또한 이 파일들이 소장하지 않은 호들 중 일부가 국사편찬위원회가 하버드대학 하버드-옌칭도서관에서 수집한 질레트 문 서(Gellette Papers)에 영문판으로 남아있다.

《주간신보》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간신문으로, 1945년 10월 발행이 시작되었고 1947년 4월 11일 77호를 끝으로 용지 부족으로 폐간되었다. 분석 대상으로 총 34호를 확보했다.27)

《농민주보》는 농촌을 대상으로 한 주간신문으로 1945년 12월 창간되었다가 1947년 7월부터 격주로 발행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농민주보》는 1948년 6월 26일에 발행된 101호가 마지막 호이 다. 정확한 폐간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101호가 폐간호인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분석 대상으로 총 86호를 확보했다.28)

²⁷⁾ 분석을 위해 확보한 《주간신보》는 다음과 같다. 13호 (1946년 1월 19일), 32호 (1946년 5월 29일, 뒷면은 미확보), 35호 (1946년 6월 19일, 앞면은 미확보), 36호 (1946년 6월 26일), 38호 (1946년 7월 10일), 39호 (1946년 7월 17일), 40호 (1946년 7월 24일), 41호 (1946년 7월 31일), 42호 (1946년 8월 7일), 44호 (1946년 8월 21일), 45호 (1946년 8월 28일), 46호 (1946년 9월 11일), 48호 (1946년 9월 18일), 50호 (1946년 10월 3일), 52호 (1946년 10월 16일), 53호 (1946년 10월 23일), 54호 (1946년 10월 30일), 55호 (1946년 11월 6일), 56호 (1946년 11월 13일), 57호 (1946년 11월 20일), 58호 (1946년 11월 27일), 59호 (1946년 12월 6일), 60호 (1946년 12월 13일), 61호 (1946년 12월 20일), 62호 (1946년 12월 27일), 63호 (1947년 1월 3일), 65호 (1947년 1월 20일), 69호 (1947년 2월 14일), 70호 (1947년 2월 21일), 71호 (1947년 4월 21일), 77호 (1947년 4월 11일)

²⁸⁾ 분석을 위해 확보한 《농민주보》는 다음과 같다. 2호 (1945년 12월 29일, 1면은 미확보), 4호 (1946년 1월 12일), 6호 (1946년 1월 26일), 7호 (1946년 2월 2일), 8호 (1946년 2월 9일), 10호 (1946년 2월 23일), 11호 (1946년 3월 2일), 12호 (1946년 3월 9일), 13호 (1946년 3월 16일), 14호 (1946년 3월 23일), 16호 (1946년 3월 30일), 17호 (1946년 4월 13일), 19호 (1946년 4월 27일), 20호 (1946년 5월 4일), 21호 (1946년 5월 11일), 22호 (1946년 5월 18일), 23호 (1946년 5월 25일), 24호 (1946년 6월 1일), 25호 (1946년 6월 8일), 26호 (1946년 6월 15일), 27호 (1946년 6월 22일), 28호 (1946년 6월 29일), 29호 (1946년 7월 6일), 30호 (1946년 7월 13일), 31호 (1946년

《세계신보》는 1947년 6월 창간되었고, 정확한 폐간 시기는 알수 없으나 1948년 9월 이후에서 1949년 1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호는 1948년 9월에 발행된 63호이다. 《세계신보》는 신문 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호별로 발행된 정확한 날짜를 파악할 수는 없다. 분석 대상으로 총 46호를 확보했다.29)

⁷월 27일), 32호 (1946년 8월 3일), 33호 (1946년 8월 10일), 34호 (1946년 8월 17일), 35호 (1946년 8월 31일), 36호 (1946년 9월 7 일), 37호 (1946년 9월 14일), 38호 (1946년 9월 21일), 39호 (1946 년 9월 28일), 41호 (1946년10월 19일), 42호 (1946년 10월 26일), 43호 (1946년 11월 2일), 44호 (1946년 11월 9일), 45호 (1946년 11 월 16일), 46호 (1946년 11월 23일), 47호 (1946년 11월 30일), 49호 (1946년 12월 14일), 50호 (1946년 12일 21일), 52호 (1947년 1월 4 일), 54호 (1947년 1월 18일), 55호 (1947년 1월 25일), 56호 (1947 년 2월 1일), 58호 (1947년 2월 15일), 59호 (1947년 2월 22일), 60 호 (1947년 3월 1일), 61호 (1947년 3월 8일), 62호 (1947년 3월 15 일), 63호 (1947년 3월 22일), 64호 (1947년 3월 29일), 65호 (1947 년 4월 5일), 66호 (1947년 4월 12일), 67호 (1947년 4월 19일), 68 호 (1947년 4월 26일), 69호 (1947년 5월 3일), 70호 (1947년 5월 17 일), 71호 (1947년 5월 24일), 72호 (1947년 5월 31일), 73호 (1947 년 6월 7일), 74호 (1947년 6월 14일), 75호 (1947년 6월 21일), 78 호 (1947년 7월 12일), 79호 (1947년 7월 19일), 81호 (1947년 8월 16일), 82호 (1947년 8월 30일), 83호 (1947년 10월 18일), 84호 (1947년 11월 1일), 85호 (1947년 11월 15일), 86호 (1947년 11월 29일), 87호 (1947년 12월 13일), 88호 (1947년 12월 27일), 89호 (1948년 1월 10일), 90호 (1948년 1월 24일), 92호 (1948년 2월 21 일), 93호 (1948년 3월 6일), 94호 (1948년 3월 20일), 95호 (1948년 4월 3일), 96호 (1948년 4월 17일), 97호 (1948년 5월 1일), 98호 (1948년 5월 15일), 99호 (1948년 5월 29일), 100호 (1948년 6월 12 일), 101호 (1948년 6월 26일)

²⁹⁾ 분석을 위해 확보한 《세계신보》는 다음과 같다. 3호 (1947년 6월), 4호 (1947년 6월), 6호 (1947년 7월), 7호 (1947년 7월), 9호 (1947년 7월), 11호 (1947년 8월), 12호 (1947년 8월), 13호 (1947년 8월 말 또는 9월 초), 14호 (1947년 9월), 15호 (1947년 9월), 16호 (1947년

각 신문별로 발행이 확실한 시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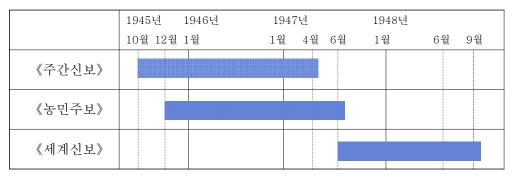


표 1. 〈점령기 미군정의 주간신문별 발행 시기〉

4) 한국 사회의 여론 관련 자료

남한의 정치·사회 동향과 한국인 여론이 미군정의 주간신문에 미친 영향은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가 간행한 공보부의 여론조사 보고서류를 활용했다.30) 미군정 공보부가 작성한 주간 보고서 《여

⁹월), 17호 (1947년 9월), 18호 (1947년 10월), 19호 (1947년 10월), 20호 (1947년 10월, 21호 (1947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 22호 (1947년 11월), 23호 (1947년 11월), 25호 (1947년 11월), 26호 (1947년 11월), 27호 (1947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28호 (1947년 12월), 29호 (1947년 12월), 30호 (1948년 1월), 32호 (1948년 1월), 34호 (1948년 2월), 35호 (1948년 2월), 36호 (1948년 2월), 37호 (1948년 3월), 38호 (1948년 3월), 39호 (1948년 3월), 40호 (1948년 3월, 영어), 41호 (1948년 4월, 영어), 42호 (1948년 4월, 영어), 43호 (1948년 4월 24일, 영어), 44호 (1948년 5월 1일, 영어), 45호 (1948년 5월 8일, 영어), 46호 (1948년 5월 15일, 영어), 47호 (1948년 5월 22일, 영어), 49호 (1948년 6월 5일, 영어), 55호 (1948년 7월 17일, 영어), 59호 (1948년 8월 14일, 영어), 60호 (1948년 8월 21일, 영어), 61호 (1948년 8월 28일, 영어), 62호 (1948년 9월 4일, 영어), 63호 (1948년 9월 11일, 영어)

^{30) 〈}여론 동향(Opinion Trend)〉 〈정치 동향(Political Trend)〉은 한 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89 《HQ,USAFIK G-2 periodic report=주한미군 정보일지 부록》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에 수록;

론동향(Opinion Trend)》과 《정치동향(Political Trend)》, 그리고 공보부의 비정기 여론조사 보고서는 해당 시기 남한 사회의 현안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과 한국인의 여론을 동시에 보여준다. 미군정 여론조사 보고서의 항목과 내용이 미군정의 신문과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매체 수용자와 매체 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공보부의 여론조사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에 수록.

一. 미군정기 공보 기구의 주간신문 발행

1. 주한미군정청 공보부의 설립

1) 미군의 남한 점령과 주한미군정청 공보부의 설립

해방 직후 사회개혁과 국가 수립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은 건국준 비위원회의 수립을 시작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건 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었고,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 공화국의 설립을 선포했다. 전국 각지에서 치안대가 일제 경찰을 추방하고 치안유지를 담당했고, 노동조합이 공장을 접수하는 등 미 군이 도착하기 이전, 이미 한국인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있었 다.31)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 일본군은 전문을 통해 남한 정세를 24군단 사령관 하지에게 전달했는데, 그 전문은 남한 정세를 공산 주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일본군의 해석과 정세에 대한 우려를 담 고 있었다. 즉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38도선 이남으로 넘어올 수 있으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선동가들이 평화와 질서를 교 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³²⁾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미군의 남한 점 령목적을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소련에 대한 보루의 구축으로 인식 하며 남한에 상륙했고, 이후 급진 세력이 잘 조직된 데 비해 보수 세력은 조직과 대중적 지지가 없다는 점이 점령목적을 위태롭게 하 는 것으로 간주했다.33)

³¹⁾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1987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중에서 3 장 참고.

³²⁾ 일본군이 미군에게 전달한 남한정세에 대한 정보는 정용욱, 2003 위의 책, 3장 참조.

^{33) 〈}사관기장〉 1946년 3월 8일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출판부,

해방 직후 남한의 정세와 그에 대한 하지의 인식은 점령당국으로 하여금 한국인과 내부 정세에 연루·개입하게 만들었는데, 이를 가능 하게 한 부서가 공보기구였다. 미군정 공보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맥아더 사령부 산하 심리전 파견대로 활약했던 요원들이 남한에 상륙한 뒤, 총독부 산하의 정보과를 접수하여 KRAI(Korean Relations and Information Section, 정보과)를 설치한 이래 1946 년 3월 주한미군정청 공보부(Department of Information)으로 조직 명이 확정되기까지 몇 차례의 조직적 변화를 거쳤다. KRAI는 1945 년 9월 20일 I&I(Intelligence and Information, 정보과), 1945년 11월 Public Information Section(PIS, 정보과), 1946년 2월 Bureau of Public Information(BPI, 공보국), 1946년 3월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DPI, 공보부)로 조직 명칭이 변 경되었고, 과에서 국으로, 국에서 과로 점차 그 조직적 위상이 승격 되었다.

미군정청 공보 기구는 수차례 조직 변화를 거쳤지만, 활동 목표와 조직적 체계에 따라 조직 변화를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점령 초기 공보 임무를 담당한 KRAI(정보과) 시기와, 조직적 기틀을 잡은 I&I(정보과)이후 시기가 그것이다. 이 두 시기는 활동 목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KRAI의 주요 활동 목표는 한국인과 군정의 연락관계 수립, 한국인 인사들의 심사(screen)와 미군정과의 연결(channel), 한국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 한국인들에게의 정보배포였다.34) I&I 이래의 공보 기구들의 목표는 군정 활동에 대한 공보, 한국인 여론의 수집과 분석, 언론 지도, 정당 및 신문과 간행물에 대

¹³³쪽에서 재인용.

^{34) 1948,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소장처:미국립문서관(NAII),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 관 사료참고코드 AUS179_01_05C0168_050, 원문 4쪽) (이하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로 표기)

한 등록·허가·검열·회계감사, 영화의 제작·배포·상영, 라디오 서비스 제공 등이었다.35)

활동 목표의 차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KRAI가 한국인과 군정과의 연락관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다. 이는 조직 명칭에 '한국인과의 관계(Korean Relations)'를 명시한 것에 나타나듯이 KRAI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점령군으로써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세 파악을 위해 한국인과의 접촉 창구가 필요했는데, KRAI가 이를 담당한 것이다. 공보관계자들은 9월 초부터 신문, 방송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으며, 9월 12일 하지의 '정당은 오라' 성명을 들으러 시청에 모인 사람들의 소속정당을 모두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남한 내 정당을 통제했다. 36) 즉, KRAI는 언론 상황을 파악하고, 정당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미군정이 남한정세를 파악하고 한국인에게 점령 당국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군이 상륙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공보기구 책임자가 변경되고 KRAI에서 I&I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KRAI의 책임자는 폴 헤이워드(Paul Hayward)중령이었다. 그는 전직 보도 전문가, 작가이자 몬테레이 민정요원보충대에서 군정 교육을 받았다. 군정과 보도 두 분야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고 있어서인지, 그는 공보 활동에 대한 군정 상부의 통제적 성향에 매우 힘들어했다. 단적인 예로 그는 군정 상부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혹은 말아야할지에 관한 과다한지침들을 쏟아내자, (스트레스로 인하여-필자 주) 시청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통로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 떨어지려다 간신히 저지당했다. 결국 그는 KRAI의 수장으로 역임한 뒤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환자복을 입고 본국으로 후송되었다.37)

³⁵⁾ 위의 문서, 18~19쪽

³⁶⁾ 위의 문서, 5쪽

1945년 9월 20일, 뉴먼(Glenn Newman) 중령이 초임 정보과장 대리로 임명되었다. 38) KRAI(정보과)의 책임자인 헤이워드 중령이 신경쇠약에 걸린 후, 군정장관 아놀드 장군이 급히 그에게 임무를 맡을 것을 요청하면서 정보과장으로 부임한 것이다. 그의 부임과 동시에 KRAI는 I&I로 개칭하고, 여론수집을 담당하는 여론처와 공보활동을 담당하는 공보처를 두 축으로 하는 체제로 조직의 기틀을 잡았다. 뉴먼은 정보과장 대리로 부임한 이래 이후 공보국장, 공보부장을 역임하며, 1947년 2월 군정장관대리 보좌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점령기 군정청 산하 공보기구를 책임졌기 때문에, 군정청 공보정책과 공보활동의 방향에는 그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직업군인으로, 오키나와 군정 임무를 거절했으며 한국에서의 군정 임무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즉, 그는 군정이나 공보에 대한 배경이 전무했다. 미군정 공보부에서 정치정보분석가 및 주간신문의 편집인, 출판 책임자로 활약한 아다 리크 (Ada E. Leeke)는 뉴먼의 부임에 대해 훗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점령당국이 전임 정보과장의 고국 후송 사건을 겪은 후, 홍보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일을 전담해야 고통을 적게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새로운 정보과장으로 직업 군인을 임명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뉴먼이 한국인에 대해서 알지도못했고, 군정이나 군정이 고안하는 선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매우 섬세한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만 소리 높여 외쳤으며 문제가 정교할수록 소리만 더 크게 지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39) 이

³⁷⁾ Ada E. Leeke, 1991 《When Americans Came to Korea》, Pine Hill Press, 100쪽;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4쪽

^{38) 〈}美軍政廳情報部長更迭 「헤」 中佐入院, 「뉴」 中佐新任〉 《매일 신보》 1945.9.20

³⁹⁾ Ada E. Leeke, 1991 앞의 책, 100쪽, 102쪽

를 입증하듯 훗날 군사관은 공보부장 뉴먼이 언론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일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고, 이로 인해 군정과 한국 언론간의 신뢰, 우호, 협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평가했다.40)

하지와 뉴먼이 남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들의 최측근 한국 인인 이묘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41) 미군이 진주한지 이틀 뒤인 9월 10일, 서울의 명월관에서 한국인 기자들과 미국인 기자들, 그리고 공보관계자들의 회합이 있었다. 이때 이묘묵은 《코리아타임 스》 발행인으로써 영어로 연설했다.42) 그는 이 연설에서 점령군이

⁴⁰⁾ 뉴먼 대령의 약력, 그에 대한 군사관과 아다 리크의 평가, 새로운 공보 담당자의 채용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서들 참고.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Historical Division, 1945.09.05 ~ 1946.02.02, 〈Public Information Section〉,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고코드 AUS009_41_00C0073, 원문 93~94쪽)(이하〈Public Information Section〉으로 표기)〈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4쪽, 16쪽; 1988, 《주한미군사》 2권 돌베개 간행, PartⅡ, Chapter Ⅰ, 60~62쪽; Ada E. Leeke, 위의 책, 100~102쪽

⁴¹⁾ 이묘묵은 1922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고, 1925년 오하이오주 마운 트유니온 대학 졸업했다. 1926년에는 뉴욕 시라큐스 대학에서 도서관학 석사를, 1931년 보스턴대학에서 철하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역사학을 강의하다 1934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1937년 동우회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되었으며 1938년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맡았다. 1942년 친일단체인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개편한 재단법인 야마토 쥬쿠(大和塾)에 참여했고, '황도(皇道)'학습을위해 창립된 황도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 B4%EB%AC%98%EB%AC%B5&ridx=0&tot=116)

^{42) 《}코리아타임스》는 1945년 9월 5일 창간된 해방 이후 최초의 영자 신문이다. 《코리아타임스》의 발행인은 이묘묵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신문 발행을 주도한 사람은 하경덕이다. 하경덕은 하버드대학의 정규과 정을 졸업한 뒤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928년 서울 로 돌아왔고 1931년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1945년 11월 23일 매일신보가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새로 발행할 때 부사장으

직면한 주요 문제로 법과 질서의 유지, 식량과 연료 문제, 일본인 재산 문제, 인플레이션 상태, 재일(在日) 조선인, 공산주의 동조자의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43) 시기상 그의 연설은 남한 상황을 최초로 미군 장교들과 미국인 신문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하지 장군은 이 연설의 원고를 받아갈 정도로 이묘묵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묘묵은 즉시 하지의 개인통역으로 발탁되어 9월 11일부터 하지와 주요 모임에 동행했으며, 미소공위 때 하지의 통역을 맡을 정도로 하지의 최측근으로 활약했다.44) 뉴먼이 헤이워 드 중령의 후임으로 부임하자 이묘묵은 하지뿐만 아니라 뉴먼의 개 인통역관을 맡는 한편, 뉴먼에게 한국인의 관습과 심리에 관한 문제 를 자문해주는 고문으로 활동했다.45) 미군정은 9월 28일 각 신문사 편집국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선신문주간회를 조직할 것을 요청하는 등 언론계와 연락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에 나섰는데, 이 때 이 묘묵이 조선신문주간회의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뉴먼이 공보기구에 부임한 이후 이묘묵은 점령 직후 미군정에 한국 정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통로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46)

로 영입되었다. 《코리아타임스》는 출발 당시는 일간신문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편집위원 대다수가 미군정의 요직이나 대학으로 초청되었고, 재정난에 부딪혀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다가 단명했다. 제2호는 9월 25일자, 제3호는 10월 19일자, 제4호는 11월 5일자, 제5호는 11월 25일자 등이다. 정진석, 2010 〈해방공간의 언론인들(상)〉 《신문과방송》 472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8628)

^{43) 1988, 《}주한미군사》 1권 돌베개 간행, Part I , ChapterIV, 253~254 쪽

^{44) 〈}조선동포를 위한 자주국가수립에 조선의 기능을 충분발휘. 하지군사 령관 기자단회견담〉 《매일신보》1945년 9월 12일

^{45)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17쪽

⁴⁶⁾ 김복수, 1991 《미군정의 언론정책과 한국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124쪽

이묘묵이 제공한 남한 정세 대한 정보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직전 일본군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일맥상통했다. 그는 명월관 연설 에서 여운형의 지지자들은 확실히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못 박았고, 《주한미군사》는 해방 직후의 정치 상황을 서술하며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공산당은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공 급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는데, 그 정보의 출처는 이묘묵이었 다.47) 일반적으로 공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여 론을 수집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홍보할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매체 를 통해 이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기 전후 일본군이나 한국인에게 제공받은 정보들이 모두 남 한의 정세가 공산주의에 기울어져있다는 해석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은 향후 미군정 공보활동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뉴먼의 I&I시기부터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정세 파악과 여론수집 기능이 체계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보 활동이 준비되었다. 전술하였듯이 공보기구는 I&I 시기부터 남한 정세 정보와 한국 사회의 여론을 수집·분석하는 여론처(Office of Public Opinion)와 한국인들에게 미군정의 입장과 정책, 활동을 홍보하는 공보처(Office of Public Information)를 두 축으로 조직적 체계를 갖추었다. I&I의 공보처 산하 계획계(Planning Sub-Section)는 여론처가 수집한정보를 바탕으로 공보 활동을 계획했다. 여론처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광보 활동을 계획했다. 여론처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에 관한 의견을 공보처 계획계에 제출하면, 계획계는 매주 심리적으로 중점을 둘 항목을 결정하여 주간 선전 계획을 작성했고, 특별히 강조해야할 부분을 표시한 주간 중점표를 관리했다. 비록 계획계는 공보 기구가 조직 개편을 거치며 사라졌지만, I&I의 조직을 모태로 공보부가 계속 여론 담당 부서와 공보 담당

^{47) 1988, 《}주한미군사》 1권 돌베개 간행, Part I, ChapterⅢ, 220쪽, 232쪽

부서로 나뉘었다는 점은, 이후에도 계획계의 활동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공보 기구가 수집한 남한 정세와 여론이 공보 매체를 통한 선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48)

그런데 점령초기 공보기구의 남한 정세 및 여론 수집과 공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침은 미국무부로부터 하달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미군의 남한 점령 약 한 달 뒤인 1945년 10월 13일에 이르러서야 점령당국에 최초의 민사 지침을 하달했다.「SWNCC 176/8: 한국의 미군 점령지역내 민간행정에 관해 미육군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 주는 초기 기본지령(이하 SWNCC 176/8, 또는 초기기본지령으로 표기)」이 그것이다. 초기 기본지령은 일본 항복 이후신탁통치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이 지침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로운 독립국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정치적·행정적 분리를 완전히 실현하고, 일본의 사회적·경제적·재정적 통제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는 것을 군사 점령의 목표로 명시했다.

초기 기본지령은 점령 당국이 점령 목표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그 중 하나는 점령 당국이 금지·탄압할 사상 및 선전의 내용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신도주의적(神道主義的) 및 초민족주의적 일본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계속적인 지배를 주장하는 사상의 유포'였다. 즉이 시기 국무부는 향후 한국에 자유로운 독립국을 설립하기 위해점령군이 수행할 역할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고, 일본 치하에 한국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지의 미군정이 직면한 문제가 남한에 국가 수립과 새로운 사회질서에

⁴⁸⁾ 졸고, 2010, 387~389쪽

대한 한국인의 열망이 이미 조직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미군정이 보기에는 공산주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점령지의 급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초기 기본지령의 공보 관련 지침은 '우편, 무선, 라디오, 전화, 전신, 전보, 영화, 신문을 포함한 민간통신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와 검열을 실시할 것, 이러한 통제 하에 모든 채널과 매체를 통해국내외 뉴스 및 정보 배포를 촉진하고 장려할 것, 모든 매체가 미국의 이상 및 민주주의 원칙을 배포하여 한국인들이 민주적인 한국정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기 위해 공보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 49 이는 매체의 통제와 검열을 허용했지만, 어떤 내용을 검열해야 하는지를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이상 및 민주주의 원칙',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외에 구체적인 공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국무부의 지침은 점령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고, 미군정은 자신의 판단 하에 검열과 공보의 대상과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 기본 지령을 바탕으로 미군정 공보 활동을 정책적·물리적으로 지원해줄 책임이 있는 미국의 부서는 국무부의 국제정보문화국 (OIC, Office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Cultural Affairs)과육군부 민정국(CAD, Civil Affairs Division)이었으나, 이 기구들도 대한(對韓) 공보활동에 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무부 국

^{49) 「}SWNCC 176/8: Basic Initial Directive To the Commander in Chief, U.S. Army Forces, Pacific, For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Those Areas of Korea Occupied by U.S. Forces」1945 년 10월 13일, 정용욱, 이길상 편, 1995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자료집》3, 다락방 간행 (이하 《대한정책사 자료집》으로 표기) 415~416쪽; 졸고, 2010, 380~381쪽에서 재인용

제정보문화국의 공보 계획에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범주로 묶여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1945년 11월 현재 담당자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공보활동과 관련한 미군정의 정책적·물질적 지원 요청은 본국과 미군정 공보부 간에 직통라인이 설치되지 않은 채, 항상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를(GHQ/SCAP) 통해야 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질수 없었다.50)

요컨대 미군정청 공보기구는 1946년 3월 미군정청 공보부가 설립되기까지 조직과 명칭이 변화했지만, 남한의 정세를 파악하고, 정보와 여론을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공보 기구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였다. 그리고 점령 초기 공보 기구와 연결된 한국인 요인들의 시각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공보 책임자 뉴먼의 성향은 향후 공보정책과 활동의 방향이 하지가 상륙직전부터 갖고 있던 우려, 즉 남한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을 공산주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다. 국무부가 미군정에 하달한 초기 기본지령은 점령 현지의 급박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대한정책'을 홍보하라는 일반적인 공보지침을 내리는 한편, 점령군의 매체통제를 바탕으로 한 공보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점령군은 통제할 내용과 배포할 내용을 자신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었다.

⁵⁰⁾ 졸고, 2010, 381~383쪽

2) 미군정의 언론통제 정책

앞서 살펴보았듯이, I&I(정보과)이래 공보기구는 여론 담당 조직과 공보 담당 조직을 두 축으로 하고,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 직적 체계를 정립했다. 1946년 3월 미군정청 공보국이 미군정청 공 보부로 승격되면서 산하의 여론 담당 조직은 여론국, 공보 담당 조 직은 공보국으로 승격되었다. 조직의 명칭이나 위상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보기구가 I&I 이래 각각 여론과 공보를 담당하는 두 조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군정청 공보 기구의 최종 명칭인 공보부 및 산하 공보국과 여론 국으로 조직명을 통칭하겠다.

공보부 공보국의 공보 활동은 공보부 여론국이 수집한 남한 정세 정보와 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여론국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여론국은 직접 정보를 수집했다. 대표적으로 주간보고서 〈정치동향(Political Trends)〉(이하 〈정치동향〉)과 〈여론동향(Opinion Trends)〉(이하 〈여론동향〉)이 그것이다. 〈정치동향〉은 여론국 정치조사과에서 발행하는 주간보고서로, 한국인 정치지도자들과의 면담 및 각종 중요한 정치 모임에 참석하여 수집한정보를 종합·분석한 것이다. 〈정치동향〉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정보일지(G-2 Periodic Report)에 실리는 등 정보참모부와 정세 분석을 공유했다. 〈여론동향〉은 여론국 여론조사과가 서울과지방을 대상으로 정기 및 비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작성한 주간 보고서이다. 군정 상부는 주간 단위로 작성되는 공보부 여론국의 보고서들을 통해 남한 정세 및 여론의 추이를 발 빠르게 파악했다.

공보부가 수집한 정보를 정보참모부에 제공하고 정보참모부도 수 집한 첩보를 공보부에 제공함으로써, 공보부와 정보참모부는 정세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했다. 특히 여론국 조사과는 그 어떠한 첩보라도 군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준비하는 정보수집기구로써, 정보참모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51) 정보참모부와 공보부 여론국의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민공화국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아 다 리크(Ada.E.Leeke)에 따르면 미군이 진주할 무렵 여운형의 건국 준비위원회가 정부 기능을 맡았는데, 이에 대해 깜짝 놀란 하지가 즉각 인민공화국과 모든 인민위원회를 부정했으며, 동시에 공보부에 '그들을 경계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정치적 공백 있는 한국의 지방(provinces)을 탈취하려는 폭력단 상태에 (syndicate)이라고 묘사한 24군단 첩보들이 공보부로 하달되었 다.52) 아다 리크는 공보부로 24군단 첩보들이 내려왔다고만 서술했 지만, 당시 24군단의 첩보기구들이 정보참모부와 그 산하 방첩대 (CIC) 및 민간통신검열대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첩보들의 출처 문서는 정보참모부 정보일지(G-2 Periodic Report), 방첩대의 정보 보고서, 민간통신검열대(CCIG-K)의 검열보고서 등이었을 것이다.

여론국은 자체 조사와 정보참모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한국의 정세와 여 론 동향을 조사하는 일차적인 창구로 삼았다. 해방 직후 정론지(政 論紙)의 성격을 띠는 다양한 신문들이 발행되었는데,53) 여론국은 서 울에서 발행되는 민간 신문들의 핵심 기사들을 매일 영어로 번역하 고 이를 토대로 〈언론요약(Press Summary)〉(이하 〈언론요약〉)

⁵¹⁾ 졸고, 2010, 389~391쪽

⁵²⁾ Ada E. Leeke, 1991 앞의 책, 23쪽

⁵³⁾ 해방 직후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에 대해서는 박용규, 1992 〈미군정 기 중간파 언론-설의식의 《새한민보》를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한국언론정보학회, 168~169쪽; 박승관, 강현두, 조항제, 박용규, 1996〈해방 50년: 한국언론과 사회변동〉《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60~161쪽 참고.

을 작성했다. 한국 신문 기사들은 〈정치동향〉 에서 남한 정세를 분석하는 데 주요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공보부가 매일 작성한 〈언론요약〉은 정보참모부 정보일지(G-2 Periodic Report)에 첨부되었다.54)

미군정은 한국 언론의 동향을 점검하거나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 매체를 적극적으로 통제했다. 비록 하지는 남한에 진주한 직후 신앙의 자유와 언론·사상의 자유를 약속했지만,55)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군정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점령당국의 치안에 방해되지 않는 선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했다.56) 1945년 9월 12일 군정청 정보과장 헤이워드(Paul Hayward) 중령은 기자단 회견에서 언론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연합군에 불리한 것 이외에는 계출이나 검열은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으며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서 제외될 것은 당연하다고 언명했다.57)

또한 1945년 9월 23일 신임 정보과장 뉴먼은 각 신문사 편집책임자와의 회견에서 언론 통제에 대한 한층 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뉴먼은 미군으로서는 신문검열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으나낭설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 등의 일이 있다면 상당한 고려를 해야만 하며, 언론자유를 남용하면 검열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사태 여하에 따라서는 압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일 무책

^{54)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 - 1981; Record Group)(Series: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G-2 Periodic Report》1946.4.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해외화국관련기록물

^{55) 〈}法律과 秩序를 維持. 命令嚴肅히 직히라〉《매일신보 호외》 1945 년 9월 9일.

^{56) 〈}法律과 秩序를 維持. 命令嚴肅히 직히라〉《매일신보 호외》 1945 년 9월 9일.

^{57) 〈}言論, 結社等은 自由〉 《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

임한 풍설이 전파되어 치안을 문란시키는 일이 있다면 미군당국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58) 즉 미군정은 명목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표방했지만, 미군정에게 불리한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언론 통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미군정은 건물, 인쇄기 등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이용해 언론계의 지형을 개편하고자 했다. 해방 직후부터 1946년 전반기까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발행 부수가 많았던 신문들은 진보 적 민주주의와 민족반역자 처단을 표방한 진보적 성향의 신문과 중 도 좌익 성향의 신문들로, 《조선인민보》 《자유신문》 《중앙신 문》 등이 대표적이다.59) 언론계를 주도한 신문들이 대체로 해방 직후의 새로운 질서, 국가 수립에 대한 전망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 문에 미군정은 언론계의 지형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해방 직전 전북 도내 유일 한 일본어 신문이었던 《전북신보》의 시설을 이용하여 1945년 8 월 17일 전주에서 창간한 《건국시보》는 조선 건국 전라북도 임시 위원회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했다. 광주에서는 전남 건준이 전남 도 내 유일한 일본어 신문이었던 《전남신보》의 시설로 1945년 8월 31일 《전남신보》를 발행했다. 대구에서는 건준이 대구 지역 유일 신문이었던 《대구일일신문》을 인수하여 1945년 10월 3일 《대구 일보》를 창간했다.60)

^{58) 〈}日本人들 送還에 全力中. 巷間의 浪說을 嚴戒. 官吏逐出謀略과 住民 들 虐待치말라〉 《매일신보》 1945년 9월 23일.

⁵⁹⁾ 김영희, 2000,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적 역할-모스크바 3상회의 한 반도 관련 의정서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36쪽

⁶⁰⁾ 최준, 1965 〈韓國新聞解放20年史(1)〉 《관훈저널》9, 관훈클럽, 4쪽; 윤덕영, 1995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16, 한국역

미군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신문들을 존속시켰지만, 귀속재산과 시설을 이용해서 우익지의 발행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동아일보》가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 《경성일보》사의 인쇄시설을 지원받아 1945년 12월 복간되었다.61) 한편 미군정은 해방 직후 국문지 발행을 위한시설을 완비하고 있던 유일한 신문사인 조선총독부의 국문 기관지《매일신보》사를 접수하여 우익 인사로 간부진을 편성했으나, 《매일신보》 자치위원회가 이를 반대하자 《매일신보》의 재정상태를이유로 신문을 정간하였다. 이후 군정장관과 매일신보 관계자가 회합하여 《조선일보》와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 하에 제호를 《서울신문》으로 변경하여 속간했고, 이에 1945년 11월 《조선일보》가 복간되었다.62》지방에서도 도 군정이 진주한 직후 신문사를 접수하는 한편 우익 언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언론 구조에 대응했다.63》

언론 통제는 언론 법령의 제정 및 운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미군이 남한에 상륙하기 하루 전인 1945년 9월 7일 맥아더 사령부가 선포한 포고령 3종 중 하나인 포고령 2호는 '범죄 또는 법규 위반'으로서, 범죄 행위에 대해 모호한 범주를 상정해 놓았고, 최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⁶⁴⁾ 점령당국은 공보부가 매일 작

사연구회, 369~376쪽

⁶¹⁾ 윤덕영, 1995 앞의 논문, 348~349쪽

⁶²⁾ 최준, 1965 앞의 논문, 5~6쪽, 윤덕영, 1995 위의 논문, 18~19쪽

⁶³⁾ 유종원, 김송희, 2005 〈미군정기 지역언론 특성에 관한 연구-광주지 역 신문을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제5권 2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87쪽

⁶⁴⁾ 포고령 2호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항복 문서 또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표한 포고·명령·지시를 위반한 자, 미국인과 기타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자, 공중치안·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 〈美軍總司令官布告〉 《매일

성한 한국 신문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포고령 2호를 근거로 신문들을 징계했는데, 포고령 2호는 범죄를 불명확하고 포괄 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군정이 자신의 판단 하에 언론을 통제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다.65)

포고령 2호처럼 법령의 목적이 통제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언 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제 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1945년 10월 30일 공표된 법령 제19호 는 인쇄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문, 서적의 출판 사무를 운영, 유지하는 기관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했는데, 이 정보들은 언론 취체에 이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앞에 서 짧게 살펴본 1945년 11월 《매일신보》의 정간 과정을 들 수 있다. 일본이 패망한 당일 《매일신보》는 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의 신문위원회와 협력하여 《해방일보》 로 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17일 일본군이 자치위원 회를 해산시키면서 이는 무산되었고, 10월 2일 미군정이 《매일신 보》를 접수했다. 10월 10일 아놀드 군정장관은 인민공화국을 부인 하는 성명을 모든 신문 1면에 게재할 것을 '명령의 성질을 가진 요 구'라고 언명했다. 《매일신보》 제1판은 이를 게재했지만, 편집부 내의 노동자위원회가 이를 삭제한 채 2판을 판매했고, 신문책임자가 이를 발견한 뒤 제3판에는 성명서가 즉시 다시 수록되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정은 한국인 주주 총회를 열어 간부진을 새로 구성하려 했으나, 자치위원회가 이를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얼마 뒤인 11월

신보 호외》 1945년 9월 9일. 1945년 9월 9일 미군과 일본군의 항복 문서 조인식이 있었다. 이를 알리는 《매일신보 호외》가 발행되었는데 이때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령이 2면에 게재되었다. 맥아더 사령부의 포 고령은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나 《매일신보 호외》에 실린 기사는 9월 9일에 제정된 것으로 표기되었다.

^{65)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20쪽

10일, 군정청 광공국의 장교가 《매일신보》사에 나타나 구두로 신문사가 폐쇄될 것을 고지했고, 이틀 뒤 열린 신문기자회견에서 뉴먼대령은 《매일신보》가 어음을 다량 발행했고 회계장부가 엉망이므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신문사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는 1945년 11월초 여론국이 《매일신보》의 회계장부를 조사했으며, 조사를 맡은 장교가 《매일신보》의 회계가 "알 카포네의 수입구조와 같았다"고 밝혔다면서 뉴먼의 주장을 뒷받침했다.66)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여론국장이었던 윌리암 라헤트 (William F. La Hatte) 소령이 1945년 12월 군사관과의 인터뷰에서 《매일신보》 정간과 여론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점이다. 그는 군정이 《매일신보》를 정간 할 때 자신들도 매우 놀랐고, 여론국은 당시 신문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매일신보》의 회계장부 조사와 여론국은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67) 여론국장의 발언은 미군정 공보정책을 공보 활동의 측면에서만 파악하기보다는, 미군정의 정치적 필요성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매일신보》의 정간 과정은 미군정이 통제하는 여론의 종류를보여주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실제로 운영된 방식과 목적을 보여준다는점에서 중요하다.

신문뿐만 아니라 기타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영화는 사전 검열되었다. 1946년 4월 12일 발표된 법령 제 68호 '활동사진의 취체'에 의해 조선 내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영어로 번

^{66) 《}매일신보》 정간에 대해서는《주한미군사》 2권 돌베개 간행, Part II, Chapter I, 65~68쪽,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32~33쪽 참고.

^{67) 〈}Public Information Section〉, 99~100쪽

역되어 공보부에 제출된 뒤 검열을 받았다. 또한 라디오는 미군정이 직접 접수하여 프로그램을 감독, 제작, 통제했고, 1946년 3월부터는 국영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미군정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였다.⁶⁸⁾

미군정은 신문, 영화, 라디오 등 언론 기관을 통제하는 한편, 점령 직후 사적 매체인 전단과 벽신문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했다.69) 이 는 출판 등록제와 더불어 국가비상시기를 선포한 군정법령 제19호 에 근거했다. 이 법령은 맥아더사령부의 포고령에 기초한 것으로써, 전단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공보국장이었던 튜크(David Tuke)소령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오히려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70)71)

^{68) 1946}년 10월 8일에는 군정 법령 제115호 '영화의 허가'가 공포되어 공보부의 영화 허가제가 규정되었고, 허가 없이 배급·상영한 영화는 몰수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1945년 9월 16일 경성중앙방송국과 산하 9개의 방송국을 접수했고, 정보과가 방송 프로그램을 감독, 제작, 통제했다. 1946년 3월부터는 중앙방송국이 공보부에 흡수되면서 공영체제에서 국영체제로 전환되었다. 미군정의 영화 검열에 대해서는 정근식, 최경희, 2011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질문과 과제- 식민지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 (1945~1952)〉 《대동문화연구》 제74집, 26~32쪽 참고.; 미군정의 언론 귀속재산 접수와 운영에 대해서는 김민환, 1995 〈미군정의 언론정책〉 《언론과 사회》 1995년 여름 통권 제8호, 18~28쪽 참고.

^{69) 〈}정치동향〉 2호 1945년 10월 26일; 〈정치동향〉 3호 1945년 10월 29일, 1988-89, 《주한미군 정보일지 부록》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간행 (이하 〈정치동향〉으로 표기)

^{70) 〈}Public Information Section〉, 97쪽

⁷¹⁾ 예를 들어 《매일신보》는 서울 시내에 일본인은 전부 조선에서 철거하고 집을 내어놓으라는 삐라를 뿌린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선전행동을 삼가라며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령 2호를 언급한 군정청 발표를 실었다. 〈日人退去順調進陟. 治安秩序를 紊亂히 말라〉 《매일신보》 1945년 10월 27일; 또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한 뒤 붙은 삐라에 대해서 제1관구 경찰청장 장택상은 하지 성명에 대해 반대 또는 공격하는 내용을 품은 벽삐라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로 하지 중장 성명서를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군정포고령에 배치·위반되기 때문이

여론국의 〈정치동향〉은 1946년 1월 보고서 형식이 바뀌기 전까지 벽신문과 전단 현황을 보고하는 항목을 두었고, 훗날 주한미군사 령부 미국공보원이 1947년 7월부터 12월까지 면·리 단위의 남한 지방을 시찰하며 실시한 현지조사는 벽신문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72) 이는 점령당국이 전단과 벽신문을 여론을 움직이는 주요 요소로, 그리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미군정은 공적 매체와 사적 매체를 모두 통제했고, 특히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매체에 대해서는 귀속 재산 처분을 통해 언론 지형을 개편하거나 언론의 사후 검열과 법령을 통해 그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장(場)을 설정했다.

미군정은 여론이 공적으로 표출되는 장(場)을 설정하는 동시에, 직접 그 속에 뛰어들어 목소리를 냈다. 신문, 영화, 라디오 방송, 서 적 등 여러 가지 매체가 미군정을 대변했다.73) 그 중에서 신문은

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1946년 5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에서 재인용.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dh&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dh_002_1946_05_11_0120&position=-1

⁷²⁾ 주한미국공보원이 실시한 지방 현지 조사에 대해서는 조민지, 2015 〈1947년 하반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현지조사와 지방여론〉 서 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고

⁷³⁾ 공보부가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공보부 산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었고, 공보부가 제작한 뉴스 영화가 귀속 재산인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또한 귀속재산인 조선서적주식회사를 군정의 모든 인쇄물을 인쇄하는 데 이용했다.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6~9쪽; 공보부 영화과가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는 김한상, 2011 〈1945~48년 주한미군정 및 주한미군사 령부의 영화선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작품을 중심으

남한 전역에 유통시킬 수 있었고,74)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남한 정세에 대한 군정당국의 입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여론이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미국의 대한정책에 유리하지 않았음을 남한 상륙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던 미군정은, 여론을 재편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직접 국내 현안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과 미국의 대한정책을 적극 홍보할필요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전국에 발송할 수 있는 신문 매체는 미군정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였고, 공보부는 독자적으로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주간신문을 발행하여 배포했다. 서울과 지방 도시용 《주간신보》와 농촌용 《농민주보》가 그것이다.

로〉《미국사연구》 제34집 미국사학회, 183~187 참고.

⁷⁴⁾ 신문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라디오는 서울주민이 전체 라디오의 62%를 소유했다. 극장 또한 큰 도시에만 96개가 존재했다. 라디오 수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이는 바다에 뱉은 침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인구에 비해 극히 적은 수였고, 미군정이 배포한라디오 수신기는 상당수가 수리 중에 있었다. 미디어 보급이 서울에 편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영희, 2010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수용: 1880~1980》커뮤니케이션북스, 156~165쪽; Ada E. Leeke, 1991 앞의 책, 101~102쪽

2. 공보부의 주간신문 발행

1) 공보부의 《주간신보》 《농민주보》 발행

1945년 10월 15일 미군정 공보부는 도시용 무료 주간신문 《주간신보》를 창간했다. 미군 진주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창간이었다. 공보부는 1945년 10월부터 주간보고서 〈정치동향〉을 작성했는데, 이 시기부터 언론과 전단 및 벽신문을 분석하는 동시에 《주간신보》를 도시 지역에 배포함으로써 신속하게 도시 지역의 여론과 정세에 개입하고자 한 것이다. 《주간신보》는 군정의 중요한 보도자료, 포고령, 발표 등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미군정은 이를 통해 많은 전단들을 별도로 인쇄하고 배포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75) 이는 《주간신보》의 발행 의도가 미군정의 입장을 선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간 당시 편집자는 알 수 없지만, 1946년 여름부터 1947년 4월 《주간신보》가 폐간될 때까지 편집자는 아다 리크(Ada E Leeke)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1910년 탄광 사업을 위해 식민지 조선에 부임하여, 1914년 황해도에서 아다 리크를 낳았다. 그녀는 1943년 미국 조지아 Fort Oglethorpe에서 소위로 임관했고, 1944년 버지니아 대학교의 군정학교에 입대했으며, 이후 스탠포드 대학교 민정학교를 거쳐 Civil Affairs Staging Area에서 Post Newspaper의 부편집장을 역임했다. 즉, 아다 리크는 한국 거주 경험, 민정 관련 교육, 공보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1945년 10월부터 공보부 정치분석가로 역임하며 한국인 정치가와 한국 정세를 분석을 담당했고, 러치 군정장관의 연락 장교로도 일했다. 아다 리크와 같

^{75) 〈}Public Information Section〉, 14쪽

이 한국 정세에 능통한 사람이 《주간신보》의 발행을 책임졌다는 것은 군정 당국이 《주간신보》가 한국 정세 변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행되기를 의도했음을 보여준다.

《주간신보》는 타블로이드지 2면으로 구성되었고, 기사는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되었다. 창간호로 40만부가 발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에 이를 80만부로 증간할 계획이 세워져 늦어도 1946년 1월부터는 80만부가 발행되었다. 76) 공보부 공보국 출판과에서 《주간신보》의 기사들을 제작하면 생산과에서 《주간신보》에 실릴 만화와 삽화들 및 신문의 레이아웃을 준비하고 인쇄했다. 생산과의 생산 책임량 외에 20만부는 조선공인사(the Chosen Printing Company)에서 인쇄되었다. 77) 인쇄된 신문은 우편을 통해 지방으로보내졌다. 78)

주목할 것은 《주간신보》가 도시민을 독자층으로 삼았으나 사실 상 서울의 독자를 가장 중시했다는 점이다. 서울에 배포할 《주간신 보》의 내용은 지방에 배포할 《주간신보》의 내용과 종종 차이를 보였다.79) 또한 서울용 《주간신보》는 지방용과 다른 인쇄소에서 인쇄되었는데, 서울용 《주간신보》는 한국어 번역본이 완성되는 즉

^{76)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 1〉 195쪽, 이길상 편, 1990 《미군정 활동 보고서》 1권, 184쪽;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2〉 194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1권 378쪽;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4〉 291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1권, 870쪽

^{77) 〈}Public Information Section〉, 58쪽

⁷⁸⁾ 위의 문서, 72쪽

⁷⁹⁾ 예를 들면 1946년 8월 7일자 영문판 《주간신보》 42호는 서울판 (Seoul Edition Only)에만 싣는 기사로 "Ration Increase Defends on Summer Grain"이 있었다. 또한 서울판과 지방판에 세계뉴스 소식을 다르게 실었다. 1946.08.07. 〈The CHUKAN Digest No. 42〉 소장처: 미국립문서관(NAⅡ),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고코드 AUS179_01_05C0065_002)

시 고속윤전기에서 인쇄되어 다음날 아침 서울의 신문들과 경쟁하 기 위해 배포되었다.80)

공보부가 공보 대상으로 서울 지역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히 중시한 것은 당시 서울이 정치·문화의 중심으로 서울의 여론동향이 가장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민간 신문발행 부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발행된 주요 신문들만이 1주일에 6번 발행되었으며, 주간 및 다른 정기간행물들도서울에서 발행되었다.81) 공보부가 매일 작성한 〈언론요약〉은 서울에서 발행된 신문을 분석했고, 주간으로 작성한 〈정치동향〉도서울에서 발행된 신문들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았다. 미군정은 서울의 신문들을 한국 정세를 파악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삼았고, 《주간신보》의 독자 중에서도 서울의 독자를 가장 우선으로 삼았던 것이다.82)

《주간신보》가 서울의 독자를 주요 독자로 파악했다는 것은 1947년 1월에 이르러 《주간신보》 서울판이 별도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때부터 서울시가 제공한 기사를 《주간신보》에 뒷면에 게재하여 서울시의 시정 활동을 홍보했다.83) 공보부는 우선 《주간신보》 서울판을 발행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각지방판을 발행함으로써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⁸⁰⁾ Ada E. Leeke, 1991 앞의 책, 104쪽

⁸¹⁾ 김영희, 2010 앞의 책, 157~159쪽

⁸²⁾ 미군정이 서울 지역의 여론을 특별히 중시했다는 점은 서울에서 여론 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서울의 여론만을 조사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지방의 경우 도시와 도회지를 중심으로만 여론조사가 시행되었으며, 한국인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주제들을 다룬 정기 여론조사만이 실시되었다. 송재경, 2014 《미군정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적 동향》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2쪽

^{83) 〈}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14〉 88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3권, 317쪽

있었다.84) 그러나 1947년 4월 《주간신보》는 용지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폐간되는데,85) 이는 1947년 6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새로 운 주간신문인 《세계신보》를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공보부는 《주간신보》를 창간한 지 약 두 달 뒤인 1945년 12월 22일에 《농민주보》를 창간했다. 《농민주보》는 공보부가 농촌에 배포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신문이었다.86) 타블로이드 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순 한글로 작성된 신문으로, 창간호부터 80만부가 인 쇄되었다. 미군정은 《농민주보》의 인쇄를 위한 시설과 경비에 대한 경제보국회를 이용했다. 대한경제보국회는 1945년 12월, 이승만이 조직한 친일경제인 조직으로, 표면적으로는 미곡 수집 촉진을 목표 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곡 문제의 해결 과정에 이승만의 도움을 받아 그의 정치적 위신을 고조시키고 그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 려는 미군정의 의도와, 정치 자금을 확보하려는 이승만의 요구, 그 리고 우익 진영의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여 과거 친일 행 적에 대해 면죄부를 얻고 경제적 이권을 얻으려는 친일 경제인들의 의도가 결합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미군정은 《농민주보》의 인쇄 를 《한성일보》에 맡겼는데, 《한성일보》는 《농민주보》를 제작 해준다는 조건으로 《경성일보》시설 관리권을 넘겨받았으며, 하지 의 승인 하에 경제보국회에 대부된 차입금 2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 이 《농민주보》의 발간 비용으로 《한성일보》측에 제공되었다.87) 민간 신문들이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을 감

안했을 때 미군정이 농촌을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한 것은 매우 이

^{84) 〈}週間新報에 地方版〉 《독립신보》 1947년 1월 24일

^{85) 〈}軍政週刊新報休刊〉《독립신보》 1947년 4월 13일

^{86)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22쪽

⁸⁷⁾ 대한경제보국회와 《농민주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역사비평사, 580~593쪽

례적이었다. 이는 당시 농촌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미군정의 우려에 기인했다. 미군이 상륙했을 때, 인민공화국(이하 인공)은 이미 도, 시, 군을 넘어 마을 단위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88) 당시 여론국 라헤트(W.F.LaHatte) 소령은 1945년 12월 지방순회 후 인공의 힘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은 모든 수준에서 정부로 조직되어 있어 인공과 공존할만한 다른 조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주간 보고서 〈여론동향〉에 명시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군정의 개입 없이 인공에 대항해 번성할 수 있는 조직은 전무하다고 판단했다.89)

당시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농민들의 정치적 성향 혹은 견해가 미군정과 상충한다는 것은 군정이 향후 남한을 통치하는 데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지방에까지 침투시키고 폭압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여 농민들을 장악하고 통치했지만, 미군이 이와 같은 지방 장악력을 갖기란 불가능했다. 이에 미군정은 농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농민주보》를 발행했다.

순 한글 신문을 통해 말단 농가의 한국인을 설득한다는 발상은 이미 일제 하 전시체제기에 존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3월부터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주간신문(週刊新聞) 《새소식》이 그 예이다.90) 이 신문은 '국어를 아직 모르는 반도 민중 가운데

⁸⁸⁾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1987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144쪽, 345쪽

^{89) 1988, 《}주한미군사》 2권 돌베개 간행, Part I Chapter I, 17쪽

⁹⁰⁾ 최준의 《한국신문사》에는 1945년 5월에 창간되었다고 보았으며, 윤임술의 《한국신문백년지》에는 3월 중순, 정진석의 《언론조선총독부》에는 3월 8일 창간되었다고 보았다. 《매일신보》 1945년 3월 5일자에 오는 8일에 '새소식'이라는 언문신문을 따로 발행한다는 기사로 보아 정확한 것은 3월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문 판형에 대해서는 최준은 타블로이드형 절반 4면, 윤임술은 타블로이드판, 정진석은 타블로이드형 절반 4면으로 보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 2009

에서 한층 정도가 얕은 사람들'에게 시국을 알려 '이 전쟁을 싸워이기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기사와 '증산에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순 한글로 작성했다.91) 발행부수는 20만부였으며 애국반을 통해 배포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폐간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새소식》의 필요성을 경무국에 진언하고, 《매일신보》사 특수신문부 부장을 맡아 이 신문의 발행을 주도한 최병협(崔秉協)이라는 인물이 《농민주보》 사설의 주요 작성자라는 것이다.92) 1896년 1월 14일 출생한 그는 1915년 경성보통고등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이후 함경북도 서면공립보통학교 등함경북도의 보통학교들에서 훈도를 역임했으며, 1927년부터 1930년까지는 함경북도 도 시학(道 視學)에 재직했다. 1933년부터 1934년까지는 경기도 내무부 지방과 촉탁으로 임명되었고, 1935년부터 1937년까지는 충청북도 도 시학에 재직했으며, 1938년부터 1941년까지는 충청북도 옥천 군수를, 1941년부터 1942년까지는 충청북도 영동 군수에 재직하는 등 식민지 시기 고위 관료로 재직하면서 일제 식민통치를 선전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다. 이에 일본정부로부터 1937년 훈8등 서보장, 1939년 훈7등 서보장, 1941년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93) 그의 일제 침략전쟁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1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881~884쪽

^{91) 〈}새 언문 신문 오는 8일부터 발행〉 《매일신보》 1945년 3월 5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 2009 위의 책, 884쪽에서 재인용.

⁹²⁾ 최병협은 1945년 《매일신보》의 특수신문부장에 재직하며 《새소식》을 창간했는데, 특수신문부라는 것이 그가 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존재하던 부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1991 〈한일합방으로민족언론 자취감취 매일신보는 총독부기관지로 전락 -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의 사람들: 기획연재 - 인물로 본 한국언론 100년(6)〉 《신문과 방송》 제252호, 서울언론진흥재단, 58쪽

⁹³⁾ 최병협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 2009 위의 책,

는 1938년 단행본 《조선의 여명》을 저술하여 지원병을 선전하고 선동한 것, 조선인 최초의 지원병 전사자인 이인석의 죽음을 미화하 는 글을 기고하고 충혼비 건립을 주도한 것 등이다.94)

군수로서의 활동이 그의 친일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농촌계몽 운동에 관한 이력은 그와 농촌의 접점을 보여준다. 그는 경기도 내 무부 촉탁으로 있으면서 농촌계몽운동 야학교사 강습회 강사로 임 명되어 파견되었고, 직접 농민 독본류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95) 해방 후에는 미군정 하에서 조선농회의 교화부 부부장과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고, 군정청 학무국의 성인계몽운동 강사로도 활동했 다.96)

http://www.ibuk5do.go.kr/5do/frt/sub/a07/governorRecord.do; 〈京 畿道農村啓蒙 夜學教師講習會 講師로 崔秉協囑託을 任命派遣 十七日부 터 巡回開催〉 《매일신보》 1934년 5월 10일

^{870~886}쪽.

⁹⁴⁾ 그가 1939년 7월 11일 《경성일보》에 게재한 〈이 어버이에 이 자식 있다〉는 "(전략) 이군은… 반도에서 태어나 황국신민으로서 책무를 다했고… 용사 이군은 말없이 모범을 보인 것이고… 그 유족은 군인가족의 귀감이다. (후략)"라며 지원병의 전사를 미화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편, 2009 앞의 책, 870쪽~873쪽. 《경성일보》 기사는 873쪽에서 재인용.

⁹⁵⁾ 최병협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농촌과 농민에 관한 저술활동을 했다. 1955년에 간행된 《농촌을 살리는 길》, 생활과학사, 1959년에 간행된 《농촌문제백서》 등이 그것이다. 또한 1962년 4월부터 1966년 9월까지 제3대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를 역임했다.

^{96) 《}조선일보》 1946년 1월 8일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에서 재인용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dh&synonym=off &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 n=0&levelId=dh_001_1946_01_08_0150; 〈腦裏서 「日帝」抹消 成人 啓蒙隊 各地巡回〉 《동아일보》 1946년 1월 29일; The G-2 Historical Section of the XXIV Corp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n and its Predecessor Organization, 〈Historical Report, Dept of Agriculture, 1 July - 15 Aug. 1948: Chapter II -

최병협은 조선농회와의 연관성 하에서 《농민주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주보》에는 최병협이 작성한 사설이 5차례 등장한다.97) 《농민주보》 사설의 총 개수가 24개라는 점과, 1947년도에는 사설이 오직 두 개만이 실렸는데 그 중 하나가 최병협의 사설이라는 점은 그가 《농민주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98) 따라서 순 한글 신문 《농민주보》를 통해 말단의 한국인에게 미군정의 입장을 설득하고 미군정에 대한 협력을촉구한다는 발상은, 최병협이 일제 시기 순 한글 신문《새소식》을 애국반을 통해 말단의 한국인에게 유포하고 전시체제 협력을 선전한 경험을 전수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매주 토요일 발행되어 80만부씩 무료로 배포되던 《농민주보》는 용지난으로 인해 1947년 7월부터 격주로 발행되었고,99)발행부수도 30만부로 감소했다.100)편집 책임자는 창간호부터 1947년 6월까지데오도르(Augustus J. Theodore) 육군 대위가 맡았고, 《주간신보》가 폐간되면서 편집자였던 아다 리크(Ada E. Leeke)가 《농민

Organization, Chart, Personnel, Relationship to Other Organizations, Progress Reports, Bur Fisheries, Bur Forestry, KAA, Supply Section, Vested Business, Problems of Organizatio n〉 소장처:미국립문서관(NAII),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고코드 AUS179_01_05C0043_033, 원문 6쪽)

^{97) 1946}년 6월 8일자 25호의 〈우수한 민족성을 발휘〉, 46년 7월 7일 자 31호의 〈원인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1946년 8월 31일자 35호 의 〈경제의 근력을 세우자〉, 1946년 10월 26일자 42호의 〈농촌의 병태〉, 1947년 3월 15일자 62호의 〈농촌으로 농촌으로〉

⁹⁸⁾ 총 24개의 사설 중 최병협 이외에 필자가 확인되는 사설은 두 건이 존재한다. 하나는 1946년 5월 18일자 22호에 조선농회 고문 우리암이 작성한 〈청년은 국가의 꽃〉이고, 다른 하나는 1946년 7월 6일자 29호에 실린 박규서의 〈농민교육〉이라는 사설이다.

^{99) 〈}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22〉 98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4권, 90쪽

^{100)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23 1947.8〉 212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4권

주보》의 편집 책임을 맡았다. 한편 창간 당시 주간은 소설가 방인 근(方仁根)이었다.101)102) 1930년대 대중작가로 명성을 얻은 방인근은 1940년대에 《매일신보》와 방송국을 통해 일제의 전쟁을 선동했는데, 《매일신보》와 방송국을 매개로 해방 이후 《농민주보》의 주필로 발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방인근은 《농민주보》에 한국인을 동물원에서 탈출한 원숭이에 빗대어 미군에게 감사하는 내용의글을 게재하기도 했으나,103) 그의 글은 《농민주보》 2회에 실린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가 언제까지 주필로 활약했는지는 알 수 없다.

《농민주보》의 주필이 방인근으로 홍보되었지만, 그는 소설가로 서 글을 게재하는 것 외에 주필이나 주간으로서 신문의 논조와 방

^{101) 〈「}농민주보」 發刊〉 《중앙신문》 1945년 12월 10일

¹⁰²⁾ 방인근의 호는 벽파(碧波), 춘해(春海)로, 1899년 충남 예산에서 태 어났다. 배재학당, 교토의 리츠메이칸, 중앙대학 독문과에서 수학했다. 1924년 이광수와 함께 종합문예 월간지 《조선문단》을 창간하고, 1929 년 양주동과 함께 《문예공론》등을 발행했지만 거듭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했다. 이에 1930년대부터 잡지 편집자로 활동했고, 1933년부터 《동아일보》에 〈마도의 향불〉을 연재하며 대중작가로 명성을 얻었 다. 이후 장편소설을 《매일신보》와 《조선일보》 등지에 잇따라 발표 했다. 1939년 10월 국민문학의 건설, 내선일체의 구현, 총력전 수행에 적극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문인협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 다. 1940년 초부터 친일적인 집필활동과 방송활동에 의욕을 보였고, 1943년에는 경성방송국 촉탁으로 활동하며 군국명부전(軍國名婦傳)을 제작해서 연속 방송하여 조선인의 전쟁동원을 선동했다. 또한 1944년 4 월《매일신보》에 산문 〈전승의 기원-조용자 무용발표회를 보고〉를 이틀간 게재하여 무용은 현 시국 하에 건전 명랑하고 육체문화운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비평하는 등 일제 전쟁에 협력했다. 해방 이후에 는 1946년 3월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에 참여했고, 1949년 12월 한국 문학가협회에 관여했다. 1954년에는 춘해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자작 소 설을 영화화하는 데 주력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친일인 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177~179쪽

^{103) 〈}원숭이가 말한다〉 《농민주보》 2호 1945년 12월 29일

향을 결정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술하듯이 공보부장, 주한미사령관, 군정장관은 공보할 주제와 묵인할 주제를 세세히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신문에 투영할 여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간신보》가 작성되는 과정에서도 공보부 한국인의 역할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주간신보》편집자였던 아다 리크는 영어로 작성된 군정의 보도자료, 세계뉴스, 사설들을 자신이 작성하거나 재작성 또는 편집하고 한국인이 번역하여 《주간신보》에 게재했다고 기록했다.104)한국인의 기사 작성에 관한 언급은 《주간신보》 3호 발행 준비에 관한 문서에 유일하게 등장한다.105)이 문서는 한국인 작가 두 명이 《주간신보》의 중요한 뉴스 이야기들을 작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간신보》를확인해보면 특정 기사에 두 명의 한국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이문서상에 나타나는 한국인 작가 두 명인 것으로 보인다. 조한공(趙漢兢),106) 곽우불(郭牛佛)107)이 그들로, 이들은 1946년 6월 26일자

¹⁰⁴⁾ Ada E. Leeke, 1991 앞의 책, 103~104쪽

^{105) 〈}Public Information Section〉, 58쪽

¹⁰⁶⁾ 조한궁은 1946년 미군정청 공보부 보도관계 직원으로 들어와서 1947년 6월 서울중앙방송국 방송과 편집계로 전근되었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초대 사무관으로 승격되었다. 1951년 서울 수복 선발대에 보도기자를 대표하여 참여하기도 했으며, 1957년 공보부 방송관리과지도계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리자로서 수련하고, 1958년 8월 춘천방송국장으로 승진하였다. 1947년부터 약 10여년간 방송뉴스 편집자로 활약하여, 1958년 초까지,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기에 뉴스아이템을 선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김성호, 2014《한국방송기자 통사》 21세기북스, 58~59쪽, 191~195쪽

¹⁰⁷⁾ 곽우불은 1915년 전남 진도 출생으로, 휘문중학교, 일본 동아상업고 등학교, 일본 중앙대학법과대학에서 수학했다. 이후 식민지 시기 함경북도 도지사와의 인연으로 함경북도 민정시찰업무에 종사했다.육사 5기라는 기록으로 보아,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방 이후부터 조선경비사관학교 입학 이전까지 공보부에서 조한궁과 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9월에 발행된 잡지 《신천지》에 곽우불이 미국 참모총장 조지 마샬의 글을 번역한 기사가 실린 것으로

《주간신보》 36호부터 1946년 9월 18일자 《주간신보》 48호까지 게재되었던 군정청 한국인 관료에 대한 인상기를 작성했고, 곽우불은 이와 더불어 1946년 8월 7일자 《주간신보》 42호에 게재된〈종합대학문제에 관하야〉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국립대학설립에 대해 문교부차장 오천석과 면접을 한 후 이를 정리한 것이다.한국인 관료 인상기와 〈통합대학문제에 관하야〉 기사는 모두 인터뷰 후에 작성된 기사로서,한국인 기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즉,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는 군정발 성명서와 언론에 배포하기 위한 군정청 부서들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역할은 주로 이를 번역하는 것이었고, 한국인이 특별하게 기사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미국인이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다. 위의 기사들을 비롯하여전술한 《농민주보》의 방인근의 글 〈원숭이가 말한다〉에 나타나듯이 공보부 외에 소속된 자나 한국인이 작성한 기사에는 반드시작성자의 이름이 표기되었다. 이는 한국인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보아, 공보부에서 번역 및 인터뷰 기사 작성을 담당했을 것이다.한국전 쟁기에는 육군 소령으로 부산에서 정훈업무에 종사했으며, 소령으로 전역 후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8년 진도군 번영회가 결성되어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57세에 신학을 시작하여 이후 목회활동에 전념했다. 백수복, 2016 〈전처의 9남매는 하나님이 선물한 보석들〉

⁽URI: http://210.101.116.28/W_files/kiss9/52318705_pv.pdf); 〈제 79화 육사졸업생들 5기생의 사회활동〉 《중앙일보》 1983년 2월 4일; 죠지 마-샬, 곽우불 역, 〈이렇게 하여 日本을 敗亡시켰다〉 통권 8호, 제1권 제8호 《신천지》 1946년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URL: http://info.nec.go.kr/); 〈'청년 - 문화 - 북한'에 필이 꽂힌 열정의 사역자〉 《크리스찬리뷰》 2017년 8월 28일 (URL: http://www.christianreview.com.au/5325); 디지털진도문화대전 (URL http://jindo.grandculture.net/Contents/Contents?dataType=01&contents_id=GC00501433&isTreeSpread=Y)

매우 특별한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양 신문의 발행부수는 미군정이 주간신문을 통한 정보 배포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보여준다. 양 신문의 배포량은 1946년 1월에이미 160만부에 달했다. 108) 1947년 7월에 미군정이 조사한 남한신문 배포량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유통량은 약 47만부이며, 그 중가장 많은 배포량을 기록한 것은 《경향신문》으로 6만부를 조금넘었다. 109) 미군정의 주간신문 배포량은 일간 신문 전체를 약 4일간 배포하는 양에 근접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어떠한신문도 미군정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없는 구조였다.

서울 지역에는 《주간신보》와 《농민주보》가 매우 잘 보급되었다. 그러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인해 남한 전역으로의 배포는 쉽지않았다.110)《주간신보》와 《농민주보》는 인쇄 후 9개 도의 군정장관에게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그 중 《농민주보》는 도 군정청에서 군정중대 본부로 보내졌고, 군정중대 본부에서 군수(district governors)에게 보내진 후 각 면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군수(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면에 근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다. 경기도내 《농민주보》 배포 기록은 대부분의 시골길은 오로지 지프차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중장비나 민간자동차는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111)

^{108)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 4〉 291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1권, 870쪽

^{109) 〈}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22〉 100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4권, 92 쪽

^{110) 〈}여론동향〉 12호 1946년 5월 23일

¹¹¹⁾ From Walter E. Monagan, Jr. Major MI, OIC, Office of Public Opinion To Secretary of the Public Information Section, 1945.12.28, 〈Distribution of the Farmers' Weekly〉, 소장처: 미국 립문서관(NAII),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고코드

또한 군과 면의 한국인 관리들의 관심부족도 하위 단위로의 배포에 방해물로 작용했다.112) 신문이 면과 그 이하 단위에 도달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 관리들(한국인)이 군청에 와서 가져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간신보》의 배포 지역이 면단위까지 목적으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방식과 한계를 경험했을 것이다. 일례로 《주간신보》의 책임자인 아다 리크(Ada E.Leeke)는 강원도 춘천을 방문했을 때, 오래된 《주간신보》가 먼지가 앉은 채로 도청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다.113)

1946년 공보국이 실시한 여론조사들은 《주간신보》나 《농민주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인터뷰들을 수시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여론 조사들은 지주와 관리 층은 이 신문들을 본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6년 2월 10일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국도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농부들은 《농민주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중 《주간신보》는 학교를 통해 배포되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편 면사무소에서 농업 전문가로 일한다는 한 인터뷰 대상자는 구장이 매주 면사무소에 들러서 《농민주보》를 가져와 개인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농민주보》를 본적이 있고 《주간신보》 역시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개성에서실시한 인터뷰에 대한 1946년 2월 23일자 보고서는, 군정 관리들은 《주간신보》와 《농민주보》가 민간경로를 통해 배급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인터뷰 대상자 중 한 지주는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를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114)

AUS179_01_05C0138_054, 원문 1쪽)

¹¹²⁾ Ada E. Leeke, 1991 앞의 책, 101쪽

¹¹³⁾ Ada E. Leeke, 1991 위의 책, 101쪽

¹¹⁴⁾ From Walter E. Monagan, Jr. Major MI, Chief, Public Opinion Section To Director,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Report on public opinion sampling trip to Suwon〉 1946년 2월 11일 ; From

이러한 조사들은 면장, 구장 등 한국인 관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군정 인쇄물이 마을단위로 들어가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점 과, 이들이 마을로 인쇄물을 가지고 가더라도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쇄물이 농민의 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주나 관리, 식자층의 손으로 들어가기가 쉬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미 군정의 신문들은 농민 개개인에게 전달되기 보다는 지주와 관리, 식 자층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이 신문이 담고 있는 미군정의 입장과 해 석을 전달할 수 있었다. 1948년 6월 국무부 정보조사국(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의 보고서는 남한 농촌 지역 실태조사 보고 서에서 농촌의 작은 마을들은 마을의 이장 아래 단결되어 있어 새 로운 생각(new ideas)에 일치된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마을의 식자층과 지도자층의 여론이 해당 지역의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115) 비록 미군정의 주간신문들이 대중들에게 직 접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행정 조직을 따라 지방과 마을의 지도자 에게 배포된 주간신문들의 내용은 그 지방과 마을의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중들이 직접 신문을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도 군정-군수-면 장으로 이어지는 배포경로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그 극복이 시도되 었다. 예를 들면 해남에서는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를 각 군 의 경찰서장에게 배달했고, 이를 다시 면 경찰서장들에게 배달했으

John D. Evans, Jr., Major MI, Chief, Public Opinion Section To Director,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Public opinion sampling trip into the KAESONG area〉 1946년 2월 23일,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한림대 아시 아문화연구소 간행, 394~400쪽.

¹¹⁵⁾ From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Offic of Intelligence Reseach, 〈Social and Political Forces in Small Communities in South Korea〉 1948년 6월 10일,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간행, 632~653쪽

며, 그 후에 면의 학교에 배포했다.116) 또한 1946년 미곡수집시 특별 공보를 펼칠 때에는 전라남도의 경우 《주간신보》를 식량유통경로로 배포하기도 하였다.117) 그러나 배포방식의 한계로 인해 인쇄물이 면과 리 단위로, 그리고 농민들의 손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계는 궁극적으로 1947년 5월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이 설치되어 비행기를 통해 신문 매체를 공중살포하고, 1948년 5.10 선거를 위한 대대적인 선전을 실시하면서 극복되었다.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2) 《주간신보》 《농민주보》의 성격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는 각각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발행된 신문이었기 때문에, 신문의 편집구성은 독자층의 특성을 반영했다.

《주간신보》는 도시지역에 경쟁 신문들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신문과 마찬가지로 국한문체로 기사가 작성되었으며 깔끔하게 편집되었다. 다만 같은 호에도 한문으로 작성된 기사와 '한글(한문)'의 형식으로 작성된 기사, 그리고 한글로만 이루어진 기사가 동시에 게재되는 등 문체가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오락용 기사는 한글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초기 《농민주보》는 기사 제목이 손으로 쓴 글씨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 등 조악한 편집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 반면, 《주간신보》는 민간 신문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신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주간신보》는 타블로이드지 2면으로, 각 지면은 9단으로 이루어 졌다. 앞면은 기사, 해외소식, 삽화로 구성되었다. 군정당국의 성명

¹¹⁶⁾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0-2001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 문서》 47, 534쪽

^{117) 〈}여론동향〉 30호 1946년 11월 25일

서와 군정청 각과의 보고가 기사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해외 소식은 여러 나라에 관한 단신을 게재했는데 통신사나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삽화는 짧은 글이나 구호를 그림과 함께 첨부하여 군정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삽화를 통해 보건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전재민의 주택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집을 나누어 살자고 설득하는 등 농촌보다 도시에 극심했던 전재민 문제를 반영했다. 또한 모리배와 암시장 비난, 미군정의 정치 구상에 대한협력 촉구 등을 다루었다.

뒷면은 논설, 〈주간문답〉, 만화를 기본 구성으로 했다. 그 외에 군정청 한국인 관료에 대한 〈인상기〉, 〈육아일기〉, 국사 관련이야기,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장이 투고한 〈어린이습관 양성〉, 호열자 관련 캠페인, 〈민주주의 투쟁사〉, 시(詩), 〈어린이 몸은 가정체육으로〉, 〈각관공청안내〉 등의 고정난이 시기에 따라 연재되었다.

《농민주보》는 타블로이드지 4면으로, 각 지면은 11단으로 이루어졌다. 1면과 2면은 기사와 사설, 〈세계뉴스〉로 구성되었다. 기사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와 군정장관 등 군정 당국의 성명서 및 군정청의 각 부서의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주간신보》의 기사들이 보도기사의 형식으로 성명서와 군정청 보고를 기사 속에 녹여낸 것에 비해 《농민주보》의 뉴스 기사들은 군정당국의 성명서 및 군정청의 발표를 그대로 번역 및 요약하여 전달했고, 성명서와 함께 군정 당국자의 얼굴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크게 게재했다.

《농민주보》의 기사들은 〈군정청보도〉란으로 묶이기도 했다. 〈군정청보도〉는 군정청의 각 부서의 장 혹은 과장들의 공지 발표 들을 짤막하게 모아 놓은 것으로, '~부의 발표에 따르면'이라는 형 식으로 시작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소 5단 이상으로 구성되 어 지면의 상당분량을 차지한 이 고정난은 《주간신보》와 민간 신 문에서는 볼 수 없는 항목이었다. 〈군정청보도〉는 특정시기에는 헤드라인 위치에 실릴 만큼 《농민주보》에서 중시되었지만, 여기에 실리는 내용들은 당시의 주요 정세나 이를 반영한 정책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미군정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의목적을 띄거나 군정청의 잡다한 소식 및 공지를 모아놓은 것이었다. 〈세계뉴스〉는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 근황 위주의 소식을 한데 모은 고정난으로 4단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주간신보》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와 기사 출처에 대한 언급 없이 내용만을 기재한 것이 특징적이다. 〈군정청보도〉와 〈세계뉴스〉로만 《농민주보》 1면 전체가 구성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두 고정난은 《농민주보》 편집의우선순위에 놓여있었다.

3면에는 농업과 축산업 등 농민의 생업과 관련된 정보성 기사가 실렸다. 특히 조선농회의 고문 윌리암스(Frank.E.C.Williams)가 '우 리암'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연재 기사와 더불어 농무부와 조선농회 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 축산업, 잠업 등의 기사로 구 성되었다.

2면 혹은 3면 하단에 위치한 고정난 〈김첨지〉는 농민들에게 미군정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김첨지라는 화자가 농민들 혹은 농민을 표상하는 자신의 손주에게 군정의 메시지를 가르치듯이 전달하는 계몽의 성격이었다.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농민들의 결심과 행동을 유도하고자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되어라', '~하자', '결심하자!', '맹세하자' 등 농민들을 강하게 설득하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김첨지〉가 담당한 역할은 독자에게 미군정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모범적인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반탁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하지 중장의 성명들이 헤드라인으로 실렸을 때, 당시 〈박첨지〉(〈김첨지〉의 전신)는 미군정을 '지혜', 및 '선각자'로 표현하며 미군정의 입장을 따를 것을 설득했

다.118) 또한 좌익 선전에 전면 대응하는 하지 중장의 특별성명이 헤드라인에 실렸을 때에는 이 성명을 읽고 '감격에 넘쳐 다만『고맙습니다』하고 눈물 흘릴따름'이라는 태도를 제시했다.119) 《주간신보》도 발행 초반에는 이와 유사한 고정난인〈김생원〉이 있었으나곧 폐지되었는데,120) 아마도 도시민들에게 훈계조로 미군정에 대한태도를 설득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4면은 아동과 부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오락면이었다. 4면의 지면 구성은 꾸준히 변화했지만 한글교육, 위생 및 보건 교육, 국사, 부인란, 만화가 4면 편집의 핵심이었다. 121) 그 중 한글 강좌는 1호부터 11호까지는 〈어린이 차지〉라는 삽화 옆에 〈마침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글 글자와 간단한 문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11호를 마지막으로 〈마침법〉의 연재가 끝나고 12호부터는 문교부편수국 편찬의 〈한글강좌〉 연재가 시작되었다. 총 57회 중에서 1호부터 9호까지는 자음과 모음을 읽고 쓰는 법에 대한 것이었고, 10호부터 15호까지는 이를 바탕으로 읽을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이실렸다. 이후 16호부터 연재가 끝날 때까지 '말법에 대한 공부'인 '

^{118) 《}농민주보》 4호 1946년 1월 12일; 《농민주보》 6호 1946년 1월 28일

^{119) 〈}조선민중에게 고함〉 《농민주보》 36호 1946년 9월 7일자

^{120) 1946}년 1월 16일자 《주간신보》 13호에는 〈김생원〉이 있다. 하지만 1946년 5월 29일자 32호에는 없어진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사라졌을 것이다.

^{121) 4}면의 구성은 한글강좌, 부인란, 동화, 동요, 만화→ 한글강좌, 부인란, 국사, 만화→ 한글강좌, 보건후생부 제공 연재란, 국사, 만화로 변화했다가 국사 연재가 끝난 후에는 한글강좌, 보건후생부 제공 연재란, 장편 동화, 만화의 구성으로 변화했다. 1947년에 들어서는 한글강좌, 장편동화, 만화로 단순화되었다가, 70호에서 한글강좌가 57회로 끝나면서 71호부터 장편동화, 부인과 가정, 간혹 동요 혹은 시, 만화로 구성되었다. <부인과 가정>란은 처음에는 '손쉽게 병고칠수 있는 가정치료법'이 10회 연재된 후, 82호부터 '해산 전후엔 이런점에 주의'가 2회, 그 후에는 요리독본이 연재되었다.

말의 법칙'즉 '우리말본'을 다루었다. 이는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이던 외솔 최현보의 '우리말본'을 수록한 것이다. 기본적인 문법에서 '우리말본' 공부로 넘어가는 단계였던 13호부터 〈어린이 차지〉라는 삽화 없이 〈한글강좌〉로만 연재되면서, 한글강좌는 어린이 대상의한글 교육에 한정하지 않은 문맹 퇴치의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위생 및 보건 교육은 보건후생부가 제공한 연재물로 구성되었으며, 국사는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이 편찬한 것이었다. 부인란은 초기에는 육아 위주의 내용을 게재하다 중반에 사라진 뒤 1947년에는 요리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인과 가정〉란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은 지면 구성을 보았을 때, 《주간신보》의 앞면, 그리고 《농민주보》의 1면과 2면은 기사와 해외소식을 전하는 뉴스 지면이고, 《주간신보》의 뒷면과 《농민주보》의 3면 및 4면은 오락, 정보, 계몽의 지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는 모두 지면의 기능이 뉴스와 오락·정보·계몽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양자의 뉴스 전달 방식이 다르며, 오락·정보·계몽의 내용이 달랐다.

뉴스 전달 방식을 살펴보면,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는 모두 군정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사의 출처로 삼았지만, 뉴스 전달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뉴스의 출처와 군정의 보도 방식을 살펴보면, 양 신문의 뉴스 출처는 군정 당국의 성명서와 공보부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 그리고 군정 관료와 한국 신문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었 다. 군정의 모든 국장들은 매일 오후 3시까지 일간 보도 자료를 제 출했고, 이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다음날 아침 10시 시청에서 열리 는 일간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되었다.122) 보도 자료의 상당부분은 군

^{122)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6쪽

정청 활동을 홍보하는 것으로,123) 식량 및 중장비 수입, 홍수 통제, 콜레라 박멸 등 미군정이 남한에서 달성하고 있는 건설적인 것들이 주가 되었다.124) 그러나 공보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가 서울 지역의 민간 신문에 실리는 비중은 20~30%에 불과했다.125) 특별한 이슈에 관한 성명서나 보도 자료는 주요 신문에 전부 실린다고 하더라도, 군정 활동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의도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정이 발행하는 신문들은 군정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홍보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였다.126) 한편 군정과 한국인 기자들 간에 매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들은 공보부 주간신문의 기사 주제에 영향을 끼쳤다.127) 공보부장은 기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군정장관 및 주한미군사령관과 세부사항을 논의했고, 이후 공보부에 무엇은 말해야 하고 무엇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명령으로 하달되었다. 공보

¹²³⁾ 군정의 보도 자료는 1945년 12월에 시작된 "The Military Government Hour"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매일 30분간 극화하여 방송되었고, 매일 아침 "Public notice"에서도 방송되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매일 7차례 진행되는 뉴스 방송에서도 보도되었다. 〈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10〉 59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2권, 548쪽

¹²⁴⁾ Ada E. Leeke, 1991 위의 책, 99~100쪽

^{125)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34쪽

^{126)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23쪽

¹²⁷⁾ 군정과 한국인 신문기자들 간의 기자회견이 매일 개최되었다. 이 때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들은 공보부장이나 요청된 관료들이 답변해주었고, 군정장관이 매주 한 차례 신문기자들과 만나 그 전 주에 신문기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들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정례회견 외에 특별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기자회견이 소집되었다.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21쪽;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25〉 161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4권 600쪽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상부의 명령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초대 공보 책임자인 헤이워드 중령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매우 세세했 다.128)

공보부의 보도 지침은 이러한 성명서나 군정 활동 보도 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었다. 직유, 은유 등을 활용하여 군정의 입장과정책을 쉽게 풀어서 재밌는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비록 군정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고정난으로 《주간신보》의 삽화와 《농민주보》의 〈김첨지〉가 있었지만, 이들은 지면의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었고, 그 외의 지면은 모두 군정의 성명서나 보도자료, 신문기자회견시 당국자의 발언이 그대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군정 당국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공보부장 뉴먼에 대한 아다 리크(Ada E. Leeke)의 혹평에서도 드러나듯이, 공보부장이 공보나 선전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129)

공보부의 보도지침이 사실을 말하고, 군정 당국의 성명서나 보도 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은 독자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간신보》는 군정 당국의 성명서와 군정청 발표를 보도기사의 형식으로 기사 속에 녹여낸반면, 《농민주보》는 이를 그대로 번역하여 전문 혹은 요약본을 게재했다. 또한 《농민주보》는 성명서와 함께 군정 당국자의 얼굴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크게 게재함으로써 권위 있는 당국자가 직접 성명서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성명서를 번역할 때에도 《주간신보》와 《농민주보》가 사용한 언어는 상이했다. 《주간신보》는 국한문을 혼용하여 민간신문들과 같은 문체로 성명서를 번역하고 기사 제목을 구성했지만, 《농민주보》는 순한글 중에서도

¹²⁸⁾ Ada E. Leeke, 1991 앞의 책, 100쪽

¹²⁹⁾ Ada E. Leeke, 1991 위의 책, 100쪽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농민들이 미군정의 메시지를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예를 들어 1946년 11월 3일 《주간신보》 56호 헤드라인 기사인 〈조선은 식민지화 않는다〉와 1946년 11월 23일 46호 4면의 〈양민을 선동하는 거즛선전의 내용을 백일청천하에 폭로. 하-지 중장 성명〉기사는 동일한 하지 성명서를 게재한 것이지만 제목에서 보이듯이 번역 문체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는 뉴스 전달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 을 뿐만 아니라 기사가 내포하는 정보의 수준에도 차이를 보였다. 《주간신보》의 기사는 민간신문들의 논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 군정과 미군정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는 1946년 7월 미군정의 국립대학교설치안, 1946년 9월 총파업. 12월 입법의원 선거에 대한 《주간신보》의 보도에 잘 드러난다.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이 발표한 국립대학교설치안(이하 국대안)에 대해 신문들이 비판하자, 《주간신보》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인터 뷰 기사를 게재했다. 미군정이 특히 주목한 것은 1946년 7월 17일 자 《중앙신문》에 실린 사설로, 미군정은 이를 전문 번역하여 분석 했다.130) 이 사설의 주요 논지는 조선에 단 하나뿐인 최고교육기관 을 6명의 이사가 좌우하도록 맡기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하며, 사실 상 문교부장 일인의 전단(專斷)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총장 이하 전 교원의 지위가 종속관계에 처하게 되어 학원 자치가 전면적으로 주살(誅殺)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신문》뿐만 아 니라 다른 신문들도 이러한 비판에 공감했다. 《자유신문》 또한 사설

^{130) 〈}Editorial: Comments Concerning Forming of National University〉 1946.7.18. 소장처:미국립문서관(NAⅡ), (출처: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고코드 AUS179_01_05C0148_048); 〈論說, 國立大學校에 關하야〉 《중앙신문》 1946년 7월 17일

을 통해 이사회의 구성원이 너무나 소수인 데 비해 권한은 너무 과도하고, 교수의 임면권까지 갖고 있어 전조선문교의 장래가 이들에 의해 좌우되는 위험천만에 놓였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의 대상을 교육행정관의 전횡 독점으로 한정하고 문교당국이 더욱 적절한 안을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131)

《농민주보》는 국대안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반면,《주간신보》는 국대안에 대한 비판을 문교부차장 오천석박사의 인터뷰 기사를통해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오천석은 이사회는 정치에 관련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규정 하에 사회적 저명인사와 교육자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사회의 정치성을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정이 이사회를 임명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 또한 국대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일반사회인보다도 종합당하는 학교의 교수측이 더 많다면서, 이를 능력이 없는 교수의 불만으로 취급하고 국대안 반대 이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정치적 요구보다는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시작된 1946년 9 월 총파업이 점차 대중의 지지를 받자,132) 《주간신보》와 《농민주

^{131) 〈}사설: 國立綜合大學案에 대하여〉 《자유신문》 1946년 7월 16일 132) 노동자들의 요구는 쌀 배급, 일급제 반대, 임금 인상, 해고 감원 반대, 급식 계속,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 노동법령 실시였다. 파업 직전 공보부 여론국의 주간 보고서 〈여론동향〉은 경주 지역의 식량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려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고했다. 파업이 개시된 이후 〈여론동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서울주민의 46%가 철도파업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45%는 그렇지 않다고생각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그 중 전자는 좌익이 생계조건과 군정의 혼란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파업을 일으켰다고 보았고, 후자는 열악한 생계조건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시위를 통해 나타났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9월 26일 60%가 파업을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27일에는 63%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남조선 전역의 철도종업원 총파업〉《자료대한민국사 제3권》 《조선일보》《서울신문》 1946년 9월 25

보》는 모두 민주주의적 노동 제도를 만들기 위한 미군정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했다.133) 그런데《주간신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다음호에 〈노동자학대는 사실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조선공산당의 미군정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134) 이 사설은 최근발표된 일부 좌익 신문이 미국인이 조선노동자를 과거 일본인이 조선노동자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나 소처럼 취급하고 학대하며 고문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사실과는 상반되며, 오히려 군정청은 민주주의적 노동법령 제정을 통해 노동 상태를 개선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공의 논리를 적극 비판했다.

《주간신보》는 1946년 12월 과도입법의원 설치를 앞두고도 사설을 통해 《중외신보》에 실린 공산당 성명서가 미군정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비호하기 때문에 입법기관 설치는 민중을 기만하는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135) 입법의원에 친일파와 민족반역자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당시 여론의 보편적인 우려였는데, 《주간신보》는 이를 공산당의 모략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사설에 게재한 것이다.입법의원 구성에 관한 당시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한편《농민주보》와 《주간신보》의 오락·정보·계몽 지면을 살펴 보면, 《농민주보》는 3면과 4면을 농업, 국어, 국사, 보건 정책과의

일; 〈여론동향〉26호 1946년 9월 11일; 〈여론동향〉28호 1946년 10월 3일

^{133) 〈}노동자의 해방〉 《주간신보》 52호 1946년 10월 16일; 〈노동의 해방〉 《농민주보》 41호 1946년 10월 19일

^{134) 〈}노동자학대는 사실인가〉 《주간신보》 53호 1947년 10월 23일

^{135) 〈}입법의원 반대 공산당서 성명〉 《중외신보》 1946년 9월 25일; 〈입의반대의 일고찰〉《주간신보》 55호 1946년 11월 6일; 〈The CHUKAN Digest No. 55〉, 소장처:미국립문서관(NAⅡ),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고코드 AUS179_01_05C0065_008, 원문 5쪽)

관련 하에 구성한 반면, 《주간신보》는 도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 거나 여론을 반영한 소재를 채택했다. 예를 들면 《농민주보》와 《주간신보》 모두 매호 국사 기사를 연재했는데, 《농민주보》의 기사는 문교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사 교과서를 시대 순으 로 연재한 반면 《주간신보》는 노국공주의 일화와 같은 흥미로운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또한 《주간신보》 1946년 6월 26일 36호부터 1946년 9월 18일 48호까지 연재된 군정청 한국인 관료에 대한 인상기는 당시 한국인 군정 관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 론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이었다. 이 연재는 한국인 기자가 경무부장 조병옥, 농무부장 이훈구, 오정수, 공보부장 이철원, 체신부장 길원 봉, 사법부장 김병로, 외무처장 문장욱 등 군정의 한국인 고위 관료 를 직접 만나 받은 인상을 서술한 것으로, 이들의 학위, 경력 등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기술했다. 예컨대 기자는 조병옥의 부드러운 성 품과 인간적인 면모가 그가 경무부장으로써 일제 강점기 경찰과는 다른 민주주의적 경찰제도를 확립하리라는 신뢰감을 주었다고 서술 했다. 또한 조병옥이 겪은 일제강점기의 고난,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빠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136) 이처럼 기자가 조병옥에 대해 받은 주관적인 인상과 조병옥의 개인적인 면모는 궁극적으로 그가 일제 강점기의 경찰과는 다른 민주주의적 경찰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평 가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공보부 여론국이 작성한 〈여론동향〉 보고서에 한국인 관료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 매주 기록된 항목 중에는 정부, 즉 군정에 대한 여론이 있다. 이 항목은 군정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점 검했는데, 이때 비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항상 거론된 것이 군정 내 한국인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비판이었다. 일례로

^{136) 〈}趙炳玉博士 印象記〉 《주간신보》 36호 1946년 6월 26일

1946년 4월 7일자 〈여론동향〉6호는 서울에서 인터뷰한 사람들 중 56%가 한국인 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자 〈여론동향〉16호는 조선인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오직 20%만이 만족을 표시했고 54%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대답했다며 조선인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지적했다. 1946년 9월 17일자 〈여론동향〉27호는 서울에서 유명한 관리와 경찰에 대해 새로운 설문지를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가 관리에 대한 불만을, 9%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고했다.

미군정이 서울 지역에서 확인한 대중들의 불만과 비판은 한국인 군정 관리들이 일제하에 부역했고, 이들이 식민지 시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 그리고 점령당국이 관리를 임명하는 채용방식에서 기인했다.137) 군정 내 한국인 관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이들과 식민지의 연속성에 그 초점이 있었으나 《주간신보》는 '인상기'라는 접근방식을 통해 관료의 개인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면서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한편 《주간신보》에 연재된 '민주주의 투쟁사'와 '민주주의 발달사'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것으로, 《주간신보》가 독자를 대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 선전에 보다 열을 올렸음을 보여준다. 군정 내 관료의 인상기 연재가 끝난 뒤 1946년 10월 3일 50호부터 고정난으로 '민주주의 투쟁사'가 연재되었다. 1947년 3월 14일 73호부터는 '민주주의 발달사'로 연재된 이 논문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137) 〈}여론동향〉 4호 1946년 3월 25일; 〈여론동향〉 5호 1946년 3월 31일; 〈여론동향〉 6호 1946년 4월 7일; 〈여론동향〉 8호 1946년 4월 21일; 〈여론동향〉 9호 1946년 5월 1일; 〈여론동향〉 12호 1946년 5월 23일; 〈여론동향〉 14호 1946년 6월 6일; 〈여론동향〉 15호 1946년 6월 14일; 〈여론동향〉 16호 1946월 6월 22일; 〈여론동향〉 19호 1946년 7월 18일; 〈여론동향〉 21호 1946년 8월 2일; 〈여론동향〉 23호 1946년 8월 23일; 〈여론동향〉 26호 1946년 9월 11일; 〈여론동향〉 27호 1946년 9월 17일

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과 한국의 사례도 다루었다. 《주간신보》의 민주주의 관련 연재기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간신보》와 《농민주보》의 지면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각 신문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간신보》의 뉴스 지면은 민간 신문들의 논조에 민감하게 반응 하면서, 미군정을 비판하는 논조에 대한 대항논리를 적극적으로 선 전했다. 이를 통해 독자가 현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배격하고, 미군정의 해석방식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 오락·정보·계몽 지면은 여론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그리고 한국사 및 민주주의 홍보를 포 함한 흥미로운 내용으로 도시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이처럼 흥미로 운 주제, 그리고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주간신보》는 도시 독자, 특히 서울의 독자들을 민간 신문의 담론으로부터 지켜내 는 역할을 맡았다.

《농민주보》의 뉴스 지면은 대상 독자인 농민들이 현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군정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뉴스 기사를 구성했다. 이 때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당국자의 그림이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미군정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오락·정보·계몽 지면은 군정청과 연계하여 농업 정보, 한글과 한국사 기사 등을 연재하고 이를 성인교육의 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농민 계몽을목적으로 한 부드러운 선전의 성격을 띠었다. 이를 통해 《농민주보》는 현안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농가의 말단 한국인에까지 전달하고, 농민 계몽에 일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3.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설립과 《세계신보》 발행

1)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설립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1946년 8월 말 좌익의 선전에 대한 전면적인 역선전을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공보장교 란킨 로버츠(Rankin Roberts) 중령은 9월 3일 남한 내 역선전의 강화, 국무부와 군부간의 협의를 통한 본국의 물자 지원 및 공보 장비 확보, 공보 전문가의 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하지와 맥아더에게 제출했고, 10월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약 두 달간 국무부와 육군부담당자들과 협의했다. 란킨 로버츠가 미국에서 국무부와 육군부담자들과 협의하는 동안, 아놀드 군정장관은 국무부 담당자를 만나역선전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138)

란킨 로버츠는 국무부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민간인 공보 전문가 7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신문, 통신, 공보 분야의 경력자들이었다. 예를 들어 토마스 마이클모어(Thoms G. Michelmore)는 시카고 헤럴드와 워싱턴 타임즈의 주필이었다. 찰스 콜맨(Charls L. Coltman)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 내 물가 통제를 위해 조직된 국무부 산하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의 the Field Division의 책임자로, 출판물·언론 보도·라디오 등을 이용하여 지방에 물가통제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필요시 전쟁정보국(OWI)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 각지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어 극동 사정에 정통했다. 또한 윌리암 헨리 라이안은 뉴

¹³⁸⁾ 졸고, 2010, 398~400쪽

욕 아메리칸 또는 허스트 계열 신문의 주필을 역임했고, 한국에 오기 전 맥아더 사령부에서 라디오 및 영화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였다139)

채용된 7명의 공보 전문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이들의 책임자인 제임스 스튜어트(James L. Stewart)이다. 제임스 스튜어트(James L. Stewart)는 규크 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2차 세계 대전 중인 1939년 중국 충칭에서 AP 통신 기자로 일했다. 일본의 진주만 침공 이후 중국-버마-인도 전장의 CBS 종군 기자로 일했고, 1942년 전쟁정보국(OWI, Office of War Information)의 중국 전장 심리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또한한국에 입국하기 직전까지 주중 미해병단 정보국장으로 천진과 북경에서 활약하는 등, 그는 언론 및 선전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전 책임자였다.

스튜어트는 1946년 12월 내한하여 1947년 2월 15일 뉴먼을 대신해서 공보부 고문역을 맡았고, 이후 1947년에는 새로운 선전기구인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창설을 주도하고 공보원장에 임명되었

^{139) 〈}뉴맨 대좌 승진. 후임에 신문에 신문인 출신 육(六)씨(氏)가 부임〉《동아일보》1947년 2월 19일; 〈공보부 고문진을 강화〉 《조선일보》1947년 2월 19일; 〈공보부 강화, 미군 관계자 보충〉 《자유신문》 1947년 2월 19일; 《Preliminary Inventory of the Records of the Information Department of the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Record Group 188)》, By National Archives (U.S.),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59, 12~14쪽, 34~35쪽 URL Record States Records Service 1959, 12~14쪽, 34~35쪽 URL Record States Records Service 1959, 12~14쪽, 34~35쪽 URL Record Service R

https://books.google.co.kr/books?id=NiDyjoAB1D4C&pg=RA1-PA13 &lpg=RA1-PA13&dq=charles+l.+ coltman+ opa+ field+ division&sour ce=bl&ots=4LMJFn-hhF&sig=ACfU3U2XT9CtzSEJeholX4BLPZxVhd v1bw&hl=en&sa=X&ved=2ahUKEwjVrrmTttTrAhVJ05QKHRzNCjAQ 6AEwAXoECAIQAQ#v=onepage&q=charles%20l.%20coltman%20opa %20field%20division&f=false

다. 그는 공보부와 공보원을 총괄하며 점령군의 선전 활동을 책임지게 되었다. 140) 뉴먼이 공보 분야에서 물러나고 스튜어트와 민간인 공보 전문가들이 선전 활동을 담당하게 된 것은 기존의 공보부 소속 미국인들이 대체로 군인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향후 공보 활동의 질적 변화를 예고했다. 141)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다 리크는 뉴먼이 공보·선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며 혹평했는데, 이는 1947년 국무부로부터 선전 전문가가 내한하여 공보 활동을 담당하게 된데는 뉴먼의 공보 기술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공보 실패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42)

1946년 말 내한한 스튜어트는 공보부의 고문을 역임하는 한편 새로운 선전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군정은 1946년 9월부터 행정 각부서의 직능을 한국인 직원에게 위임한다는 방침 하에 군정청각 부장급 이하 지방관의 소관 행정권을 한국인 관리에게 이관하고미국인은 고문으로 물러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른바 '군정 한국인화' 정책으로, 미군정은 행정기구를 한인화하고 입법기구를 설치하여 법원 조직과 함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체계

¹⁴⁰⁾ 스튜어트는 1949년 주한미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자 공보원장으로 임명되었고,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여 자유아시아연맹에서 일했다. 자유아시아연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비밀리에 설립한 반 공주의 선전 단체로, 아시아 지역에 라디오 방송을 송출했다. 이후 자유 아시아연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댄 또 다른 단체인 아시아재단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제임스 스튜어트는 1947년 이래 공보원장, 아시아재단을 통해 미국의 대한선전 정책 및 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Public Information Section〉 93~94쪽;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An Outline)〉, 1948, 4쪽, 16쪽; 제임스 스튜어트에 대해서는 SFGATE 신문에 실린 기사 참고

URL:https://www.sfgate.com/bayarea/article/James-L-Stewart-longtime-liaison-to-Asia-2523343.php

¹⁴¹⁾ 졸고, 2010, 401쪽

¹⁴²⁾ Ada E. Leeke, 앞의 책, 100~102쪽

를 갖추려는 계획이었다.143) 이에 따라 1946년 10월 한국인이 공보부 책임자로 임명되고 미국인은 고문이 되었으며, 1946년 12월 공보부의 모든 미국인이 주한미군사령부 본부 부속 건물로 이동하여 공보부의 '한국인화'가 완료되었다. 1947년 4월 제임스 스튜어트는 만약 한국인이 책임지는 공보부가 단독으로 공보 활동을 담당하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수의 파벌이 한국인에게들려주고자 하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주한미군사령부 산하로 공보 활동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144)

스튜어트의 제안은 1947년 5월 30일 주한미군사령부 산하에 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이 창설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이에 미군정 공보기구는 주한미군정청 산하 공보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으로 이원화되었고, 공보의 주체는 공보부의 한국인과 공보원의 미국인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공보기구와 주체의 이원화가한국인 담당의 공보 활동과 미국인 담당의 공보 활동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보원의 미국인들과 공보부의 미국인 고문들은 공보부의 활동을 감독했고, 공보원의 원장은 공보부의 고문으로서 공보정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공보부의 실질적인모든 활동에 대해 자문했다. 공보기구가 공보부와 공보원으로 이원화되었지만, 사실상 공보원이 공보부의 정책과 활동을 통제·감독하는 구조였다.145)

¹⁴³⁾ 안진, 2005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 161~162쪽

^{144)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Series: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5-1948), (File: History: Civil Information Office, 5/30/47 - 6/30/48) From James L.Stewart, PRO USAFIK to CG, XXIV Corps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inclosure #3 Propaganda Plan〉 1947.4.14.,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이하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의 부록문서로 표기); 〈History of DPI〉 1948, 18쪽

1947년 5월 30일 공보원이 창설되었지만, 이 시기 공보원은 강연 반을 중심으로 한 서류상의 조직이었고, 6월부터 주간신문 《세계신 보》를 발행한 것이 주요 활동의 전부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정책 이 미소공위 결렬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미국의 대한공보정책이 강화되었고, 이는 공보원의 활동이 본격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삼부조정위원회는 1947년 5월, 신탁통치하 한 국정부 수립을 위해 소련과 협상할 때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 해 한국에 적극적, 개혁적 정책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1946년 8월 14일자「SWNCC 176/23:한국의 군정을 위한 중간지령(이하 SWNCC 176/23로 표기)」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SWNCC 176/23 의 공보정책은 1945년 10월의 SWNCC 176/8의 공보정책 즉, 미국 의 이상과 민주주의 원칙을 배포하고 한국인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보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반복했다. 그러나 SWNCC 176/23의 공보정책은 1947년 5월 8일 SWNCC 176/24와 1947년 5월 12일 SWNCC 176/25로 수정되면서 변화했다. SWNCC 176/24와 176/25는 한국인들이 '일본 군국주의 영향에서 문화기관과 교육시스템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활기있는 교육시스 템과 공보매체(media of information)'를 만들어 이를 '자유주의적 이고 민주적'으로 보존・발전시키도록 도울 것을 명시했다. 또한 '공 보매체'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공보정책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으 며, 점령당국의 점령목표를 위해 정보매체 기관 및 시설들을 만들고 유지하라고 지시했다.146)

1947년 6월 26일 국무부는 SWNCC 176/25의 수정안인

¹⁴⁵⁾ 공보원의 창설 과정에 대해서는 졸고, 2010, 397~419쪽 참고.

^{146) 「}SWNCC 176/23:한국의 군정을 위한 중간지령(Interim Directive for Military Government in Korea)」1946.8.14 정용욱, 이길상 편, 1995 《대한정책사 자료집》 4 57~84쪽, SWNCC 176/24 위의 책, 101~109쪽; SWNCC 176/25 위의 책 118~126쪽; 졸고, 2010, 412~414쪽에서 재인용.

SWNCC 176/26을 제출했다. 공보정책과 관련하여 국무부는 한국인들이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보 프로그램으로 장려한다는 항목을 점령정책 목표에 추가했다. 또한 '미국 점령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의 역사, 제도, 문화, 업적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과 이해를 넓'힐 것, '학교, 강연, 전시와 이동교육단을이용하여 현재 성인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1947년 7월 24일 「SWNCC 176/29:한국의 군정을 위한 중간지령(이하 SWNCC 176/29로 표기)」로 승인되었다.147) SWNCC 176/29는 미소공위 결렬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가진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체제를 수립할 것을 명시했는데,148)미국이 사실상 미소공위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이라는 단독 방침을 추진하면서 한국인이 미국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공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공보정책의 강화에 따라 1947년 6월 3일 '교육과 공보 조사 사절 단(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Survey Mission)'이 한국에 파견되었다. 사절단은 1947년 7월에 시작되는 1948년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남한의 교육 및 공보 분야의 활동과 계획을 조사하러 왔다. 6월 20일 사절단이 작성하여 국무부와 육군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공보 활동과 관련하여 물질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한국과 워싱턴간의 주간통신이 열렸고, 공보원 간부가 이에 참여하여 공보부와 공보원의 활동에

¹⁴⁷⁾ SWNCC 176/26 위의 책, 135~139쪽; SWNCC 176/28 위의 책, 145~151쪽; 「SWNCC 176/29:한국의 군정을 위한 중간지령(Interim Directive for Military Government in Korea)」1947.7.24. 정용욱, 이 길상 편, 1995 위의 책, 162~187쪽; 졸고, 2010, 412~414쪽에서 재인용.

¹⁴⁸⁾ 박찬표, 199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고려대학교 출판부, 230쪽

관한 보고 및 국무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당하는 등 국무부와 공보원간의 연락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공보원은 국무부와육군부 민정국(Civil Affairs Division, CAD) 재교육계(Reorientation Branch)가 설정해 놓은 전반적인 공보 지침과 방향하에서 공보정책을 만들게 되었다. 149) 1947년 5월 30일 창설된 공보원은 1948년 예산이 집행되는 1947년 7월 건물을 배정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국무부와 육군부의 정책적 물질적 지원 하에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소련 정부도 북한에 '이데올로기 문화센터'인 소련문화원을 수립하려 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이미 1946년 1월 북한 내 평양, 함흥, 원산에 소련문화원의 개관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재정부족의 이유로 계속 인가되지 않았다. 150) 이에해방 직후부터 북한과 소련의 문화교류 창구 역할을 한 것은 1945년 11월 발족한 조소문화협회였다. 151) 1947년 초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의 한국문제 정치고문관실 보좌관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전권대표로 임명되어, 그가 조소문화협회의 북한 내 사업 활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소련의 문화교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47년 7월에 이르러 소련 정부는 문화원 설립에 대한 예산지출을 인가하고 10월에 요원 편성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1947년 말, 다량의 선전 자료를 준비하여 북한에 발송했고, 1947년 말에서 1948년 초에 걸쳐 모스크바로부터 소련문화원 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요원을 선발, 교육시켜

¹⁴⁹⁾ 삼부조정위원회(SWNCC) 문서의 공보정책 변화와 교육과 공보 조사 사절단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졸고, 2010, 414~416쪽 참고.

¹⁵⁰⁾ 강인구, 1995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 교류 활동〉《한국사연구》90 한국사연구회, 405쪽

¹⁵¹⁾ 임유경, 2009 〈조소문화협회의 출판·번역 및 소련방문 사업 연구-해방기 북조선 문화·정치적 국가기획에 대한 문제제기적 검토〉《대동문화연구》6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83쪽

북한에 파견했다. 소련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지도부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반미선 전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도 주의를 기울여 선별하여 제공했다.152)

비록 평양의 소련문화원이 개관한 시점은 소련 정부가 관련 예산을 인준한지 약 1년만인 1948년 7월에 가서야 수립되었지만, 미소협조 노선이 폐기되는 시점에 미국과 소련이 모두 자국으로부터 정책과 자료를 제공받는 문화, 이데올로기 기구를 각자의 점령지대에설치했다는 것은 미소의 냉전 이데올로기 선전이 점차 한반도에 본격화할 조짐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보부가 미군정의 원활한 점령통치를 목표로 미군정의 정책·활동·입장을 홍보했다면,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은 미 본국과의 연계하에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 미국인 등 미국을 선전하는 기구(the United States propaganda machine)였다. 공보원장은 공보원의 홍보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사실적으로 정직한 미국의 선전캠페인"이라고 설명하고, 공보원의 주요 임무를 "속보 배포나 보도기관 지원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선전프로그램의 설립"이라고 규정했다.153)

미국 선전기구로서 공보원의 임무는 첫째, 한국인이 남한의 미점 령군에게 호의를 갖게 할 것, 둘째, 미국의 외교정책 및 미국의 시 스템을 한국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할 것, 셋째, 양국 정부와 사람들 간의 기초적인 우정을 형성하여 점령군이 떠난 후에도 우호 적인 유산이 남아있게 할 것, 넷째, 이러한 목표를 공격하는 선전에 대해 역선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154) 세 번째 목표에서 보이듯이

¹⁵²⁾ 강인구, 1995 앞의 논문, 405~414쪽

^{153)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6쪽

^{154)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Series: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5-1948), (File: History: Civil Information Office, 5/30/47 - 6/30/48) From James L. Stewart Director Office of Civil

공보원은 점령이 종료한 이후까지를 대비한 미국 선전 기구였다.

공보원의 임무 네 가지 중에서 핵심은 두 번째, 즉 한국인들이 미국의 대한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한국인들의 태도(attitude)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공보원은 한국 상황에 따라 미국 정책의 다른 목표들을 강조했지만, 기본적인 임무는 공보·선전 기술을 이용한미국의 대한정책 실행이었다. 155) 따라서 공보 활동이나 내용이 국내정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공보부와 공보원이 같았지만, 이전 시기 공보부가 미군정의 점령통치를 위해 미국의 대한정책 공보를 변용한 것과 달리, 공보원은 미국의 대한정책 실행을 원조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미국의 대한공보정책은 국무부, 육군부 민정국 재정향계의 권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결정, 공보원의 결정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앞의 세 기관이 공보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설정했다면, 공보원은 상세하 고 실제적인 정책을 결정했다. 156) 즉 남한 정세에 입각하여 한국문 제의 유엔이관, 더 나아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미국의 대한정 책을 한국인에게 납득시키고 선거에 한국인을 참여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공보원의 결정에 달렸다.

현재 남아있는 공보원의 활동과 역사에 관한 문서들은 공보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써, 이 문서들 을 통해 공보정책 결정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공보원의 정책은 정

Information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 inclosure #4 Report on the History and Growth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947.11.10.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이 하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의 부록문서로 표기)

^{155)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 1948,1~2쪽

^{156)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6쪽

책위원회(Meeting of Policy Board)에서 결정했고, 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 Meeting)에서 주요 메시지를 결정했다. 157) 예를 들면 1947년 9월 정책위원회는 지방과 대중에 대한 강조, 여론지도 층에 대한 강조, 정치세력과의 엄격한 비제휴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1948년 1월에는 남한의 자유롭고 독립된 정부수립을 위한 대중의 지지를 창출할 것, 소련 대한정책의 의도를 설명할 것, 미국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협조적이고 지성적인 협조를 창출할 것,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경제·사회 개혁에 대중의 요구를 창출할 것을 결정했다. 158)

공보원의 조사분석부(Research and Analysis Branch)는 남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선전을 위한 자료 를 수집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전의 형태, 시점, 방법을 조언했다.¹⁵⁹⁾ 1947년 7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의 비방을 현지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했고,¹⁶⁰⁾ 1948년 1월부터는 생산 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배경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파일을

^{157)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문서의 53쪽부터 61쪽은 이 문서에서 인용한 문서들의 미주이다. 이 중에서 53쪽의 각주7번 문서는 1948년 1월 7일자 〈Consensus of Statements at Meeting of Policy Board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이고 각주 10번 문서는 1947년 9월 3일자 〈Consensus of Statements at Meeting of Policy Board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이다. 58쪽의 각주 130번 문서는 1948년 3월 15일자 〈Notes, Editorial Board Meeting, OCI (initialled by Mr. James L. Stewart, Director, OCI)〉로, 정책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존재를 보여준다.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5쪽

^{158)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5쪽

^{159)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의 부록문서 From /s/Milton Shier To Deputy Chief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Inclosure #7 Activities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by Individual Positions〉 1947.9.5

^{160)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17쪽

만들기 시작했다.161) 조사분석부의 현지 조사와 정보 분석 결과는 공보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47년 11월, 조사분석부는 공보원의 강연반의 연설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했는데, 보고서의 제목으로 보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분석부의 활동이 공보원의 선전 내용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무엇이 공보에 필요한 내용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사한다.162)

요컨대 국무부와 육군부의 정책적 틀 하에서, 공보원 조사분석부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위원회가 공보정책을 결정했으며 편집위원회가 공보 메시지를 결정했다. 이때 메시지는 정세에따라 시기마다 구체화되었다. 공보원은 특히 미국의 대한정책이 미소공위 결렬 이후 남한만의 선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보원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는 한편 공보메시지가 '예리해졌다'고 평가했다.163)

2) 공보원의 《세계신보》 발행과 매체의 성격

1947년 6월부터 공보원이 발행한 주간신문 《세계신보》는 공보원의 공보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매체로, 공보원 출판물 중에서

¹⁶¹⁾ 위의 문서, 33쪽

^{162)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18쪽, 33쪽. 위의 문서 56페이지의 각주 80번 문서인 1947년 11월 14일자 Mr. C.A.Norred, Jr.,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OCI, to Mr. James L.Stewart, Director, OIC 〈Use of Terms 'Democracy'and 'Communism' as Foundations for OCI Political Speeches〉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조사분석부가 공보원의 공보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단서를 제공한다.

¹⁶³⁾ 위의 문서, 20쪽

가장 중요하고, 미국 메시지 전달에 특히 효과적인 매체로 간주되었다. 공보원이 창설되기 이전인 1947년 초, 스튜어트는 공보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세계신보》를 고안했다. 《세계신보》는 6인치(15.24cm)×9인치(22.86cm) 2면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신보》의 크기는 타블로이드 판형(27.3cm×39.6cm)이었던 《농민주보》와《주간신보》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였고 한 호가 한 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후술하듯이 공중살포를 주요 배포 방법으로 삼기에 적합했다.164)

《세계신보》의 편집자는 다우즐리 클라크(Dowsley Clark)였다. 그는 위스콘신 출생으로 미니애폴리스 트리뷴(the Minneapolis Tribune) 편집장, 전시정보국(OWI, Office of War Information)에서 미국 국내 뉴스를 담당하는 뉴스국 국장을 역임한 언론인이자선전 전문가였다. 1948년 초, 한국에 홍보 전문가로 부임했다가 같은 해 11월 그리스 아테네에 경제협조처(ECA) 공보관(Public relations officer)으로 이전한 것을 볼 때 1948년 5월의 제헌선거홍보를 위해 공보원에 부임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165) 그는 선

¹⁶⁴⁾ 위의 문서, 11쪽, 23쪽

¹⁶⁵⁾ 그는 1896년 위스콘신 출생으로 위스콘신 주립대(Wisconsin State University) 졸업 후 미니애폴리스 트리뷴(the Minneapolis Tribune)에서 기자로 일하였고 1918~19년 사이 약 18개월간 육군에 복무했다. 그 후 미니애폴리스 트리뷴(the Minneapolis Tribune) 편집장으로 역임하다 1941년 전시정보국(OWI, Office of War Information)에 합류했다. 중서부 7개 도시의 OWI 정보활동 책임자를 거쳐 194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국내 뉴스를 담당하는 뉴스국장으로 재직했다. 1945년 OWI가 폐지된 후 오하이오주 털리도시의 일간신문 털리도 블레이드 (Toledo Blade)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민간 신문사에서 활동하다가 1948년에 갑자기 한국에 홍보 전문가로 부임했다. 1948년 11월 그리스 아테네에 경제협조처(ECA) 공보관(Public relations officer)으로 부임했고, 1953년 8월 미국 해외 공보처(USIA,United Sates Information Agency)가 신설된 후 11월 USIA에 홍보 전문가로 임명되었다. 《National War Agencies Appropriation Bill for 1945: Hearings

거 홍보가 본격화하고 생산 프로그램이 강화된 1948년 3월 공보원 출판과장으로 임명되어 《세계신보》 뿐만 아니라 공보원 출판물들의 편집 업무 전반을 책임졌고,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했다. 공보원의 활동보고서는 그의 부임으로 업무량이 더욱 원활하게 분배되고 일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166)

《세계신보》는 오락과 정보를 위한 지면은 없이 매호 10개 내외의 기사로 구성되었고, 기사는 순한글로 작성되었다. 《농민주보》 및 《주간신보》와 마찬가지로 군정 당국의 성명서, 기자회견, 워싱턴발 성명서, 외신기사들이 주로 실렸다. 이 자료들은 가공되어 기사로 작성되었고.167) 사설은 비정기적으로 실렸다. 《세계신보》에

before the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seventy-Eighth Congress. Second Session on the National War Agencies Appropriation bill for 1945. Part 2 By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Deficiencies 1944, 278쪽; 《The Biographic Register 1960 (Revised as of May 1, 196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60쪽;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winter 1943-1944(Revisions December 1 By Division of Public Inquires, Office of War Information. Washington 25, D.C., 92쪽; 《Official Register of the United States 1945 Compiled by the 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 32쪽; 《A Report on Recovery Progress and United States Aid,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February 1949》, 139쪽 (출처: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URL:http://digital.library.wisc.edu/1711.dl/History.Recovery; Defiance Crescent News Newspaper Archives Monday, May 15, 1978 - Page 18 (URL:

https://newspaperarchive.com/defiance-crescent-news-may-15-1978 -p-18/)

^{166)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의 부록문서 〈Inclosure #7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February 1948 To 29 February 1948〉 1948.3.20.

서 헤드라인으로 가장 많이 실린 주제는 미국의 대한정책이었고, 기사들의 일관된 메시지는 '미국은 한국의 통일 독립 정부 수립을 원하고 돕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소공위가 미소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는 사건들은 미군정과 미국 고위층의 성명과 발표로 전달되었다. 예를 들어 유엔이 한국문제를 채택하자, 이는 2면 또는 작은 기사로 처리되었고,168) 유엔의 미국안 채택이 옳은 결정이라는 덜레스와 하지의 성명은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169)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채택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신문 하단에 작은 기사로 싣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크게 보도하는 방식으로 유엔 이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170)

¹⁶⁷⁾ 다우즐리 클라크는 《세계신보》는 공식성명서를 매우 조금만 담고 있으며, 이마저도 재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 - 1981) (Series: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File: 18 Military Government - Korea, Office Civil Information) 〈OCI Branch Managers' Meeting Held in Seoul, Korea, 10 and 11 June 1948〉 13쪽,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이하 〈OCI Branch Managers' Meeting Held in Seoul, Korea, 10 and 11 June 1948〉으로 표기)

^{168) 〈}국제련합 총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미국안을 채택〉 《세계신 보》 23호 1947년 11월; 〈미국안이 국제련합 총회에 통과〉 《세계신 보》 25호 1947년 11월

^{169) 〈}하-지중장 성명: 조선독립에 관한 국제련합총회 결의안을 전폭적 지지〉 《세계신보》 26호 1947년 11월

¹⁷⁰⁾ 미소공위의 대립 발생, 유엔이관 이후의 과정 등은 하지 및 미 국무부 관리 등주요 관리들의 성명, 서한 발표 등을 중심으로 정세를 보도함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알리려 했다. 특히 미소공위가 참가 정당 및단체 문제로 난항을 겪는다는 기사가 실린 《세계신보》 7호 이후, 11호의 미소공위에 대해 마셜이 소련외상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시작으로 12호의 군정장관 러취의 발표, 17호 마샬미국무장관이 조선문제를 국제연합에 제출하면서 총회석상에서 한 연설, 18호 미 육군차관 드레이퍼의 성명 등에서 미국은 통일된 자주독립 조선을 어떻게 하면 건설할 수

《세계신보》는 군정활동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군사관이 집필한 공보원 역사는 《농민주보》는 농업정보와 군정활동에 관해 출판하고 《세계신보》는 주한미군사령부의 활동과 미국의 대한정책을 다루기로 처음부터 결정되었다고 두 신문의 역할을 구분했다.171) 그러나 실제로는 《농민주보》도 주한미군사령부의 활동과 미국의 대한정책을 다루었고, 《세계신보》도 군정활동을 보도했다. 다만《세계신보》의 군정활동 보도는 미군정에 의한 남한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되었고, 미군정 하 남한의 교육, 보건, 교통 등의 발전사항이 특히 강조되었다.172) 또한 1948년 올림픽에참가하게 된 내용부터 자금조달, 경기장 광경, 올림픽 대표단의 뉴욕 도착 소식 등 남한의 올림픽 참가 소식이 상세하게 다루어졌다.173)

이례적으로 미곡수집 공지 및 독려, 결과 보고, 정책 위반자 처벌 등 군정의 식량 정책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미곡수집이 미국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171)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11쪽. 한편 이문서는 《농민주보》가 《주간신보》를 대신했다고 서술했는데, 《주간신보》의 폐간 후에 새로 발간된 신문은 《세계신보》이고, 《농민주보》는 《주간신보》가 폐간되기 전부터 이미 활발히 발행 중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주간신보》를 대신한 매체가 《세계신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172)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의 부록문서 〈inclosure #6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January 1948 To 31 January 1948〉1948.2.25.

^{173) 〈}조선도 1948년 올림픽 대회참가〉 《세계신보》 4호 1947년 6월; 〈올림픽참가자금 조달협회 조직〉,《세계신보》 11호 1947년 8월; 〈재일 한인 올림픽 후원회 결성〉 《세계신보》 27호 1947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조선서 처음으로 참가하는 올림픽 경기장 광경〉 《세 계신보》 28호 1947년 12월; 〈올림픽 대표 뉴욕에 도착〉 《세계신 보》 29호 1947년 12월

인에 대한 여론을 좌우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보원은 1947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충청남도 논산군의 13개 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에서 미국인과 남한과도정부의 활동에 대한 반대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세 가지는 지하화한 극좌의 선동, 극우와 경찰의 억압에 대한분노, 미곡수집이었다.174)

한편 미국의 한국 원조의 종류와 노력은 《세계신보》가 매호 다루는 중요한 주제였다. 《농민주보》도 미국으로부터의 물자 원조를 다루었지만 《세계신보》에서는 이러한 기사들이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원조의 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양곡, 유학생 및 교육, 소금, 원면, 의료품, 설탕, 4H구락부 등 각종 분야가 제시되었다.175) 미국 시민들이 한국인을 매우 동정하고 있다는

^{174) 〈}Seventh Field Trip: Nonsan, Ch'ungch'ong Nam-Do, 5-8 December 1947〉1948.1.15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 1945.9-1948.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간행, 607쪽

^{175) 〈}미국서 조선에 량곡 수출〉 《세계신보》 3호 1947년 6월; 〈조선 인유학생 33명 미국. 캐나다. 하와이 향 출발〉 《세계신보》 11호 1947년 8월; 〈목재와 장작이 조선에 입하 미국과 일본에서〉 《세계 신보》 12호 1947년 8월; 〈미국서 소금이 왔다〉, 〈조선에 입하된 미국 잉여물자〉. 〈미국워면이 인천항에 도착〉 《세계신보》 17호 1947년 9월; 〈미국에서 입하된 소맥을 조선에서 제분〉 《세계신보》 22호 1947년 11월;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소금이 입하〉 《세계신 보》 25호 1947년 11월; 〈교수 양인 농학 연구차 도미〉, 〈의사2명 연구차 도미〉, 〈막대한 량의 의료품과 설탕이 입하. 생고무도 다량 입 하〉 《세계신보》 27호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 〈미 현대 소방차 입하. 1분에 3백 카론을 배수〉 《세계신보》 29호 1947년 12 월; 〈미국서 입하된 우유분 배급〉, 〈기관차 4대 입하〉 《세계신보》 32호 1948년 1월; 〈미국물자입하 조선경제계에 큰 공헌. 딘 군정장관 기자단회견담〉 《세계신보》 34호 1948년 2월; 〈미국서 구제품 입 하〉 《세계신보》 36호 1948년 2월; 〈미국4H구락부에서 조선농촌청 년을 원조〉 《세계신보》 37호 1948년 3월; 〈미국마령서 종자 입

점도 강조되었다. 미국의 언론인, 주한미군,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 모두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정,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76) 또한 세계 식량 사정의 악화와 이에 대한 각국의노력이 보도되는 한편,177)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아와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도 기사에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신보》 3호의 〈미국 극동각국에 미곡수출〉이라는 기사에서는 세계의 악화된 식량상황을 위해 미국은 생산 미곡의 1/3만 먹고 나머지는 기아에 허덕이는 극동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은 세계의 부흥을 원하고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필리핀,인도의 독립도 지지한다는 소식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의 독립과경제번영을 기원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178)

《세계신보》는 독자층을 민간 신문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한국 인 대중으로 상정했다. 《세계신보》는 민간 신문을 접할 기회가 없 는 농촌(rural) 한국 독자들에게 미국의 점령정책을 포함한 그 주의

하〉〈유학생 도미〉 《세계신보》 39호 1948년 3월

^{176) 〈}조선에 있는 미국인은 진실로 조선을 원조〉, 〈미국 신문인 들이 조선 사정을 연구〉 《세계신보》 9호 1947년 7월; 〈조선 역도선수와 음악가에 미국인이 의연금을 기증〉 《세계신보》 15호 1947년 9월; 〈미국유학가는 조선학생들. 조선체재 미국인들의 호의〉 《세계신보》 20호 1947년 10월

^{177) 〈}영국은 경제곤경에: 전국민은 일치단결하야 곤란을 극복〉, 《세계신보》 11호 1947년 8월 ;〈영국민 생활대긴축: 경제위기 극복조치안발표〉, 《세계신보》 14호 1947년 9월 ; 〈한조각 빵이라도 아껴 저축하라. 트루먼 대통령이 전국민에게 요청〉, 〈동남아시아가 기근 상태에 직면〉 《세계신보》 20호 1947년 10월; 〈식량을 절약하는 미국각산업계 외국식량 기근을 방지하고져〉, 《세계신보》 21호 1947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전세계적 식량 사정을 검토하라. 헬믹대장이조선국민에게 요망〉 《세계신보》 22호 1947년 11월

^{178) 〈}세계경제 부흥을 위하야 미국이 제안〉, 〈비율빈독립은 동양의 표본〉 《세계신보》 6호 1947년 7월; 〈인도는 드듸여 독립하였다 독립기념 성대히 거행〉 《세계신보》 12호 8월

국내외 뉴스를 제공하는 한편, 농촌(rural), 읍(town), 인구 5만 이하의 도시(city)에 속보를 확실히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지방의 신문이 도 단위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세계신보》가 민간 신문이 존재하는 서울과 지방 도시를 독자층에서 제외하고, 민간 신문이 도달하지 않는 전 지역의 한국인을 독자층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179)

공보원은 AP, UP, INS 등의 통신사는 더 큰 도시의 신문에만 속보를 배포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전에뉴스에 대한 특정 입장이 전파된다고 보고, 《세계신보》를 통해 속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180) 즉, 공보원은 국내 신문들이 국제 통신사로부터 미국의 대한정책 관련 뉴스를 전달받아 보도하는 과정에서국내 정치세력의 입장이 투영되고, 그것이 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공보원은 민간 신문이 부재한 지역에 미국의 대한정책에 관한 특정 정파의 해석이 유포되기 이전에, 《세계신보》를 통해 뉴스와 그에 대한 점령 당국의 입장을 배포하고자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공보원의 설치가 모색될 무렵《주간신보》가 폐간되었다는 점이다. 《주간신보》는 1947년 4월 폐간되었다. 한편 《농민주보》는 공보원이 창설된 후 30만부 발행을 유지하다가 1947년 7월 14일 이후에는 격주로 발행되었다.181) 즉,《세계신보》를 위한 용지는 《주간신보》의 폐간 및 《농민주보》의 발행 감소로 확보되었다.

《주간신보》의 폐간과 《세계신보》의 창간은 점령군의 공보 정

¹⁷⁹⁾ 해방 당시 지방에는 일제 말 일도일지(一道一紙) 원칙에 따라 각 지방에 일문지가 하나씩 있었다. 당시 용지 부족과 미군정의 언론 통제 정책으로 보았을 때, 해방 2년 만에 도 단위 이하에서 신문 발행이 활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박용규, 1988, 앞의 논문, 32쪽

^{180)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10~12쪽

^{181)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11쪽

책과 대상의 변화를 반영한다.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주간신보》 가 민간 신문에 대항하며 사실상 서울의 독자를 대상으로 미군정의 정계 개편과 군정 정책을 설득했다면, 한글로 작성된《세계신보》는 미국의 메시지를 미국인이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공보 정책과 대상의 변화가 공보 기구와 매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미군정에 의해 좌익 언론이 위축되고, 서 울과 지방에서 좌익 조직이 모두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면 서, 미군정이 더 이상 대항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없게 되 었다는 점도 《주간신보》의 폐간을 가능하게 했다. 1946년 5월 18일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의 폐간을 시작으로, 9월 6 일 《조선인민보》《현대일보》《중앙신문》이 발행 정지되었다. 그 외에도 1947년 7월 2일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과 《조선인 민보》의 발행인 김광수가 포고령 2호와 신문지법 위반으로 구속되 었고, 《노력인민》은 일정 기간 이상 휴간하면 무기정간할 것을 규 정한 공보부령 1호 위반으로 자동 폐간되었으며, 10월 8일에는 소 련의 타스 통신과 계약한 유일한 통신사인 해방 통신이 폐쇄되는 등 좌익 언론인에 대한 구속과 좌익지에 대한 정간이 수시로 이루 어졌다. 좌익 언론의 위축되면서 우익 신문이 언론계를 주도하게 되 었다. 대표적으로 그간 좌익 언론이 주도했던 조선신문기자회에서 우익 언론사가 탈퇴하여 1947년 8월 우익 언론인만으로 구성된 조 선신문기자협회를 결성함에 따라 언론인 단체의 주도권이 조선신문 기자회에서 조선신문기자협회로 옮아갔다.182)

¹⁸²⁾ 김민환, 2001 〈미군정의 언론정책〉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나 남, 246~248쪽; 〈중외신보, 공보부령 저촉으로 무기정간 처분〉 《자 료대한민국사 5권》 1947년 8월 28일; 박용규, 2007 〈미군정기 언론 인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 《한국언론학보》 51(6) 한국언론학회, 148~153쪽

한편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 미군정과 경찰은 우익청년단을 이용하여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좌익 조직을 무력화시켜나갔고, 1947년에는 지방에 진출하여 좌익 조직을 독립중앙촉성협의회 지부로 대체시켜나갔다. 이에 1947년 가을에 이르면 지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좌익 조직은 거의 사라졌다. 미군정의 좌익 언론 탄압의 강화와 좌익 조직의 약화는 미군정이 군정 비판에 대한 대항논리를 선전할 필요성을 감소시켰고, 이러한 여건은 공보부의 《주간신보》의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183)

공보원은 《세계신보》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배포방식을 개선했다. 스튜어트는 배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공보원의 창설을 제안하던 단계부터 자동차와 가솔린의 보급, 공중살포를 위한 비행기를 배치해 줄 것을 상부에 요구했다. 184) 이에 《세계신보》는 한국기관, 우편제도뿐 아니라 6, 7 보병사단 순찰대의 지프차와 비행기의 공중살포를 통해서도 배포되었다. 185) 더 나아가 공보원은 제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차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고 이를 《세계신보》를 비롯한 공보물을 배포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훗날 공보원의 후신인 USIS는 농촌에서는 한국의 민간 신문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배포량을 가졌기 때문에 USIS가 유일한 뉴스기관이라고 자평하였다. 186)

¹⁸³⁾ 지방에서의 좌익 조직 붕괴에 대해서는 임나영, 2008 《1945-1948 우익청년단 테러의 전개 양상과 성격》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 사학위 논문 참고.

^{184)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의 부록문서 〈inclosure #3 Propaganda Plan〉 1947.4.14

^{185)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의 부록문서 〈inclosure #4 Report on the History and Growth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947.11.10;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11쪽

^{186) (}In most rural areas in Korea USIS is the only news agency

배포방식과 더불어 배포량은 공보원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여준다.《세계신보》의 발행부수는 5만부에서 시작하여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직후인 1947년 10월에는 20만부로 증가했다. 1948년에 들어서 30만부로 증가한 발행부수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음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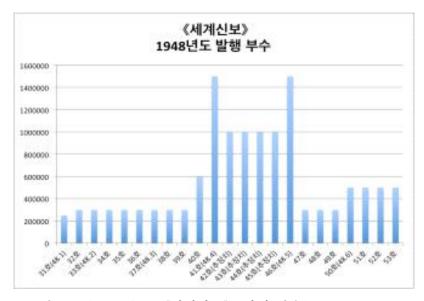


그림 1. 〈1948년도 《세계신보》 발행 부수〉

출처: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48〉의 부록문서 #5~#11.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948.1.15.~ 1948.7.15.

통상 30만부였던 발행 부수는 선거 공보가 실시되면서 3월 마지막 호에 60만부로 증가했고, 4월 첫째 호인 41호에는 150만부로급증했다. 42호부터 45호까지는 정확한 발행 부수는 알 수 없지만 4월의 총 발행 부수가 5,625,000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호당 최

[[]한국의 지방 지역에 설립된 미국공보원은 유일한 통신사]〉 사진 뒷면, 소장처:미국립문서관(NAⅡ),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고코드 AUS001_41_00V0000_015)

소 100만부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4월에 발행한 5개호 중 4개, 즉 총 5,625,000부 중 4,625,000부가 적색과 검정색의 2가지 색으로 출판되어 흥미를 끌었다.187) 선거가 끝난 이후 발행 부수는 30만부로 감소했다가 이후 50만부로 증가했다.

1947년 11월 발행 부수의 절반은 지상에서, 나머지 반은 공중에서 살포되었으나, 3월 중순부터는 가장 고립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전체부수의 3/4이 공중살포 되었다. 한민당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외에 모든 정당들이 선거 발상을 마음내켜하지 않거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직접 인쇄물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기 선거 출판 캠페인의 기본 전략이었다.188)

공보원은 이처럼 대중을 중요한 공보 대상으로 삼는 한편 여론지도층을 공보의 대상으로 주목했다. 공보원은 도시 중간계급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정통하지만 영향력이 없다고 간주했다. 따라서 이전시기까지 공보부의 공보정책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적 구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공보원의 정책은 대중을 한 축으로, 여론지도층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선전의 직접적 대상 구분을 중심으로이루어졌다. 공보의 대상을 여론형성그룹과 대중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미국의 일반적인 전후 공보프로그램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상황의 현실에 따른 공보원 정책의 특징으로 평가되었다.189)

여론지도층에 대한 홍보 활동의 중심은 도서관 프로그램과 월간 잡지의 배포였다. 공보원은 육군 민정국이 기증한 장서 1500권을 서울 4개, 부산 2개, 개성 1개의 도서관에 배치하고 여기에 잡지를

^{187)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April 1948 To 30 April 1948〉 1948.5.15;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40쪽

^{188)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40쪽 189) 위의 문서, 5쪽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이 도서들은 독일, 일본과 같이 발전된 산업 국가들의 요구에 기준을 맞추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한국 인들의 이해수준보다 훨씬 높았고, 《U.S Camera》, 《Life》 와같이 보다 읽기 쉬운 사진 책이나 잡지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았다. 공보원은 장서의 약 1/10만이 한국인 독자들에게 유용하며,한국인들의 필요에 적합하면서도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은 농업, 지리학, 의학, 그리고 인문과학 특히 철학이라고 평가했다.190)

공보원의 월간 잡지는 육군 민정국이 제공하는 미국 잡지 기사들을 번역하여 제작되었다. 잡지 제작은 공보원이 담당했지만, 민정국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 잡지명은 《민주주의》로 결정되었으나,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소련이 과도하게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문화풍속》으로 변경되었다. 191) 1948년 4월 10일에 첫 호 3만부가 공보원 지부들과 the Chosun Book Distribution에 의해 50원에 유료 배포되었고, 이 중15000부가 판매되었다. 이후 6월부터는 15000부로 출판 부수를 변경했고, 7월에는 잡지 가격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했다. 192)출판이 확인되는 마지막 《문화풍속》은 8월호이지만, 정확한 폐간 시

¹⁹⁰⁾ 위의 문서, 15쪽

^{191) &}lt;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January 1948 To 31 January 1948 > 1948.2.25.; <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February 1948 To 29 February 1948 > 1948.3.20

^{192)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March 1948 To 31 March 1948〉 1948.4.15;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April 1948 To 30 April 1948〉 1948.5.15.;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May 1948 To 31 May 1948〉 1948.6.15.;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June 1948 To 30 June 1948〉 1948.7.15

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이 국무부 산하 USIS로 변경된 후 100원에 판매하는 유료 월간잡지 《아메리카》가 1949년 3월 창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풍속》은 그 이전에 폐간되었을 것이다.

국무부는 월간 《아메리카》를 《문화풍속》의 후속편으로 인식했다. 국무부는 월간 《아메리카》의 목표를 한국인 지식인층에게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촉진시키는 것에 두고, 잠재적 독자층으로 학생, 지식인, 중산층 상인, 정부직원, 전문가들, 글을 읽을 줄 알며 잡지 구매력이 있는 극소수의 농부를 설정했다.193》이는 공보원의 《문화풍속》이 겨냥한 독자층이 어디에 있었는지 유추하게 해준다. 여론지도층을 위한 도서 제공과 잡지 발간이 미 본국의 자료 제공으로 이루어진 공보원의 활동이라면, 한국인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보원의 신문 발행과 라디오 방송은 공보원이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공보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출판물과 라디오는 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공보 주제나 내용을 바꾸어야 했다. 라디오 방송 원고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신보》를 통해 공보원이 미소공위 결렬에서 분단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면마다 공보원이 전파한 메시

한편《세계신보》의 메시지는 라디오 방송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 게 해 준다.194) 《세계신보》와 라디오 방송이 긴밀히 연결되었기

지를 파악할 수 있다.

^{193) (}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eries: Reco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1938-53) Lot 52-367, Entry 1559, Box 152, From Dorothy Boyce, Publication Editor (The American Monthly-Korea) To Mrs. Marion K.Sanders, Chief, Magazine Branch, INP 〈Subject: Field Trip to Korea, June 1-July 7, 1949〉 1949.7.18., 28쪽

¹⁹⁴⁾ 라디오 방송 원고를 담당했던 사람은 스테판 세스타노비치(Stephen Sestanovich)로, 그는 1947년 11월 말에서 1948년 1월 초 사이에 편집 전문가(Editorial Specialist)이자 라디오 원고 작가로 공보원에 부임했다. 그는 1912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하에 있었던 크로아티아

때문이다. 공보원은 1948년 1월 매주 토요일 밤 6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세계신보》의 내용을 연극화하여 방송했고, 이는 각 지방 방송국에서도 중계 방송되었다. 프로듀서는 이 프로그램을 "민주주의 사고"를 홍보하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이용하여 뉴스를 쟁점화하는(point at news) 쇼"라고 설명했다. 195) 《세계신보》를 극화한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내용도 《세계신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8년 3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뉴스 속의 뉴스(News Behind the News)"라는 주간프로그램이 방송되었는데, 이는 최근 뉴스를 극화한 것으로서 선거홍보 시 토지개혁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3월 15일 새로시작한 "뉴스 해설(News Commentary)"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남부 달마치야 연안에 있는 코르출라 섬에서 태어나 1920년 가족과 함 께 미국으로 갔다. 세이트 메리스 컬리지(St.Mary's College)를 졸업하 고 버클리 대학교에서 역사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으며 저널리즘, 출 판, 홍보 관련 조교로 활동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전시정보 국(OWI)에서 복무했다. 전쟁 중에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적의 라 디오 방송을 번역, 분석하는 편집자로 일했다. 공보원장인 스튜어트, 《세계신보》 책임자, 라디오 방송 책임자가 모두 전시정보국(OWI) 출 신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선거가 끝난 이후 1948년 6월 10일, 11일 양 일간 열린 제 2차 공보원 지부장 회의에서 이 두 명은 함께 편집 (editorial) 정책과 문제들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맡았는데, 이는 출판과 라디오를 통한 홍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보 여준다.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0 November 1947 To 15 January 1948.1.15.; (OCI Branch Managers' Meeting Held in Seoul, Korea, 10 and 11 June 1948>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Stephen Sestanovich obituary) San Francisco Chronicle on June 24, 2014

https://www.legacy.com/obituaries/sfgate/obituary.aspx?n=stephen-n-sestanovich&pid=171454488

^{195) 〈}매 토요일밤 시사극방송〉 《세계신보》 32호 1948년 1월;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26쪽

금요일까지 9시 30분부터 15분간 방송된 뉴스 분석 프로그램으로 "김삿갓"이라는 가명을 쓴 아나운서가 북한의 토지분배 계획, 북한 헌법, 소련의 활동과 정책들을 비난하고 선거인 등록의 중요성, 남한 농지개혁, 미국의 한국에서의 활동, 5.10 선거 참여 촉진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196) 라디오과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이 뉴스분석을 통한 강도 높은 역선전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했다.197) 후술하듯이 남한 토지개혁 홍보, 북한과 소련에 대한 비난 등은 공보원의 선거 홍보가 진행되면서 《세계신보》가 강조한 주제였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세계신보》의 홍보 주제와 메시지의 유사성은 두 매체를 통한선거 홍보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3장에서는 미국 대한정책의 중요한 국면에 따른 《세계신보》의 보도 양상과 논조를 살펴보고, 이를 주요 우익 신문의 논조와 비교하겠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한정책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향하면서 한국인을 향한 홍보 메시지와 선전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세계신보》와 더불어 동시기에 발행되었던 공보부의 《농민주보》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농민주보》는 공보원의 창설과 함께 공보원이 간행 책임을 맡았다가 1947년 12월 이후 다시 공보부의 기능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공보원장을 비롯한 공보부의 미국인 고문들이 공보부의 정책과 활동을 감독하는 등 공보원의 공보정책이 공보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으므로 《농민주보》의 내용은 공보원의 정책 하에 결정되었다.198》

^{196)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 44~45쪽; 《World News》 44호 1948년 5월 1일.

¹⁹⁷⁾ 공보원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선영, 박용규, 이상길 외, 2007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338~340쪽 참 고

¹⁹⁸⁾ 미국인의 공보부 활동 감독에 대해서는 졸고, 2010, 410~412쪽 참고.

二. 주한미군정청 공보부의 선전 담론

1. 제1차 미소공위 전후 반탁·반소 선전

1)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반탁 선전

해방 직후 새로운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한 구상들이 분출했다. 정치세력들은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여 좌우를 막론하고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각자의 해법과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했는데, 이 구상들은 좌·우, 미·소, 이념으로는 범주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컨대 1945년 8월 조선공산당의 '8월 테제'는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를 당장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부르주의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고, 1945년 12월 한국 민주당은 '계급적 대립문제, 기타 사회문제는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좌우익 모두 자본주의, 공산주의 양자 노선 중 한쪽만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199)

흥미로운 것은 해방 직후의 다양한 국가 수립 구상들이 모두 민주 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설명되었으며, 각 정치세력 들은 각자 자신이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해방 직 후의 국가 건설 구상들은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신민주주 의, 자유민주주의 등 모두 민주주의로 표방되었다.200) 이는 민주주 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을 물리친 이념으로써, 해방 직후

¹⁹⁹⁾ 김인식, 2008 〈「8월테제」의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건설론〉《한국민족운동사연구》5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윤덕영, 2014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165, 한국사연구회

²⁰⁰⁾ 김정인, 2013 〈해방 전후 민주주의'들'의 변주〉 《개념과 소통》 12 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새로운 질서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신념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이때 민주주의는 해방의 이념으로, 과거 일제 통치 하에서 억눌렸던 모든 욕망과 권리를 회복하고 비참한 삶의 조건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했다.201) 즉, 해방 직후 민주주의는 탈식민국가·자주적 독립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소련식 민주주의나 미국식 민주주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202)

해방 직후부터 1945년 말에 이르기까지 정치세력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각자 탈식민·자주적 독립 국가 수립 구상을 내놓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1945년 12월 27일 국내 신문들을 통해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입장이국가 수립 문제의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그 보도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조선보》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이 조선의 즉시 독립을, 소련이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203) 이기사는 '워싱턴 25일발 합동지급보'로 표기된 외신기사로, 12월 25일에 이 기사를 송신한 통신사는 표기되어있지 않고, 수신 통신사가합동통신이라는 것만 밝혔다. 이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외상간의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나온 보도였다.

²⁰¹⁾ 김봉국, 2018 〈해방 직후 민주주의 공론장의 안과 밖〉 《감성연구》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59~163쪽

²⁰²⁾ 김봉국, 2018 위의 논문, 150쪽

^{203)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삼팔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 〈독립신탁론대립? 미국은 즉시독립을 주장〉 《조선일보》 1945년 12월 27일; 〈조선문제표면화, 미국은 즉시독립을 주장, 주목되는 삼국외상회의〉 《신조선보》 1945년 12월 27일

기사 내용은 미국무부장관 번스가 모스크바로 출발할 당시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조선의 즉시독립을 주장하라는 훈령을 받았 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번스가 그와 같은 훈령을 받았다는 것을 누 가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은 국민투표로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한 반면, 소 련의 입장은 남북한을 일괄한 일국신탁통치를 실시해야하며 38도선 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사실 신탁통치는 미국의 전후(戰後)처리 방침의 하나로, 미국은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 1943년 2월 얄타 회담, 1945년 7월 포 츠담 회담을 거치며 소련에 한반도 신탁통치를 제안했다. 그 중 포 츠담 회담에서 미국이 20~30년간의 한반도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소련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소련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소는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구두 합의했다. 미소는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의 외상회의 즉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때 미국의 신탁통치안이 소련의 선(先)조선 정부 수립안과 충돌하자, 양자의 절충안으로 조선 임시정부 수립과 최장 5개년 간에 걸친 미·영·중·소의 신탁통치가 합의되었다. 204) 즉, 1945년 12월 27일자의 보도는 소련이 조선의 즉시 독립을,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사실을 뒤바꾼 왜곡 보도였다.

1945년 12월 27일 기사는 '워싱턴 25일발 합동지급보'라고만 표기할 뿐, 외신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이 기사는 UP통신의 기사였다. 1945년 12월 25일 UP통신은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라는 기사를 작성했고, 한국 신문의 '워싱

²⁰⁴⁾ 서중석, 2004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 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 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282~288쪽, 302~305쪽

턴 25일발 합동지급보'기사는 UP의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205) 그런데 미육군이 해외에 근무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문인《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의 1945년 12월 27일자는 한국 신문에 실린 '워싱턴 25일발 합동지급보'기사와 동일한 기사를전재하고, 이 기사의 필자로 UP통신의 랄프 헤인젠(Ralph Heinzen) 기자를 지목했다. 그는 유럽에서 오랜 특파원을 보낸 유럽 전문가로 동아시아와는 관련이 별로 없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날조 전문가'로 통하는 기자였다.206)

이를 요약하면 1945년 12월 25일 UP 통신은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를 내보냈다. 1945년 12월 27일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는 이를 발췌하여 게재하며 기사의필자가 랄프 하인젠임을 밝혔다. 1945년 12월 27일 한국 신문에는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에 실린 기사와 똑같은 기사가실렸는데, '워싱턴 25일발 합동통신지급보'로 게재하여 기사를 발신한 통신사를 밝히지 않았고, 기사의 작성자 또한 밝히지 않았다.

이상의 경위를 추론하면 랄프 헤인젠은 UP 통신의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를 작성했거나, 이를 발췌하여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의 기사를 작성했거나, 아니면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의 기사에 이름이 도용되었다. 그리고 한국 신문들은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의 기사를 게재했거나,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의 기사를 게재했거나,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에 게재하기 위해 준비된 동일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합동통신이 계약한 외신 통신사는 UP가 아니라 AP였기 때

²⁰⁵⁾ UP 기사 전문의 출처는 UPI 웹사이트.

https://www.upi.com/Archives/1945/12/25/Independence-of-Korea-is-being-urged/9081517275283/

^{206) 《}태평양 성조기》지와 랄프 하인젠에 대해서는 정용욱, 2003 앞의 책, 158~165쪽

문에 합동통신이 UP의 기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UP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통신사는 조선통신이었다. 그리고 만약 합동통신이 UP 통신의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기사를 받아서 한국 신문에 배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 신문과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가 UP통신의 기사를 똑같이 발췌해서 번역하여 동일한 날짜에 실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합동통신이 국내에 외신을 전달하며 '워싱턴 25일발 합동통신지급보'라고만 표기할 뿐 발신 통신사를 표기하지 못한 것은, 기사의 출처가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이거나 12월 27일《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와 한국 신문들에 실리기 위해준비된 동일한 기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합동통신을 이용 혹은 합동통신의 이름을 빌려 이를 국내 신문에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거나, UP 기사를 발췌한 기사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1945년 12월 27일에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와 한국 신문들에 실리도록 합동통신을 이용하여 배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 기사를 배포한 사람은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 랄프 하인젠, 합동 통신사와밀접한 관계였고,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와 한국 신문에 동일 날짜에 동일한 기사를 실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문들은 1945년 12월 27일의 합동통신지급보 기사와 함께 '합동특보(特報)'로 표기한 외신기사 하나를 묶음으로 게재했는데, 이 기사 또한 목적을 가지고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207) 이 기사는

^{207) 〈}조선분점은 부당, 미여론에 續出되는 삼팔선〉 《동아일보》 1945 년 12월 27일; 〈조선분점은 부당, 독립은 미중이 공약, 삼팔도선에 대한 美紙 보도〉 《신조선보》 1945년 12월 27일; 〈조선분점은 부당, 독립은 미중이 공약, 삼팔도선에 대한 美紙 보도〉 《민중일보》 1945

카이로 회의에서 장개석과 서구연합국이 조선독립을 선언했고, 테헤란, 얄타, 포츠담 각 회담에서 아무도 38선 분할점령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조선의 독립은 미국과 중국이 약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내용으로 보아 이 기사는 '워싱턴 25일발 합동통신지급보' 기사의 주장, 즉 미국이 조선의 독립을 예전부터 원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합동특보(特報)'라고 표기하여 수신자가 합동통신임을 밝히고있을 뿐, 이 기사를 송신한 통신사, 송신 날짜나 수신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기사는 도입부에 뉴욕의 '오덴스벌그 쩌널'지가 '이즈음 「철벽이 갖어온 비극」이라는 삼십팔도에 관하야 다음과 갓튼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며 그 출처를 밝혔다.

이 기사가 뉴욕에서 발행되는 공화당 계열의 잡지인 《Ogdensburg Journal》에 실린 것은 1945년 11월 6일이다.208》 《Ogdensburg Journal》 7면에 실린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은 본래 38선으로 인한 조선 경제의 파탄이었다. 테헤란, 알타, 포츠담등 국제협약에서는 한국의 인위적인 분단을 약속한 적이 없고,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장개석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 독립시키는 것만을 약속했는데, 38선이 생기면서 조선 경제가 파탄났다는 것이었다.

국내 신문에 1945년 12월 27일자 '워싱턴 25일발 합동지급보' 기사 바로 옆에 실린 '합동특보(特報)' 기사는 1945년 11월 6일자 《Ogdensburg Journal》의 기사 원문 중에서 카이로회담에서 미국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 조선을 독립시킬 것을 주장했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미·중이 조선 독립을 약속했다는 사실만

년 12월 27일

^{208) 〈}Iron Wall Brings Misery〉 《Ogdensburg Journal》 1945년 11 월 6일. 출처는 NYS HIstoric Newspaper 웹사이트.

URL:

https://nyshistoricnewspapers.org/lccn/sn84031165/1945-11-06/ed-1/seq-8/

을 강조함으로써 '워싱턴 25일발 합동지급보'기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1945년 11월 6일자 기사가 발신사와 발신일, 수신일 없이 합동통신에 특보로 전해지고, '1945년 12월 25일 워싱턴발 합동지급보'기사 옆에 실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같은 시기에두 기사를 보도하도록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워싱턴 25일발합동지급보'기사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두 달 전에 작성된외신인 1945년 11월 6일자의 《Ogdensburg Journal》기사가 함께배포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 랄프 하인젠, 합동 통신사와 밀접한 관계였고,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와 한국 신문에 동일 날짜에 동일한 보도를 실을 수 있고, 두 달 전의외신을 합동통신의 이름으로 국내 신문에 일제히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이 1945년 12월 27일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국내 전달 보도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태평양성조기(Stars and Stripes》에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점을 볼때, 미육군 극동군사령부와 서울의 점령 당국이 관련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209)

미군정은 1945년 10월 이래, 신탁통치안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한반도 신탁통치 가능성이 처음 국내에 전달된 것은 1945년 10월 20일이었다. 미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가 1945년 10월 20일 미국외교정책협의회 회합에서 조선은 자치를 할 준비가되어있지 않으므로 미국은 우선 신탁관리를 실시하여 그간 조선이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 보도된 것이다.210) 한민당, 조선공산당, 인민공화국, 국민당 등 모든 정당은 이에 일제히 반발했고, 미군정은 〈정치동향〉을 통해 신탁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주시했다.211) 이에 아놀드 군정장관은 10월 30

²⁰⁹⁾ 정용욱, 2003 위의 책, 165~167쪽

^{210) 《}매일신보》 1945년 10월 23일

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빈센트의 발언은 단지 개인의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니므로 묵살해 버리라고 까지 언급했다.212) 즉 미군정은 이미 10월 중순 이래 신탁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었으므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가 가져올 미국과 미군정에 대한 비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언론을 이용했을 수 있다.

한편 우익은 미국이 즉시 독립을,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1945년 12월 27일자 보도 이후 정국이 신탁통치 찬성이냐 반대냐를 중심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해방직후 친일파·민족반역자 대 독립운동가·애국자로 분류되었던 정치적 대립구도는 반탁이냐 찬탁이냐로 재분류되었고, 이를 통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던 것이다.213)

급진 세력이 잘 조직된 데 비해 보수 세력은 조직과 대중적 지지가 없다는 점이 점령 목적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던 하지는 오보를 정정하는 대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해서 우익의 반탁, 반소 운동을 지원했다. 214) 이는 박헌영-존스턴 기자사건 보도에 관한 미군정의 개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46년 1월 5일 박헌영은 한인 기자 12명, 외신기자 7명 및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때 참석한 기자는 《뉴욕타임즈》의 리차드 존스톤, 《태평양 성조기》의 코넬 중사, 공보부의 터커(Tucker) 대위 등이었다. 215) 여

^{211) 〈}정치동향〉 3호, 1945년 10월 29일; 〈정치동향〉 5호, 1945년 11월 5일; 〈정치동향〉 6호, 1945년 11월 9일

^{212) 《}매일신보》 1945년 10월 31일

^{213) 1945}년 말 《동아일보》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왜곡 보도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용욱, 2003 〈1945년 말 1946년 초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론과 공작을 중심으로-〉《역사비평》62, 역사문제연구소 참고.

^{214) 〈}정치동향〉 1946.3.8. 정용욱, 앞의 책 133쪽에서 재인용

²¹⁵⁾ 정병준, 2018 《방선주 저작집 2-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한국현대

기서 박헌영은 현재 한국은 소비에트화할 단계가 아니며, 미군정이 반탁운동을 고무하고 옹호하는 반면 인민위원회 등 민주주의세력을 대량 검거한다고 비난했다.216) 박헌영의 기자회견은 다음날 《동아일보》《조선일보》에는 게재되지 않고, 《조선인민보》《자유신문》《중앙신문》《신조선보》《서울신문》등에 실렸다. 헤드라인들은 모두 박헌영이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 조건에 순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으며, 당시에는 박헌영의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217)

그러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열흘이 지난 시점에 박헌영 기자회견에 대한 존스톤 기자의 기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되었다. 박헌영이 소련의 1국 신탁제를 지지하며, 향후 10~20년 이내에 소련연방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담았고, 《동아일보》《조선일보》《대동신문》등은 박헌영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218) 1월 16일 박헌영이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부정하는 담화를발표했지만,219) 《동아일보》와 《대동신문》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샌프란시스코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며 박헌의 '매국적 언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방송 관련 기사와 함께 이를 한민당이 배격한다는 기사를 게재했고, 17일에는 박헌영의 발언을 비난하는 단체들의 궐기를 보도했다. 18일에는 조공이 탁치를 절대 지지하여 반반탁(反反託) 운동을 감행했다는 실천적 사실로 볼 때 존스톤 기자가 오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백번 양보하여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헌영이 책임

사자료》 선인. 118쪽

^{216) 〈}국제적 민주조선 수립, 통일전선은 4정당 교섭으로. 공산당 박헌영 씨 내외기자단과 회견〉 《자유신문》 1946년 1월 6일

²¹⁷⁾ 정병준, 2018, 앞의 책, 119쪽

²¹⁸⁾ 서중석, 2004 앞의 책, 323쪽

^{219) 〈}박헌영씨는 사실을 부인〉 《조선일보》 1946년 1월 17일

을 져야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220) 《대동신문》 또한 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보도하고, 17일 '매국적(賣國賊) 성토대회'에 대한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221) 한편 《조선일보》는 1월 17일 샌프란시스코 방송 내용, 한민당의 비판, 샌프란시스코 방송 내용을 부인하는 박헌영의 담화를 모두 게재하고, 18일에 조선공산당의 입장을 보도했다.222)

1월 18일 존스톤은 자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발표했지만, 같은 날 1월 5일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은 존스톤의 보도가 오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223)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존스톤의 발표를 크게 보도한 데 비해, 기자단의 발표는 게재되지 않았다. 이 무렵 미군정은 존스턴의 보도는 이미 전파되고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더 이상 기자 회견 내용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했다.224)

미군정은 존스톤이 보도가 왜곡 보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정치동향〉을 작성하던 공보부의 버취 중위는 공보부장 뉴먼에게 자신이 작성한 1월 20일자〈정치동향〉17호가 존스턴이 박헌영의 말을 정확히 전달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치동향〉다음

^{220) 〈}조선을 소련 속국으로〉, 〈박헌영의 매국 언동. 한민당에서는 배격을 결의〉 《동아일보》 1946년 1월 16일; 〈전국적으로 배격운동〉 〈UP가 전한 문제의 전문〉 《동아일보》 1946년 1월 17일; 〈사설. 오해냐 왜곡이냐〉 《동아일보》 1946년 1월 18일

^{221) 〈}賣國賊성토대회에서 박헌영씨를 타도〉 《대동신문》 1946년 1월 17일

^{222) 〈}UP 기자의 보도〉 , 〈한민당도 배격 결의〉, 〈박헌영씨는 사실을 부인〉 《조선일보》 1946년 1월 17일;〈뉴욕紙所報는 오전〉 《조선일보》 1946년 1월 18일

^{223) 〈}뉴욕타임즈엔 오보는 없다. 존스턴씨와 박헌영씨의 회담진상 경위〉 《동아일보》1946년 1월 20일; 〈쫀스톤 기자 보도, 절대로 사실무근〉 《공업신문》 1946년 1월 20일

^{224) 〈}G-2 Weekly Summary〉 19호 1946년 1월 22일 3쪽, 1990,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1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81쪽

호에서 존스턴의 기사가 '거짓'이었다고 정정해도 무방할지 물었다. 그러나 뉴먼은 이에 반대하며, 그대로 놓아둘 것을 지시했다.²²⁵⁾

공보부는 사태를 방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1946년 2월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존스톤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공보부는 조사결과 존스톤의 인용은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졌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 보도가 왜곡 보도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이다.226) 박헌영이 소련의 1국 신탁통치와 조선의 소련 합병을 주장했다는 보도는 미군정에 의해 '사실'의 권위를 갖게 되었고, 이는 신탁통치 정국 이후 좌익이 찬탁을 주장하기때문에 반민족, 매국노이며, 반탁을 주장하는 우익이 민족주의자, 애국자라고 줄곧 선전해 온 《동아일보》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다.227)

한편 1946년 1월부터 1차 미소공위가 휴회 전까지 《농민주보》와 《주간신보》의 신탁통치 관련 기사 및 사설을 표로 정리하면이하와 같다. 이 시기 분석을 위해 확보한 《주간신보》는 1946년 1월 19일에 발행된 《주간신보》13호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농민주보》의 선전담론을 위주로 분석하겠다.

^{225) 〈}사관기장〉 1946.1.26. 정병준, 앞의 책, 123쪽에서 재인용; 서중 석, 앞의 책,

^{226) 〈}미국기자와 박헌영씨의 문답 정확한 사실임이 조사로 판명〉 《동 아일보》 1946년 2월 19일; 〈박헌영씨담화사건 군정청공보국 발표〉 《조선일보》 1946년 2월 19일

^{227) 〈}사설: 自我冒瀆을 擊함 信託受諾은 奴隷根性〉 《동아일보》1946 년 1월 5일; 〈全民族의 總意에 依한 過渡政權樹立에 着手〉 《동아일 보》1946년 1월 6일

표 2. 〈신탁통치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 (1946년 1월 ~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위 휴회 이전)〉

| 《농민주보》 | | 《주간신보》 | |
|-----------------|--|-----------------|-----------------------------|
| 1946년 1월 12일 | 〈오해하지 말라〉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주장〉 〈조선인에게 고함〉 〈침착하게 행동하라 미국서 온 보도〉 | 1946년 1월 19일 | 〈사설:獨立好機는不再來〉 〈金主事와 케軍曹〉 |
| 1946년 1월 28일 | 〈러-치소장의 연설〉 | | 미확보 |
| 1946년 2월 2일 | 〈하-지중장의 연설〉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하야〉 | | 미확보 |
| 1946년 3월 16일 | 《미소공동회담의 결과 군정청 특별발표》 《운명의 三십八도선 밀약에 의 한 것이 않이다》 | | 미확보 |
| 1946년 3월 23일 |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미국 대표의 목적〉 | | 미확보 |
| 1946년 5월 4일 | 〈공동위원회를 협조 새조선건 설에 노력하라〉 | | 미확보 |

미군정이 서울에서는 언론 공작을 통해 우익을 지원했다면, 신문이 존재하지 않는 농촌에는 《농민주보》를 통해 직접 우익을 지원했다. 공보부가 〈정치동향〉에서 한국민주당이 각 도에 지부를 설립했으나, 훈련 받은 군정관리의 즉각적인 장려가 없이는 그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할 만큼, 점령 당국은 우익이 지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228) 공보부는 지방이 신탁통치 정국으로 인한 서울의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228) 〈}정치동향〉 13호, 1945년 12월 22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이 농촌에 전달하는 정보는 농촌이 신탁통치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을 것이다.²²⁹⁾

1946년 1월 12일자 《농민주보》 3면 하단에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 번스장관이 조선 자주독립을 주장했지만 소련이 반드시 조선에 신탁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작은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정보의 출처나 근거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230)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동아일보》가 번스 장관이 모스크바 3상회의 종료 후 출발을 앞두고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을 주장했으나 소련이 1국 신탁통치제를 주장하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실었다는 점이다. 231) 《농민주보》의 기사와 《동아일보》의 기사가 같은 정보를 비슷한 문구로 다루고 있고, 양자 모두정보의 출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두 기사의 출처가 같거나 《동아일보》의 기사를 《농민주보》의 기사가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1945년 12월 27일자 왜곡보도가 모스크바로 출발하기 전 번스가 받은 훈령에 대한 보도라면, 1946년 1월의 《동아일보》와 《농민주보》는 이를 모스크바를 떠나며 번스가 언급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가 실린 시점은 국내 신문들에 모스크바 3상회의 왜곡 보도가 게재된 지 약 보름이 지난 뒤로, 이때는 이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 전문이 전달되고, 한국신문들은 신탁통치가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구상한 안이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었다.232)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여론도 분화하여 1946년 1월 신

^{229) 〈}정치동향〉 15호, 1946년 1월 5일

^{230)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주장〉 《농민주보》 4호 1946년 1월 12일

^{231) 〈}三千萬의 總意無視는 弱小民族解放의否認〉《동아일보》1946년 1 월 8일

^{232) 〈}지난 十月에 內定된 듯. 運營如何론 短縮可能. 在美韓族委員團 田 耕武氏 談〉 《자유신문》194년 12월 29일; 《조선일보》1945년 12월

문들의 논조는 찬탁 반탁의 구분법을 넘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를 자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통일 전선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분화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자유신문》《중앙신문》등은 기존의 반탁 논조를 변경하고, 신탁과 독립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므로, 양 진영이 모두 양보하여 민족통일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233) 《농민주보》는 이와 같은 한국 신문들과는 대조적으로 민간신문이 존재하지 않던 농촌지역에 소련이 조선에 신탁통치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다.

《동아일보》와 《농민주보》가 1946년 1월 시점에서도 소련이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정이 1945년 12월 말의 왜곡보도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군정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자, 1946년 1월 24일 소련의 타스 통신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여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라는 점을 폭로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보도가 서울의 라디오를통해 방송되지 못하도록 검열하는 등,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 왜곡보도가 정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썼다. 결국 1945년 12월 27일에 이루어졌던 왜곡보도는 약 1달 뒤인 1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소련측 수석대표 슈티코프 장군이 서울에 온 후 처음으로 기자단과회견하여 타스 통신의 전문을 발표하고, 25일에 이어 27일에 애치슨 미국무차관이 이에 대체로 수긍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정될 때까지 미군정에 의해 부인되지 않았다. 234) 물론 《농민주보》는 타스 통신 관련 기사나 슈티코프 장군의 기자회견 관련 기

³¹일 김영희, 2000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경향-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의정서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44(4), 한국언론학회, 50쪽에서 재인용.

²³³⁾ 김영희, 2000 위의 논문, 50~56쪽

²³⁴⁾ 정용욱, 2003 앞의 책, 176~185쪽

사는 싣지 않았다.

즉, 1945년 말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보도가 왜곡 보도라는 것이 국무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인될 때까지, 미군정은 우익이 이를 이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미군정이 직접 발행하는 신문인 《농민주보》는 기존의 왜곡보도의 논리를 사용함으로써, 반탁 반소 논리를 농촌에 확산라는 데 기여했다. 반탁 논리는 1946년 1월 이후 특히 지방에서 우익이 좌익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는데, 《농민주보》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다.235)

한편 이 시기 남아있는 《주간신보》는 1946년 1월 19일에 발행된 《주간신보》 13호가 유일하다. 따라서 미군정이 《주간신보》를통해서울 및 주요 도시 지역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어떻게홍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주간신보》 13호에 실린 사설과 기사를 통해 《농민주보》의 논조와 비교가 가능하다. 《주간신보》 13호의 사설을 보면, 《농민주보》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보도를 신탁통치안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그 주창자가 소련이라고 왜곡한 시점에, 《주간신보》는 당시《동아일보》를제외한 기타한국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주간신보》 사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새로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조선에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대중과 지식인이 취해야할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사설은 먼저 조선인끼리 서로 반목하여 격분하는 언론을 발표하는 것은 신정부의 수립을 지연시키는 것이므로, '일반 민중과 지도자들은 침착한 태도로 일치한 여론'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첫째, 신정부수립에 대한 정확한 계획, 둘째, 조선인 지도층 중에서 임시

²³⁵⁾ 서중석, 2004 앞의 책, 316쪽

정부의 주석이 될 만한 인물과 기타 주요부문의 부장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한 통일된 여론, 셋째, 장차 민주주의적 총선거에 제공할 전문적인 계획안에 대해 여론을 일치시켜 미소 양국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소공위에서 조선인 지도자들과 상의 하에 수립한정부가 일반 민중들의 협력으로 순조롭게 운영되면, 장차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해 정무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6)

이처럼 《주간신보》는 직접적으로 좌우의 협력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격분하는 언론'을 중지하고 지도자들의 협력을 통해 정부수립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동아일보》등우익 신문을 제외한 민간 신문들과 논조를 같이 했다. 《주간신보》는 당시 한국 신문들을 볼 수 있는 도시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기때문에, 한국 신문들의 보도 내용이나 논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었고, 《농민주보》처럼 왜곡보도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같은 호《주간신보》에 실린 한국인 김주사와 미국인 K군조간의대화로 구성된 고정난〈金主事와 利軍曹〉는 신탁통치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대화체로 풀었다. K군조는 김주사에게 '지금 아직 신탁이 된 것이 아니오 만일 조선 사람들이 새로된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 같으면 신탁통치라는 것은 이후에도 반드시 없을 것이올시다'라고 말하며, 신탁통치가 철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37)《농민주보》 또한 마찬가지로 신탁통치가 철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주간신보》는 한국 신문들의 논조를 의식하여 '민중과 지도자들의 일치된 여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반면, 《농민주보》 는 소련=신탁통치 주장 대 미국=즉시 독립 주장을 홍보함으로써 농 민에게 반소, 반탁 감정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후술하듯

^{236) 〈}사설: 獨立好機는 不再來〉 《주간신보》13호 1946년 1월 19일

^{237) 〈}金主事와 케軍曹〉 《주간신보》13호 1946년 1월 19일

이 《농민주보》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미소공위가 개최중이거나 재개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소련을 비판하는 내용을 꾸준히 보도했다. 이는 《주간신보》가 소련을 비판하는 기사를 거의 게재하지 않은 것과 매우 다른 특징이었다. 즉, 미군정은 서울 및 도시지역에 배포하는 《주간신보》에는 소련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음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차단하고 그 대신 우익 신문을 비호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익에 힘을 실어줬고, 민간 신문이 존재하지 않는 농촌을 상대로는 《농민주보》를 통해 반탁·반소·반공 선전을 실시하여 우익이 지방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미군정이 우익의 반소·반탁운동을 지지한 것은, 당시 미군정이 우익을 통합하여 과도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고, 이를 국무부의 신탁통치안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는 분할점령으로 빚어진 행정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군정통치기구를 통합한 뒤, 점령행정을 대신할 우익 중심의 자문기구 또는 정무기구를 수립하는 것을 현실적인 정부 수립의수순으로 생각했다. 미군정은 우익 중심의 기구를 자문기구 또는 정무기구로 수립함으로써 국가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을 만족시키면서 미국의 지지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238)

이를 반영하듯 1946년 3월 미소공위가 개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농민주보》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할 때 38선 철폐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할 문제로 전달했다. 1946년 1월 12일자 헤드라인에 〈오해하지 마라〉 제목으로실린 하지의 성명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38선 철폐를 언급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조선에대한 문제가 실현된다면 38선 문제가 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

²³⁸⁾ 정용욱, 2003 앞의 책, 144~145쪽

다. 1946년 1월 9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 양군 대표들 간의 미소공위 예비회담 중에는 미소공위 개최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38선 철폐로서 이것이 통일조선 건설의 제일 계단이라며, 38선 철폐 문제를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문제에 앞서 설명했다.239) 예비회담에서 소련과의 입장 차이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하지는 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성명서에서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가 조선의 행정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것이었던 반면, 소련군은 미소 양군 사령부간의 조정을 요하는 소수의 가장 긴급한 문제만 토의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지면에 38선 확정에 대한 얄타밀약설을 부정하고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38선을 철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사가 실렸다.240)

한편《농민주보》는 군정 당국의 성명서를 통해 반탁 시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들의 논조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를 반(反)하는 '반탁'노선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향한 무질서한 시위를 경고하였다. 예컨대 전술한 1946년 1월 12일자 《농민주보》의 하지 중장 성명서 〈오해하지 말라〉는 이미 1945년 12월 30일 밤에 라디오로 방송된 것으로, 《농민주보》1면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성명서에서 하지는 조선을 신탁통치한다거나 앞으로 꼭 한다는 것이 아니며 신탁통치 실시는 4국이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라고 했으니, 시위와 운동, 또는파업의 행동은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241)

또한 미군정의 성명서들은 반탁 시위를 계속하면 조선이 국제사회의 신임을 잃어 결국 신탁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취는 성명서에서 자신 역시 조선의 신탁통치를 보기 원치 않는다며,

^{239)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하야〉 《농민주보》 7호 1946년 2월 2일

^{240) 〈}미소공동회담의 결과 군정청 특별발표〉; 〈운명의 三십八도선 밀약에 의한 것이 않이다〉 《농민주보》 13호 1946년 3월 16일

^{241) 〈}오해하지 말라〉 《농민주보》4호 1946년 1월 12일

반탁운동은 '마치 기빨에다 『신탁통치를 주소서』 라고 써가지고 행열하는 것 보다 더 불리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시위는 조 선이 사실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케 한다면서, 신탁통치를 피하고 싶다면 사소한 정치적 투쟁을 단념하고 경제건설을 위해 일 하라고 주문했다.242)

더 나아가 하지는 반탁시위가 '열국으로 하여금 조선인은 안정이되지 못하고 독립할 준비가 못 되었다고 밋도록 할 것'이고 '기필코조선에 『신탁』을 강제 설치할 확실한 길을 닦어' 준다고 하며 '시위와 문란상태를 즉시 정지할 것'을 당부했다. ²⁴³⁾

이처럼 성명서들은 한국인들의 시위 여부에 따라 신탁통치를 피할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시위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 때 미군정이 문제로 인식한 것은 반탁 시위 그 자체가 아니라 무질서한시위, 미군정을 향한 시위였다. 《농민주보》에 실린 미군정 성명서에서 '반탁'이라는 단어는 위에 언급한 러취 소장의 성명서에 '반탁진정'이라는 용어로 한번 등장하며, '반탁'이라는 용어보다는 '신탁을 반대하는 시위, 파업, 무질서' 등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농민주보》는 질서 있는 신탁통치 반대 시위가 조선인의 자제력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하는 하지의 성명서와 동시에 시위가 미군정을 향한다면 더욱더 독립이 연기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244)

질서 있는 반탁 시위를 칭찬하고, 무질서, 파업, 미군정을 향한 시위를 경고한 것은, 미군정이 미국의 대한정책과 상충하는 반탁 노선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의 점령통치에 위협이 되는 시위를 문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군정의 성명서들은 미소공위

^{242) 〈}러-치소장의 연설〉 《농민주보》 6호 1946년 1월 28일

^{243) 〈}하-지중장의 연설〉 《농민주보》 7호 1946년 2월 2일

^{244) 〈}침착하게 행동하라 미국서 온 보도〉 《농민주보》 4호 1946년 1 월 12일; 〈조선인에게 고함〉 《농민주보》 4호 1946년 1월 12일

하 조선임시정부 수립과 미·영·중·소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핵심으로 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한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의 실행을 방해하는 반탁 시위를 자제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신탁통치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군정도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피력하여 미군정을 향한 무질서한 시위를 그만둘것을 촉구함으로써, 미군정을 향한 당장의 분노와 시위를 막는 데선전의 초점을 맞추었다.

'반탁' 노선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미군정 또한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모스크바 3상회담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소공위는 개최되기 이전부터 이미 결렬의 조짐이 예고된 것과다름없었다. 결국 1946년 3월 미소공위가 개최된 지 약 두 달 만에한국인 협상단체 문제, 특히 반탁단체의 미소공위 참가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군정 입장의 모순이 드러났다.

국무부는 1차 미소공위를 앞두고 '소련이 조종하는 소수파가 우세를 점하지 못하도록'한국인 대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미소공위에서 임시정부수립의 매개체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미군정은미소공위의 한국인 협상단체로 내세우기 위해 1946년 2월 14일 결성된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이하 민주의원)을 결성했는데,이는 1945년 말 이래 반탁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수립될 정부의 핵으로 삼기 위해 미군정이 추진한 우익 통합 기구인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에 여운형 등 일부 좌익 인사를 영입하여 결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운형을 비롯한 좌익 대표들이 민주의원을 이탈하고 2월 15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수립하면서, 민주의원은 결과적으로우익 대표 단체에 그쳤다. 역설적이게도 미군정이 그동안 국무부의신탁통치안에 대항하여 우익 중심의 과도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결성한 반탁·우익 대표 단체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를수립해야 할 미소공위 협상단체가 된 것이다.245)

미소공위가 개최된 후 소련이 반탁 단체의 참여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자 미군정은 미소공위에 한국인 대표기구로 참여한 민주의원이미소공위 개최의 근거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즉 신탁통치 실시를 반대한다는 모순에 맞닥뜨렸다. 이는 그간 미군정이 견지한 신탁통치 반대 입장과 미소공위의 취지도 모순되었다. 미군정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단체가 미소공위에 참여하도록 우익 단체들을설득해야 했고, 한국인 여론에는 미소공위의 실시와 신탁통치 반대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소련에는 반탁단체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따라서 미군정은 '반탁' 보다는 '시위'를 문제 삼고, 신탁통치는 피할 수 있는데 시위를 계속하면 받게 된다고 강조한 기존의 선전 메시지를 수정해야 했다. 그 결과 이전에 반탁시위에 참여했더라도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의 목적을 지지한다고 선언한다면 미소공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 5호'를 발표했다. 이는 반탁입장의정당 사회단체를 미소공위에 참여시키기 위한 미국의 입장과, 이들을 미소공위에서 배제하려는 소련측 입장을 절충한 것이었다.

《농민주보》는 '조선사람들이 확실히 원조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뵈여주든가 일정한 기간만 四국의 원조를 받겠다고 하고 여기에 四국이 찬동만한다면 원조를 전연 안받을수도 있고 받기로 한다면 표개년 이내에 일정한 기간에 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미소공위에 참가하여 신탁통치 철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홍보했다. 하지는 이제 '신탁'이라는 표현 대신 '원조'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조선인과 조선인의 통치 능력에 원조의 정도와 기간이 달렸다고주장했다. ²⁴⁶ 이로써 미소공위 참가와 신탁통치 반대는 모순되지 않

²⁴⁵⁾ 미소공위에서 조선임시정부수립 방침에 관한 미소의 정책, 미군정의 과도정부 수립 구상과 민주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용욱, 2003 앞의 책, 201~222쪽 참고

^{246) 〈}공동위원회를 협조 새조선건설에 노력하라〉 《농민주보》 20호

게 되었으며, 신탁통치의 성격은 '원조'로 홍보되었다.

미군정은 여론조사에서도 대중들이 반탁단체의 미소공위 참여로 신탁통치의 기간이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1946년 4월 19일, 20일 양일간 서울지역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동성명 5호에 대한 여론조사는 3번 질문에서 답변자가 공동성명 5호가 의미하는 바를 무엇이라고 해석하는지를 물으며, 선택지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장기간의 신탁통치와 미국과 소련에 의한 단기간의 감독(supervision) 두 가지를 주었다.

공동성명 5호는 신탁통치를 한국 정부 수립의 전제로 하고 있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를 반탁단체가 지지하며 조선 임시 정부 수립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신탁통치의 기간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것이 미소의 신탁통치(trusteeship)인지 감독(supervision)인지 등 신탁통치의 성격과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질문은 반탁단체의 미소공위 참여가 신탁통치의 기간과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선택지로 주어졌다. 이에 대한 답변은 '미소에 의한 장기간의 신탁통치'가 64명 (19%), '미소에 의한 단기간의 감독'이 268명(81%)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6번 질문은 '작년 12월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신탁통치 가능성을 포함하여)을 지지하는 정당들만이 미소공위에 참여해야한다고 믿는지'를 묻고, '네', '아니오', '모르겠다'의 선택지를 주었다. 이 질문은 '신탁통치 가능성을 포함하여'라는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자들만이 미소공위에 참여하면 신탁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바꾸어 말하면 반탁단체가 미소공위에 참여해야 신탁통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질문이내포하고 있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네'가 43명(135%), '아니오'가

¹⁹⁴⁶년 5월 4일

257명(77%), '모르겠다'가 32명(10%)의 결과를 보였다.247)

신탁통치가 철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앞서 본 하지의 〈오해하지 마라〉성명서 이래의 군정발 성명서들과 일치하지만, 1945년 말 1946년 초의 논리와 이때의 논리는 그 성격이 달랐다. 이전의 신탁 통치 철회 가능 논리는 반탁운동, 즉, 미군정을 향한 시위와 무질서 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의 것으로써, 시위를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어 신탁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그것은 반탁단체가 미소공위에 참여해야만 신탁 통치의 기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그 성격이 신탁에서 '감독' 또 는 '원조'로 변한다는 것으로써, 반탁입장을 견지한 우익 대표기구에 그친 민주의원을 협의대표기구로 내세우며 미소공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미군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논리였다. 또한 이제껏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고 미군정 역시 반탁 입장이라고 은연중에 홍보 했던 미군정으로서는 갑자기 한국인들에게 신탁통치 결정을 포함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현실화하는 미소공위에 협조하라고 설득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미소공위가 개최되어도 여전히 신탁통치를 피하면서 정부수립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홍보 논리와 맥락이 통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군정은 여전히 대중들이 미국은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믿기를 바랐다. 공보부 여론국은 "일본과 소련 프로파간다의효용성(Effectiveness of Japanese and Soviet propaganda)"에 대한 여론조사를 서울과 지방에 실시했다. 먼저 1946년 4월 11일 서

²⁴⁷⁾ From Glenn Newman, Colonel, CAC, Director, DPI To All Concerned 〈Public relation to the Communique #5 issued by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5, 425~426쪽 (이하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로 표기)

울에서 1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4월 15일에서 30일까지 남한 지방의 651명에 대해 동일질문지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651명 중에 1/3은 도시(town and city) 거주자였고 2/3는 농촌(rural) 거주자였다. 조사항목은 총 10가지로 미국인이 한국인을 경멸한다고 생각하는가, 차라리 북한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총독부보다 미군정을 선호하는가 등 미국에 대한 일본이나 소련의 악선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 중 5번째 질문은 누가 진정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느끼는가라고 묻고 '소련', '미국', '양자 모두', '모두 다 안원하지 않는다'의 네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이 질문은 미군정이 한국인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한국인이 누가 신탁통치를 원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소련의 악선전의 영역으로 분류했음을 의미한다. 이 질문에 대해 서울지역은 60%가 소련, 6%가 미국, 32%가 양자 모두라고 대답했고, 지방은 22%가 소련, 31%가 미국, 29%가양자 모두라고 대답했다. 248)

요컨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한국인에게 전달되자, 미군정은 한국인의 반탁 감정을 의식하고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신탁통치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한 우익이 반공·반소·반탁 논리를 활용하여 애국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 우익 신문을 지원하거나 농촌에 직접 반공·반소·반탁 논리를 선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즉, 우익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구상을 갖고 이

²⁴⁸⁾ From Glenn Newman, Colonel, CAC, Director, DPI To All Concerned 〈Effectiveness of Japanese and Soviet propaganda in Seoul〉 1946년4월 12일, 〈Effectiveness of Japanese and Soviet propaganda in the Provinces and in Seoul〉 1946년 5월 20일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422~423쪽; 438~443쪽

를 신탁통치안의 대안으로까지 생각했던 미군정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를 한국인에게 이해시키고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결의가 미군정과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익의 해게모니 장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전을 실시했다. 또한 민주의원의 미소공위 참가에 대한 선전 메시지와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미군정은 자신의 입장과 미국의 대한정책 사이의 모순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을 실시했다.

2)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 결렬과 반소 선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미소공위에 참가할 한국인 협상단체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다가 1946년 5월 6일 미국 측의 제안에따라 무기한 휴회에 돌입했다. 미소 공위 휴회부터 1946년 말 미군정의 미소공위 재개 교섭이 보도되기 이전까지 《농민주보》《주간신보》의 미소공위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미소공위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 휴회~1946년 9월)

| 《농민주보》 | | 《주간신보》 | |
|-----------------|--|-----------------|-------------------------|
| 1946년 5월 18일 | 〈미소공동위원회 휴회. 하- 지중장 성명서〉 | 1946년 5월 21일 | 미확보 |
| 1946년 5월 25일 | 〈사설: 언론사상의 자유〉 〈세계뉴스: 상후란시스코〉 〈세계뉴스: 서울〉 | 1946년 5월 29일 | 신문 앞면만 확보 〈공위재개를 요함〉 |
| 1946년 | 〈세계뉴스: 와성톤〉 | 1946년 | 미확보 |

| 6월 1일 | | 6월 5일 | |
|--------|-----------------------|--------|-----------|
| | | 6월 12일 | |
| 1946년 | / 기선 · 기수이 무게되기 | 1946년 | 신문 뒷면만 확보 |
| 6월 15일 | 〈사설: 자유와 독재정치〉 | 6월 19일 | 관련 기사 없음 |
| | 〈사설: 평화와 전쟁〉 | | |
| 1946년 | 〈세계뉴스: 파리〉 | 10101 | |
| 6월 29일 | 〈세계뉴스: 와싱톤〉 | 1946년 | 관련 기사 없음 |
| | 〈조선 경제의 발전위해 남북 | 6월 26일 | |
| | 조선의 통일이 시급〉 | | |
| | 그건의 항문의 사람/ | | |
| 1946년 | | 1946년 | |
| | 〈세계뉴스: 와싱톤〉 | _ | 관련 기사 없음 |
| 8월 3일 | | 7월 31일 | |
| 104614 | | 104614 | |
| 1946년 | 〈세계뉴스: 동경 〉 | 1946년 | 관련 기사 없음 |
| 9월 14일 | | 9월 11일 | |
| | | | |
| 1946년 | 〈아세아 전대륙을 농락햐랴 | 1946년 | 관련기사 없음 |
| 9월 28일 | 는 소련〉 | 9월 18일 | |
| | | | |
| | 1 | | |

휴회를 알리는 하지의 성명서가 5월 9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졌고, 5월 10일 한국 신문들의 1면에 게재되었으며, 5월 18일자《농민주보》 1면에 보도되었다. 하지의 성명서는 휴회의 책임이 소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는 모스크바 결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민주정당과 사회단체를 배제하자는 소련의 안은 의사발표의자유 원칙에 반(反)하며, 소련이 38선 철폐 문제를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 측은 미소공위를 부득이 휴회했다고 밝혔다.249)

미군정은 미소공위의 결렬을 우익이 명백히 위상을 확고히 할 수

^{249) 〈}미소공동위원회 휴회. 하-지중장 성명서〉 《농민주보》 22호 1946년 5월 18일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다. 또한 우익이 지방으로 조직을 확대할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파악했다.250) 선전의 차원에서 이는 공개적으로는 미소공위 결렬을 의사발표의 자유문제로해석하여, 결렬의 책임은 소련에게 있으며, 미군정은 조선인이 스스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신조로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51) 그리고 비공개적으로는 서울에서 우익 신문이 좌익을 비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미군정은 미소공위 휴회의 원인을 '의사발표의 자유'라는 측 면에서 해석하고 이것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한편. 《농민주보》를 통해 이를 적극 선전했다. 미소공위 휴회 직후 공보부 여론국은 1946년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지역에서 846명에게 '미소공 위의 휴회 소식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지 는 미소공위 휴회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곧바로 누가 휴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질문으로, 미소공위가 왜 휴회되었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한국 인 정치정당들의 의사발표의 자유를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질 렀다고 믿는가'로, '네', '아니오', '모르겠다' 중에서 응답자가 선택 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결과는 '네'가 717명(84.4%), '아니오'가 100명(11.8%), '모르겠다'가 23명(3.8%)이었다. 설문을 보면 공보부 는 여론조사를 통해 대중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미군정의 생각을 대중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다. 나머지 질문은 미소공위 휴회가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가. 미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였다.252)

^{250) 〈}정치동향〉 33호 1946년 5월 14일

^{251) 〈}정치동향〉 33호 1946년 5월 14일

²⁵²⁾ From Glenn Newman, Colonel, CAC, Director, DPI To All

이와 동시에 《농민주보》에는 의사발표의 자유에 관한 일련의 사설들이 실렸다. 이 사설들은 민주주의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즉 개인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253) 반대항의 개념으로 독재주의를 설정하고, 독재주의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독재자의 세력 하에 강제적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54) 또한 민주주의 하에서 의견통일은 진리의 사상이 진리가 아닌 사상을 극복하는, 즉 여러 개인의 의견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설은 토론을 통한 의견의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영원한 자유를 획득하고 평화국가를 건설하는 방법임을 역설하면서 독자들에게 언론사상의 자유를 옹호하자고 주장했다.255)

반탁단체의 미소공위 참가에 대한 찬반 여부는 이제 의사 발표 자유를 지지하는지, 토론에 의한 합의를 옳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강압적으로 의견을 획일화하는 독재체제를 지지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느냐 하는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미소공위 결렬은 의사표현의자유와 토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미국의 부득이한 선택이 되었다.

국내 신문들은 미소공위 결렬을 의사발표의 자유의 문제로 해석하는 미군정의 입장을 공유하고, 미소공위 결렬의 책임이 소련에 있다고 보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소련이 반탁

Concerned 〈Reaction to the news of the adjournment of the Joint Commission〉 1946년 5월 14일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432~433쪽

^{253) 〈}언론사상의 자유〉 《농민주보》 23호 1946년 5월 25일

^{254) 〈}자유와 독재정치〉 《농민주보》 26호 1946년 6월 15일

^{255) 〈}평화와 전쟁〉 《농민주보》 28호 1946년 6월 29일

단체의 참가를 거부하여 미소공위가 결렬되었다고 보고, '「신탁보다는 즉시독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고 해서 「모스코」협정에 보장된 조선임시정부조직에 참여하는 권리까지 배제한다는 것은 조선인 다수의사에 배치될 뿐 아니라 대서양헌장에 세계적으로 승인한 모든 사람의 의사표시자유권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미국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신탁통치 반대를 촉구했다.256) 한편《자유신문》은 AP통신 기사를 이용하여, '소련 측이 민주의원과 동의원하에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통일임시정부수립 후에 반탁운동을계속할 의사를 표현한 만치 소련 측은 민주의원과 동의원하의 정당과 사회단체와 통일임시정부수립 건에 관하야 협의할 수 업다고연명한 것'이라며 소련의 책임으로 미소공위가 결렬되었다는 것을인정하면서도 소련 측의 입장 또한 보도했다.257) 공보부는 미소공위결의 책임이 우익에게 있다고 보도한 신문은 《조선인민보》뿐이며, 조선의 미군 점령지역에서 반공주의 운동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258)

그러나 한국 신문들은 모두 소련에 미소공위 결렬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향후 미소공위가 갖는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도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이는 신문들마다는 소조에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38선을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미소공위가 결렬된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보며 미소공위를 통한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59) 반면 《동아일보》는 미소공위 결렬 국면을 반소·반공 운동에 적극 활

^{256) 〈}사설. 대서양헌장과 언론의 자유〉 《동아일보》 1946년 5월 12일; 〈사설. 신탁통치는 절대반대다〉 《조선일보》 1946년 5월 13일

^{257) 〈}소측연락부대는 주둔. 속개의 鍵은 반탁단체의 초청여부〉 《자유 신문》 1946년 5월 10일

^{258) 〈}정치동향〉 33호 1946년 5월 14일

^{259) 〈}사설. 웨처라 나서라 미소회담 휴회〉 《조선일보》 1946년 5월 11일

용하였다. 《동아일보》사설은 '「소련은 우리에게 탁치를 강요하는 나라」'라고 강조하고, '「반일즉 자주 자주즉 반일」의 부동한 자표로 사십년의 오늘을 경과하였든 것처럼 「반탁즉자주, 자주즉반탁」이란 한 점을 향하야 꾸준히 줄기차게 진군'할 것을 촉구했다.260) 또한 '탁치를 지지하는 조선 공산당계열의 매국한 도배(徒輩)', '민족반역자'를 처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민당의 성명, 독립촉성국민회의성명들을 보도했다.261) 그리고 미소공위가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평가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구상을 보도하기 시작했다.262)

반면 《자유신문》은 회담이 결렬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의 미소공위 휴회 성명만큼이나 강조하며, 미소공위를 통한 조선임시정부수립을 촉구했다. 하지의 미소공위 휴회 성명이 실린 5월 10일자 헤드라인은 〈회담은 결렬이 아니고 재차 계속될 것이다. 하지중장 질문에 대답〉으로, 이는 공보부장 뉴먼이 회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대답했다는 보도였다.263) 사설에서도 조선의임시정부수립은 막부삼상회의와 대서양헌장에 의해 완수되고야 말성격의 것이므로 도중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팔도선 문제보다도 무엇보다도 오직조속한 임시정부수립'이 중요하다며 미소공위의 재개와 임시정부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264)

미군정은 미소공위 결렬을 의사발표의 자유문제로 해석하여 우익의 반소·반탁 운동에 명분을 제공하는 한편, 좌익을 비난하기 위한

^{260) 〈}사설. 미소공위결렬. 반탁즉 자주를 재강조.〉 《동아일보》 1946 년 5월 11일

^{261) 〈}미소회담 결렬의 반향〉 《동아일보》 1946년 5월 11일

^{262) 〈}자율정부수립 갈망〉 《동아일보》 1946년 5월 1일

^{263) 〈}회담은 결렬이 아니고 재차 계속될 것이다. 하-지중장 질문에 대답〉 《자유신문》 1946년 5월 10일

^{264) 〈}사설.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 《자유신문》 1946년 5월 11일

우익의 언론 공작을 뒤에서 도왔다. 1946년 5월 7일, 우익 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성일보》 《대동신문》에 일제히 조봉암이 박헌영에게 보내는 편지가 게재되었다. 265) 조봉암은 일제 시기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하고 주요 간부로 역임했지만, 해방 직후 박헌영계가 주도하는 조선공산당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1946년 2월 건준 인천시 민전 의장이라는 한직을 맡았다. 266) 조봉암이 박헌영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게재된 기사에서 조봉암은 인민위원회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구락부에 지나지 않으며, 민전에 공산당원이 과대히 침투했고, 3상회의 지지투쟁은 기술적으로 졸렬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항간에는 『박헌영에게는 자주 찻고 곱게 보여라 그럿치 않으면 말썽을 부려라』라고 한다며 당이 무원칙하며, 종과적이요, 봉건적이라고 비판했다. 267)

그런데 미소공위 결렬과 도시에 조봉암의 서신이 우익 신문에만 일제히 게재된 경위에는 미군정의 역할이 컸다. 조봉암의 편지는 이미 1946년 3월 중순경 미군 방첩대가 인천의 민전 지부를 수색했을 때 압수한 것인데, 한참 뒤인 1946년 5월 7일자 우익 신문들에만 일제히 게재된 것이다.268) 그런데 훗날 당시 《한성일보》 기자이자 안재홍 비서였던 최흥조는 미군이 편지를 입수한 뒤의 경위에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군 MP가 조봉암의 편지를 지니고 가던사람을 우연히 검문하여 편지 뭉치를 압수했고, 이를 민주의원 비서

^{265)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一)〉 《동아일보》 1946년 5월 7일;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二)〉《동아일보》 1946년 5월 8일; 〈존 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三)〉 《동아일보》 1946년 5월 9일; 〈박헌영 동무에게, 인천에 있는 조봉암〉 《조선일보》 1946년 5월 7일

²⁶⁶⁾ 서중석, 2004 앞의 책, 495~496쪽.

^{267) 〈}박헌영 동무에게. 인천에 있는 조봉암〉 《조선일보》 1946년 5월 7일

^{268) 〈}신문에 투고사실도 업고 사신을 악의로 윤색한 것. 조봉암씨 기자 단에 언명〉 《중외신보》 1946년 5월 15일

국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비서국장이자 이승만 박사의 개인 비서였던 윤치영은 이를 즉시 등사하여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공개서한으로 위조하여 신문사에 배포했고, 우익신문들인 《한성일보》《대동신문》《동아일보》 등에는 특별히 부탁하여 서한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269》전후 맥락을 살펴보았을때, 1946년 3월 방첩대가 조봉암의 편지를 입수했고, 미군정은 이를 갖고 있다가 1946년 5월 미소공위의 결렬과 함께 민주의원 비서국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이 입수한 편지가 우익 신문에실리게 되는 경위는 당시 미군정과 우익 언론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미군정이 서울에서 우익 언론을 활용하여 우익의 반소·반공 운동을 지원했다면, 농촌에서는 직접 반소·반공 선전을 실시했다. 미소공위 휴회와 동시에 《농민주보》의 〈세계뉴스〉고정난에는 갑자기반소 기사들이 등장했다. 기사들은 미소공위 결렬의 책임이 소련에 있으며, 미국은 미소공위 재개 의향이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미국이먼저 회담을 결렬시킨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했다. AP의 시사평론가 『화이트』써의 견해라고 전하며, 38선 철폐의 지연은 곧조선의 통일지연을 의미하는데, 소련이 이를 반대했으므로 책임이소련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는 기사를 실었다.270) 또한 국무차관 애치슨이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 각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련이 전 조선 내에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언제든 회의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271) 하지 역시 언제든 공위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되었다.272)

〈세계뉴스〉는 소련이 미소공위를 결렬시켰으며 미국은 공위를

²⁶⁹⁾ 최흥조, 1978, 〈정치파동·국민방위군사건과 그 패기〉 《한국언론비화 50편-노기자들의 직필수기》 한국신문연구소, 264~266쪽

^{270) 〈}상후란시스코〉 《농민주보》 23호 1946년 5월 25일

^{271) 〈}와싱톤〉 《농민주보》 24호 1946년 6월 1일

^{272) 〈}서울〉 《농민주보》 23호 1946년 5월 25일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기사와 함께 국제협상에서 소련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소련이 4상 회의에서 이태리 배상문제를 놓고 미·영·불과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세계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도함으로써,273) 소련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미소공위 결렬을 같은 맥락에서 보도했다. 특히 세계기근 해결책 마련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기사는 1946년 봄 남조선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을 때 실린 것으로,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 세계기근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기사와 대비되었다.274)

더 나아가 〈세계뉴스〉는 폴리 사절단의 사절단장 폴리가 북한방문을 결과를 보도하며, 소련이 북한에 야심이 있음을 시사하는 기사들을 게재했다. 폴리 사절단은 1945년 5월부터 1946년 말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일본의재외 재산에 대한 조사를 위해 1946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남한에 체류했는데, 그 중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는 북한 지역을 시찰했다.275)

《농민주보》의 폴리의 방북 관련 보도는 두 건이다. 하나는 1946년 6월 14일 폴리가 김포비행장에서 봉천으로 출발하기 전 언급한 것을 보도했는데, 기사 말미에 소련측이 북한의 기계나 생산물을 반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폴리의 특별고문의 발언을 첨부했다. 다른 하나는 언제, 어디서

^{273) 〈}상후란시스코〉 《농민주보》 23호 1946년 5월 25일; 〈와싱톤〉 《농민주보》 24호 1946년 6월 1일; 〈파리〉, 〈와싱톤〉 《농민주 보》 28호 1946년 6월 29일

^{274) 〈}인류의 생명구조가 세계재건의 근본정신. 『후-버』씨의 담화〉 《농민주보》 24호 1946년 6월 1일

²⁷⁵⁾ 폴리 사절단의 방문에 대해서는 1988, 《주한미군사》 2권 돌배게 간행, Chapter Ⅱ, Part Ⅳ, 531~538쪽 참고.

실시한 신문기자 회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다만 폴리가 신문기자석상에서 시찰담을 전하며, 북조선의 소련점령군이 그들의 가족을이 지구에 초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소련인은 분명 북조선에서정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는 것이었다.276) 그런데 《농민주보》에 실린 폴리 사절단의 방북 시찰 관련 기사, 즉 김포공항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문기자석상에서의 폴리의 발언은 한국 신문들에는 실리지 않았다. 한국 신문에서 폴리의 북한 시찰 관련 보도를 중요하게 다룬 것은 1946년 6월 초로, 1946년 5월 31일자 공보부의 특별발표와 1946년 6월 4일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폴리의발표에 대한 보도였다.

1946년 5월 31일자 공보부의 특별발표와 6월 4일자 폴리의 발표는 자못 상이한 논조를 보였다. 먼저 공보부의 특별발표의 핵심은 소련이 북한 기계 반출 여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사절단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보부는 폴리 대사특별보좌관 어네스트 크라인 박사의 언급이라며, 치스챠코프 중장이 모스크바 당국으로부터 북한의 공장시설과 기계를 반출하지 말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소련이 사절단의 행동을 엄격히 감시 및 제한 중이기 때문에 사절단은 도저히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예로 폴리 사절단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5개의 공업지대 중에서 2곳은 소련의 병사(兵舍)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사절단의 조사가 거부되었다는 것을 제시했다.

한국 신문들은 일제히 6월 1일 헤드라인으로 5월 31일자 공보부의 특별발표를 게재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공보부의특별발표를 소련군의 행동제한으로 사절단의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평으로 달았다.277)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276) 〈}조선 경제의 발전위해 남북조선의 통일이 시급〉 《농민주보》 28 호 1946년 6월 29일; 〈와싱톤〉 《농민주보》 32호 1946년 8월 3일 277) 〈행동을 제한 또는 금지.進退維谷의 폴리 사절일행〉 《동아일보》

만약 조선 내 소유재산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없애면 앞으로 조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했다.278) 한편 《자유신문》은 헤 드라인 제목을 〈소군의 대규모 복원(復員)로 폴리 배상사절단 행동 부자유〉로 뽑아, 소련군이 사절단을 감시·제한하는 것이 소련의 조 선내 기계나 공장 반출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련 측의 설명 대로 소련군의 복원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279)

반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폴리가 직접 발표한 6월 4일자 발표는 사절단이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두세 건의 기계 이전이 있었다고 보였으나 소규모였으며 조선 내 지점으로 이송 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사실상 5월 31일자 공보부의 특별발표와 상반된 논조를 보였다. 6월 5일자 폴리의 성명에 대해, 《동아일보》는 특별한 논평을 달지 않은 채 헤드라인으로 게재했는데, 기사 제목을 〈이거(移去), 조하(造荷)를 보았다- 조선내에 이송인지도 몰은다〉로 뽑아, 여전히 소련군의 기계 반출을 강조하고자 했다. 반면《조선일보》는 〈폴리 사절 귀경조사실정을 발표〉라는 기사 제목을 달고, 폴리 사절단이 소련군의 시설 이전을 소규모의 두세 건만을 발견치 못했다고 발표했다고 논평했다. 280)《자유신문》은 헤드라인 제목으로 〈공업 시설 이전 없다-부흥에 전력, 일부는 작업〉을 달아, 소련의 공업 시설 이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음날 사설로 폴리 사절단에 의해 소련군이 공업시설을 반출하지 않고 공업 부흥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평가하고, 이로써

¹⁹⁴⁶년 6월 1일; 〈미사절단 북조선서 난관에〉 《조선일보》 1946년 6월 1일

^{278) 〈}사설.폴리 사절 북조선 동정〉 《조선일보》 1946년 6월 1일 279) 〈소군의 대규모 복원(復員)로 폴리 배상사절단 행동 부자유 〉 《자 유신문》 1946년 6월 1일

^{280) 〈}이거(移去), 조하(造荷)를 보았다. 조선내에 이송인지도 몰은다〉 《동아일보》 1946년 6월 5일; 〈포-레 사절 귀경조사실정을 발표〉 《조선일보》 1946년 6월 5일

친선과 우호를 통해서만 자주독립이 도래할 수 있는 이 때에,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치 않은 사실을 선전하여 조선민중에게 반소감정을 일으켜 민족분열과 연합국 이간을 책동하는 악질적 음모가 이제야 폭로되었다'고 강조했다. 281)

소련의 북한 기계 반출 문제는 6월 4일자 폴리의 발표가 5월 31일자 공보부의 특별발표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농민주보》는 공보부의 특별 발표와 폴리의 발표를 모두 게재하지 않고,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 이후인 6월 24일자에 소련의 기계반출을 시사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8월 3일자에는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폴리가 소련군의 북한 정주를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이다.특히 8월 3일자 기사는 이 신문기자회견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고, 내용의 중요도에 비해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군정이 《농민주보》에만게재한 기사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농민주보》는 미소공위 휴회를 '의사결정의 자유'의 문제로 설명하는 동시에 반소 기사를 제공했다. 《농민주보》의 선전에 따르면 미소공위 결렬은 비협조적이고 북한 지역에 야심을 갖고있는 소련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자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미소공위의 결렬에 대한 미군정의 해석은 우익에게 반탁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미군정은 서울에서는 우익 언론들을 활용하여 반탁·반소·반공 운동을 지원했고, 농촌에는 《농민주보》를 통해 반탁·반소·반공 운동의 명분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익은 반소·반공·반탁 노선에서 더 나아가 단독정부 수립

^{281) 〈}공업시절 이전 없다. 부흥에 전력, 일부는 작업〉 《자유신문》 1946년 6월 5일; 〈사설. 폴리 사절 북조선 시찰 보고〉 《자유신문》 1946년 6월 6일

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정부는 미소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한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우익의 반소·반공·반탁 운동을 지원하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은 자제시키고,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의 미소협상 재개를 위한 대한정책을 실행해야 했다. 이는 미군정 선전 담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2.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좌익에 대한 공세

1)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좌우합작·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전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미국에게는 미국의 한국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1차적 중요성을 갖 게 되었다. 미군정 공보정책과 선전 활동은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 를 수밖에 없었고, 미소공위가 재개되기 이전까지 점령지역에서 미 국의 공보 활동은 한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상황 전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미소공위 결렬 이후의 사태 전개에 대비한 미국의 새로운 대한정책은 1946년 6월 6일 〈Policy for Korea〉로 공식화했다. 이미 1차 미소공위 시작 전 국무부는 맥아더 사령부에 김구나 이승만에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삼가고, 공산주의적 계획이 최고의 희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토지개혁, 재정개혁을 담은미국의 진보적 계획을 실행할 지도자들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소련의 지지를 받는 공산주의 그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지도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국무부는 진보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지원할 것을 지시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군정의 주도로 설치 된 민주의원이 우익으로만 구성됨으로써 이 계획은 실시되지 못했 다.282)

미소공위 결렬 후 새로운 대한정책인 〈Policy for Korea〉는 국무부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식화, 구체화한 것이었다.283) 이 문서는 남한에서 일련의 조치를 적용하여 미국의 원칙과 그의 실행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낼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소련이 현재의 입장을 수정하게 하는 동시에 소련과 합의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일련의 조치란 남한 행정에 한국인 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남한지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의초안을 작성·제출할 입법자문기구를 선거를 통해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은 남한을 위한 건설적인 경제, 교육개혁프로그램을 폭넓게 구성하여, 한국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

^{282) 〈}Proposed Message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Draft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날짜미상, 《Forie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The Far East Volume VIII》, 645~656쪽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FRUS에서 원문 및 국역문 참고. (이하 《FRUS, 1946》, 원문 URL 표기.)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2_001 0_0340&types=0

^{283) 〈}Policy for Korea〉는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Occupied Areas (Hilldring) to the Operations Division, War Department〉 1946년 6월 6일자에 수록. 《FRUS, 1946》, 692~699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2_0010_0700&types=o

막으로 일본이 항복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고령의 망명 한국인들로 구성된 반소 한국인 지도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립이나 한국에서 미국의 목적 달성에 핵심적이지도 않으며 소련과의 합의 도달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즉, 국무부의 새로운 대한정책의 핵심은 소련과의 합의 기반을 마 련하는 동시에 미국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 군정이 남한에서 한국인의 행정참여를 늘리고, 민주의원을 능가할 입법자문기구를 선거를 통해 설치하여 여기서 만든 법안을 토대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국무부는 이러한 개혁이 소련이 받아들 일 만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련이 미국의 목표와 방식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 다. 또한 미소공위 결렬의 핵심이 미국 측 의사표현의 자유 원칙과 소련 측의 반소 한국인 지도자들 참여 거부간의 충돌이라고 보고, 이들의 참여를 제외시킨다면 소련과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 내 다양한 파벌들 간의 합의도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 중간노선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남한 정계통합, 경제·사회적 개혁, 입법기구의 설치 및 군정 한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구상을 통해 미군정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 미소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구상이었다.284)

〈Policy for Korea〉는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공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대한정책, 즉 중간파를 활용한 정치구상과 일정 수준의 사회개혁에 대한 홍보는 새로운 대한정책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과 한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상황 전개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이루

²⁸⁴⁾ 미국의 새로운 대한정책과 미군정이 추진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개량 적 성격에 관해서는 정용욱, 2003 위의 책, 6장 참고.

어졌다.

먼저 미군정이 중간파를 활용할 것을 지시한 국무부의 정책을 선전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5월 25일 미군정의 버취 중위의 알선으로 김규식, 여운형, 원세훈이 좌우합작을 논의하기위해 모이면서 좌우합작이 시작되었다. 6월 14일 김규식, 여운형, 허헌, 원세훈은 회의 끝에 좌우합작 원칙에 대한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며, 6월 26일 김규식과 여운형이 거의 의견의 일치를보았다. 285) 좌우합작은 언론들이 민족의 사명이자 과제라고 평가할만큼 당시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286) 예컨대 《조선일보》 사설은남북통일, 좌우합작이 아니고는 조선의 완전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 총의이며, 각 정치 노선이 대승적 견지에서 민족 전체의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287)

좌우합작운동은 급속히 전개되어, 1946년 7월 11일 좌우합작위원회 10명이 좌우 각각 5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22일 정식 예비회담에는 중도 좌·우파, 우파, 좌파가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조선 공산당이 7월 27일 민전 5원칙을 제시하며 좌우합작을 부인하고 7월 31일 우익이 8원칙을 제시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난관에 봉착했다.288)

²⁸⁵⁾ 서중석, 2004 앞의 책, 400~403쪽

^{286) 〈}사설. 좌우합작〉 《광주민보》 1946년 6월 21일; 〈사설. 좌우합작 과 국민의 기대〉 《영남일보》 1946년 6월 21일

^{287) 〈}사설. 남북과 좌우의 통합〉 《조선일보》 1946년 6월 12일

²⁸⁸⁾ 민족주의민족전선(민전) 5원칙은 1. 3상회의 결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하여 미소공위 속개 운동을 전개,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되 북조선 민전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 통일을 기할 것, 2.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 중요산업 국유화, 민주주의적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위시한 민주주의 기본과업에 매진할 것, 3.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반동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박멸하고,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애국지사를 즉시 석방할 것, 4. 남한에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토록 기도할 것, 5. 군정고문기관 혹

조공이 민전 5원칙을 제시하며 좌우합작 반대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미군정과 조공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미군정은 한편으로는 좌우합작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좌익에서 분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군정은 5월 8일 조공의 기관지 《해방일보》인쇄시설인 조선정판사가 있는 근택빌딩을 포위하고, 정판사 인쇄직공과 사무원을 검거했다. 이른바 '정판사 위폐사건'이라 불리는 이 소식은 미소공위가 결렬된지 약 일주일 뒤인 5월 15일 공보부의 발표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공보부는 300만원 이상의 위조지폐를 발행하여 남조선 일대를 교란하던 지폐위조단을 일망타진했는데, 이들 중 조선공산당 간부가 2명, 조선공산당원이 16명이며, 위조지폐단의 소굴인 근택빌딩은 조선공산당 본부라고 발표했다.

공보부의 발표는 신문마다 다른 비중으로 게재되었다. 5월 16일 자 《동아일보》와 《한성일보》는 이를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하고, 조선공산당이 남한 경제 혼란의 주범임을 강조하는 제목을 달았다. 반면《중외신보》는 2면 하단에 기사를 배치했고, 《조선일보》는 2면 상단에 기사를 배치하며 우익 신문들만큼 비중 있게 보도하

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이다. 우익의 6원칙은 1.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 3. 소위 신탁문제는 임정 수립 후 동(同)정부가 미소공위와 자주독립정신에 기하여 해결할 것, 4. 임정 수립 이후 6개월 이내에 보선에 의한 전국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것, 5. 국민대표회의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 6. 보선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언론,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를 절대보장할 것, 7. 정치, 경제, 교육의 모든 제도 법령은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정할 것, 8.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징치하되 임시저부 수립 이후 특별법정을 구성하여 처리케 할 것이다. 민전 5원칙의 내용은 사실상 우익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좌우합작을 반대하기 위해 좌익이 제시한 것이다. 정용욱, 2003 앞의 책, 283~285쪽; 서중석, 2004 앞의 책, 403~411쪽

지 않았다.289) 농촌에 배포되는 《농민주보》는 우익 신문들과 마찬 가지로 공보부의 발표를 헤드라인으로 게재했는데, 《농민주보》에 정치 정당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이 발표가 실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290) 본래 《농민주보》는 우익의 경우당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주요인사를 언급했지만, 좌익은 좌우합작이 추진될 당시 여운형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좌익 인사와 관련된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는데, 조선공산당이 언급된 발표가 머릿기사로 실린 것이다. 즉, 《농민주보》에서 우익과 좌익의 정치적 입장이나 구호가 등장하지 않고, 좌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려지는 상황 속에서 조선공산당은 조선 경제혼란의 주범으로 대서특필되었다.

1946년 5월경 위폐사건은 흔한 범죄였으나, 공보부의 발표와 우익 신문들 및 《농민주보》의 조선정판사 사건 보도를 통해 조선공산당은 경제난의 원흉으로 홍보되었다. 지방에서 우익청년 단체와정당지부 조직은 이를 바탕으로 좌익을 비난할 수 있었고, 성난 농민은 조선공산당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 노선에 사과해야 한다면

^{289) 〈}지폐위조사건진상전모 공보부서 정식발표. 위조일당은 十六名. 전부가 공산당원.이관술 권오직은 피신〉《동아일보》 1946년 5월 16일; 〈근택『삘딩』위조지폐단의 전모 전율할 共黨의 음모 이관술, 권오직은 탈주14名은 체포 정판사를 이용 교묘히 범항〉 《한성일보》 1946년 5월 16일; 〈삼백만원위조지폐사건 어제 공보부에서 특별발표〉《중외신보》 1946년 5월 16일; 〈대규모 지폐위조단 사건 진상 정식 발표. 주범 공산당 간부 二名 미체포. 당원 十四名은 체포〉《조선일보》 1946년 5월 16일

^{290) 〈}위조지폐사건의 전모 범인일단을 일망타진〉 《농민주보》 23호 1946년 5월 25일; 한편 하지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이 조선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큰 의심을 받고 있으나 공판은 범인 개인에 한하여 처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군정당국이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했다. 〈위폐공판 방패 폭동에 대한 하지 중장의 성명〉 《농민주보》 32호 1946년 8월 3일

서 "당신은 당과 조선인민에게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당신의 공산당은 '도둑정당(Robber's Party)'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할복하라!"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판사사건은 지방의 농민들이조선공산당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좌우에 대한대중들의 지지를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291)

미군정의 좌우합작운동 지지는 이처럼 1차 미소공위 결렬과 동시에 실시된 좌익에 대한 공세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에 박헌영은 평양에 다녀온 뒤, 1947년 7월 '신전술'을 채택하고 여운형에게 합작운동 반대를 표명했다. 신전술은 해방 직후부터 견지했던 미국과의 협조합작전술을 폐기하고, 미군정의 정책을 제국주의로 규정했다. 292) 1946년 7월 27일 민전 5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미군정과 조선공산당이 전면적으로 대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좌우합작운동이 난관에 봉착하자, 언론들은 좌익의 참여를 독려했다. 《조선일보》는 좌익 중에서도 먼저 조국을 찾자는 사람이 있으니 조국을 찾기 위해 뭉치자고 일부 좌익의 참여만이라도 독려하는 동시에,293)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보았을 때 미국은 '남조선단독정부는 세울 생각이 없고 보수분자의 수중에 있다는 외관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좌우합작공작을 열심히 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판했다.294) 《조선일보》는 더 나아가 전체 좌익의 참여를 촉구하며, 당면한 정치·경제·문화 부문에 대한 대중의 일상적인

²⁹¹⁾ 고지훈, 2008 〈정판사사건 재심청구를 위한 석명서〉 《역사문제연구》 제20호 역사문제연구소, 355~356쪽, 369~370쪽; 〈G-2 Periodic Report, No.248〉 1946.6.8. 고지훈, 2008 위의 논문 370쪽에서 재인용.

²⁹²⁾ 김무용, 1997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과 당면과제〉 《역사연구》 제5호 역사학연구소, 294쪽

^{293) 〈}사설. 좌우합작의 신출발〉 《조선일보》 1946년 8월 23일

^{294) 〈}사설. 미대조선책〉 《조선일보》 1946년 8월 24일

요구와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통일 투쟁으로 좌우합작을 바라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거나, 혁명 세력의 전체와 애국지사가 함께해야 건국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95) 한편《동아일보》는 조선공산당이 편파적인 5원칙을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국제적 제약과 모략에 포로되지 않고,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애국적 좌파가 용감하게 출현'하여 국론통일에 참여하기를 촉구했다.296) 좌우합작운동의 부침에 따라 한국 언론이 좌익의 참여를 촉구하는 가운데, 미군정의 주간신문들은 좌우합작 위원회에 대한 미군정의지지와, 성공적인 좌우합작운동의 사례를 보도했다. 1946년 미군정주간신문에 게재된 좌우합작위원회 및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295) 〈}사설. 좌우합작을 논함〉 《독립신보》 1946년 9월 11일; 〈사설. 좌우합작에의 기시〉 《조선일보》 1946년 10월 10일 296) 〈사설. 행동통일의 신계기〉 《동아일보》 1946년 8월 24일

표 4. 〈1946년 좌우합작·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 관한 《농민주보》 《주간신보》기사 목록〉

| 《농민주보》 | | 《주간신보》 | | |
|---|--|---------------------------|---|--|
| 1946년 7월 13일 | 〈하지중장성명서. 김규 식 여운형씨의 통일노력 을 지지〉 | 1946년 7월 3일 | 미확보 | |
| | | 1946년 7월 10일 | 《입법기관설치안에 관하야- 하지 장군의 성명서》 〈4정당의 공동회담〉 〈사설. 건설의 제1보〉 〈입법기관의 설치안은 진행 | |
| | | 1946년 7월 17일 1946년 | 중〉 〈삽화: 이렇게 벌히지 말고 서로 한거름식만 더 나가면!〉 〈논설: 위대한 정치가의 출현 | |
| 1946년 7월 27일 | 관련 기사 없음 | 7월 24일 1946년 7월 31일 | 을 요망함〉 〈논설:합의적통일과 강행적통 일〉 | |
| 1946년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31일 9월 7일 9월 14일 | 관련 기사 없음 | 1946년 8월 7일 | 〈논설: 적청색대극기〉 | |
| 1946년 9월 21일 | 관련 기사 없음 | 1946년 9월 11일 | 〈삽화: 뭉쳐라! 좌우합하야 건국의 성터를 닥자〉 | |
| 1946년 9월 28일 | 〈김박사의 합작성명지 지. 하지중장 언명. 공보 부 특별발표〉 | 1946년 9월 18일 | 〈좌우합작공작에 하-지 중 장 전면적동의〉 〈입법기관설치에 대한 진보상 황〉 〈무모한 정객에 경고-아놀드 소장의 성명〉 | |
| 1946년 | 미확보 | 1946년 10월 16일 | 〈조선과도입법의원 래11월 에 소집한다〉 | |

| | | | 〈서울시입법의원 선거방침을 | |
|----------|--------------------------------|------------------|--|--|
| 10월 5일 | | | 결정〉 | |
| 10 2 0 2 | | | - 0/ 〈민주주의와 신입법의원 - 군 | |
| | | | 정장관 버취 소장〉 | |
| 104013 | 〈좌우합작안에 찬성. 입 | | 000 1111 207 | |
| 1946년 | 법기관은 민중의 대표기 | | | |
| 10월 19일 | 관. 하지 중장 서명〉 | | | |
| | 〈친일파반역자 의원자격 | | 〈입의 1차회의연기-미곡수집 | |
| 1946년 | 없다.러취장관 성명〉 | 1946년 | 과 배급은 그대로 실시〉 | |
| 10월 26일 | 〈입법의원설치에관한법 | 11월 6일 | 〈논설: [입의]반대의 일고 | |
| _ | 령〉 | | 찰〉 | |
| 1946년 | | | | |
| 11월 2일 | 관련 기사 없음 | 1946년 | 〈[입의]개원일 박두〉 | |
| 11월 9일 | | 11월 13일 | | |
| 1946년 | ⟨입법의원에서 위선 선 │ | 1946년 | 〈[서울, 강원, 양도의 입의원 | |
| | 거법 가결〉 | 11월 27일 | | |
| | /1百 /1包/ | 11 U 21 U | (입의무효는 법령에 따를 것 | |
| 1946년 | | | - 서울, 강원양처 재선을 오해 | |
| 11월 23일 | 관련 기사 없음 | | 마라〉 | |
| 11월 30일 | | 1946년 | 〈입법의원개원일 왜함대복멸 | |
| 1946년 | 미확보 | | 날〉 | |
| 12월 7일 | 미럭모 | | 〈논설: 민주정치의 중요단 | |
| 1946년 | | | 계〉 | |
| 12월 14일 | 관련 기사 없음 | | | |
| | 〈입법의원개원. 독립달 | | (a) a) | |
| | 성에 매진 김규식의장 개 | | 〈대망의 입법의원 12일 수 | |
| | 회사〉 | | 역사적 개막 삽화〉 | |
| | 〈자치촉성의길 하지중장 | | 〈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45 | |
| 1946년 | 의 축사〉 〈성공을 축원 맥아더원 수 축사〉 | 1946년 12월 13일 | 명중 [여대의원도 4명]〉 | |
| 12월 21일 | | | 〈맥아더 원수의 축사〉 | |
| | | | 〈국무장관대표 [애치슨]씨 축 | |
| | 〈국운을 작정할 것 러- | | 사〉 | |
| | 취장관축사〉 | | 〈러-취 장관 축사〉 | |
| | 〈국민의 히망이 발표될 | | 〈논설: 미증유의 신기구〉 | |
| | | | | |

| 것 미국무장관 대리축 | | |
|--------------|---------|------------------|
| ルト 〉 | | |
| 〈입법의원의 관선의원씨 | | |
| 명〉 | | |
| | | 〈입의명년도예산- 일차회의 |
| | | 에서 정식토의〉 |
| | | 〈삽화: 입법의원설치: 입법의 |
| | 1946년 | 원은 조선통일정부수립과 자주 |
| | 12월 20일 | 독립을 촉진시키며 국민의 보 |
| | | 호와 우리들의 요구하는 법안 |
| | | 을 제정한다.〉 |
| | | 〈논설: 폭력행위의 종지부〉 |

《농민주보》는 좌우합작을 지원한다는 하지의 성명서를 7월 13일, 9월 28일 게재하여 좌우합작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만을 홍보했다. 297)《주간신보》는 하지의 성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 형식을 통해 좌우합작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군정의 구상을 설득했다. 298) 1946년 7월 10일자 《주간신보》 38호의 〈4정당의 공동회담〉과 1946년 10월 3일자 《주간신보》 50호의 〈대구좌우합작의 성공〉은 대구에서의 공산당, 인민당, 한독당, 한민당이 결성한 대구공동위원회에 대해 보도했다. 299) 이 기사들은 4당이 연합위원회를 설립했

^{297) 1946}년 6월 30일에 라디오에서 방송된 하지의 성명서를 게재한 것이다. 당시는 이승만이 '정읍발언'등을 통해 단독 정부 수립설을 선전할 때로, 이에 대응하여 하지가 좌우합작 움직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여운형씨의 통일 노력을지지〉 《농민주보》 30호 1946년 7월 13일; 〈김박사의 합작성명지지〉 《농민주보》 39호 1946년 9월 28일

^{298) 〈}좌우합작공세에 하-지중장 전면적 동의〉 《주간신보》 48호 1946년 9월 18일

^{299) 〈4}정당의 공동회담〉 《주간신보》 38호 1946년 7월 10일; 〈대구 좌우합작의 성공〉 《주간신보》 50호 1946년 10월 3일

으며 10월 1일부터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영구적 기관을 수립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실 대구공동 위원회는 일제 잔재 청산 활동과 테러방지 활동 등 정치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기사들은 4당이 좌우합작을 했다는 현상만을 보도했을뿐, 대구공동위원회가 실현하려던 바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기사들은 4당의 지향점,이들 간의 차이 등은 제외하고 이들을 미군정의 좌우합작의 모범사례로써 인용하였다.300)

또한《주간신보》는 논설과 삽화를 통해 좌우 협력을 촉구했는데, 이는 좌우합작운동의 부침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좌우 협력의 필요성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피력했다. 예컨대 사설은 태극기의 가운데원이 적색과 청색을 합해 놓은 것처럼 좌우가 합해야한다고 주장했고,301) 삽화는 '이렇게 벌히지 말고 서로 한걸음식만 더 나가면!', 그리고 '뭉쳐라! 좌우합하야 건국의 성터를 닦자' 등 구호를 담았다. 즉, 《주간신보》는 좌우합작이 난관에 봉착한 시점에 오히려 좌우합작 운동의 성공 사례를 보도하고 좌우의 당위적인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좌우합작이 성공적이며 계속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민전 5원칙 발표 이후 사실상 정지되었던 좌우합작위원회는 10월 4일 재개하였고, 10월 7일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을 절충한 7원칙을 발표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의 방침을 절충한 정치·사회 개혁안, 좌우합작위원회의 입법기구 장악을 위한 복안,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등의 구상을 담았다.302) 한국 언론들은 7원칙에 대한 각 정당의 견해와 7원칙의

³⁰⁰⁾ 대구공동위원회에 대해서는 허종, 2017 〈1946년 대구공동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대구사학》 Vol.126 참고.

^{301) 〈}논설: 적청색 태극기〉 《주간신보》 42호 1946년 8월 7일

³⁰²⁾ 좌우합작 7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이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發)할 것, 3.

내용에 대한 보도와 평가에 집중했다.303) 반면 미군정의 주간신문은 7원칙에 대해서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고 입법기구 설치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농민주보》10월 19일자에 게제된 하지의 성명서는 좌우합작파가 입법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처럼 포장하는 한편, 좌우합작 7원칙이 입법의원 활동에 구속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본래여운형과 김규식은 입법의원 설치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신 7원칙을 바탕으로 입법의원에서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구하고 남북의좌우합작을 추진하려는 생각이었고,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가 입법기관의 설치를 동의하는 대가로 좌우합작 7원칙에 동의했다.304)그러나 좌우합작위원회가 입법기관 설치를 요구했다는 명분을 얻은 뒤, 좌우합작 7원칙이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군정은 처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서중석, 2004 앞의 책, 470쪽

^{303) 〈7}원칙과 각당의 견해〉 《조선일보》 1946년 10월 9일; 〈팔면봉〉 《조선일보》 1946년 10월 16일; 〈사설. 이념의 기조는 정상적.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하야 (상)〉 《동아일보》 1946년 10월 16일; 〈사설. 토지정책의 구상은 「개혁」.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하야 (중)〉 《동아일보》 1946년 10월 17일; 〈사설. 미흡한 채 발족의 단계.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하야 (하)〉 《동아일보》 1946년 10월 18일; 〈토지정책의 비판. 홍성하〉 《동아일보》 1946년 10월 29일

³⁰⁴⁾ 좌우합작위원회와 입법의원 설치 과정 및 위원회와 미군정의 동상이 몽에 대해서는 정용욱, 2003 위의 책, 7장 참고.

음부터 좌우합작운동을 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만 간주했고, 토지개혁, 친일잔재 청산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개혁도 정부수립 이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거부하였으므로, 합작 7원칙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미군정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즉, 한국 언론들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격과 7원칙의 내용을 보도하며 통일전선을 통한 국가 수립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미군정의 주간신문들의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보도는 미군정의 좌우합작 지지, 그리고 성공적인 좌우합작 사례의 전달에 초점을 두었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입법기구 설치를 주도·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보도는 입법기구 설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입법기구 설치를 앞두고 여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입법의원의 구성 문제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10월 4일 좌우합작 7원칙과 더불어 '입법기구에 관하여 하지장군에게 대한 요망'을 하지에게 제출했다. 여기서 규정한 의원될 자격이 없는자는 '친일과 민족반역자 관리(일제시대의 도·부의원 주임관 이상의 관리악질 경찰) 악질 정총대(町總代) 및 악질 모리배'였다. 또한 좌우합작 7원칙에 '친일과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할 것'이라는 항목을 포함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입법기구를 장악하고 친일과를 청산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친일과·민족반역자가향후 입법,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305)

한국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입법의원

^{305) 〈}合作의 七原則發表 民主力量을 總集結 立法機關에 對한 建議도 決定 七日 左右代表 正式會談〉 《동아일보》 1946년 10월 08일

의 생명은 민중의 혁신적이고 건설적인 의욕을 얼마나 용납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의원을 민중의 개혁과 건설을 실현하는 기구로 보았다. 그리고 민중의 진정한 의사표현기관이 되는 데 무엇보다도 그 구성의원이 문제가 제일 중대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군정의 입법의원 법령 내 친일파 배제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개 순사, 유명 무명의 끄나풀 등을 포함한 반민족적행동을 한자는 모두 제외하고 반민족적 자본가도 동시에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306)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입법의원은 민주정부수립전까지의 과도적 민의(民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비록 민선으로 전부 선출하지 못하고 관선으로 반을 선출하지만, 관선 의원들도 민중의 총의를 대표하도록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비록 사설의 초점은 입법의원이 전 분야를 망라한 민의 대표기구가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지만, 당시 친일파·민족반역자 제외에 대한여론을 반영한 듯, 관선·민선 모두 이들을 절대 배제해야 한다는 문장도 포함했다.307)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입법기구 참여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주간신보》와 《농민주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주간신보》는 이를 조선공산당의 악선전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1946년 11월 6일자 《주간신보》 55호 논설 〈입의반대의 일고찰〉은 1946년 9월 25일자 《중외신보》에 실린 조선공산당의 입법의원 반대에 대해 반박했다. 이 논설은 조공의 성명에 반대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간신보》가 한글판이 발행되기 전, 즉 영문으로 제작된 《주간신보》에는 이 사설이 《중외신보》의 조선공산당 성명 보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308)

^{306) 〈}사설: 입법의원의 구성과 성격〉 《조선일보》 1946년 10월 16일

^{307) 〈}사설: 의원자격문제〉 《동아일보》 1946년 10월 19일

^{308) 〈}The CHUKAN Digest No. 55〉, 1946년 11월 6일; 〈입법의원 반대 공산당서 성명〉 《중외신보》 1946년 9월 25일

《중외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공산당은 성명을 통해 미군정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동자본가를 비호하며 선거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법의원에 의해 민중에 불리한 법령이라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기구의 성격과기능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간신보》의 〈입의반대의 일고찰〉 논설은 조선공산당이 민중으로 하여금 군정을 불신하고 중오하게 만들게 하려는 것으로, 일반민중이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이반약한 것을 알고 현재 조선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치를 확립하려는 군정을 반대함으로써 비민주적인 정치를 수립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농민주보》는 러취의 성명서를 게재하여 미군정의 법령은 친일파의 입법의원 진출을 막는 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주보》 10월 26일자 42호 1면의 〈친일파 반역자 의원 자격없다. 러 -취 장관 성명〉은 새 입법기관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급 모리배가참가되리라는 유언이 떠돌고 있는데 전혀 오해임이 명백하며, '일정시대의 도 부회 의원 국장급 이상의 지위에 있든자 자기의 이익을위하여 일본에 협력하므로써 조선동포에게 해독을 끼친자' 등은 선거될 자격이 없다는 러취의 성명을 전했다.309) 이어 2면에는 〈입법의원 설치에 관한 법령〉이라는 제목으로 법령 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 전문을 게재했다.

미군정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0월 항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호주 투표 방식으로 신속하게 실시된 입법의원 선거는 예상대로 우익과 친일파가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김규식은 좌익진영은 전면적 검거 때문에 피선될 기회가 없었으며 피선된자가 극도로 편향적인데다가 친일파가 다수 피선되었음을 지적하고,

^{309) 〈}친일파 반역자 의원 자격없다. 러-취 장관 성명〉 《농민주보》 42호 1946년 10월 26일

이는 충분히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비민주적 선거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방민선의 전부 혹은 부문적인 무효와 재선을 요청했다.310) 언론 또한 선거 결과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규식의 주장에 동의하며 '기왕 선거라 하여 군정 하 인민의 발언에 법적근거를 주려는 것이고, 또 그 기구가 국제적 교섭이나 토의의 대상이 될 전제가 될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더 깊은 고려 밑에 조선민중이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선거를 집행케 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311)

결국 하지는 강원도와 서울에서의 재선을 명령했지만, 재선을 실시하는 이유는 친일파의 당선 때문은 아니라고 선언했다. 뉴먼 공보부장은 1946년 11월 25일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강원도와 서울에서 선출된 의원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알리면서도, 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312)《주간신보》는 서울과 강원도에서 입법의원의 재선거 결정이 의원자격 문제 때문이 아니라 법령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하지의성명서를 실었는데, 입법의원의 의원자격 문제란 역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313)

반면《농민주보》는 입법의원 선거의 실시 과정, 선거 개표 결과, 선거 결과에 대한 좌우합작위원회의 비판과 이로 인한 서울과 강원 도에서의 재선 실시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일·민족 반역자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사설로 게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미군정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했다. 1946년 11월 30일자 《농민 주보》 47호에 실린 사설〈전동포를 포용하라〉의 핵심은 사실상

^{310) 〈}金博士 「하-지」 中將에게 地方民選의 再選要請左翼陣이 없고 親 日派가 被選〉 《동아일보》 1946년 11월 6일

^{311) 〈}사설. 선거와 혁명세력〉 《조선일보》 1946년 11월 6일

^{312) 〈}개원일은 불(不)연기〉 《조선일보》 1946년 11월 26일

^{313) 〈}입의무효는 법령에 따를 것- 서울, 강원 양처 재선을 오해마라〉 《주간신보》 59호 1946년 12월 6일

친일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동포애로써 이들을 포용하라는 것이었다. 이 사설은 일제 하 관리였던 자들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행복과 기쁨을 자기네들만 누리려는 '놀부'의 심리라고비난했다. 그리고 친일·민족반역자의 청산에 대한 요구는 질투적 심리, 배타적 심리, 이기적 심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자들 때문에 일제 하 관리였던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 모리배가되었다는 논리를 구사했다.

몇 차례의 연기 끝에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했다. 입법의원의 개원과 함께 미군정은 한국인 자치기구 수립을 통해 한국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했다. 《주간신보》의 사설들은 입법의원이 '조선역사상 미증유의획기적인 위업', '조선 자치정부의 요람인 동시에 유구오천년 역사상의 신기원을 획한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입법의원의 역할을 '조선국민의 자치정체를 수립하는 방향으로서의 첫 단계', '다수의 도당들이 폭력행위로 목적하는 바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던 시기를 끝내고 정당한 변론과 상호이해에 의한 판결의 신시대를 여는' 것으로 적극 평가했다. 314) 입법의원을 자치정체의 수립, 민의대표기구로서 강조하는 《주간신보》의 보도태도는, 남조선입법의원 개원식에서 하지의 축사와 김규식의 개회사에 대한 《주간신보》의 보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315) 축사에서 하지는 입법의원의 자치적 성격

^{314) 〈}미증유의 신기구〉 《주간신보》 60호 1946년 12월 13일; 〈폭력 행위의 종지부〉 《주간신보》 61호 1946년 12월 20일

³¹⁵⁾ 하지의 축사는 1946년 12월 13일 《농민주보》 50호에 〈자치촉성의 길〉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하지의 축사는 입법의원 개원을 '남조선에 있어 민주주의 발전상 가장 중대한 계단이고 조선 자치촉성에 제일큰 거름'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김규식의 개회사는 〈독립달성에 매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하지의 입법의원 축사가 희망으로가득 찬 것에 비해, 김규식의 개회사는 입법의원이 초기의 단계임을, 통일정부 수립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임을 명시했다. 〈자치촉성의 길〉《농민주보》 50호 1946년 12월 13일; 〈독립달성에 매진〉《농민주

과 민주주의의 성격을 부각시켰지만, 김규식은 이것이 통일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간신 보》는 하지의 축사는 게재하지 않고 김규식의 개회사만을 헤드라 인으로 실었는데, 입법의원이 통일 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보적 과도입법의원'이라며 입법의원의 한계와 향후 지향할 바를 강조한 부분은 기사에서 생략되었다.316)

반면 한국 언론들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의원의 역할을 당부했다.317) 특히 《조선일보》는 입법의원이 실제로 얼마나 능력과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얼마나 민중의 혁신적 의도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에 나타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미군정청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입법의원의 진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동아일보》는 입법의원이 민의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강원도 지역에서 불투명한 이유로 선거를 무효화한 것은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입의가 본래의 의도를 그르치지 말 것을 경고했다.318)

요컨대 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한정책은 중간 파를 중심으로 정당을 통합하고 입법기구를 수립하여 남한 사회 개혁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미군정 주간신문들은 좌우합작을 추진하여 입법기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홍보하는 데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고, 기사들은 좌우합작의 당위성과 민의 수렴기구로써의 민주주의적 입법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좌익의 참여를 촉구하며 실질적인 좌우합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입법기구가 민생 개혁을 위

보》 50호 1946년 12월 13일

^{316) 〈}대망의 입법의원 12일 수 역사적 개막〉《주간신보》 60호 1946 년 12월 13일

^{317) 〈}사설. 입법의원의 책임〉 《자유신문》 1946년 12월 10일; 〈사

설. 입법의원 개원에 제하여〉 《조선일보》 1946년 12월 12일

^{318) 〈}사설, 민의를 존중하라〉 《동아일보》 1946년 12월 13일

한 법안을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정의 신문과 한국 신문의 보도태도의 차이는 미군정이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한다고 표방하지 만 사실 조선공산당을 분리시키면서 우익에 온건좌파를 통합해내려 했고, 민의 수렴기구를 설치한다고 표방하지만 사실 이를 통한 남한 사회의 개혁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 했다. 한국 언론과 미군정의 주간신문들은 모두 '좌우합작', '입법의 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용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른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정의 의도는 1946년 8월 말, 미군정이 좌익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 공세를 시작하여 '10월 항쟁' 이후 이를 강화하면서 점차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2) 미군정의 좌익 탄압과 선전 공세

국무부의 새로운 대한정책은 남한 지역에 일정 정도의 사회개혁을 실시하여 한국인의 지지를 확보할 것을 명시했지만, 미군정은 국무 부의 개혁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³¹⁹⁾ 이러한 상황에서 신전술 하 조공의 선전전과 대중운동과의 결합은 미군정에게는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신전술은 미군정에 대한 '공세적 압박전술'을 그 특징 중 하나로 하였으나, 이것이 미소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폭력투쟁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선전을 통해 강력한 대중의 운동을 이끌어내는 평화적인 투쟁'으로써 미군정을

³¹⁹⁾ 대표적인 예로 1947년에 입법의원에서 마련한 토지개혁안은 국무부에서 파견한 경제사절단장이자 하지의 경제고문이었던 번스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안과 좌우합작위원회의 무상분배안을 절충한 것이었지만우익과 미군정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하지의 노동고문으로 파견된미챔의 노동개혁 정책은 노동보호 입법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 그리고 미국식 노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었으나 하지의 혹평을 받았다. 정용욱, 2003 앞의 책, 6장 참고.

공세 압박한다는 것이다.320) 즉 신전술은 미군정 정책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폭로하는 방식, 즉 협조와 폭로의 균형을 요구했다.321) 이에 조공은 미군정의 각종 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며 그 대안으로 북한의 민주개혁을 선전하였다.322) 민주개혁을 홍보함으로써 조공을 대중들의 불만과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세력으로 인식시키고 조공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와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323)

미군정 정치고문 랭던이 국무부에 보낸 문서는 새로운 대한정책에 대한 미군정의 평가와 조공의 신전술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을 잘보여준다. 랭던은 미국의 새로운 대한정책이 군정 내에 관용과 건설적인 분위기가 증가한다면 한국인 여론이 소련 정책을 반대하고 미국 정책을 지지하게 되어, 소련이 그들의 입장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에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다. 요컨대 국무부가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조선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지위를 손상시키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324)

³²⁰⁾ 이규성, 2005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1~26쪽

³²¹⁾ 김무용, 1997 앞의 논문, 294쪽

³²²⁾ 김무용, 위의 논문, 301~315쪽

³²³⁾ 이규성, 2005, 앞의 논문, 26쪽

^{324)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년 8월 23일 《FRUS, 1946》 이 문서에 대한 국무부의 답신은 랭던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인내심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정책노선이 조만간 진전을 이루어 북한에서 소련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란 점을 확신하며, 미국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타당하고 대중적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위원회가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지만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소련에 접촉할 생각은 없으며,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있는 신탁통치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점을 자신도 알고는 있지만, 한국인들을 고무하여 신탁

랭던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좌익을 끌어들이려는 미군정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좌익이 비협조 노선을 걷기로 했으며 북한에서 소련의 개혁에 대한 남한 공산당의 정력적인 선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랭던은 미군정이 일본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순조롭게 이루어냈지만 미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소련의 사주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소련이 북한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거나, 공산주의 선전에 넘어가기 쉬운 노동자 조직, 농민동맹 및 청년단체 등 지역사회의 강력한 소수자들 사이에 이러한 불만이 만연하다고 진단했다.

이렇듯 랭던은 남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무부가 요구한 개혁조치들의 효용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영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미소공위를 재개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는 새로운 대한정책이한국인들이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어 소련이 자신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미소공위 재개를 시도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영국과 중국을 통해 소련을 압박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것은 남조선에서 아무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실시한다고 한들 한국인 여론이 미국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 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랭던은 일련의 개혁정책이 실 시되어도 조선공산당의 선전으로 인해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여론 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하며 개혁정책에 대한 미군정의 부정적 인 입장을 합리화했다.

통치가 폐기된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1946년 9월 13일 《FRUS, 1946》 735~737 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frus_002_0010_0950

구체제의 재등장과 식량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한국인의불만은 미군정도 주지하였다. 하지만 랭던의 문서에서 나타나듯이,한국인들에게 식민지 체제의 존속으로 느껴진 사회구조는, 하지를 중심으로 한 미군정의 보수적인 고위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체제로부터 순조로운 전환'을 의미했다. 따라서 미군정 통치하의 사회를 비판하는 의견들은 실체가 없는 비판, 즉 미군정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공산당의 정력적인 선전' 즉 신전술에 입각한 선전에 의해 공산주의에 경도된 자들의 맹목적인 불만으로 여겨졌다.

개혁을 통해 한국인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국무부의 방침은 현지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미군정의 개혁 불필요성, 불가 입장으로 인해 미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을 타파하는 형식으로 변용되었다. 이제미군정에게 여론은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척도가아니라, 미군정을 방해하려는 좌익의 선전과 이에 대항하는 미군정사이의 투쟁의 장이 되었다.

1946년 8월 31일 하지는 좌익의 선전에 전면 대응한 최초의 성명인 "조선민중에게 보내는 말"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군정청 공보부를 통하여 발표되고 중앙방송국이 3회 방송했다. 이는 《농민주보》 9월 7일자 36호 1면 전체 지면에 〈조선민중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지의 얼굴 그림과 함께 게재되었다. 《농민주보》최초의 1면 전면 성명서였다. 《주간신보》에는 9월 11일자 46호에〈조선주둔미군사령관 하-지중장으로부터 조선민중에게 보내는 말슴〉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하지의 얼굴 그림과 함께 헤드라인으로실렸다.325) 하지의 8월 31일자 성명서는 《농민주보》 1면 전체에,《주간신보》헤드라인으로 게재되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홍보될 만큼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는 미군정이 좌익

^{325) 〈}조선민중에게 고함〉 《농민주보》 36호 1946년 9월 7일; 〈조선 주둔미군사령관 하-지중장으로부터 조선민중에게 보내는 말슴〉 《주 간신보》 46호 1946년 9월 11일

의 선전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국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하지는 이 성명서에서 '어떤 정당'의 악질 선전을 흥미 있게 보고 있다며 네 가지 측면에서 이를 반박했다. 하지의 성명서는 미국의의도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입법기관은 군정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식량문제에 대한 한 정당의 선전은 사실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선전은 범법자들이 문란을 조장하려 한 것이다 등을 주장했는데, 이때 사실과 허위를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조선에 친일 경찰 문제나 식량 정책 문제 등이 존재하지않는 것이 '사실'이나, '모당'의 혹은 '범법자'들의 '허위' 선전, 즉 악선전으로 인해 미군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 중 경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서는 조선의 경찰은 인민에 대한 봉사와 보호와 의무 이행을 나날이 훌륭히 수행하고 정당을 탄압하지 않는데, '모당'혹은 '범법자'들이 경찰을 공격하여 혼란을 조장하고 미군정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가 발표되기 이전 《농민주보》에 실린 친일 경찰 관련 미군정성명서와 기사들은, 일본 경찰이 물러가고 이제 경찰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남한 사회의 발전의 일환으로 강조하며, 마치 친일경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326) 하지의 "조선민중에게 고함" 성명서는 친일경찰 문제를 무시하던 기존의 홍보 방침에서 더 나아가 남한에는 친일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허위'라고선언함으로써 친일경찰 청산 여론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8월 31일자 하지의 성명서는 무정부주의자, 어떤 정당, 선동가 등

^{326) 〈}러-취 군정장관의 식사. 국립경찰학교졸업식 석상에서〉 《농민주 보》 10호 1946년 2월 23일

의 다양한 용어를 활용하며 직접적으로 조선공산당, 좌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폭력주의 난폭한 혁명 계급투쟁 계급증 오심을 주장 실천하며 무상으로 큰 것을 약속하는 그런 유의 지도 자를 경계하여야 하다'고 성명을 마무리함으로써 미군정의 성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시사했다. 즉 이 성명은 공산당의 신전술에 대한 미군정 최고 당국자의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전까지의 역선전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소련, 조선 및 아시아에 야심을 품은 소련에 관한 것으로, 역선전의 주된 대상 은 소련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대한정책과 조선공산당의 신 전술 채택이 맞물리면서, 이제 역선전은 정치, 식량, 경찰 문제 등을 포함한 미군정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선공산당과 연계시켜 비 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역선전의 대상은 남한 내 좌익으로 변화했다.

미군정은 좌익의 선전에 대한 전면적인 역선전을 개시함과 동시에 주요 좌익 계일 및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언론을 통제했다. 1946년 9월 6일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이 무기 발행 정지되었고 간부들은 방첩대에 검속되었다. 곧이어 9월 7일 미군정은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등 좌익에 대한 강경대응을 실시하였다. 327) 이 세 신문의 정간은 제1차미소공위 결렬 직후 시작된 미군정의 좌익 신문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18일 '조선정판사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기관지《해방일보》를 폐간하고, 5월 29일 군정법령 88호를 제정하여 기존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좌익계 신문들을 일체 발간할 수 없게 하는 등 좌익 신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328)

그러나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의 정간은 미

³²⁷⁾ 서중석, 2004 앞의 책, 438~444쪽

³²⁸⁾ 박용규, 1988 앞의 논문, 119쪽

군정의 의도와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전의 언론 통제와 차이가 있었다. 미군정이 좌익에 대해 전면적인 역선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는, 신문 발행 정지나 언론 관계자의 구속 사유는 주로 기사의 내용 에 근거를 두었다. 예를 들어 1946년 5월 7일 인천 방첩대는 《인 천신문》 간부와 직원을 검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인천 군정관 스틸맨 중좌는 '인천시 적산관리국 공장과장 盧載龍이 일인가옥을 불법접수하였다는 기사와 倉中장유회사관리인이 매수당하여 부당허 가하였다는 기사가 사흘 연재되었는데 사실 무근의 기사'라며 '이 사건의 진상은 허위보도'라고 발표했다.329) 또한 1947년 7월 7일 미군정은 《자유신문》, 《조선인민보》, 《대한독립신문》의 사장, 주필 등 간부를 콜레라 기사를 문제 삼아 구금했다.330) 그 중 해당 시기 《자유신문》의 콜레라 기사를 찾아보면, 1946년 7월 3일자 〈공포의 연백군, 호열환자 100명 발생?〉으로, 연백군 일대에 한꺼 번에 100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 으나 이 급보를 접한 보건후생부가 소독약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 다는 내용이었다.331) 이로 미루어보아 이 신문들의 콜레라 관련 기 사가 또한 '허위보도'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구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신문협회와 군정출입기자단은 군정당국이 마포 콜레라 기 사 관계로 해당 언론인들을 구속한 것은 언론기관에 대한 일대 모 욕이라는 입장을 군정장관에게 제출했다.332) 그 외에도 8월 8일

^{329) 〈}인천CIC, 인천신문사 간부 및 직원을 검거〉《자료대한민국사 2 권》 1946년 5월 7일. 출전은 《중앙신문》1946년 5월 9일; 〈인천시 군정관, 인천신문사원 검거사건 진상발표〉《자료대한민국사 2권》1946 년 5월 9일. 출전은 《중앙신문》1946년 5월 12일

³³⁰⁾ 김민환, 2001 〈미군정의 언론정책〉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244쪽

^{331) 〈}공포의 연백군, 호열환자 100명 발생?〉《자유신문》1946년 7월 3일

³³²⁾ 이 진정서는 관련 기자들이 검속된 이유가 '마포 콜레라' 기사관계라고 밝혔는데, 당시 《자유신문》의 콜레라 관련 기사는 연백군 관련 기

《조선인민보》의 식량배급 청원 시위 보도가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사장과 편집국장이 검거되었고, 8월 20일 《건국신문》의 주간 김 광수는 위폐사건에 관한 호외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 다.333)

이처럼 제1차 미소공위 이후 미군정이 검속 대상으로 삼은 기사의 내용은 미군정의 남한 점령통치의 허점을 노출하는 기사들로, 그분야는 적산관리, 보건, 식량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쳤으며, 미군정이 이를 제재한 근거는 이 기사들이 허위보도라는 것이었다. 제1차 미소공위 이전 시기에는 언론 자유의 원칙에 따라 좌익 신문의존재를 인정했지만, 미소공위 결렬 이후에는 신문이 미군정의 점령정책 하 남한 사회의 제반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제재했던 것이다.

반면 군정 당국은 1946년 9월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의 정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334) 1946년 9월 6일 공보부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수명의 인물이 군당국으로부터 검거'되었으며, 이상의 세 신문이 정간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포고령 2호위반이 정간 이유임을 밝혔을 뿐이다.335) 미군정이 편찬한 《주한미군사》는 9월 4일 하지가 극좌 신문인 이들 세 신문을 정간시키고책임자를 구속시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9월 6일 방첩대 요원들이 신문사 3사와 주요 임원들의 집을 급습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

사가 유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두 신문들 중에서 '마포 콜레라' 관련 보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문협회와 군정출입기자단, 기자 구속문제 등 건의문·진정서〉《자료대한민국사 2권》1946년 7월 13일. 출전은 《동아일보》 1946년 7월 16일.

³³³⁾ 김민환, 2001 〈미군정의 언론정책〉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 244쪽; 박용규, 1988 앞의 논문, 121쪽

³³⁴⁾ 박용규, 1988 앞의 논문, 122쪽

^{335)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의 3신문정간처분〉 《자료대한민국 사 3권》 1946년 9월 6일. 출전 《조선일보》 1946년 9월 7일

고 《중앙신문》에서는 구속된 자들의 고소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지만, 《조선인민보》는 박헌영과 공산당의 성명을 담은 것을 고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이 세 신문에 대한 정간은 구체적인 기사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지의 명령에 의해 신문들의 정간과 관련자 구속이 먼저 결정되고, 사후적으로 관련 기사를 찾았던 것이다.336) 당시 G-2 정보보고서는 이 세신문을 정간한 것이 좌익 언론의 행보에 건전한 영향을 미쳤다고평가했다.337) 군정당국이 이 신문들을 정간한 이유는 특정 보도의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군정이 좌익의 역선전에 전면 대응하는한편, 좌익의 선전을 봉쇄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신문기자회 대표는 하지를 방문하여 세 신문에 대한 정간 해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진정서는 군정이 '위정당국으로서 국민의 건설적 비판과 진언을 듣는 것은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 한 반대 의견이라도 그 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문제의 3신문이 좌익측의 주장과행동을 많이 반향시켰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신문기자회 대표는 미군정의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 탄압이 보도 내용 때문이 아니라 좌익의 입을 막기 위한 의도임을 간파하고 이를 비판했던 것이다.338)

한편 군정당국이 역선전에 치중하였던 시기, 군정 내에는 국무부의 새로운 대한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이를 홍보하려는 움직임도 존

³³⁶⁾ 박용규, 1988 앞의 논문, 132쪽; 1988, 《주한미군사》 2권 돌베개 간행, 《주한미군사》 2권, Part Ⅱ Chapter Ⅳ, 602~604쪽

^{337) 〈}G-2 Weekly Summary〉52호 1946년 9월 12일 3쪽, 1990,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2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74쪽

^{338) 〈}조선신문기자회대표, 하지를 방문 3신문정간해제 진정서 제출〉 《자료대한민국사 3권》1946년 9월 11일. 출전 《서울신문》 1946년 9월 13일

재했다. 대표적인 예로 하지의 경제고문 번스는 개량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신정책 노선을 홍보하려고 노력했다. 1946년 8월 31일 발표된 하지의 "조선민중에게 보내는 말" 성명서가 준비되는 과정 에서 번스는 국무부 장관에게 하지의 성명서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곧바로 국무부가 후속 성명을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 다.339)

번스는 전문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의 선전기구가 미국 정책이 제국 주의적이며 반동적이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운을 떼며 하지의 성명이 8월 29일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미국의 고위당국자,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8월 31일 토요일 조간신문에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하는 성명의 내용을 자세히 적고, 이것이 하지의 성명을 지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이라고 목적을 명시했다.

번스는 이 전문에서 전반적으로 하지의 성명서 발표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국무부가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번스가 작성한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이름의 성명서는 미군정의 개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지의 성명서와 차이가 있다. 번스의 성명서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동조건의 향상, 농민개인의 농지 소유로 소작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토지개혁의 실시, 일부 소수 특히 일제에 부역하여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 방지, 어떠한 단체나 분파에의해 장악되지 않는 경찰의 설립 등 해방 직후 핵심 과제들의 해결

^{339) 〈}통일정부수립될때까지 미군은 조선을 원조. 미국무장관 대리 "아치 손"씨 성명〉 《농민주보》 37호 1946년 9월 14일; 〈The Economic Adviser in Korea (Bunce)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년 8월 26일 《FRUS, 1946》, 731~73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frus_002_0010_0910

을 약속했다. 이 성명은 번스가 작성한 그대로 미국 날짜로 8월 30일 워싱턴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국무장관 대리 애치슨에 의해 발표되었다.

하지의 성명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미군정의 입장에 맞게 변용했다면, 번스의 성명은 국무부의 대한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데에 충실한 것이었다. 국무부발 추가 성명은 한편으로는 미군정의 성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정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충실하지 않았음을, 국무부의 추가설명을 필요로 할 정도로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군정의 홍보활동은 국무부의 대한정책과도 일정한괴리를 가지며 미군정의 입장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46년 8월 31일 하지의 성명으로 시작된 좌익에 대한 역선전은 10월 항쟁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부청 앞에서 여성과 어린이가 중심이 된 시민 2천여 명이 '배고파 못 살겠다, 쌀을 달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발포에 시위대는 경북도청 광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었다. 이때 시위는 특정 계급·계층의시위가 아니라 노동자, 학생, 청년, 시민, 공무원, 의사, 일부 경찰까지 참여한 전체 대중의 항쟁이었다. 대구에서 발생한 시위는 이후 3·1제 소작제도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추수봉기와 결합하며 12월 중순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40) 이른바 '10월 항쟁'이었다.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 식량 공출, 토지개혁의 지연 등 해방 이후 1년간의 군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10월 항쟁에서 경남에서 시위대의 주된 공격 목표는 경찰서와 지서였고, 그 다음이 군정 및 면사무소, 군수사택과 관공리의 사택 등 행정 관계 기관과 사택이었다. 그리고

³⁴⁰⁾ 김상숙, 2016 《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10월 항쟁》 돌베개, 70~71쪽, 101~103쪽, 106~107쪽

주요 공격 대상 인물은 경찰과 그 가족, 군수와 관리, 우익인사와 지주, 전도사 등의 순서였다. 341) 또한 전남의 농민들의 시위는 토지정책, 공출의 불균형, 지주·관리·경찰의 유착에서 비롯한 깊은 원한때문에 발생했다. 당시 전국 수십만의 농민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한조직은 부재했고, 10월 항쟁은 자연발생적인 개별 농민 전쟁들이집합하는 양상을 이루었다. 342)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직 면하자, 미군정은 10월 항쟁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해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홍보했다. 첫째, 경무부장이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시 위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10월 항쟁 초반의 경우, 대구 지역에 대 한 계엄령으로 인해 신문 및 출판물이 금지되어 신문이 발행되지 않고, 시위로 인해 언론사의 자체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무부장 의 보고는 언론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었다.343) 10월 항쟁 관련 언론 브리핑은 1946년 10월 3일자 기자회견담에서 시작되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달라는 《동아일보》 기자의 요청에 따라, 경무부장 조병옥이 호출되어 사 건 경위를 전달했다. 조병옥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에 이르기까 지 날짜별로 시위 참가 인원과 장소, 이로 인해 경찰이 입은 피해상 황 및 경찰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10 월 항쟁에 대한 군정 관료의 언론 브리핑은 경찰의 보고를 전달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일보》는 조병옥의 발표를 게재하며, 시위로 인해 교통, 통신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보도가 어려운 상황에 서 사실상 경무부장의 단편적 발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 는데, 이는 10월 항쟁에 대한 해석과 정보 배포에 미군정이 사실상

³⁴¹⁾ 김상숙, 2016 위의 책, 271~273쪽; 정해구, 1988 《10월 인민항 쟁 연구》 열음사, 147쪽

³⁴²⁾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1986 앞의 책, 457~473쪽

^{343) 〈}계엄령으로 신문은 발금(發禁)〉 《조선일보》 1946년 10월 12일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언론 또한 그 점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44) 같은 시기 미군정은 부산에서 발행되던 《민주중보》가 대구에서 발생한 시위를 호외로 발행했다 하여동 신문을 10월 4일 포고령 2호 위반으로 무기정간 하고 운영위원장을 구속했는데, 이는 미군정이 시위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45)

한국인 기자들은 군정 당국의 브리핑에서 경찰의 보고가 정확하지 않으며, 파업과 기타 문제들의 핵심은 식량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경상북도 군정장관이 식량 수집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사임했으나, 사실 핵심적인 책임은 식량행정관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으므로, 여론은 이들을 해임하고 더 적합한 인물들이 이 일을 맡기를 원한다고 밝혔다.346) 기자들은 사실상 경찰의 피해상황만을 부각시키는 군정의 언론 브리핑을 비판하고, 식량 수집을 담당하는 관리들과 경찰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답변을 담당한 관료는 도대체 '여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당신이 친구들 몇몇이랑 얘기한 것이냐고 기자 를 비꼬았다. 기자가 모든 정당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같은

^{344)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 - 1981)(Series: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File:9 Press Conference - Korea) 〈Press Conference: 3 October 1946〉 1946.10.3.; 〈Press Conference: 7 October 1946〉 1946.10.7.; 〈Press Conference: 10 October 1946〉 1946.10.10.; 〈Press Conference: 21 October 1946〉 1946.10.21. (이하 〈Press Conference: 날짜〉로 표기); 〈대구 及 근접지역의 폭동 진상과 수습 방책에 대하여〉 《조선일보》 1946년 10월 8일

³⁴⁵⁾ 김복수, 1991 앞의 논문, 77쪽

³⁴⁶⁾ 당시 기자회견담에 참여한 기자 중에서 신문사가 확인되는 기자는 《동아일보》의 노 기자, 《서울타임즈》의 김 기자, 《합동통신(KPP)》의 유 기자, 《한성일보》의 신 기자, 《수산경제신문》의 이 기자이다. 〈Press Conference: 8 October 1946〉 1946.10.8. 3쪽

생각이라고 대답하자, 관료는 기자가 뉴스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러취 군정장관에게 직접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347)

10월 항쟁 초반에 한국 언론은 사태의 전개에 대한 정보를 미군 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사설을 통해 당시 시위의 의미를 나 름대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설령 이 사건 이 일부 정치적 책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민중이 이와 같이 동하게 된 데는 그들이 현재의 사회 사정에 대하여 그렇게 행 동을 하게까지 만든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진압하면 그만 이라든지 하는 경단(輕斷)을 삼가고, 그들이 폭동에까지 이르게 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사정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생각해야 한다며 사건의 핵심 파악과 문제 수습을 강조했다.348) 반면 《동아 일보》는 파업의 주지와 정신은 알겠으나 그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 하고, 이를 좌익 지도자의 정치 운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파업소 동의 명분이 된 식량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면서도 권력이 폭동을 단 호히 저지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349) 한편 10월 10일 이후에 이르면, 언론사들은 자체 특파원들의 현 지 조사 보도를 싣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특 파원 모두 폭동의 과격성이나 경찰이 입은 피해 등을 보도했지만,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다. 예컨대 《동아일보》는 10월 15일 자 3면 전체를 대구로 보낸 특파원의 보도로 구성했는데, 시위대가 적기가(赤旗歌)를 불렀다는 점을 여러 기사에서 서술하며 파업이 좌

^{347) 〈}Press Conference: 8 October 1946〉 1946년 10월 8일 3쪽

^{348) 〈}사설: 대구사건의 중대성〉 《조선일보》 1946년 10월 8일

^{349) 〈}사설: 주지는 是하나 방법은 罪- 남조선파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 (상)〉《동아일보》1946년 10월 5일; 〈사설: 남조선파업에 대한 우리 의 소견(하)〉《동아일보》1946년 10월 6일

익의 정치투쟁의 일환이라는 것을 강조했다.350) 반면《조선일보》의 특파원 보도에는 시위대가 적기가를 불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식량을 위시한 민생 전반의 문제와 추곡수집에 대한 농민들의불안, 불만 등에서 시위가 비롯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 나아가 특파원의 기사는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모략이 있기전에 민중에게 불평과 불만, 공황, 동요의 씨를 뿌리기는 식량 배급의 불충분과 강력한 공출"에 있었고, 무책임·무방침한 조선인 관공리에 대한민중의 불신임이 폭발하는 데 "「모방면의 책동」이란 것이 기회를타게 했든 것"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지적했다.351) 특파원의 입장은본지의 사설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352)

둘째, 미군정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체감한 미군정은 당국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10월 항쟁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과 해석을 홍보했다. 《농민주보》는 '폭동', 《주간신보》는 '소요'라는 단어로 당시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사태의 양상과 전개 과정은 전달하지 않는 한편 군정 당국의 성명서를 게재하며 미군정의 해석과 입장을 보도했다. 10월 항쟁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 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350) 〈}무서운 소동 첫날 十月一日〈투쟁위원회 간판문제로 노평과 경찰 충돌 대수롭지 않은 소동원인〉,〈전율!〉,〈군수 기타를 소살〉,〈직장을 사수〉,〈선동가해자 체포〉,〈유치장도 파괴〉,〈이일간에 걸쳐 동족살해전 경찰습격, 가옥파괴경관가족까지 구타〉,〈구일 만에 회복〉,〈정당한 勞爭은 당연 조건개선진정은 언제든지 환영 식량파업과 「하지」 중장성명(上)〉《동아일보》 1946년 10월 15일

^{351) 〈}피해는 의외로 심대. 경관측의 행방불명도 二九0명〉 《조선일보》 1946년 10월 11일; 〈원인은 「쌀」문제〉 《조선일보》 1946년 10월 11일; 〈경북도청 총파업〉 《조선일보》 1946년 10월 11일; 〈경북도 내 치안 완전 회복. 식량정책이 최대의 암. 전신전화 개통, 신문도 발간〉 《조선일보》 1946년 10월 16일

^{352) 〈}사설: 대구사건의 처리〉 《조선일보》 1946년 10월 19일

표 5. 〈10월 항쟁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 기사 목록〉

| 《농민주보》 | 《주간신보》 | | |
|---|-------------------------|--------------|--|
| 〈폭동사건과 그 대책. 기자단 러-취 장 관과 문답〉 《농민주보》42호 1946년 10월 26일 헤드라인 | 1946년 10월 3일 | 관련 기사 없음 | |
| 〈무정부주의자는 당신네를 선동한다〉 | 1946년 10월 10일 | 미확보 | |
| 《농민주보》 42호 1946년 10월 26일 4면 전체 | 1946년 10월 16일 | 관련 기사 없음 | |
| | 1946년 10월 23일 | 관련 기사 없음 | |
| 〈속히 폭동을 정지하고 새 조선 건설에 | 〈소요를 속히 | 정지하라. 남조선 소요 | |
| 매진> | 사건에 하-지중장의 성명서 요지〉 | | |
| 《농민주보》43호 1946년 11월 2일 | 《주간신보》54호 1946년 10월 30일 | | |
| 헤드라인 | 헤드라인 | | |
| 〈양민을 선동하는 거즛선전의 내용을 | 〈조선은 식민지화 않는다. 하지중장 | | |
| 백일청천하에 폭로. 하-지 중장 성명〉 | 의 성명 요지〉 | | |
| 《농민주보》46호 11월 23일 | 《주간신보》56호 1946년 11월 13일 | | |
| 2면 전체 | 헤드라인 | | |
| 〈하-지 중장 성명 조미회담 건의에 대 | 〈경찰수준향상에 노력. 조미공회건의 | | |
| 한 폭동원인해결 대책〉 | 에 하-지 중장 답〉 | | |
| 《농민주보》49호 1946년 12월 14일 | 《주간신보》59호 1946년 12월 6일 | | |
| 헤드라인 | 헤드라인 | | |

미군정은 10월 항쟁의 주요 원인이 친일 경찰 문제와 식량정책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명서들을 통해 미군정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먼저 친일 경찰 문제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은, 미군정 하에는 전직 경찰이 2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경찰에

대한 민중의 원망이 선동가들에 의해 거짓 선동되어 대중들이 경찰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곡수집 과정 중 경찰의 만행에 대해서는 경찰은 직무를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또한 민주주의적인 경찰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친일경찰 개혁의 문제를 민주주의적 개혁의 문제로 전환하였다. 353) 미군정은 더 나아가 경찰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다며 경찰의 만행을 경찰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였다. 미군정은 이제 친일 경찰로 인해 발생한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비민주적인 경찰의 문제, 그리고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논리를 통해 문제의 성격을 다시 규정했다. 354)

식량문제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은 미곡 작황과 미군정의 식량 정책은 문제가 없으나 공출에 대한 농민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문제이며, 악선전이 농민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공출 정책에 협조하면 농부 자신도 넉넉히 쌀을 남겨둘 수 있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적당한 배급을 할 수 있으니 농민들에게 식량 규칙에 순종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미군정의 식량정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355)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미군정을 불신케 하고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공출을 반대하도록 선동했으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관해 거짓 선전을 하여 군정을 무력화시키려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량정책에 대한 악선전을 1) 외국 수출설

^{353) 〈}폭동사건과 그 대책. 기자단 러-취장관과 문답〉 《농민주보》 42호 1946년 10월 26일

^{354) 〈}양민을 선동하는 거즛선전의 내용을 백일청천하에 폭로〉 《농민주 보》46호 1946년 11월 23일; 〈조선은 식민지화 않는다. 하-지 중장의 성명서 요지〉 《주간신보》56호 1946년 11월 13일

^{355) 〈}미곡수집을 계속. 농민의 자발적협력 요망. 러-취장관 성명〉 《농민주보》 45호 1946년 11월 16일; 〈굶어죽는자를 내면 결국 전 동포의 수치〉 《농민주보》 47호 1946년 11월 30일

2) 미국인 소비설 3) 다량저장설 4) 중간판매설 5) 강제약탈설로 분 류하여 반박했다.³⁵⁶⁾

이와 같이 미군정은 경찰 문제와 식량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대중들이 악선전에 기만·선동되어 일어난 폭동·소요가 10월 항쟁의 본질이라고 홍보하는 한편, 대중을 선동한 자들은 남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1946년 10월 26일자 《농민주보》 42호 4면의 〈무정부주의자는 당신네를 선동한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하지의 성명서는 남한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규정했다.357)이 성명서는 10월 항쟁의 원인을 남한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 즉 북한의 선동과 연관 지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성을 띠었다. 남한의 현 상황을 식량 문제, 악질경찰 문제, 노동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전제하고, 외부에서들어온 악질 선동가의 선동에 기만당한 대중들이 소요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하지는 성명에서 남한 외부에서 온 자들의 선동이라는 증거가 있지만 이를 세세히 밝히지 않겠다며 증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당시 공보부 소속이었던 리차드 로빈슨은 훗날 파업 기간 중 체포된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남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356) 〈}폭동사건과 그 대책. 기자단 러-취 장관과 문답〉, 〈무정부주의자는 당신네를 선동한다〉 《농민주보》 42호 1946년 10월 26일; 〈동포의 기근을 방지하랴면 미곡수집대책의 절대로 필요. 러-취 장관 성명〉, 〈속히 폭동을 정지하고 새조선 건설에 매진하라. 하-지 중장 성명〉 《농민주보》 43호 1946년 11월 2일; 〈양민을 선동하는 거즛선전의 내용을 백일청천하에 폭로. 하-지 중장 성명〉 《농민주보》 46호 1946년 11월 23일; 〈속히 소요를 정지하라. 남조선 소요 사건에 하지 중장의 성명서 요지〉 《주간신보》 54호 1946년 10월 30일; 〈조선은 식민지화 않는다. 하-지 중장의 성명서 요지〉 《주간신보》 56호 1946년 11월 13일

^{357) 〈}무정부주의자는 당신네를 선동한다〉 《농민주보》 42호 1946년 10월 26일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사태를 북한의 선동가들이 조종했다는 하지 장군의 빈번한 비난은 근거가 없는 듯했다고 평가했다.³⁵⁸⁾

하지의 성명서들은 더 나아가 북한의 선동가들 뒤에는 소련이 있다고 암시했다. 1946년 11월 2일 《농민주보》 43호에 〈속히 폭동을 정지하고 새 조선 건설에 매진하라〉는 제목으로 실린 하지의 10월 23일자 성명서는 선동가들을 '조선국가의 역적'으로 규정하고,이들이 폭동수단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조선 대중을 자기네의 전제적 통치 하에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랴'는 최후의 목적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하여 설명했다.359) 11월 23일자 《농민주보》 46호 〈양민을 선동하는 거즛선전의 내용을 백일청천하에 폭로. 하-지 중장 성명〉는 이들의 목적이 '인심을 소동시키고 질서를 혼란케 하여 일반민중으로 하여금 미군정을 불신임케 한 다음에 자기네들의 정치적지배권을 잡으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360)

폭동의 최후 목적이 전제적 통치에 있다는 것은 이전의 성명서가 남한 외부의 사람들, 즉 북한에서 온 악질선동가들을 미군정 반대시위의 주범으로 본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뒤에 소련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들을 '조선국가의 역적'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다. 이를 보여주 듯,《대동신문》의 기자는 러취 군정장관과의 기자회견담에서, 하지의 성명이 사실이라면 하지가 소련에 항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361)

³⁵⁸⁾ 리차드 로빈슨, 1988 앞의 책, 150쪽

^{359) 〈}속히 폭동을 정지하고 새 조선 건설에 매진하라〉 《농민주보》 43호 1946년 11월 2일; 〈속히 소요를 정지하라. 남조선 소요 사건에 하-지 중장의 성명서 요지〉 《주간신보》 54호 1946년 10월 30일

^{360) 〈}양민을 선동하는 거즛선전의 내용을 백일청천하에 폭로. 하-지 중 장 성명〉 《농민주보》 46호 1946년 11월 23일; 〈조선은 식민지화 않는다. 하-지 중장의 성명서 요지〉 《주간신보》56호 1946년 11월 13일

^{361)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 – 1981)(Series: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요컨대 미군정 정책 전반에 대한 대중적 비판의 성격을 가졌던 10월 항쟁에 미군정이 홍보의 측면에서 대응한 방식은 역선전의 강화였다. 1946년 8월 말 미군정은 미군정 비판이 좌익의 선전 탓이라는 것을 반박하며 본격적으로 좌익에 대한 역선전을 시작했다. 친일 관료의 재등장, 토지개혁의 지연, 식량 정책의 실패 등 해방 직후 주요 과제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 실패는 여론의 악화를 가져오며 결국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폭동'과 '소요'의 배후에 전제정치를 하려는 북한으로부터의 선동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군정 반대여론 - 좌익(조선공산당) - 북한, 소련을 연결하고 시위의 본질을 정치투쟁으로 규정했다. 항쟁, 즉 폭동에 가담하는 자는 기만당한 선량한 대중 혹은 조선의 역적이 되었다. 이제 군정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식량을 더 얻고 싶고, 친일 잔재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어떤 정치체제, 즉 전제정치를 지지하는 가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역선전은 대한정책을 입안하는 워싱턴과 이를 집행하는 군정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일련의 개혁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으라는 국무부의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던 미군정은 미군정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위한 역선전에 체제대립을 이용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한국인의 지지를 확보하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대중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었다. 미군정의 10월 항쟁 해석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은 미군정과 여론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 사설은 소요 사건을 다만 선동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편협한 관찰은 일개 취체당국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일지는 몰라도 총괄자 또는 정치책임자가 가지기엔 부족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File:9 Press Conference-Korea) 〈Press Conference: 22 October 1946〉 1946.10.22. 3쪽

정치는 민정을 알아야 하고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민심과 민정(民情)을 파악하려면 냉정한 태도로 관찰하여 발견한 새로운 정치적 구상을 주저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군정이 사태의 본질을 관찰하고 이를 개선하여 민심을 잡을 것을 호소했다.362)

한편 이 시기 《농민주보》의 〈세계뉴스〉에는 소련이 전(全) 조선을 지배 하에 두려는 야심을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다. 소련이 전조선을 소련의 지배 하에 있는 허수아비 공화국인 외몽고와 같이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세력을 펼치려는 욕망에 성공한다면 유럽의 반분과 아시아의 전 대륙이 소련의 지배 하에 종속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363) 북한에서 소련 정책, 즉 민주개혁에 대한 좌익의 선전에 대응하듯, 이 시기 〈세계뉴스〉는 소련의 아시아지배 야욕에 관한 것이었고, 조선을 공산화하려 한다는 표현은 쓰지않았지만 소련이 전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심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소련에 대해 비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기존의 《농민주보》의 소련 비판 보도는 북한 지역에서 소련의 야심을 비판했지만, 미군정이 10월 항쟁이 소련과 북한에서 온 자들에 의해일어난 것이라고 홍보하는 시점에서는 공교롭게도 소련이 전 조선, 아시아에 야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1946년도 공보부의 미국의 대한정책 선전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충실히 홍보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다. 미군정은 국무부의 정책과 도 일정한 괴리를 보이면서, 남한을 통치하고, 남한 정세에 대응하 기 수월한 방향으로 대한정책을 변용 혹은 취사 선택하여 전달했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 홍보는 그 목적과 성격 면에서 사 실상 미군정의 남한 통치를 위한 홍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 군정의 미국의 대한정책 홍보의 성격은 1947년에 이르러 변화했다.

^{362) 〈}사설.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라〉 《조선일보》 1946년 10월 26일 363) 〈세계뉴스〉 《농민주보》 37호 1946년 9월 14일; 〈아세아 전대 륙을 농락햐랴는 소련〉 《농민주보》 39호 1946년 9월 28일

3. 국제 냉전의 시작과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선전

1) 1947년 초 미군정의 미소공위 재개 교섭 선전

1946년 하반기, 한국인들은 미소공위 속개를 정부수립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 미소공위 재개에 대한 여론이 무르익어갔고, 미군정은 미소공위 재개를 위해 북조선주둔 소련군 사령관과 물밑접촉을 실시했다.364)이 시기 미군정의 미소공위 홍보는 1차 미소공위 전후의 홍보와 큰 차이를 보였다.이를 살펴보기 위해 미군정의 미소공위 재개 노력에 대한 《농민주보》《주간신보》의 기사를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미군정의 미소공위 재개 노력에 관한 《농민주보》《주간신 보》기사 목록〉

| | 《농민주보》 | | 《주간신보》 |
|-----------------|---|-----------------|--|
| 1946년 | 〈미소회담에 새희망 | 1946년 | 〈조선을 전적국이란 부 |
| 11월 16일 | 재개교섭 순조 진행〉 | 11월 27일 | 당〉 |
| 1946년 | 관련 기사 없음 | 1947년 | 〈소련만 동의한다면 즉시 |
| 12월 28일 | | 1월 3일 | 라도 남북조선통일〉 |
| 1947년 1월 25일 | 《미소공동위원회 속개에 관한 양방의 의견 거진 접근》 《미국은 조선독립공약. 경솔한 시위행동은 조선 독립을 방해할 뿐》 | 1947년 1월 20일 | 〈미소공위 속개 교섭중! 국 제정세 재언명. 경거망동은 독립의 일대지장〉 |

³⁶⁴⁾ 정용욱, 2003 앞의 책, 360쪽

| 1947년 2월 15일 | 〈시국에 관하여〉 〈모스코 협정 이행에 관 한 방법 협의뿐〉 | 1947년 2월 14일 | 〈미신문인조선기자단과 회 견. 미국은 영토적 야심 호 무. 〉 |
|-----------------|--|-----------------|--|
| 1947년 2월 22일 | 〈연합국 노력에 협조하 면 조선독립 불원 실현〉 〈조선 독립달성의 길은 모스코 협정 이행 외에 없다〉 | 1947년 2월 21일 | (막부협정 이행에 진전. 뿌라운 소장의 연속성명 요지) 〈열망의 독립은 온다. 그릇된 기도는 정부수립을 천연.하지중장 성명서〉 |
| 1947년 3월 1일 | 〈모스코협정실천 제1계 단. 조선임시정부 수립〉 | 1947년 2월 28일 | 〈남조선 단정설은 오보〉 |
| 1947년 3월 8일 | 〈신탁의 뜻을 오해마라. 내용과 실천 방법은 아직 미정. 내용도 몰으는 반 대 운동은 무의미〉 | 1947년 3월 7일 | 관련 기사 없음 |
| 1947년 3월 15일 | 〈모스코협정은 변경할 수 없다. 무익한 소동보 다 진정한 건국사업에〉 | 1947년 3월 14일 | 관련 기사 없음 |

1946년 11월 7일, 공보부는 하지가 북조선주둔 소련사령관에게 보낸 8월 12일자 서신과 10월 26일에 수신한 소련군 답신에 대해 특별발표하며 미군정의 미소공위 재개 노력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1946년 11월 16일 《농민주보》 45호에 〈미소회담에 새희망 재 개교섭 순조 진행〉으로 실린 이 발표의 핵심은 소련이 의사 자유 의 발표권을 인정한다고 회신했다는 것, 모스크바 협정의 이행이나 공동위원회가 하는 일에 집단적 반대를 조장하거나 사주하는 개인 및 정당이나 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 하지가 동의했다는 것, 미국이나 소련 대표라도 모스크바 협정을 변경시킬 권력이 없다는 것, 신탁의 내용은 원조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아 무 것도 없으며 공동위원회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조선임시정부수립 이라는 것이다.³⁶⁵⁾

이 발표는 모스크바 협정이 변경 불가능하며, 미소공위의 과제가 조선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미군정은 1차 미소공위 전에는 조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탁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고 홍보했다. 그러나 2차 미소공위 재개를 추진하면서부터는 모스크 바 협정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것과 신탁통치의 내용은 원조라는 내용을 홍보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소공위를 통해 신탁통치를 철회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었다. 미군정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우선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최 선을 다하자는 것으로 홍보 논리를 전환했다.

미소공위를 통해 모스크바 협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미군정의 입장은 1947년 초, 우익이 반탁 시위를 계획하고 정부 수립을 기도하면서 재차 강조되었다. 1946년 12월 초 이승만은 도미에 앞서 김구와 향후 계획에 합의했다. 국내에서 김구가 반탁·반군정·반하지 운동의 일환으로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면, 미군정은 김구를 체포·투옥할 수박에 없을 것이며, 김구는 순교자로서 집중조명을 받으리라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하지가 공산주의자들을 감싸는 반면한국 애국자를 박해한다고 선전하여 하지의 해임을 요구하고, 즉각적인 한국 독립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호소하려 했다. 이 시위는 1947년 1월 18일, 19일, 20일로 예정되었으나 미군정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어 저지되었다. 한편 1월 20일에는 우익진영에 의해 입법의원에서 반탁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김구와 임정계열은 임정을조직적으로 보강하여 신정부수립을 선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월에는 신익희의 행정조직법 초안이, 3월에는 서상

^{365) 〈}미소회담에 새희망 재개교섭 순조 진행〉 《농민주보》 45호 1946년 11월 16일

일의 남조선과도약헌이라는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흐지부지 되는 등 입법기구를 통한 우익의 정부수립기도가 이어졌다. 이처럼 1947년 초 우익은 반탁운동과 입법의원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366)

미군정은 이러한 우익의 정부수립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통해 경고하는 한편, 이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이를 차단했다. 미군정은 엄정한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킬 교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만약 어느 정당 측에서 그릇된 시위계획을 경솔히 남행한다면, 조선은 자주독립을 완성시키기 위해 조직된 기관에 협력하지 않으므로,독립될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는 의심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무질서, 폭행, 악질선동 등 모든 불온한 행동은 자주 독립사업진행상에 극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느 단체들의 경솔한행동은 '결국 장래 국제회의에 조선의 전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367)

파업과 무질서, 시위가 조선의 독립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임을 잃어 조선 독립에 해가 될 것이라는 논리는 1차 미소공위 전반탁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미군정의 성명서와 같았다. 하지만 1차미소공위 전의 성명서들이 반탁운동이 결국 신탁통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조선독립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미군정의 성명서들은 반탁운동이 '장래 국제회

^{366) 1947}년 초 반탁운동의 정권 장악 목표는 정병준, 2005 《우남 이승 만 연구》 역사비평사, 633~634쪽; 정용욱, 2003 앞의 책, 320~348쪽 참고.

^{367) 〈}미소공동위원회 속개에 관한 양방의 의견 거진 접근〉, 〈미국은 조선독립공약. 경솔한 시위행동은 조선독립을 방해할 뿐〉 《농민주 보》 55호 1947년 1월 25일; 〈미소공위 속개 교섭중! 국제정세 재언 명. 경거망동은 독립의 일대지장〉 《주간신보》 65호 1947년 1월 20 일

의' 즉 미소공동위에 악영향을 끼쳐 국제적 협의 하의 조선임시정부수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두 시기의 성명서들의 목적은 크게 달랐다. 즉 1차 미소공위 전에는 '반탁'이 아니라 미군정을 향한 '시위'를 막는 것이 성명서의 목표였지만, 2차 미소공위 재개를 앞두고는 반탁노선이 미소협조 하 조선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미국의 대한정책과 배치된다고 천명했다.

미군정 반대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폈다는 점은 좌 익에 대한 미군정의 역선전과 같았지만, 좌익에 대해서는 물리적 탄 압을 가하고 '조선국가의 역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반면, 우익에 대해서는 경고성 성명의 발표로 그쳤다는 것은 큰 차이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좌익의 활동이 미군정 정책 비판과 연결되었지만 우익 의 활동은 자신들의 정권 장악만을 의도하는 것으로 여론에 큰 여 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정이 중간파 활용 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구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들을 활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하지는 2차 미소공위 개최 도중 우파의 동향에 대해 맥 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래에 필요해진다면 이승만의 영향력과 지지자들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승만을 비난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즉 1차 미소공위 전후의 반탁운동에서 미군정이 문제 삼았던 것이 무질서와 시위, 미 군정을 향한 적대였다면, 이 시점의 반탁운동에서 미군정이 문제 삼 았던 것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위배되는 반탁노선 그 자체와 우익의 정부수립 기도였다.368)

^{368)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1947년 6월 2일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The Far East, Volume VI》 661~662쪽.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FRUS에서 원문 및 국역문 참고. (이하 《FRUS, 1947》, 원문 URL 표기.)

미군정은 국무부 차원에서 우익의 반탁 노선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했다. 하지의 정치고문 랭던은 이승만과 우익의 반탁운동 계획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하는 전문에서, 전술한 하지의 성명을 언급하고, 국무차관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반탁운동에 관해 논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동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국제적인 기획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기회에 악영향만 끼칠 것임을 지적해달라는 것이었다.369) 미군정의 요청으로 국무부는 1947년 1월 23일 '하지 장군이 그의 성명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인 반체제 집단의 활동은 그들의 조국을 위하여 통일되고 독립된 정부를 얻고자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을 뿐임을 미국 정부가 유념하고 있다'는 국무장관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경무부장 조병옥은 어떠한 단체나 선전이든지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할 때에는 경찰이 전 기능을 다하여 진압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370) 이 담화문은 반탁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1차 미소공위와도 차이가 있지만, 통일된 조선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해 정부가 '세계정세와 국내사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마련한 정책을 조선인이 이해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즉 반탁시위가 국제정세 하에 마련된 미국의 대한정책을 거스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대한정책과 이에 따른 미군정의 시책을 따를 것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의 성명, 국무부의 성명. 경무부장의 담화 등 반탁운동에 대한 미군정의 일련의 대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3_001 0_0450&types=0

^{369)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7년 1월 17일 《FRUS, 1947》, 598~600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3_001 0_0020&types=0

^{370) 〈}시국에 관하여〉 《농민주보》 58호 1947년 2월 15일

응 방식은 1차 미소공위 때와 달리 미군정이 진지하게 반탁노선 자체를 미소공위 성공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익이 반탁을 주장하고 미군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권 장악을 시도하자, 미소공위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과 미소공위 미국 측 대표단 산하의 정치고문단은 남한정치에 적용할 행동지침으로〈정치발전계획〉을 제출했고, 하지는 1947년 2월 10일 이를 승인했다. 〈정치발전계획〉은 미군정이 입법의원과 중간파를 적극 활용하여과도정부 수립계획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었다. 하지는 입법의원의 주도권을 우익이 갖도록 지지했지만, 그시점에서 우익이 단독정부를 수립하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때문에 이 계획을 승인했다. 〈정치발전계획〉은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371〉남한에 대의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노력을계속해야한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사항을 권고했는데, 그중 6번째, 7번째는 공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372〉이 중 6번째 항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3_001

^{371) 〈}정치발전계획〉이 입안된 배경과 목표에 대해서는 정용욱, 2003 앞의 책, 322~323쪽

³⁷²⁾ 여섯 번째 항목은 한국인들이 모스크바 합의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계몽 캠페인이 즉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항목은 정치적 목표의 진척을 위하여 기관차, 비료, 식량 등과 같은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더욱 광범위하게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 6항의 원문은 이하와 같다. 6. That a vigorous educational campaign be instituted at once to inculcate among Koreans more realistic consideration and acceptance of the Moscow Agreement. (강조는 필자) 이 문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미덕, 가치관 등을 끈기 있게 타일러 주입, 배양한다는 의미의 동사 'inculcate'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6항은 교육캠페인을 요청하였지만, 사실상 이때의 교육은 공보를 통해 모스크바 협정의 이해와 지지를 불러일으킨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7년 2월 20일 《FRUS, 1947》 607~608쪽

목은 한국인이 모스크바 협정을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 이도록 강력한 교육캠페인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발전계획〉의 제안에 따라 미군정은 모스크바 3상회담 결의를 대중에게 이해시키 위한 성명서들을 준비했다. 1947년 2월 하지가 발표한 성명서들은 신탁통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강조했다. 하지는 '조선인 대표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때에 모스코-협정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저러한 생각은 전혀 그릇된 생각이다'라며 신탁통치안이 철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스크바 협정 수정 불가, '조선문제의 국제성'이라는용어로 전달했다. 또한 '신탁통치'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정치,경제, 사회적 향상을 위한 원조의 구체안을 작성할 때 조선임시정부와 조선 단체들이 협의할 것임을, 그리고 이것이 조선의 독립에 대한 보호와 보증임을 설명함으로써 본래 모스크바 3상 협정이전제하고 있는 최장 5년의 신탁통치와 조선임시정부 수립의 과정을충실히 전달했다. 373) 하지의 성명들은 모스크바 결정은 일언반구도수정이 불가능하며, 연합국의 노력에 협조하는 길만이 조선 독립의길임을 강조했다.

하지의 성명에서 더 나아가 미국 측 미소공위 수석대표 브라운 소장은 5차례 성명서를 발표하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홍보했다.374) 1947년 2월 15일자 《농민주보》 58호에는 1차 성명서와 2차 성명서를 실었다. 1차 성명서는

⁰_0090&types=0

^{373) 〈}모스코협정 이행에 관한 방법 협의뿐〉 《농민주보》 58호 1947 년 2월 15일; 〈연합국 노력에 협조하면 조선독립 불원 실현〉 《농민 주보》 59호 1947년 2월 22일; 〈열망의 독립은 온다. 그릇된 기도는 정부수립을 천연. 하지중장 성명서〉 《주간신보》 70호 1947년 2월 21일

^{374) 〈}조선 독립달성의 길은 모스코 협정 이행 외에 없다〉 《농민주 보》 59호 1947년 2월 22일

모스크바 협정의 취지, 2차 성명서는 모스크바 협정의 규정에 관해설명했다. 1차 미소공위 전후 하지의 〈오해하지 마라〉 성명에서지칭하는 '오해'가 조선인의 의사를 무시한 신탁통치, 혹은 조선에꼭 신탁통치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던 반면, 브라운의 성명서에서 지칭하는 한국인의 '오해'는 신탁통치가 철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내내 미소공위 휴회의 근본원인은 소련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전되었지만, 브라운의 성명서는 반탁운동을 1차 미소공위 휴회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했다.

브라운의 3차 성명은 1947년 3월 1일 《농민주보》 60호에, 4차 서명은 1947년 3월 8일 《농민주보》 61호에, 5차 성명은 1947년 3월 15일 《농민주보》 62호 2면에 게재되었다. 375) 앞선 1차, 2차 성명서가 모스크바 협정서의 규정에 기초한 그간의 성명서와 대동소이했다면, 3,4,5차 성명서는 모스크바 협정의 취지와 단계를 포괄적이면서도 쉽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특히 3차 성명서는 공동성명 5호에 서명한 단체들이 어떻게 협정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수립의 어떤 측면을 논의하게 되는지, 토의의 범위를 넘어선 성질의 문제를 제출하기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소·영·중의 합의에 의해 조선임시정부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등 미소공위의 과제와 실질적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최초의 설명이었다.

또한 4차 성명서는 신탁통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유일한 성명이었다. 성명서는 '자기나라에 육해군의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375) 〈}모스코협정실천 제1계단. 조선임시정부 수립〉 《농민주보》 60호 1947년 3월 1일; 〈신탁의 뜻을 오해마라. 내용과 실천 방법은 아직 미정. 내용도 몰으는 반대 운동은 무의미〉 《농민주보》 61호 1947년 3월 8일; 〈모스코협정은 변경할 수 없다. 무익한 소동보다 진정한 건국사업에〉 《농민주보》 62호 1947년 3월 15일

힘을 빌려야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약소국가들을 보호하여 줄 '국제연합기구의 실력이 강해지기 전까지' 조선의 안전 및 완전독립을 일정한 기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신탁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국제적 평화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신탁은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기 전에 '보호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용한 '보호'와는 그 뜻이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이렇듯 신탁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의구심을 잘 표현한 언어로 신탁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편 5차 성명서는 앞서 4차례에 걸친성명을 요약하고 조선 문제의 국제적 성질을 당부하는 하지의 말을 재인용하며 끝맺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관한 브라운의 성명은 이제껏 주로 남한 정세 대응 차원에서 그때그때 언급되어 온 조선임시정부 수립 문제와 신탁통치 문제를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성명서들은 사실상 1차 미소공위 전, 또는 1945년 12월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 보도가 있기 전에 조선인이 알아야했을 모스크바 3상 협정의 취지, 신탁통치라는 개념이 도입된배경 및 목적, 협상에 참여할 조선인 단체들이 토의 가능한 범위와한계, 정부수립의 과정, 조선인의 역할, 신탁통치와 조선 독립의 관계 등 연합국의 협조 하에 조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했다.

《농민주보》가 브라운의 성명서들을 다수의 기사들로 보도한 반면, 《주간신보》는 브라운의 성명서들의 요지를 1947년 2월 21일자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한편 당시 조선을 방문 중이던 미국인 신문편집자 및 발행인 9명이 조선인 신문기자단과 만나 발언한 내용을 2월 14일자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미국인 신문편집자들은 미국인은 조선의 조속한 독립을 바란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영토적야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여론은 시위행열에 동요되지 않

기 때문에 시위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얻게 된다며 한국인은 하지 중장, 러취 중장, 브라운 중장에게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376) 이는 사실상 미국인 신문편집인들의 입을 통해 미소공위 재개 교섭 이래의 미군정의 홍보 논리를 반복한 것이었다.

요컨대 미군정이 중간파를 지원하여 미소공위에 대비한다는 기존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 시기 미군정의 미국의 대한정책 홍보는 우익의 반탁운동과 정부수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모스크바 결정을 대중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켜 제 2차 미소공위에 대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국제협조 하 미소공위를 통한 조선임시정부수립 노선을 강조하는 공보방침은 국제 냉전이 고조되며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성명들을 발표하면서 다시 변화했다.

2) 국제 냉전의 시작과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선전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상하 의원에서 의회가지중해 지구에서 공산주의 사상 침투에 방어적 역할을 하는 그리스,터키 양국에 4억 달러의 차관을 부여할 것과 미국이 양국에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른바'트루먼 독트린'이다. 이 연설은 1947년 2월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관의 공사 고문 조지 케넌이 국무부에 타전한 '장문의 전보'의 주장,즉 소련과의 협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미국은 소련과의 상호 적대적이고 상호 불신의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본격적인 냉전의 개시를 상징했다.377)

^{376) 〈}미신문인조선기자단과 회견. 미국은 영토적 야심 호무(毫無)〉 《주간신보》 69호 1947년 2월 14일; 〈막부협정 이행에 진전. 뿌라운 소장의 연속성명 요지〉 《주간신보》 70호 1947년 2월 21일 377) 서중석, 2004 앞의 책, 514쪽

국제 냉전의 고조와 함께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소련에 대한 일련의 비난에 한국 문제를 추가했고, 한국 문제는 냉전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378) 트루먼 독트린 이전 시기까지 미군정의미국 대한정책 홍보가 한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신탁통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의 입을 통해 미소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한국 문제의 성격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농민주보》와 《주간신보》에 실린 미국의 대한정책 및 소련 관련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표 7.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소공위 관련 《농민주보》《주간신보》기사 목록 (1947년 3월~1947년 5월)〉

| 《농민주보》 | | 《주간신보》 | |
|-----------------|--|--------------------------|--|
| 1947년 3월 22일 | 〈동아의 평화는 조선독립에 있다〉 | 1947년 3월 14일 | 〈자주독립조선을 건설. 힐드링 국무장관보 연 설〉 |
| 1947년 3월 29일 | 〈소련대독배상백억"불"요구〉 | 1947년 3월 21일 | 관련 기사 없음 |
| 1947년 4월 5일 | 《인권은 신성불가침 뺏을수도 뺏길수도 없는 권리-민주주의 의 정의》 〈『마샬』씨의 민주주의 정의 는 『노서아』에 대한 엄정한 해석〉 | 1947년 3월 28일 4월 4일 | 미확보 |
| 1947년 4월 12일 | 〈자유 원하는 국가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역설〉 〈조선에 대한 재정원조 역설〉 | 1947년 4월 11일 (최종호) | 〈남조선 단정 부인. 민 주주의 발달을 위함. 조선 을 조선인에 돌려줄 뿐〉 |

³⁷⁸⁾ 브루스 커밍스, 1986 앞의 책, 296쪽

| | 〈독일문제 해결책 중대난관에 | |
|-----------------|-------------------|--|
| | 봉착〉 | |
| | 〈단독정부 수립설은 오보〉 | |
| | | |
| 1947년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요청. 늦 | |
| 4월 26일 | 이면 미국은 단독 조치〉 | |
| | | |
| 1947년 5월 17일 | 〈미소공위개최전에 자유의사 | |
| | 발표권을 다짐〉 | |
| | 〈정치 경제 각 방면에 건전한 | |
| | 발전향상〉 | |
| | 〈소련의 대중정책 중국의 우 | |
| | 려를 증대(남경)〉 | |
| | 〈4상회의 실패 경과. 마샬장관 | |
| | 고문발표(뉴욕)〉 | |
| | 〈공산주의자 숙청을 역설. 트 | |
| | 루만 대통령 (와싱톤)〉 | |

1947년 3월 14일 《주간신보》73호와 1947년 3월 22일 《농민주보》 63호의 헤드라인은 1947년 3월 10일에 미 국무차관보 힐드링이 디트로이트 경제구락부에서 한 연설로, 연설문의 핵심은 조선을 '참다운 민주주의적'독립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379) 그간의 보도는 조선임시정부 수립 절차와 신탁통치 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앞으로 수립될 정부의 성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힐드링은 조선의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수립 여부에 따라 동아시아에 평화가 올지, 아니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지 결정된다고 조선 정부 수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미소공

^{379) 〈}동아의 평화는 조선독립에 있다〉 《농민주보》 63호 1947년 3월 22일; 〈자주독립조선을 건설.

힐드링 국무장관보 연설〉 《주간신보》 73호 1947년 3월 14일

위 실패로 미국은 현재 지대에서 '단독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공약을 배반할 생각이 없으며 모스크바협정 실천에 관해 최후까지 소련과 협력할 의사와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힐드링이 언급한 '참다운 민주주의'의 의미는 미국식 민주주의로, 마샬 미 국무장관이 당시 개최 중이던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규정했다. 1947년 4월 5일 《농민주보》 65호 헤드라인으로 게재된 마샬의 발언은, 자기의 신념과 자유를 발표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며 연고 없이 취업권을 거부당하거나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박탈당하는 공포증에서 생활하는 사회는 자유사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380) 이 기사 하단에는 미국신문들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마샬의 정의가 탁월하다고 평가했고, 자유는 소련 민주주의의 선물이 아니며 소련 정부는 인민을위한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관료정치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381)

즉, 트루먼 독트린 이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의 성명서들이 헤드라인으로 게재되었고, 이 때 강조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핵심은 조선에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반대 항은 소련식 민주주의 정부로 설정되었다.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었을 때,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한 미군정의 설명은 의사발표의 자유의 문제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국제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자유가 생명,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포괄적인의미로 해석되는 한편 미국식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부와 소련식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된

^{380) 〈}인권은 신성불가침 뺏을수도 뺏길수도 없는 권리-민주주의의 정의〉 《농민주보》 65호 1947년 4월 5일

^{381) 〈『}마샬』씨의 민주주의 정의는 『노서아』에 대한 엄정한 해석〉 《농민주보》 65호 1947년 4월 5일

것이다. 또한 조선에 민주주의적 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전 세계 민 주주의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위성턴발 성명들은 본격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를 대비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타국의 경제에 대한 미소의 입장을 대비시켰다. 1947년 4월 12일 《농민주보》 66호는 〈자유 원하는 국가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미 해군장관 포레스탈의 연설을 헤드라인으로 게재했다. 382) 이 기사는 미해군장관 포레스탈이 자유 제도를 유지하려는 모든 국가를 위하여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 원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보도했다. 또한 만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전체주의 국가군의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서반구는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기가곤란하게 될 것이며, 트루먼 대통령의 그리스와 터키 원조계획은 결국 국제연합의 실력에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자유 제도, 즉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은 미소의 대립이 새로운 단계에 도립했음을 암시했다.

또한 포레스탈의 연설은 국제연합의 실력에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 흥미롭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 시기 브라운 소장의 모스크바 협정에 관한 4차 성명서는 국제연합 실력에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선에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정 선전에 나타난 조선에 있어서의 신탁통치의 역할을 이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가 대신하고 있었다.

한편 미소공위 재개 협상이 시작된 이후 중단되었던 《농민주보》 의 소련 관련 기사들은 이 시기에 다시 실리기 시작했는데, 공교롭

^{382) 〈}자유 원하는 국가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역설〉 《농민주 보》 66호 1947년 4월 12일

게도 소련의 독일에 대한 경제적 야심을 보도했다.383)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소식을 전하면서 소련이 독일을 이용하여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영 측과 격렬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소련이 독일로부터 배상받기 전에 먼저 독일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확보하여준다면 타협할 호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힐드링의 연설을 제외한 국무부의 성명들이 국제 냉전 하 미국의 대외정책을 천명했다면, 미 국무장관 대리 애치슨이 미국 국회에서한 연설은 국제 냉전 하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국의 대한정책의 접점을 암시했다. 1947년 4월 12일《농민주보》는 애치슨의 연설을 축약해서 〈조선에 대한 재정원조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384) 앞서 힐드링이 말한 미국이 남한에서 취할 단독적 행동의 핵심은 바로 이 재정원조였다. 이 기사는 소련이 조선공산당을 통해자신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고, 천연자원의 대부분이 있는 북한에 진주한 소련 때문에 남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조선에 재정원조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애치슨의 연설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남한, 즉 미국식 민주주의 진영에 재정 원조를 하겠다고 한 점에서 자유세계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통해 전체주의의 지배를 막겠다는 포레스탈의 연설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남한에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소련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그간 소련에 대한 비판은 독재, 전체주의 등 정치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졌는데, 이제 조

^{383) 〈}소련대독배상 백억"불"요구〉 《농민주보》 64호 1947년 3월 29 일; 〈독일문제 해결책 중대난관에 봉착〉 《농민주보》 66호 1947년 4월 12일

^{384) 〈}조선에 대한 재정원조 역설〉 《농민주보》 66호 1947년 4월 12 일

선의 경제적 곤란의 책임이 소련에 있다고 함으로써 소련 비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그에 대한 미국의 원조라는 미국의 냉전 정책은 점차 조선 에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와 맞닿아가고 있었다.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국무부의 태도에도 대소 강경 노선이 드러 났다. 국무장관 마샬이 미소공위 재개를 위해 소련외상 몰로토프에게 보낸 서한들은 모두 소련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미국식 민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신탁통치 반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단체 및 정당, 즉 반탁을 지지하는 단체 및 정당들도 미소공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협정에 규정된 문구에 대한 쌍방의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미국 측은 오는 회담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385)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전세계적 차원의 냉전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대한정책은 미소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견지했다. 즉 한반도 문제는 국제 냉전의 고조 속에서 미소협조를 요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국무차관 애치슨은 마샬의 강경한 언사가 미소협상을 망칠까 우려하며, 마샬이 위의 서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의견발표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측은 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단독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단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아직 미소공위를 통해 한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을 폐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문구가 미국이 모스크바협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줄까봐 우려했던 것이다.386) 그러나 마샬은 문구 수정 없이 서한을 발표했고, 국

^{385)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요청. 늦이면 미국은 단독 조치〉 《농민주 보》 68호 1947년 4월 26일; 〈미소공위개최전에 자유의사 발표권을 다짐〉 《농민주보》 70호 1947년 5월 17일

³⁸⁶⁾ 애치슨은 마지막 문단에 대해 모스크바 협정을 재고할 가능성을 여

무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애치슨의 우려대로 미국의 대한정책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아닌가 하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낳았다.

한국 언론은 미국의 대조선 경제안을 대소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외신들을 소개했다. 이들 중에는 미국이 소련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단독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혹자는 이를 남한단정수립의 의미로 본다는 내용도 있었다.387) 당시 미국에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이승만은 이러한 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미국의 조선에 대한 재정지원안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조만간 남조선임시독립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388)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의혹은 1947년 3월 27일 러취 군정장관이 기자 회견석상에서 남조선만이라도 어떠한 정부를 수립하여 조선사정을 유엔에 상정하고 남북을 통일해야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증폭되었다. 결국 러취는 3월 29일 기자단회견 석상에서의 언명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우리의 목적은 남북조선을 통일국가로 만드는 것이며 소련과의 협정 효력은 아직도 유효하고, 요컨대 모스크바 협정의

는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독적 행동에 대한 경고가 오히려 미국 측이 공약을 회피 및 지연시키거나 황당한 반대 제안을 한다는 비난의 여지를 소련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한국 내에 거짓 희망이나 혼란스러운 추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1947년 4월 2일 《FRUS, 1947》, 623~625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3_001 0_0160&types=0

^{;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Secretary of State, at Moscow〉 1947년 4월 5일 《FRUS 1947》, 628~630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3_001 0_0180&types=0

^{387) 〈}南朝鮮에 單獨政府設. 美國務長官補演說로 表面化 推測〉 《자유신 문》 1947년 3월 18일

^{388) 〈}數個月以內 臨政樹立 李博士 華府서 言明〉 《동아일보》 1947년 3월 24일

포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해명성명을 발표했다.389) 미 본국으로부터의 성명 및 각종 외신보도로 증폭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의구심은 조선 통일정부 수립 문제가 국제 냉전의 논리 속으로 잠식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한국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2차 미소공위를 전후하여 《농민주 보》는 사설과 기사를 통해 민주주의 정부란 어떠한 것인지를 홍보 하기 시작했다. 1947년 5월 31일자 《농민주보》 72호는 5월 21일 개막된 제 2차 미소공위 개막식 소식을 1면 헤드라인으로 게재하는 한편, 2면에 〈민주주의는 새조선을 건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 었다.390) 이 기사는 '민주주의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부제로, 민주주 의가 자유, 선거, 교육, 노동권 등의 9가지 항목을 보장한다고 설명 하고, 민주주의는 정직한 시민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며, 테러나 비밀경찰로써 인민을 위협하지 않으며, 그 정부가 독재적일 수 없으 며, 인민의 사상을 전제하며 징벌하지 않는 것이며, 남녀노소 빈천 을 물론하고 모든 그들의 근본권리를 보호하며 존경해주는 것이라 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소련 사회와 대비시켜 규 정했다.

다음 호인 1947년 6월 7일자 《농민주보》 73호는 〈분열과 민주주의〉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로버트 매키버 (Robert.M.MacIver) 논설의 요지를 전달하였다.³⁹¹⁾ 이 사설의 초점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정의였다. 어떤 나라나 전제주의나 독재주의

³⁸⁹⁾ 러취 군정장관의 이 해명성명은 《농민주보》 66호에 〈단독정부 수립설은 오보〉라는 기사로 게재되었다.

^{390) 〈}민주주의는 새조선을 건설〉 《농민주보》 72호 1947년 5월 31일 391) 로버트 매키버(Robert.M.MacIver), 영국 출신의 미국 사회학자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

다.〈분렬과 민주주의〉 《농민주보》 73호 1947년 6월 7일.

라는 말은 싫어하고 민주주의라는 말은 좋아하므로 자신의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닐지라도 이를 꾸며 더욱 발전된 새로운 민주주의라고까지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은 항상 정치적 자유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두 가지 민주주의의 성격 혹은 특징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인민이 자유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러한 민주주의가 아닌 형태의 다른 민주주의는 분열을 일으키는 세계의 화근이라고 평가하면서, 타국의 일을 교접하는 당사국은 전 인류의 공통된 이익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그 통일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분열시키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경고했다.

이상의 기사들은 마샬의 민주주의 정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민주주의의 성격을 소련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면서도, 선거, 교육, 노동권 보장 등의 범위로 민주주의 성격을 비교하는 범주가 확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등장했다는 점은 이전과 달랐다.

특히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이 강조된 것은 2차 미소공위를 앞두고 미국이 선거를 통해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구상을 세웠기때문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인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건의를 참고하여 조선임시정부의 형태와 조직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지만,392) 남한과 북한의 인구비가 2:1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선거를 통해 조선임시정부 수립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393) 하지는 이즈음 영남과 호남 지방을 시찰한 결과조선 사람들이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392) 〈}모스코협정실천 제 一계단. 조선임시정부 수립. 부라운 소장 발표〉 《농민주보》 60호 1947년 3월 1일

^{393) 2}차 미소공위시 미국의 선거를 통한 임시정부수립에 대해서는 정용 욱, 2003 앞의 책, 384~393쪽

입법의원에서 보통선거법을 작성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는 1947년 5월 17일자 《농민주보》70호에 보도되었다. 394) 이처럼 미군정의 민주주의 홍보는 1차 미소공위 직후 의사발표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에서 1946년 말 입법의원 설치 전후 입법기구의 수립과 삼권분립으로 그 초점이 이동했고, 2차 미소공위 전후에는 보통선거를통한 정부 수립으로 변화했다. 395)

한편 새조선의 지향점이 민주주의로 설정되면서 미군정은 남한의 여러 사회문제들이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해결되었다고 홍보했다. 1947년 6월 미군정 시책들은 비민주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민주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홍보되었다. 경찰은 민주주의 경찰로 재조직되었다고 선포되었다. 1947년 6월 《농민주보》 73호에 게재된〈비민주주의적 경찰관을 숙청〉 기사는 조미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비민주주의적 경찰관 숙청안에 의해 1946년 12월 1일 이래 비민주주의적 경찰간부 560명을 파면했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적 방법을 체득하여 실천하지 않는 경찰관은 파면시킬 것이라는 경무부장의 발표를 전했다.396) 군정 당국은 비민주주의적 경찰 간부를 숙

^{394) 〈}정치 경제 각 방면에 건전한 발전향상〉 《농민주보》 70호 1947 년 5월 17일

^{395) 〈}민주주의의 기초〉 《농민주보》 62호 1947년 3월 15일; 〈민주주의와 입법〉 《농민주보》 41호 1946년 10월 19일. 41호의 1면 헤드라인은 〈좌우합작안에 찬성. 입법기관은 민중의 대표기관〉이라는하지의 성명이었다. 한편 입법의원 설치가 홍보될 때 자유선거와 소련에 대한 기사가 《농민주보》에 등장했다.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사회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며 독일이 소련주의에 가담하느냐 서구민주주의에 가담하느냐가 명백히 판시되었다고 평가하는 기사가 《농민주보》 43호에 게재되었고, 같은 호에 불가리아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라는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의 요구를 소련 측이 거절했다는 미 국무부발표가 보도되었다. 〈독일 국회의원 선거 사회민주당의 대승리〉,〈"불가리아"의 자유선거거절〉 《농민주보》 43호 1946년 11월 2일

^{396) 〈}비민주주의적 경찰관을 숙청〉 《농민주보》 73호, 1947년 6월 7 일

청했다고 선포했지만, 이는 조미공동회담에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건의한 숙청안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무엇보다 좌우합작위원회는 경찰 수뇌부, 즉 경무부장 조병옥과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하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오히려 경찰은 1946년 12월 8일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하여,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친일경찰 청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던 전직 경찰 최능진 계열의 간부 및 반친일경찰 세력을 제거했다. 이로써 10월 항쟁에서 제기된 친일경찰 청산 요구는 반친일파계 경찰의 대량 해임과 인사조치로 귀결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397) 한편 노동부장은 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노동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노력 중이라고 홍보한 노동조합의 건실한 발전의 실제 내용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불법화하는 것이었다. 398)

이와 같이 트루먼 독트린 이후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은 조선임시정부가 취해야 할 성격으로써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농민주보》는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으로 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을 강조했고, 미군정의 친일경찰 개혁 반대와 노동조합 정책을 민주주의의 발전으로선전했다. 반면 남경발 소식이라는 기사는 소련이 여순항과 대련항에 중국 공산당을 침입시키고 있으며, 소련의 훈련을 받은 북조선인공산당원이 침입해 중국공산당을 원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제공산당 안에 북조선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시사했고, 이는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군정 하의 남한과 대비되었다.399)

흥미로운 것은 미소공위 시작 직전 소련 비판 보도가 증가했다는

³⁹⁷⁾ 강혜경, 2002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5-1953년)》숙명여자대 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61~63쪽

^{398) 〈}전국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 《농민주보》 75호 1947년 6월 21일

^{399) 〈}소련의 대중정책 중국의 우려를 증대(남경)〉 《농민주보》 70호, 1947년 5월 17일

것이다. 모스크바 4상회의 실패의 전 책임은 소련에 있으며, 소련이 독일이 전체주의를 다시 채택하게 하는 위험한 동기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은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회담은 실패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는다고 끝맺었다. 이 기사의 측면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정부 내의 공산주의자를 숙청하고 러시아인의 그리스·터키 입국을 금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거액을 소비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400) 즉, 미소공위가 개최되기 직전 《농민주보》는 미국과 소련의 국제노선을 명확히 대비시키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민주주의와인권 존중으로 명시했다.

요컨대 해방 직후부터 1946년 하반기까지 미군정은 미 국무부 정책과도 괴리를 보이며 점령통치를 위한 선전에 집중했다. 현지 여론에 민감했던 미군정은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국내에전달 또는 전파되는 과정에 개입했다. 또한 공보부의 주간신문을 통해 미군정도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탁통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홍보하는 등,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이 소식이 미군정의 입지와 정치구상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였다.

또한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1946년 6월 미국은 중간파의 활용과 남한 사회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정책을 수립하고 미군정에게 이를 실행 및 홍보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에 대해 미군정은 회의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이는 공보부의 주간신문들의 논리에 반영되었다. 또한 미군정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친일과·민족반역자를 제외해야 하며 남한 사회개혁과 민생 개혁을 위해기능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좌우합작에 대한

^{400) 〈4}상회의 실패 경과. 마샬장관 고문발표(뉴욕)〉, 〈공산주의자 숙 청을 역설. 트루만 대통령 (와싱톤)〉《농민주보》 70호, 1947년 5월 17일

미군정의 당위적인 지지와 민주주의에서 입법기구의 창설이 갖는 의미를 주로 선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군정은 좌익에 대한 역선전을 강화했다. 국무부가 제시한 개혁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던 미군정에게 여론은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 미군정을 방해하려는 좌익의 선전과 이에 대항하는 미군정 사이의 투쟁의 장이 되었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말부터 좌익에 대한역선전을 본격화했고, 10월 항쟁 전후 미군정을 비판하는 여론을 좌익, 북한, 소련과 연결시키거나 그 선동에 기만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 틀을 형성했다.

역선전은 대한정책을 입안하는 워싱턴과 이를 집행하는 군정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일련의 개혁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으라는 국무부의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던 미군정은 미군정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방식에 치중했다. 그리고 군정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위한 역선전에 체제대립을 이용하였다.

미국의 대한정책이 미군정에 의해 변용되어 전달되는 양상은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트루먼 독트린 으로 냉전이 본격화한 이후 한국문제에 관한 워싱턴 정책 입안자들의 성명서와 연설문들이 공보부의 주간신문에 연일 게재되었다. 워싱턴발 성명서와 연설문들은 조선에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미국이 재정 원조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때 미국식 민주주의의 의미는 소련 민주주의와의 대비를 통해 설명되었는데, 양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자유와 선거였다. 또한 미국 과 소련의 대비는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 경제적인 영역으로도 확장 되어, 미국은 타국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경제 원조를 실시하 는 반면 소련은 경제적 야심을 위해 타국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워싱턴이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강조함에 따라 제2차 미소공위 재개를 앞두고 미군정은 남한에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반면 국제공산당 안에 북조선이 포함된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미군정 하 남한과 소군정 하 북한을 대비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은 미소 협조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소 대립 홍보의 강조점은 미소의 대립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수립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데 있었다. 즉, 조선 정부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탁통치의 실시 유무나 미소공위 참가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식민주주의 정부인가의 여부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선전 논리였다. 하지만 제2차 미소공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이 한국문제를 단독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이를 설득시킬 새로운 공보 정책과 기구, 선전 매체가 요구되었다.

三.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선전 담론

1. 제2차 미소공위 결렬 전후 민주주의와 반공주의 선전

1) 제2차 미소공위 결렬 전후 미국의 남한 경제원조 선전

1947년 5월 개최된 제 2차 미소공위는 개막 2개월 만에 교착상 태에 빠졌다. 한국인 협상단체를 둘러싼 미소의 대립은 제1차 미소 공위 때와 마찬가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947년 7월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책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현 지에서는 미소공위를 지속했다.401)

미국의 대한정책이 미소협조 폐기노선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계신보》는 미국의 남한 경제원조 계획을 강조했다.402) 1947년 7월에 발행된 《세계신보》 6호는 마샬 플랜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이와 함께 러취 군정장관이 미국으로 귀국하여 조선 경제 원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기사 두 건을 게재했다.403) 본래 마샬 플랜

⁴⁰¹⁾ 정용욱, 2003 앞의 책, 404~410쪽

^{402) 〈}미소공동위원회의 의견대립점〉 《세계신보》 7호 1947년 7월; 〈미소공동위원회 계속 토의중〉 《세계신보》 9호 1947년 7월; 〈미 국측입장을 브라운 소장이 입법의원에 설명〉 《세계신보》 9호 1947 년 7월;〈공위협의 희망자 광범위 참석요구. 「쁘라운」소장 「슈」성명 을 반박〉 《세계신보》 13호 1947년 8월 말 또는 9월 초

⁴⁰³⁾ 미소공위 실패의 책임과 관련하여, 미소의 의견대립점이 반탁운동자에 관한 것이며 이는 자유의사표현의 문제라는 해석은 1차 미소공위 때와 같았다. 〈세계경제 부흥을 위하야 미국이 제안〉 《세계신보》 6호 1947년 7월; 〈러취장관 조선에 필요한 것을 미국에 언명〉 《세계신보》 6호 1947년 7월; 〈조선원조에 대한 군정장관 대리 발표〉 《세계신보》 6호 1947년 7월

(Marshall Plan)은 1947년 6월 미 국무장관 마샬이 제창한 유럽부흥계획으로, 이는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의 기조를 2차대전 전후 긴급 구호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원조로 전환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외원조정책을 자리매김하였다.404) 《세계신보》는 마샬 플랜을 기아, 빈곤, 황폐, 혼란에 대해 원조하고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소개하고, 조선의경제회복에는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며, 미국은 조선을 형제를 원조하는 것과 같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세계신보》는 마샬 플랜과 미국의 조선 경제원조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미국 대한정책의 변화가 분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경제 부흥을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남한 경제부흥을 연결시키는 관점은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방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8~9월 웨드마이어 (Albert.C.Wedemeyer) 장군을 중국과 남한에 특사로 파견했다. 웨드마이어는 중국에서는 국민당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미국의 원조를 통해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남한에서는 단정안이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점령 정책을 평가하며, 미군정 관리들과 한국인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한국 언론은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방한이미국 점령지대에 대한 일방적 계획이 필요한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절단의 정치적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였다.405)

한국 신문들은 각자의 정치 구상에 따라 사절단의 방문과 미국의

⁴⁰⁴⁾ 미국의 대외원조정책과 봉쇄정책에 대해서는 이동원, 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2~23쪽.

⁴⁰⁵⁾ 정용욱, 2015 〈1947년 웨드마이어 특사의 방한, 단정안 현실화의 획기〉 《역사비평》 2015년도 8월호 역사비평사, 74~75쪽

대한정책 변화를 해석·전달했다. 먼저 중도 및 진보적 신문들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절단의 역할이 38선 철폐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일보》는 38선으로 인해 조선의 정신은 병상이 되었고 육체의 지옥이 되었으므로, 38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원조라도 결국 그물에 걸린 고기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웨드마이어 장군의 조선 원조나 구제의기본안은 연합국이 이 그물을 하루 바삐 거두는 데에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06) 《자유신문》또한 사설에서 미소의 대립으로인해 미국이 중국과 조선에서 단일정책을 세우는 것은 부득이하지만, 조선은 중국과 달라 양 진영이 협동이 안 될 바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선의 참된 여론은 관리나 정당인보다 자유주의자인 평론가와 학자에게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서 사절단이 공평한 견해를 들을 것을 촉구했다. 407)

우익 신문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절단의 방문이 조선의 자주독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신문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했다. 《한성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조선의 자주 독립에 대한 세계사적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38선으로 양단된 조선의 정치적·경제적 혼란 상태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조선의 자주 독립이 세계 평화, 인류 행복, 극동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루먼 독트린 이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의 성명서가 한국 문제에 부여한세계사적 사명과 동일한 논리를 보였다.408) 한편《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조사 목적을 첫째, 조선의 자주독립을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어느 정도로원조하면 경제적으로 자치자족할 수 있는가, 셋째 조선의 민주주의

^{406) 〈}사설: 조선을 정해(正解)하라. 웨 장군을 맞이하면서〉 《민중일 보》 1947년 8월 27일

^{407) 〈}웨드마이어중장의 來朝 환영〉《자유신문》 1947년 8월 27일

^{408) 〈}사설: 웨데마이어 특사를 환영함〉《한성신문》 1947년 8월 27일

화를 위하여 적화(赤化)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로 요약했다. 그리고 미소공위는 실패했으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대한정책을 원조를 통한 적화 방지로 규정하고, 이를 남조선에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조선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409) 즉《동아일보》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미소공위의 폐기와 단독 정부수립안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경제원조를 반공의 논리와 연결시켰다.

반면 《세계신보》는 웨드마이어의 방문이 마샬 플랜을 조선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고 홍보했다. 《세계신보》는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역할을 러취 군정장관의 조선 경제 원조에 의해 원조 금액과 종류를 조사하러 온 것이라고 홍보하며, 마샬플랜의 일환으로 그 의의를 설명했다. 웨드마이어 특사가 미국에 제출할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조선에 대한 원조 금액과 원조 종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410)

또한 《세계신보》는 북한에서 남하한 전재민이 묘사하는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보도하여 미국 경제원조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농민주보》와 《주간신보》가 전재민에 대한 군정 정책 일반에 대해 보도한 반면, 《세계신보》는 북한에서 남하한 전재민에 관한 소식만을 전했다. 그 중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전재민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울 거주를 금지하고 각 도로 분산시킨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있지만,411) 다음과 같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갖는

^{409) 〈}사설: 우리에게 最善을 주라 「웨드마이어」特使를 마지며〉《동아 일보》 1947년 8월 27일

^{410) 〈}미국 웨더마이야 중장 조선사정 시찰하러 온다〉 《세계신보》 7호 1947년 7월; 〈두가지의 조선원조안 미 국회에 상정: 총선거법 조석히 법률화. 러취장관 발표〉 《세계신보》 12호 1947년 8월; 〈웨드마이어 특사 미국에 귀환〉 《세계신보》 17호 1947년 9월

^{411) 〈}전재민을 각도로 분산〉 《세계신보》 6호 1947년 7월; 〈남조선에

의미를 해석한 기사도 있다.

1947년 8월 말 또는 9월 첫째 주에 발행 된 것으로 보이는 《세계신보》 13호에 실린 〈전재민들 남조선에 안식소를 발견〉 기사는 장충단 전재민수용소에 관한 글로, 공보부, 공보원이 발행한 신문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실상을 다루었다. 412) 이 기사에서 북한은 식량과 일자리가 부족하고, 병이 들어도 고칠 기회가 없는 절망상태에 빠진 곳이었다. 반면 미군정 통치하 남한은 친우 미국의 원조로식량이 충분하고 깨끗하고 안락하며, 직업을 얻어 가족을 부양할 수있는 곳, 아파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었다. 미국 원조의 유무는 이렇게 대비되었다. 413)

이는 1947년 3월 이후 《농민주보》에서 독일에 대한 미소의 정책을 미국의 독일 자립 원조와 소련의 경제적 야심으로 대비시킨 것과 같은 논리였다. 2차 미소공위가 교착상태에 빠진 시기 《세계신보》에 나타난 미국의 남한 경제원조와 북한으로부터 남하한 전재민의 대비는 국제 냉전 시작 이후 《농민주보》에 나타난 미소의

인구격증〉 《세계신보》6호 1947년 7월

^{412) 〈}전재민들 남조선에 안식소를 발견〉 《세계신보》13호 1947년 8월 말 또는 9월 초

⁴¹³⁾ 한편 통신검열을 담당한 24군단 민간통신검열대(CCIG-K)는 1946년 3월 북한의 토지개혁 이후, 사회개혁의 착실한 진전과 북한의 발전사항을 언급한 편지들을 입수했다. CCIG-K는 북한으로부터 온 희망에 찬편지를 소련군의 엄격한 검열의 결과라고 보았다. 한편 CCIG-K는 북한의 곤란한 생활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담은 편지들도 입수했는데, 이러한 정보의 발신원은 지주와 자본가 등이었다. 즉 이들의 고통은 남한에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북한의 민주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남한에 알리는 것이 되었다. 북한으로부터의 편지는 사회개혁에 대한 불만이든 사회개혁의 진전을 서술한 것이든 간에 북한에서 진행되던 사회개혁의 매력을 남한의 한국인에게 호소하는 '전시효과'의 역할을 했다. 고바야시 소메이(小林 聰明), 2010《한국 통신검열 체제의 형성》 히토츠바시(一橋)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학위 논문 중, 제5장 〈통신검열의 한계〉 참고.

국제적 대립 논리가 이제 한반도에 적용되어 홍보에 이용되기 시작 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여 미국 하의 체제가 우월함을 강조하는 방식은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으로 단독 정부 수립이 현실화 될수록 점차 민주 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2)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선전

미국은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을 1947년 8월 6일자 「SWNCC 176/30: 한국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미소협조 노선이 폐기됨에 따라, 이 문서는 미국은 한국인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낙담하고 폭발 직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을 명시했다.414)

1947년 9월 17일 마샬 미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이 가결되자, 군정당국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는 미국이 조선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는 소련이 비협조적이어서 미소공위로는 조선 독립의 길이 요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에서 미국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이 조선인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415)

그러나 당시 여론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한국 문제의 유엔

⁴¹⁴⁾ 정용욱, 2003 앞의 책, 421쪽

⁴¹⁵⁾ 서중석, 2004 앞의 책, 520쪽; 〈「유엔」에 상정된 조선에 관한 미국제안의 내용. 하-지중장이 중요 멧세지를 발표〉《세계신보》21호 1947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관을 조속한 독립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단독정부 수립 대 통일정부 수립의 문제로 인식했다. 1947년 9월 11일 한국여론협회가서울시내 정당 사회단체, 관공서, 언론계, 교육계, 산업 기타의 저명인사 624명을 대상으로 「남조선단독정부과정으로 향하고 있는 총선거는 당연히 중지해야 한다」는 김구의 주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찬성 187표(30%), 조건부 찬성 175표(28%), 반대 137표(22%), 회답포기 125표(20%)로,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을 단독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에 비판적인 여론이총 58%에 달했다.416)

이즈음《세계신보》는 유엔이 처리 중인 문제와 유엔의 역할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유엔 총회는 세계가 큰 동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며, 총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일본·독일과의 강화 조약 체결, 발칸민족의 그리스 독립 위협, 팔레스타인의 인종·종교 갈등을 소개했다. 417) 그 중 발칸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헤드라인 기사가 추가로 게재되었다. 유고슬라비아가 그리스 내 공산주의자들을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스 민주주의 정부를 지지·원조하기 위해유엔총회에 이 문제의 심의를 제의했다는 것이다. 418)

유엔의 그리스 문제 심의가 《세계신보》의 헤드라인으로 게재된 것은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에 대한 미군정의 해석과 동 일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소련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맞서 조선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 한반도 문제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 부와 공산주의 정부의 대립,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사주를 받

^{416) 〈}單政反對58%, 韓國輿論協會調查〉 《조선중앙일보》 1947년 10월 7일

^{417) 〈}국제연합총회는 허다한 난문제에 봉착〉 《세계신보》 18호 1947년 10월

^{418) &}quot;발칸"문제를 국제연합회에서 심의〉《세계신보》19호 1947년 10월

은 자들의 내부 전복 기도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문제라고 파악했다.419) 《세계신보》는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유엔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문제의 유엔이관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1947년 10월 미국 측이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안을 유엔에 제출하자 소련 측은 한국 문제 토의에 남북한의대표를 초청하고 미소 양군을 동시철병하여 한국인들에게 정부수립을 맡기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정치 총회 전체회의가 미국이 제안한 유엔 감시 하 전국 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43 대 0(기권 6)으로 결의함에 따라 유엔 감시 하총선거안이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확정되었다.420) 이와 함께《세계신보》의 발행부수는 20만부에서 30만부로 증가했다.421)

이 시기부터 《세계신보》는 미소의 대립과 대결을 전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선전하며,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을 본격적으로 선전했다. 전세계적 차원에

⁴¹⁹⁾ 그리스와 남한에 대한 해석은 당시 주한정치고문 제이콥스가 국무장 관에게 보내는 문서들에 잘 나타난다. "(전략) 소련측은 … 결국에 좌파가 정부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는 곧 한국을 또 다른 위성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UN을 통한 접근이 실패한다는 가정 하에) 남한 단독 정부 계획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 전선이나 유고슬라비아-이탈리아 사이의 베네치아 질리아(Venezia Giulia) 국경과 같이 38도선을 사이에 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7.9.19. 《FRUS, 1947》, 803~807쪽,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FRUS에서 원문 및 국역문 참고.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rus&levelId=frus_003_001 0_1520&types=0

⁴²⁰⁾ 박찬표, 2002 《신편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 회, 386~389쪽; 서중석, 2004 위의 책, 520~521쪽

^{421)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24쪽

서 냉전 체제의 형성을 보도하고, 냉전적 세계관과 정세 인식을 한 국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시의원 선거에서 드골의 인민연맹이 파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보도하고, 이는 프랑스가 미국과 소련의 양국 중에서 어느 나라와 친교를 맺기를 원하는지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422)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극좌 독재자들이 소련의 독재전술을 선택하여, 경찰, 군대,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하고 있고, 국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뉴욕 헤럴드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기사는 비공산주의자 진영이 국가적 독립을 위해 힘 있게 싸울 수 있도록 미국이이들을 원조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423) 그 외에도 프랑스 국회가 정부 관리에 잠입한 공산당 분자를 숙청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소식, 캐나다 과학자가 폭발약물의 비밀을 소련에 폭로한 혐의로 간첩행위에 대한 최고형을 받았다는 소식 등을 보도했다. 424)

국제 소식들은 모두 세계가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었으며, 민주주의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전후 《세계신보》는 소련의 대한정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한국 문제 이관을 한국의 독립을 위한 정책으로 홍보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국제적 대립 양상과 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보도하며 독자가한국 문제를 이에 입각해서 해석하기를 유도했다.

반면 《농민주보》는 소련의 대한정책을 조선의 공산화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반소감정을 일으키는 데 선전의 중점을 두었다. 《농민주보》에서 소련의 대한정책 비판은 미소공위가

^{422) 〈}블란서의 공산당 배척〉 《세계신보》 22호 1947년 11월

^{423) 〈「}체코」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을 경고. 비공산주의진영을 원조하자〉 《세계신보》 27호 1947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424) 〈}파괴행동과 무기소동을 불란서 국번으로 제지〉, 〈카나다과학자 간 첩죄로 유죄판결〉 《세계신보》 28호 1947년 12월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국이 미소협조 노선을 폐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차 미소공위에서 반탁단체를 협의에서 제외하자는 소련의 주장은 좌익이 전 조선을 지배하고 '공산당 사상의 크레믈린에게 우세권을 주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425) 소련이 유엔에 제안한 양군 철병안에 대해서는 소련 측의 민간인이 조선에 남아 좌익 측 조선인과 협력하여 맹렬한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전 조선을 소련 세력 하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국제공산당 부활이 세계평화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평론을 소개하고,426) 소련을 약소국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흉계를 지닌나라로 묘사했다.427)

《농민주보》의 직접적인 소련 비판은 매우 강경한 논조로, 특히 소련의 동시철병안에 대한 비판은 당시 한국 우익 언론들의 논조보다도 강한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소련에게 인류 평화를 위한 협조적인 태도로 유엔총회에서 조선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것이 동시철병의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다.428) 《한성일보》는 북한에 50만 공산군을 조직해놓았음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동남 만주의 공산군세력을 짐작할 때 실개천인 두만강 건너로 소련의 정규군이 이동한들 아무 의미가 없지만, 미군은 철퇴하면 완전철퇴가 된다고 지적하며 동시철병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429) 한편 《자유신문》은 소련이 「연합국의 원조 없이 자립」을 주장하지만 조선국

^{425) 〈}二十四 단체 제외 주장은 좌익지배를 의미. [뿌]소장 성명〉 《농민 주보》82호 1947년 8월 30일

^{426) 〈}미소공위는 어찌 되었나? 목미인채 소화불능. 국제연합총회가 의사로 등장〉, 〈국제연합총회에서의 미소간 대립심각〉, 〈양군철퇴에관한 내외여론. 전국공산화 우려〉, 〈국제공산당재조직은 세계평화에 지장〉 《농민주보》83호 1947년 10월 18일

^{427) 〈}김첨지〉 《농민주보》83호 1947년 10월 18일

^{428) 〈}사설: 同時撤兵提案과 우리의 主張〉 《동아일보》 1947년 10월 1 일

^{429) 〈}사설: UN과 蘇聯의 撤兵提案〉 《한성일보》 1947년 9월 28일

민은 우리와 합의에 의한 원조는 크게 받아야 하며, 철병은 조선독립에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 조선국민과 합의 하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30) 즉, 소련의 동시철병안에 대해 우익 신문부터 중도지에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 안이 소련의 조선 공산화기도라는 직접적인 비판은 《농민주보》에서 가장 강하게 이루어졌다. 제1차 미소공위 이전 《농민주보》의 모스크바 3상 결정 왜곡보도에 보이듯이, 미군정은 민간 신문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농민주보》를 통한 반소 선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는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농민주보》는 딘 군정장관의 취임사를 게재했는데, 이는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이유로 소련이 반탁단체를 제외하여 궁극적으로 전 조선을 공산화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은 조선인대부분이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형태의 정부 수립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431) 그러나 딘 군정장관이 반탁단체를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소련의 조선 공산화 의도로 해석한 반면, 당시 여론은이를 미소공위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었다. 2차 미소공위 중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당시 서울 지역의 여론은 미소공위의 성공을 희망했고, 미소공위의 성사를 위해서는 반탁단체를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국여론협회가 1947년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충무로 입구에서 통행인 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위의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답은 절대 성공 749명 (67%), 의문시된다 202명(18%), 기권 158명(18%) 이었다. 다음으로 「만일 결렬된다면 남선단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답은 결사반대 689명(63%), 찬성 253명(23%), 기권 159명(14%) 이었

^{430) 〈}사설: 美蘇撤兵提案과 그 將來〉 《자유신문》 1947년 9월 29일

^{431) 〈}충고와 협력을 간망. 취임사 요지〉 《농민주보》 85호 1947년 11 월 15일

다.432) 즉, 67%의 사람들이 공위의 성공을 희망했고, 63%의 사람들이 단정을 반대했다. 또한 조선신문기자회가 1947년 7월 3일 오후 5시부터 1시간동안 서울시내 중요지점 10개소에서 일제히 통행인 2,495명에 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인 1,787명이 미소공위와의 협의에서 제외할 정당·사회단체가 있다고 대답했고, 그 중 1,227명이 한민당을 지목했다.433)

또한 2차 미소공위 결렬에 대한 단 군정장관의 설명은 1차 미소공위 결렬시의 의사발표의 자유가 한국인 정당 사회단체의 의사발표의 자유를 의미했다면, 2차 미소공위 결렬 시에는 국민의 의사발표의 자유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소련이 2차미소공위에서 반탁단체를 제외하여 궁극적으로 전 조선을 공산화하려 한 것과 반대로 미국은 전 조선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부, 즉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논리는 자연스레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는 정부수립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소련의 조선 공산화 기도를 미국의 대한정책과 대립 항에 놓으면서, 《농민주보》는 미군정 하의 조선에 '사실상 새 시대'가 탄생했다는 논리를 보였다. 《농민주보》의 기사들은 조선에 민주주의가도래하여 새 시대를 맞이했으니 이제 자유라는 명분 하에 이탈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434)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민주보》의 민주주의홍보는 10월 항쟁 이후 친일 경찰 청산의 의제를 전환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수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트루먼 독트린으로 민주주의가 향후 조선에 수립될 정부의 성격으로 강조되면서

^{432) 〈}共委성공確信이 六七%, 거리의 輿論조사결과〉 《여성신문》 1947년 6월 12일

^{433) 〈}號國는? 政權形態는? 記者會서街頭輿調論查〉 《조선일보》 1947 년 7월 6일

^{434) 〈}민주주의 행복. 공창제도폐지령 실시〉 《농민주보》 85호 1947년 11월 15일; 〈사랑방 얘기〉 《농민주보》 86호 1947년 11월 22일

민주주의는 미군정 하 모든 점령정책의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홍보되었다. 이제 소련의 조선 공산화 기도에 대항하여 유엔 감시 하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자, 미군정 하남한이 민주주의 사회로 선포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미군정 하에서 민주주의가 도래한 조선을 소련의 공산화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세계신보》와 《농민주보》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유엔의한반도 문제 해결로 변화한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도했다. 하나는 이것이 조선 독립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공산화 기도로부터 민주주의 조선을 지켜내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세계신보》가 그리스 문제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홍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면, 《농민주보》는 소련의 대한정책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야한다는 인식 틀은 공통적이었다.

《농민주보》와 달리《세계신보》가 웨드마이어 사절단 관련 보도이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원조와 국제적 노력을 홍보하며 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당시 공보원 활동의성격을 보여준다.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이후, 한국인을 직접 만나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공보원 강연과는 공보원이 대중들에게 북한에서 소련의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것인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토론을 어디까지 해야할 것인가의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공보원은 공산주의에 대한 정면공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차례의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러한 방침이 몇몇 지역에서 저항을 선동하기 쉽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별다른 호소력이 없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청중들이 적대적이거나 난폭해지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보원은 강연반

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비난은 피하고 인간의 존엄성, 인권, 정치적 자유,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공격에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접 근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435)

즉, 이 시기 공보원은 소련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을 실시하여 한국인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신보》는 전세계적인 차원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미국이 담당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선전했고, 공보원의 다른 미디어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했다. 이를 위해 육군부 민정국은 미국 사진, 미국 잡지 기사, 미국 다큐멘터리 등을 제공했다. 1947년 11월 시작된 사진전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법을 전달하고 미국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었고, 전체 판넬 중에서 오직 10%만이기타 국가들과 유엔에 관한 내용이었다.436) 1947년 12월에는 원자

AUS004_36_00C0018_003)

⁴³⁵⁾ 한편 이 문서는 이후 1947년 11월 미육군 지령은 잠재적인 적이나 위협으로서 소련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점도 명시했 다. 그러나 이 지령이 공보활동에 결정적인 판단을 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7년 11월자 지령은 남아있지 않지만 1949년 11월 23일자 같은 수신인, 발신인, 제목의 지령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상태로 비롯된 군사적 문제에 관해 육 군 구성원이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언급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도 록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지령으로 미루어 보건 데 1947년 11월의 지령도 유사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지 령은 공보정책 차원의 지령으로 보기에는 당위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1947년 11월의 미육군 지령이 사실상 현지 공보활동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 1948, 25쪽; From Dept. of the Army, Adjutant General's Office to C-in-C, FEC. 1949.11.23 (Army Policy on Discussion of Russia〉 1949.11.23. 소장처:미국립문서관(NAⅡ), (출 처: 전자사료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고코드

^{436)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29쪽

력, 4H 프로그램 등에 관한 미국 잡지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대 규모로 출판하는 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공보원은 육군부 민정국이 제공하는 미국 다큐멘터리에 한국 소리를 입히는 한편, 1948년 1월부터 뉴스릴 시리즈 "대한전진보(Progress of Korea)"를 직접제작하였다.437)

^{437) 1947}년 11월에서 1948년 1월 사이 육군부 민정국이 제공한 영화는 미국 음악 스윙 재즈와 그 뮤지션을 소개하는 "스윙의 왕(Swing King)", 뉴욕 맨하튼 링컨 터널의 건설과정에 대한 "링컨 터널(Lincoln Tunnel)", 미국 동부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뉴잉글랜드(New England)",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의회를 소개하는 "국도(National Capitol)"이다. 이 작품들은 미국 제작사에서 제작한 미국 영화들로, 자 연스럽게 미국적 생활방식과 미국적 사고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졌다. 한편 미군정기 현지에서 제작된 뉴스 영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공보부는 1946년 1월부터 뉴스영화 시리즈 "시보(時報, Korean Newsreel)"를 직접 제작했는데, 공보원이 설립된 이후 뉴스 영화 제작 기능은 공보원으로 이관되었다. 공보원은 1947년 말 "시보(時報, Korean Newsreel)" 시리즈를 종료하고, 1948년 1월부터 새로운 제명 으로 "대한전진보(Progress of Korea)"를 제작했다. 이는 공보원이 점 령지의 운영 차원의 공보를 위한 뉴스 영화를 마감하고 '건국'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제명으로 뉴스 영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한전진 보(Progress of Korea)"는 주한미국공보원(USIS)이 1950년 가을부터 "세계뉴스"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작되었다. 하편 "대 한전진보(Progress of Korea)"는 1952년부터 1967까지 주하미국공보 원(USIS)이 제작한 "리버티 뉴스(Liberty News)"의 전신으로, 1952년 부터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대한뉴스"의 전신이 아니다. 김한상은 "대한뉴스"가 "시보"와 "대한전진보"의 계보를 잇는다고 주장하는 국립 영화제작소의 역사 기술은 대한민국의 국가 공보기구에서 제작된 공식 뉴스영화로서의 위상이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뉴스영화 제작 역사를 전 유하고자 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혼선이라고 평가했다.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 1948, 27쪽; 미군정기 미국에서 제공한 영화들과 점령군이 제작한 뉴스영화에 대해서는 김한상, 2011 〈1945-1948년 주한미군정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영화선전: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NARA)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34집. 한국미국사학회 183~199쪽

2. 1948년 5.10선거 선전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정 당화

1) 유엔 소총회의 결정 이후 북한 체제 비난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 총회가 가결한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실시·감독하기 위해,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하 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공보원은 위원단에 대한 홍보를 1월과 2월의 주요 목표로 삼았고, 한국인들을 선거 절차에 주목하게 만들 상세한 계획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출했다.438) 《농민주보》와 《세계신보》는 위원단의 목표를 총선거를 통한 독립국가 건설로 홍보하고, 미군정이 이들을 지지하고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439)

그러나 미군정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역할과 권한이 미군정이 준비한 선거 계획을 승인하고, 이후에는 선거를 감시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미군정은 위원단이 선거의 감시에 관해 중앙선거위원회 및 그 예하의 지방선거위원회와 협력하되, 선거를 시행하고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보장하는 문제는 미군정의 권한이며 위원단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국과 미군정의 의도는유엔과 위원단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정책의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반면 위원단 내에는 한국 문제의 처리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지지한 중국, 필리핀, 프랑스, 엘살도르 등의 대표들도 있었지만, 미국측의 일방적인 태도와

^{438)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January 1948 To 31 January 1948) 1948.2.25.

^{439) 〈}새해맞이와함께 독립사절단 환영!〉 《농민주보》 89호 1948년 1월 10일

소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우려하면서 유엔 총회 결의문이 규정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국가의 수립'이라는 위원단의 임무를 위원단의 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의 대표들도 있었다. 위원단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위원단 내의 인식의 차이는 향후 미군정과 위원단의 갈등을 예고했다.440)

위원단은 세 개의 분과위원을 설치하고, 각각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 조성, 조선 정치인 면담, 선거법 검토에 돌입했으나, 미군정의 신문들은 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만을 한차례 보도했을 뿐, 위원단 본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각 위원원들의입장은 보도하지 않았다.441) 위원단과 분과위원회가 발행하는 자체공보 또한 《세계신보》와 《농민주보》에 거의 실리지 않았다.442)예외적으로 1948년 1월 《세계신보》 30호는 위원단의 남북조선선거법 검토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는 공산주의 전제국가에서는 당이 택한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면 수감되거나 사형을 선고받는다는내용으로, 위원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선거를 비판하는 데 기사의 목적이 있었다.443)

한국 문제의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단 내부의 입장은 1948년 1월

⁴⁴⁰⁾ 위원단의 임무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과 각국 대표 위원단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최요섭, 2005 〈1947~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441) 〈}국련위원단 업무 순조진행. 선거대책을 본격적 검토. 일반준비적 업무도 거진 완료〉 《농민주보》 90호 1948년 1월 24일

⁴⁴²⁾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명서 또는 공보로서 점령당국이 발행한 신문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 위원단 일행 一월 八일 서울에 안착. 첫 번 회의는 12일에 개최〉《농민주보》 89호 1948년 1월 10일; 〈조위공보 三十三호〉 《농민주보》 93호 1948년 3월 6일; 〈조위공보 四十四호〉《농민주보》 94호 1948년 3월 20일

^{443) 〈}조선위원단서 남북조선 현존선거법 검토〉 《세계신보》 30호 1948 년 1월

22일 소련이 위원단의 북한 지역 입경을 거부하면서 명확히 분화되었다. 위원단은 남한만의 선거를 진행하자는 측과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하고 이 문제를 유엔 소총회에 회부하자는 측으로 분열되었다. 전자는 중국, 필리핀을 중심으로 했고, 후자는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했다. 그 중 호주 대표 잭슨은 미군정이 경찰을 비호하고 있고, 남한만의 선거에는 중도파가 참여를 거부하여 향후 우익이 의회를 독점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남한만의 선거를 강력히 반대했다. 더나아가 영국과 호주를 대표로 하는 영연방 국가 대표들은 김구,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다.444)

미군정은 위원단 내의 분열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미군정은 위원단의 내분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이것이 소련 및 좌익 세력들에게 선전과 폭동의 빌미가 될 경우 남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점령당국의 신문은 위원단의 입장이나 활동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 시기 예외적으로 위원 개인의 의견이 소개된 유일한 기사는 1948년 2월 《세계신보》 34호에 실린 필리핀 대표 아란즈(Melicio Arranz) 박사가 입법의원에서 연설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는 그의 연설 요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 하나는 미국이 필리핀에 군인을 보내어 아동을 교육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다.445》더 나아가 1948년 2월에 이르면 공보원은 위원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공보원장이 위원단이 무기력하며 역량이 부족해 공보원이 이들을 홍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보원이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공보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공

⁴⁴⁴⁾ 최요섭, 2005 〈1947~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46쪽

^{445) 〈}비공화국상원의원 아란즈 박사 입법의원에서 연설〉《세계신보》 34호 1948년 2월; 최요섭, 2005 위의 논문, 47쪽

보원 활동보고서에 서술할 정도였다.446)

한편 소련이 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부하면서, 총선거안은 유엔 소총회에 회부되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우선가능한 지역 내에서부터라도 선거를 실시함이 가하다'는 미국측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남한 단독정부 수립안이 통과된 것이다. 소총회의 결정이 문구상으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부터'라고 하여선거 시기상의 문제인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공보원도 이를 단독정부 수립안이 아니라 남조선 지역부터 실시하는 남북총선거안으로 홍보했다.

《세계신보》는 소총회의 결정으로 '조선 국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안은 실시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조선 남부 각 도로부터 선거를 시작하여 점차 북도로 진행'시킬 것이고 소련당국의 반대로 38선 이북 지역의 선거감시가 불가능할 경우조선국민의 3분의 1은 국회의 대표를 보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의석이 다 차지 않더라도 조선국회는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447) 즉 남조선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암시하면서도, 선거는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선거이며 북한 지역은가능한 시기에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고 그 의의를 부여했다. 따라서소총회의 결정 이후에도 선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통일정부 수립을위한 선거로 홍보되었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하지 않았다.

소총회의 결정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세계신 보》와 동일한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소총회 결의

^{446)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January 1948 To 31 January 1948) 1948.2.25.;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February 1948 To 29 February 1948) 1948.3.20.

^{447) 〈}조선국민정부 수립안 국제련합소총회 통과〉 《세계신보》 37호 1948년 3월

가 완전독립을 전취하는 최후적 단계는 아니지만 「必要한 段階」이며,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독립정부를 세워놓고 이것을 교량으로 하여 완전독립을 전취하자고 주장했다.448)《조선일보》는 소련이 계속 유엔 감시 하 선거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남조선이란 국한된 지역에서라도 중앙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일시 남북 분립의 형태로, 완전통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립신보》는 유엔에서의 결의가 우익분파에서부터 중도파를 거쳐 좌익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정치적 분파의 여론을 남조선 단독정부 반대 운동에 집결하게 했다며, 유엔 소총회의 결정이 단독 정부 수립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유신문》의 사설은 유엔 소총회 결의안을 해석하는 것을 피했다. 다만 유엔소총회 결의안에 대해 양진영이 상이하게 갈리고 있다고만 지적하고, 비록 양 진영의성질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조선을 통일국가로 수립하려는 데는일치하므로, 과거의 반제투쟁에서와 같이 유일전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449)

그런데《세계신보》가 이들 한국 신문들과 비교해서 보이는 차별점은 바로 1948년 2월부터 북한 체제와 소련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선전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공보원은 1948년 2월, 국제 공산주의, 특히 북한에서의 국제 공산주의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을 주요정책으로 삼았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월 10일 북조선인민회의의임시헌법초안 발표였다. 450)이에 따라 《세계신보》 36호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비판하는 중국 국민당 정부 외교부 성명을 신는

^{448) 〈}사설: 三·一精神을 高調 小總會 決議를 보고〉 《동아일보》 1948 년 2월 29일

^{449) 〈}사설: 三·一節과 國民運動의 主張〉 《자유신문》 1948년 3월 1일

^{450) &}lt;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February 1948 To 29 February 1948> 1948.3.20.

한편 〈북조선괴뢰 정권화? 공화국 헌법초안을 반박〉이라는 제목 의 사설을 게재했다.451)

허수아비 삽화와 함께 실린 이 사설은 소련이 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을 괴뢰정권화하고 위성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소련이 북한에 의사발표의 자유가 없고 소련으로 재산을 반출할 수 있는 정권, 궁극적으로 조선을 내란에 빠뜨리기 위해 괴뢰정권이자 위성국가를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세계신보》에 실린 북 한 관련 기사는 이북에서 남쪽으로 온 전재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북조선 지역의 경제적 궁핍을 강조했으나, 이제 북한을 소련의 꼭두각시 괴뢰정부로 규정했다. 이는 소련이 전 조선을 공산화하려고 한다는 기존의 주장이 이제 소련이 북한을 공산화하여 괴뢰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증명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미국은 5.10 선거를 통해 전조선 공산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었다.

2) 5.10 선거 선전과 분단의 정당화

유엔 소총회가 가능한 한국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자, 하지는 1948년 5월 9일을 총선거일로 공표하고 '조선 국민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장차 국민 정부를 수립할 대표자를 선거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52) 총선 거일이 결정되면서 5월에 있을 총선거를 홍보하는 것이 공보원의 3월 계획 및 활동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453) 공보원장은 3월 2일

^{451)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관해 중국정부 외교부 성명〉, 〈북조선괴뢰 정권화? 공화국 헌법초안을 반박〉 《세계신보》 36호 1948년 2월

⁴⁵²⁾ 한편 1948년 4월 6일 미군정은 총선거일을 1948년 5월 9일에서 1948년 5월 10일로 변경하였다. 〈진정한 대표자 선거. 선거방해 선동은 엄금. 「하-지」중장 총선거실시에 성명〉 《농민주보》 93호 1948년 3월 6일; 〈총선거 연기도 정식 성명〉 《자유신문》 1948년 4월 7일

^{453)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자 직원회의에서 '여론을 일으키고, 통제하고, 교육시켜야 하며 자유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보원 의 임무는 선거 개최 사실을 공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 는 자유선거 과정을 알리는 것이며, 선거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소수에게 현재 한국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선거임을 설득하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454)

선거 홍보는 먼저 선거인 등록 홍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3월 9일과 10일에 공보원 지부 부장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가졌고, 3월 30일을 등록 시작일로 간주할 것이 합의되었다. 3월 말까지 공보원의선거인 등록 홍보를 위한 계획, 자료, 배포방법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455) 공보원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는 기존의 공보원정책 결정자들에 더해 하지 중장의 참모인 노블 박사(Dr. Harold Noble) 456)와 공보부 대표를 추가했고, 비정기적으로 정치고문단의대표가 편집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층 강화되었다. 457)

¹ March 1948 to 31 March 1948> 1948.4.15.

^{454)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34쪽

^{455)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March 1948 To 31 March 1948〉 1948.4.15.;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37쪽

⁴⁵⁶⁾ 노블(Harold Noble)은 선교사의 아들로 1903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미군정 시기에는 하지의 정치 고문으로 일했으며, 김구와 김규식을 수차례 방문하여 남북협상에 불참할 것을 설득했다. 한편 노블은 이승만의 최측근으로, 노블과 이승만의 교제는 이승만이 노블의 아버지에게 영어를 배웠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노블은 이승만의 연설을 수차례 써주기도 했고,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과 주한미대사 무쵸 사이의 다리역할을 하기도 했다. 1951년 7월에 한국을 떠나 CIA의 비밀 반공 조직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자유아시아 연맹의 간부로 일했다. Edited by Spencer C. Tucker, 2010 《The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BC-CLIO, 637쪽; 〈하지중장 고문 김박사와 요담〉 《자유신문》 1948년 4월 14일; 《조선일보》 1948년 5월 7일〈하지의 정치고문 노

블, 김구와 김규식을 방문 요담〉 《자료대한민국사 제7권》에서 인용 457)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948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는 언론과 라디오의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할 예비전략을 결정했다. 이는 애국심·자부심·조상숭배에 호소할 것, 시민은 오직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를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투표권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 분노하도록 호소할 것, 5월 선거가 한국의 재통일로 가는 단계임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 사항은 가장 강력하고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회의에서 구체적인 입론이 결정되었다. 편집위원회는 남북한의 한국인들이 스스로 단일정부에 대해 토론할 날이 올 것이므로 5월의 선거는 통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이며, 남한 사람들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매우 이로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곧 있을 투표는 한국인에게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이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용할 것, '빨갱이'이슈를 조만간 문제 삼을 것, 그리고 실질적인 등록을 강조해야한다는 것도 결정되었다. 이후에도 미디어를 통해 배포되는 내용은 정확히계획되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논리들은 부단히 수정되었다.458)

선거인 등록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미군정 매체들은 선거 법과 선거등록 및 절차 규정을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대중들이 처음 맞는 보통선거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459) 선거가 인민이 자 유롭게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아 국회를 구성하

¹ March 1948 To 31 March 1948 1948.4.15.

^{458)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38~39쪽

^{459) 〈}입법의원 의원선것법 해설(一)〉 《농민주보》90호 1948년 1월 24일; 〈입법의원 의원선것법 해설(三)〉 《농민주보》 92호 1948년 2월 21일; 〈입법의원 의원선것법 해설(四)〉 《농민주보》93호 1948년 3월 6일; 〈국회의원 선것법 요약. 누가누구에게 투표. 또 투표 방법은 어떻게〉 《농민주보》94호 1948년 3월 20일; 〈국회의원 선것법 해설〉 《농민주보》95호 1948년 4월 3일

고 이들이 다시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라는 것, 즉 대의제 민주주의 성격을 홍보하며 대중들이 선거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했다. 《농민주보》와 《세계신보》에 실린 하지의 성명서들은 민주 선거의 의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군정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을 파괴하려고 음모하는 분자들로부터 선거를 방해하는 선전과 낭설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460) 《농민주보》의 〈김첨지〉는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적 선거를 설명하며 대중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461)

원! 세상이 변하여도 이렇게 변하는 수가 있단 말이오. 예전에는 우리 같은 천민의 권한으로는 단 구장 하나도 선거를 못했었는데 오는 五월 九일에는 장차 우리나라의 정부를 세울 대표자들을 우리들의 손으로 선거하게 되었단 말이니 참 우리 천민들의 인권이 급각히 하늘같이 높아졌오 그려! 「민주주의 정치는 인민의 정치」라드니 과연 그 말이 맞었오. 예전에는 어서 못 죽어 한일러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보니 앞으로 오래 살면 갈수록 좋은 세상을 보겠오 그려! 자! 그러면 이 몸이 죽고 죽어 몇 백번 죽는 한이 있드라도 오는 총선거에는 꼭 신성한 한 표를 던져보고야 말결심이오!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바탕으로 삼는 민주 선거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민간신문 또한 공감하였다. 그러나 점령 당국과 한국 인의 사이에 '민주선거'에 기대하는 의미와 수준에는 간극이 있었다.

^{460) 〈}진정한 대표자 선거. 선거방해 선동은 엄금. 「하-지」중장 총선거실 시에 성명〉 《농민주보》 93호 1948년 3월 6일; 〈선거에 관한 계몽지 도와 자유를 보장하라. 「하-지」중장 지사 청자회의서 훈시〉 《농민주 보》 94호 1948년 3월 20일

^{461) 〈}김첨지〉 《농민주보》 94호 1948년 3월 20일

예컨대《자유신문》의 사설 〈總選擧와 民主政治〉는 민주선거를 통해 수립할 정부의 성격이 중요하며, 따라서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462)

(전략) 一票의 價値란 重大한 것이다. 民主政治下에서는 國政이 國民의 意思에 맞지않을 경우에 政府를 攻擊하고 黨을 非難하는 것 보다는 國民自身이 그러한 議員에게 投票하였고 그러한 黨으로하여금 國政을 맛도록한 것을 먼저 後悔하고 反省하지안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國民自身이 自己의 政府를 選擇하는 意味에서 投票함에는 그 標?을 어느 個人보다 그 政黨에 두어야한다. 오늘날 政黨이 關立하고 政綱 策이 大同小異하야 여느 黨에 投票하여 을흘지??을 늦기는 點이 업지안흘것이나 結局 政黨에 投票하지 안흔다면 人格 識見上 適當한 國民의 代表者를 選出하였다 하드라도 選擧目的의 하나인 國民自身이 自身의 代表(?)를 選擇하지못하는 結果가되기 쉽다. 勿論 政黨에 投票한다는말은 먼저 그 代議員立候補者의 所屬 黨을 살피고 投票하라는말로 間接的으로는 그 黨의 政綱策에 投票하는 것이다.(후략)

《자유신문》 주필 이창수(李昌洙)463)가 쓴 이 사설은 투표자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정책을 가진 정당과 그 정당 소속의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한 표의 가치라고 보았다. 즉 개인의 인격이나식견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정부의 지향과합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국정이 잘못될

^{462) 〈}總選擧와 民主政治〉 《자유신문》 1948년 1월 1일

⁴⁶³⁾ 일제 치하에서 매일신보 정경부장을 지냈고, 해방 후 서울신문 편집 국장, 자유신문 주필, 공보부 여론조사국장을 지냈다. 정진석, 1995 〈해 방언론 50년사-1.해방공간의 언론〉《신문과 방송》1995년 1월호 한국 언론재단, 20쪽

경우 대의원을 잘못 뽑은 투표자가 먼저 후회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곧 있을 선거와 정부 수립의 의미를 강하게 연결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점령 당국은 인물, 즉 진정한 대표자를 뽑을 것을 강조했다. 1948년 5월 1일자 《농민주보》 97호 나타난 구호는 '신성한 한 표를 진정한 애국자에게!'였고, 이 구호 옆에는 '진정한 대표자를 뽑으랴면'이라는 제목의 박스가 실렸다. 이 박스에는 진정한 대표자를 뽑으려면 '一. 선거인의 절대 자유의사로 그가 어떠한 인물인가? 현명한 판단력으로, 一. 금전 물품 접대에 빠지지 말 것, —. 꾀임과 책동에 유혹되지 말 것, —. 금전 지위 권력등의 위력에 눌리지 말 것, —. 친척 지구 당파 등의 정실관계에 구애되지 말 것'등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항목들을 당부했다. 같은 호 〈김첨지〉 또한 다음과 같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만을 강조했다.464〉

금번 총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수는 각선거구를 통하여 대초만 원인 모양이다. 그러면 그 초 만원 중에서 어떤 입후보자 한사람 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다섯 손가락을 보아라. 그 모 양은 다 같것만은 사실은 각기 길고 짧고 크고 적어서 다섯 손가 락이 다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서 그 초 만원이 된 입후보 자 중에도 반듯이 길고 짧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길 고 짧은 것을 비교하여 가장 초월한 사람(중지와 같은)을 선택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길고 짧은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 을가? 그는 여러분 각기의 현명한 판단력에 의할 것이다.

한편 민주선거는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실시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60만부가 배포된 《세계신보》 40호는 선거 등록이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로운 정부체제 하에서 시민이 누릴 수

^{464) 《}농민주보》 97호 1948년 5월 1일

있는 특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설득했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의미에 대한 하지의 성명을 게재하고, 중간파의 선거 거 부는 결국 선거가 남한 사람들의 의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좌익의 주장을 강화할 뿐으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뉴욕타임즈 의 사설을 소개했다.465)

이처럼 공보원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홍보하며 한국인에게 선거인 등록을 독려했지만, 1948년 3월 20일, 공보원장은 선거에 대한 한국인의 열광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공보원장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다가올 선거가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국토분할을 가져올 것이라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한다는 점을 공보담당자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466) 공보원장의 지적은 한국인들이 5월에 치를 선거를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보원장의 지적은 공보원의 선거 홍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한국인의 인식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교정하는 데 기능할 것을 예고했다.

이후 공보원은 선거가 통일정부 수립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는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없애고자했다. 선거인 등록일이 4월 1일에서 9일까지로 정해진 직후 발행된 《세계신보》 41호는 페이지마다 빨간색으로 '등록하라'는 문구를 달고 150만부가 배포되었다. 선거인 등록을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당부와, 등록과 투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소개되었다.

⁴⁶⁵⁾ 이와 더불어 선거를 통일정부의 기초라고 평가하고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서재필 박사의 발표가 실렸다. 〈Registration Plans Completed-Regulations Approved in First Step to Bring About Korean Unity〉, 〈Dr. Jaisohn sees unity for Korea in the election〉 《World News》 No.40 1948년 3월 마지막 주; 〈서재필 박사 담. 금번선거는 통일정부의 기초.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라〉 《농민주보》 94호 1948년 3월 20일

^{466)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37~38쪽

또한 투표 등록과 선거는 해방 이후 독립된 민주정부를 세우기까지 가장 진보적인 단계이며, 한국의 대표를 뽑는 것은 통일 완수로 향 하는 확실한 단계라고 그 의의를 부여했다.467)

하지의 성명은 또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단은 한국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모든 한국인 단체들과 상의할자유가 있고, 북측의 대표들과 협의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할 특권을 가질 것이며, 선출된 대표들은 세계의 문명국가 대부분이승인할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고, 승인된 후에는 협상에 임하거나조약에 가입하고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대표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선거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수립될 한국 정부의 역할에 통일을위한 협상을 빼놓지 않았다.468) 그리고 1948년 4월 3일자 《농민주보》 95호는 '총선거가 「카이로」 「포츠담」 선언 같은 국제적공약으로 약속된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첫 계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김첨지〉는 다음과 같이 남한지역만의 선거의 의의를 집 짓는 사람에 비유하여 설명했다.469)

어떤 사람이 자기 터에 집을 짓는데 어느 딴 사람이 와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거러 공사를 방해하므로 그는 시비만 케고 있다가는 긴급히 집이 있어야할 자기 전 가족의 생활에 더욱 위협만 될 뿐 이어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위선 긴급 수단으로 집터 중앙에 기둥 넷을 세우고 그 위에 대들보를 얹어놓고 방풍 생활을 하면서 차차 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그의 형편으로는 불 가피한 사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하의 조선사정을 볼 때에

^{467) 〈}Koreans registering for election may 9〉 《World News》No.41 1948년 4월

^{468) 〈}Important! read this.〉 〈General Hodge explains purpose of the Election〉 《World News》 No.41 1948년 4월

^{469) 〈}선거란 무엇인가. 조선역사에 빛나는 민주선거. 이번총선거의 중요성〉. 〈김첨지〉 《농민주보》95호 1948년 4월 3일

남조선만에서라도 위선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역시 저 집 짓는 사람의 처지와 흡사한 사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1948년 3월 말, 공보원은 농지개혁 프로그램 홍보에 선거 공보와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했다.470)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은 신한공사의 해체와 그 소유지의 매각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중 앙토지행정처의 설치를 공표했다. 농지 소유의 상한 2정보, 해당 토 지 소작인에게 우선권 부여, 연간 생산량 3배의 현물을 농민이 연간 생산량의 20%씩 현물로 15년간 연부 상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이 농지개혁 프로그램은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대 중적 지지 기반을 넓히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그 목표가 있 었다. 본래 국무부는 1947년 7월 이후 농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토의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자 귀속농 지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러취 군정장관은 입법의 원 의장에게 긴급조치로 신한공사의 농지를 처분하라는 요청서를 보내, 입법의원이 12월 23일 법률안을 본 회의에 제출했으나 주로 지주들로 구성된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1948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남조선토지개혁 법안 토의가 개최되었지만 출석의 원의 법정인원 미달로 법안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귀속농지 를 포함한 농지개혁 프로그램의 준비를 계속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 은 선거 이전에 공표되고 착수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농지 개혁이 5.10 선거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 다. 이를 입증하듯 당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던 미첼(Mitchell C.Clyde)은 농지개혁이 5.10 선거와 관련된 반공의 목적으로 시행 되었다고 평가했다.471) 따라서 공보원의 농지개혁 홍보는 사실상 선

^{470)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March 1948 To 31 March 1948〉1948.4.15.;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1948, 37쪽

거 홍보의 일환이었다.

공보원의 조사분석부는 농지개혁 홍보를 기획 및 준비했고, 공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이용한 특별 홍보를 기획했다.472) 농지개혁 프로그램은 향후 수립될 한국 정부가 민주적 형태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473) 이제까지 정부 수립의절차로써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홍보했다면, 농지개혁은 앞으로 수립될 민주주의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공보주제였다.

농지개혁 홍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농지 소유권 귀속 여부였다. 《세계신보》는 역사적인 농지개혁을 통해 드디어 소작농들이 땅을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이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완전한 소유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으므로 남한보다 7%나 높은 세금을 지불하지 못하면농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쫓겨나며, 땅을 팔수도 없는 것에 비해 남조선의 농민은 지불을 완료하면 불하 받은 지 10년 뒤에 자유롭게땅을 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남한의 농지개혁이 우월하다고 시사했다.474) 《농민주보》 또한 이전 일본인농지를 불하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 시행규칙을 헤드라인으로 게재했다. 하단에는 농지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 농지개혁의필요성을 역설하는 안재홍 민정장관의 담화문을 실어 농지개혁을 홍보했다.475)

⁴⁷¹⁾ 이혜숙, 2008 앞의 책, 297~313쪽

^{472)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1948, 48쪽

⁴⁷³⁾ 위의 문서,1948, 40쪽

^{474) (}South Korean Tenant Farmers Buying Former Japanese-Owned Lands) (World News) No.40 1948.3; (817 Japanese-owned farms sold in week) (World News No.43 Week ending 1948.4.24

^{475) 〈}전일인 농지 불하. 신한공사는 정식해체. 지대는 현물로 十五년간 지불〉, 〈농토분배는 노민생활안정의토대. 안민정장관담화〉《농민주보》 95호 1948년 4월 3일

《농민주보》 와 《세계신보》 모두 불하식 석상에서 적산농지를 불하받은 소작인이 그날이 농민해방의 첫날임을 강조한 소감을 게재하며 농민들이 당국의 농지개혁에 감격했다고 보도하고, 빠른 불하 현황에 대해 연속으로 공지했다.476) 농지개혁은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 속의 뉴스(News behind the news)"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민주주의에서 수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활동의 예로서 북한의 토지분배 프로그램과 대비되었다.477)

요컨대 4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선거인 등록 전후 선거 홍보의 주요 메시지는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부 구성의 방법이라는 것, 통일정부로 가는 첫 단계라는 것, 그리고 농민이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이었다. 이를통해 대중이 선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이를 선거인 등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한편, 이들이 선거법과 절차에 익숙해지게 선전했다.

1948년 4월 14일, 국회선거위원회는 91.7%가 선거인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478) 당시 등록율이 90%에 이른 것은 경찰, 극우단

^{476) 〈}농민해방의 첫날. 적산농토불하에 소작인담〉, 〈적산농토. 불하대 금은 조선정부 소유〉《농민주보》 96호 1948년 4월 17일; 〈South Korea's tenant farmers now buying their land〉《World News No.42 Week ending 1948.4.17.; 〈적산농토 불하상황〉 《농민주보》97호 1948년 5월 1일; 〈Sale of former Japanese farms exceeds 200,000〉 《World News》 No.46 Week ending 1948.5.15; 〈적산농토 불하상황〉 《농민주보》99호 1948년 5월 29일; 〈Two holidays in June for Korean farmers〉, 〈Farm land sales reach 356,773〉 《World News》No.49 Week ending 1948.6.5.; 〈적산농토 불하상황〉 《농민주보》100호 1948년 6월 12일

^{477)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1948, 44쪽

⁴⁷⁸⁾ 국회선거위원회는 4월 14일 선거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괄호 안은 비율)

서울시 769,568,291(92.3), 경기 1,131,329(95.9), 충북 460,021(96.6), 충남 791,663(90.3), 전북 791,499(86.4), 전남

체, 시청이나 동직원 등 공무원, 청년단원들의 등록 강요가 있었기때문이다. 등록 강요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쌀 배급표를 주지 않는다거나 미등록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타인의 도장으로 대리등록을 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람을 등록시키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479) 투표 등록의 강제성은 한국여론협회가 실시한 가두조사에서도 나타났다. 4월 12일 한국여론협회가 충무로 종로의 2개소에서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상자의 74%가 등록을 했는데 그중 91%가 강요당했다고 대답했다. 480) 이에 대해 4월 15일 공보부 공보국장은 한국여론협회의 가두 여론조사 결과의 공증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보부로서는 공안상 이를 방임할 수 없고, 이는 언론자유의 한계 이외에 있다고 경고했다. 481)

그러나 점령당국의 신문들은 선거인 등록의 성공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투표로 승리의 완성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했다. 《세계신보》 43호와 《농민주보》 97호에 실린 하지의 성

^{1,229,200(88.9),} 경북 1,210,264(90.6), 경남 1,314,440(75.3), 강원 474,723(96.5), 제주 82,812(64.9), 계 8,055,798(91.7) 1948년 4월 14일 〈국회선거위원회 집계 선거등록결과 보도〉 《자료대한민국사 6 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dh&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dh_006_1948_04_14_0030&position=-1&position=-1

⁴⁷⁹⁾ 김득중, 1994〈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成大史林》10 성 균관대학교 사학회, 19~20쪽

^{480)《}조선일보》 4월 15일. 1948년 4월 14일 〈한국여론협회의 선거등 록관계 여론조사 결과〉《자료대한민국사 6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481)《}조선일보》《서울신문》 4월 16일, 1948년 4월 15일 〈공보부 공 보국장, 한국여론협회 선거등록여론조사에 대해 담화 발표〉《자료대한 민국사 6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명은 유권자의 9할 이상이 투표 등록을 마쳤다고 선언하고, 이는 한국인이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증명했다고평가했다. 또한 압도적 등록 성과는 강제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써 조선 국가의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처음 겪는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482)

이와 더불어 선거 등록 성공을 투표로 이어가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1948년 4월 17일자 《농민주보》 96호 2면에 '五 월 十일은 총선거의 날. 투표장으로 투표장으로 총진군! 투표시간은 오전 七시부터 오후 七시까지'라는 구호가 적힌 박스를 통해 투표는 전쟁에 비유되었다. 《농민주보》 97호도 1면 상단에는 큰 박스를 만들어 '투표장으로 독립문으로 총진군!'할 것을 독려하고 최후의 승 리를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미군정이 높은 선거인 등록율을 자축하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전할 때, 김구와 김규식은 각각 4월 19일과 21일, 남북협상을 위해북행했다. 김구는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남한 단독선거반대·양군 철퇴·남북 지도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 시점부터 김규식과 연대를 통한 남북협상·남한 단선 반대 노선으로 나섰다.483) 1947년 10월 1일 김규식, 홍명희, 안재홍 등이 발기하고, 12월 20일 15개 정당, 25개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도파를 거의망라하여 결성된 민족자주연맹은 1948년 2월 4일, 남북요인회담을요구하는 서한을 북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2월 16일 김구와 김규식은 북의 두 김에게 만나자는 서신을 보냈으나,북은 유엔 소총회의 결정 이후인 3월 25일에서야 평양방송을 통해전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또

^{482) 〈}Huge registration for korea's election〉 《World News》No.43 Week ending 1948.4.24; 〈등록성적은 만점이다. 빠짐없이 투표하라. 「하-지」중장 성명〉 《농민주보》97호 1948년 5월 1일 483) 정병준, 2005 앞의 책, 691~692쪽

한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4월 14일에 열 것을 채택했다고 일방적으로 방송하고, 4월 초에 소규모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4김과 그 외 남과 북에서 참여할 지도자 명단을 열거했다. 당시 북한은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2월 10일 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했고, 남북협상의 시기와 장소 및 참여인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므로 김규와 김규식은 북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나 4월 15일 김구는 '금차 회담에 큰 기대를 가져야 할는지 단언하기 어려움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서로 같은 피와피를 통해서 서로 통사정하여 보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며 북행하여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통일독립을 위해서 끝가지 투쟁하였다고 동포에게 전해달라는 결의를 표명했다. 김규식은 4월 15일까지도 회의에 대한 참가를 유보했으나, 마지막에 몇 가지 조건을 달고 회의에참석하기로 결정하고, 21일 북행했다.484)

남북협상에 참가하는 것은 분단에 대한 민족적 위기 의식 하에, 5.10 선거를 명백히 거부하는 것이었다.485) 남북협상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성과를 낸다면 5.10 선거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한만의 선거, 소련의 괴뢰정부에 대항해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라는 논리는 모두 그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었다.486) 국무부는 남북협상의 파급력을 일찍이 차단하지 못하면 미국과 유엔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것이고, 선거뿐 아니라 새로운 남한 정부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부는 공산주의

⁴⁸⁴⁾ 서중석, 2004 앞의 책, 590쪽; 서중석, 2004 《한국현대민족운동연 구 2-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37~39쪽; 〈외세의존을 배제. 자력독립의 길뿐〉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

⁴⁸⁵⁾ 서중석, 2004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1948~1950 민주주의·민족 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37쪽, 43쪽

⁴⁸⁶⁾ 서중석, 2000 〈냉전체제와 한국 민족주의의 위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01~105쪽

의 남북협상 선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선거전을 펴나갈 것을 지시했고,487) 공보원은 라디오 프로그램과 신문 출판을 통해 대중들이 남북협상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다.488)

김구와 김규식의 북행 전후, 《농민주보》와 《세계신보》는 남북 협상을 반대하는 하지의 성명과 사설을 게재했다. 하지는 남북협상 에 참가하는 남측의 사람들은 모두 북한이 초청한 자들로, 총선거 반대 인물뿐이고, 조선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려 하는 자들이라 고 지적했다. 즉 협상 참가자들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통 일은 남북 양 지역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야 하므로 5.10 선거를 위해 등록하고 투표할 것을 강조했다. 489) 또한 같은 호에는 38선 북쪽지역에서 미군초소 근접 지역에 참호를 파는 것이 목격되 었다고 보도하며 북한의 호전성을 암시했다. 490)

우익지들은 1948년 2월경 김구·김규식의 무능과 정권욕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협상을 비판했으나, 3월 말 이후 논조를 바꾸었다. 1948년 2월 3일 《동아일보》는 임정 법통과가 법통에 연연한 나머지 군정을 연장하려 한다고 김구와 김규식을 비난했다. 491) 2월 20일 《현대일보》는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무능 때문에 총선거의 심판대에 오르기를 두려워하여 독립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492) 김구와 김규식을 비난하는 데 초점

⁴⁸⁷⁾ 장영민, 2007 〈미국공보원의 5.10 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 《한 국근현대사연구》 2007호 여름호 제41집, 132쪽

^{488)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April 1948 To 30 April 1948) 1948.5.15.

^{489) 〈}남북회담의 성공을 믿지말라. 북조선당국의 정치적 모략. 초청된 인 사는 공적대표자가 아니다〉 《농민주보》 96호 1948년 4월 17일; 〈General Hodge urges Koreans to vote〉 《World News》 No.42 week ending 1948.4.17

^{490) (}Trenches Seen North of 38th Parallel) (World News) No.42 week ending 1948.4.17

^{491) 〈}사설: 총선거를 단행하라〉 《동아일보》 1948년 2월 3일

을 맞추던 논조는 1948년 3월 말 이후, 점차 남북협상은 자주통일이라는 미명 하에 소련의 위성국화를 협상하는 것이라는 비난으로변화했다. 493)이는 앞서 살펴본 남북협상에 대한 미군정의 해석과동일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양 김씨를 중심으로 한 임정의 수뇌부가 자신들의 정권욕 때문에 이러한 모략에 넘어간 것이라며 김구,김규식에 대한 기존의 비판도 여전히 실시했다. 494)즉 《동아일보》와 미군정 신문들이 남북협상이 소련의 기만술임을 동시에 지적하면서도, 《동아일보》는 이를 김구, 김규식 비난으로 이어간 반면,미군정 신문들의 논조는 이를 선거의 필요성으로 귀결시켰다.

반면 남북협상의 의의를 인정하는 논조를 보인 우익지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남북협상으로 남북한의 통일정부 수립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총선거와 별개로 남북회담을 추진시켜 보는 것도 가하다며 남북협상의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협상론자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떡을 얻으려다가 돌을얻고, 물고기를 얻으려다가 배암을 쥐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95) 《한성일보》는 남북협상에 참가하는 대표자들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 국민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미군정의 비판을 의식한 듯,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홍명희의 독립운동이력을 서술하고, 남북협상을 독립운동가들의 회합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이 오늘날에도 독립운동가들이어야 한다면서, 통일하고 독립하자는 원칙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496) 《조선일보》와 《한성일보》가 남북협상의 의의와 필요

^{492) 〈}사설: 망상! 남북회담〉 《현대일보》 1948년 2월 20일

^{493) 〈}사설: 남북협상의 비자주성〉 《동아일보》1948년 3월 30일

^{494) 〈}사설: 남북협상의 모략성〉 《동아일보》 1948년 4월 27일

^{495) 〈}사설: 메논씨의 연설과 吾人의 견해〉《조선일보》1948년 2월 24일, 〈사설: 남북회담과 그 성격 여하〉《조선일보》1948년 3월 30일, 김민환, 2001 〈미군정기 신문의 독립정부 수립론〉《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나남, 83~84쪽에서 재인용.

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비해, 당시 미군 정이 '중도지'라고 분류한 《자유신문》은 남북협상을 사대주의와 타 력주의를 박찬, 구국운동에 비유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497)

남북협상에 대한 우익 언론의 보도태도의 차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동아일보》와 《현대일보》는 1947년 8월 새로 조직된 우익 중심의 새로운 언론단체인 조선신문기자협회에 참가한 언론이었던 반면, 《조선일보》와 《한성일보》는 우익이면서도 조선신문기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이었다는 점이다. 498) 신문기자협회는 기자들의 단체이긴 하지만, 기존의 조선신문기자회에서 탈퇴하고 새로만든 단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단체를 선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단위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군정이 좌익 언론을 규제하고 우익 언론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우익지와 중도지들은 남한만의 총선거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남북협상이라는 과제에 맞닥뜨리고 나서부터는 미군정과 교감 하에 있던 우익 언론만이 미군정의 입장을 지지했던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남북연석회의는 5.10 선거 반대 의사를 명확히하고 통일정부 수립 노선을 천명했다.499) 이에 공보원은 5월에 들

^{496) 〈}사설: 통일과 독립 남북회담을 응시〉 《한성일보》 1948년 4월 25 일

^{497) 〈}사설: 자율적 남북회담의 추진〉 《자유신문》 1948년 3월 30일

^{498) 1947}년 8월 조선신문기자협회에 참가한 언론은 《동아일보》《현대일보》《독립신문》《민중일보》《대한일보》《부인신보》이다. 한편단독정부 수립에 비판적인 인식을 지닌 언론들은 1948년 6월 조선언론협회를 결성하여 조선신문기자협회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조선일보》《한성일보》는 조선언론협회에 가입하였다. 박용규, 2007〈미군정기 언론인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한국언론학보》51(6) 한국언론학회, 148~158쪽

^{499)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같은 날 김구가, 그 다음날 김규식이 방북했다. 4월 30일 남북연석회의는 〈남북

어서 남북협상 반대 선전을 더욱 강화했다. 첫째, 남북협상을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술로 규정했다. 1948년 5월 1일《농민주보》 97호 3면에 실린 공보부 여론국 고문 피셔(Ernest Fisher)의 기고문〈비애국적인 총선거반대론〉은 최근 반공주의자들도 외국군 철퇴를 주장하며 외군이 철퇴하면 동족끼리 통일단결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주의와 주장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몰라보고적화통일을 막으려는 자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지칭하는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공주의자는 남북협상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이다. 피셔는 또한 총선거를반대하는 것은 비애국적이며, 비애국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공산주의의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주장했다. 즉 남북협상 지지는 자유민주주의 지지 여부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접어들었다.500)501)

남북협상과 공산주의자의 선전·선동은 그 성격상 같은 것으로 치

조선 제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외국군대 즉시 동시 철거,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을 통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과 이를 통한 전조선 입법기관 선거 및 헌법 제정,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등의 4개항에 합의했다. 기광서, 2019 〈북한 정치사회의 변화와 국가권력의 형성〉《한국현대사 1-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푸른역사, 150~151쪽

^{500) 〈}비애국적인 총선거반대론〉 《농민주보》 97호 1948년 5월 1일 501) 어니스트 피셔(Ernest Fisher)는 선교사로,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 과의 고문으로 일했다. 정치교육과는 신문, 강연, 라디오, 전단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로, 민주주의를 알리라는 본국의 지침에 가장 부합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그러나 이 부서의 책임자는 선교사 피셔와 전직 군목으로, 이들은 주로 일부 한국인에게 설교하는 일에 치중했고, 그 내용도 미국을 파업이나 사기, 부패, 암시장, 정치적 부정, 불성실한 정치인, 폭리 등이 전혀 없는 나라, 불간섭주의 하에 경제가 스스로 운영되는 나라로 묘사하는 것에 불과했다. 리차드 로빈슨, 정미옥 역 1988 《미국의 배반》 과학과 사상, 151쪽, 251쪽; 졸고, 2010, 386쪽에서 재인용.

부되었다. 1948년 5월 1일 《농민주보》 97호에 게재된 기사는 '「총선거 반대」니 「남북회담」이니 또는 「파괴」또는 「선동」음으로 양으로 가진 미묘한 모략책동이 싸돌고'있지만, 총투표로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장으로 독립문으로 총진 군할 것을 촉구했다.502)

선거가 끝난 후 경상남도 지사 질레트(F.E.Gillette)가 작성한 경상남도의 선거 홍보에 대한 보고서는 남북협상 지지와 공산주의 지지를 어떻게 연결하여 홍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선거 홍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김구와 김규식이 반역자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적었다.503)

둘째, 《세계신보》는 북한이 소련의 꼭두각시라는 점을 자세히설명하고, 선거를 통해 소련의 조선 공산화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1947년 5월 8일《세계신보》사설은 북한 정부의 한국인 관료들은 위장술에 가까운 것으로, 그들은 소련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결정도 내릴 수 없고 성명서도 작성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인은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소련은 국민이 의사를 표시하는 자유선거를 처음부터 반대했고, 선거 방해의 마지막 조치가 '북조선회담 (the North Korea Conference)' 소집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맞서애국적 시민들은 진정한 대표를 선출할 것을 당부했다.504) 1948년 5월 15일 《세계신보》 사설 또한 북조선이 조선 국기를 버리고 소련 국기를 채택했고, 외국의 주인으로부터 모든 지령을 받는 한줌의

^{502) 〈「}참」은 승리를 안내. 한표로 최후승리〉《농민주보》 97호 1948 년 5월 1일

⁵⁰³⁾ Gillette Paper(3), From F.E.Gillette Col.,Infantry Chief Civil Affairs Officer To Commanding General, USAMGIK 〈Report on Election〉 1948.5.14. 2쪽

^{504) (}North Korean Conference (an editorial)) 《World News》 No.45 week ending 1948.5.8

끄나풀들이 승인한 헌법을 채택했다면서, 자신이 이 헌법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답을 5.10 선거를 통해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505)

이와 동시에 북으로부터 월남자 수가 폭증하여 한주에 3000명 이상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공산주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집과 땅, 전 재산을 두고 북한 거주민들이 남쪽으로오고 있다며, 토지분배로 인해 과수원 소유권을 빼앗기고 높은 세금의 고통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506)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재민들이 남한의 수용소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잘 지낸다는 기사는 이전에도 《세계신보》에 실렸지만,507) 이시기 북한 전재민에 대한 기사는 이들이 토지개혁을 비롯한 북한과소련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남하했음을 강조했다는 데 차이가있다.

셋째, 공보원의 논리에 따르면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를 반대하여 독재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선거에 참여하면 독재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다. 선거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공보원의 주장을 입증하듯, 5월에 들어서 《세계신보》는 공산주의와 민주주 의를 심판하는 사례로써 해외의 선거 사례들을 보도했다.508) 1948

^{505) (}North Korea Conference in Retrospect (An editorial)) (World News) No.46 week ending 1948.5.15

^{506) (}North Koreans Streaming Southward) 《World News》 No.44 week ending 1948.5.1.

^{507) 〈}전재민들 남조선에 안식소를 발견〉 《세계신보》 13호 1947년 8월 말 또는 9월 초

^{508) 5}월 이전에는 관료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비폭력적인 방식과 남미의 폭력적인 방식이 대비되었다.《세계신보》 43호는 미국 위스콘 신에서 공화당 당내 경선을 통해 평화롭게 대표자를 선출한 것과 콜롬 비아 보고타에서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이 정부 청사에 난입, 암살, 폭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대비하여 소개했다.〈Two Ways to Select Public Officials〉《World News》 No.43 week ending 1948.4.24

년 5월 1일《세계신보》 44호는 이탈리아 공화국이 처음으로 실시한 선거에서 민주주의 세력이 공산주의에 크게 승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내각과 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라는 대중의 요구라는 수상의 의견을 전했다.509) 5월 8일 《세계신보》 45호는 "이탈리아의 크레믈린"이라는 밀라노와 볼로냐가 있는 북이탈리아에서도 선거에서 69퍼센트가 공산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하고, 이는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라는 대중적 요구라는 기독교민주당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탈리아의 선거 사례는 《세계신보》뿐만 아니라 《농민주보》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선전되었다.510)

북한이 꼭두각시 정부임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술인 남 북협상에 속지 말고 투표하라는 독려방식은, 선거 홍보의 주요 메시 지가 통일정부 수립에서 반공 정부 수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미했다. 남북협상 이전에는 남한만의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는 통일 정부 수립의 첫 단계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협상이 실시되 어 대중들이 통일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자, 선거의 명분 은 북한처럼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변화했다.

^{509) (}Democratic forces defeat communists in Italy's election) (World News) No.44 week ending 1948.5.1.

^{510) 1948}년 이탈리아 선거에는 1947년 창설된 미국 중앙정보부(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가 개입했다. 1947년 12월 미국 국가안 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는 CIA에게 국무부의 정책 가이드 하에 비밀스러운 심리전을 수행할 책임을 맡겼다. 이탈리아의 선거 결과는 워싱턴의 강력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CIA의 첩보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Industrial Italy Rejects Communists〉 《World News》 No.45 week ending 1948.5.8.; 〈이태리도 선거. 민주당 승리〉 《농민주보》 97호 1948년 5월 1일;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1948, 44쪽; Walter L.Hixson 1998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Palgrave Macmillan, 12~13쪽; 고지훈, 2019 《첩보한국현대사》 앨피, 95~100쪽

남북협상이 무위로 돌아가고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한의 좌익 신문은 모두 사라지고, 중도파 신문들도 1948년 5월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논조를 바꾸었다. 511) 《자유신문》은 남한만의 선거가 자못 유감이지만 곧 북한에서도 선거를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곧실시될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할 것인지에 대한 사설을 게재했다. 512) 또한 현하 총선거를 추진하자는 조류와 남북협상을 추진하자는 조류로 나뉘어 있으나, 총선거를 추진한다고 해서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이는 시기 문제와 방법의 선후문제일 따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소신대로 행할 것을 촉구했다. 513) 이러한 논조 변화를 반영하듯 미군정에 의해 '중도지'로 평가되던 《자유신문》은 1948년 8월 조사에서는 '온건 우익지'로 평가되었다. 514)

⁵¹¹⁾ 박용규, 2007 앞의 논문, 154쪽

^{512) 〈}사설: 선거를 앞둔 정화운동〉 《자유신문》 1948년 4월 30일

^{513) 〈}사설: 대립의 격화와 국민의 자중〉 《자유신문》 1948년 5월 6일

⁵¹⁴⁾ 공보부는 점령초기부터 남한 내 민간 신문의 종류, 발행 주기, 발행 부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흥미롭게도 1947년 9월 조사부터 잡지의 성향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947년 9월 조사는 우익지 7종, 중도지 7종, 좌익지 4종으로 분석했으나, 1948년 8월에는 극우지 1종, 우익지 1종, 온건 우익지 4종, 좌익지 3종, 공산주의지 1종으로 분석했다. 그 중 《자유신문》《조선일보》《서울신문》은 1947년 9월 조사에서 중도지로 분류되었으나, 1948년 8월 조사에서는 온건 우익지로 분류되었다. 〈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12〉1946.9, 78쪽, 《미군정 활동 보고서》 2권, 724쪽;〈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24〉1947.9, 128쪽; 〈South Korean Government Interim Activities No.34〉1948.8 김민환, 2001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나남, 233쪽에서 재인용.

즉 5.10 선거가 실시될 무렵에는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언론은 사라지고, 남북협상을 지지하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논리가점령당국의 주간신문과 한국 신문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로써 통일을 위한 시도를 이데올로기의 대립 하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인식들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남북협상 이후 선거가 다가오면서 북한 꼭두각시론 홍보가 강화되었고, 선거를 찬성하는 자= 자유민주주의 찬성= 애국자 대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자= 선거를 반대하는 자= 독재공산주의 찬성= 꼭두각시 북조선의 헌법 찬성= 비애국자의 구분법이 형성되었다. 515) '애국'의 의미는 선거참여 여부로 판단되었고, 516) 민주주의의의미, 애국의 의미는 반공주의와 연결되었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이탈리아의 사례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한다는의미가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좌익이 지하화하고 중간파가 선거를거부하였기 때문에 투표로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투표 참여 여부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되었다.

결국 5.10 선거 과정에서 홍보된 민주주의의 실제 의미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였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립 항을 독재공산주 의로 설정하고 민주주의의 내용과 역할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것

⁵¹⁵⁾ 이러한 논리에 따라 향보단의 활동은 투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보수로 자진 봉사하는, 민중의 애국적 봉사심으로 평가되었다. 〈선거 방해를 방위코저 「향보단」을 조직. 단원 가입은 자유이다. 「띤」장관 성명〉 《농민주보》 97호 1948년 5월 1일

^{516) 《}농민주보》 97호 1948년 5월 1일에 나타난 구호는 '신성한 한표를 진정한 애국자에게!'이다. 이밖에 《농민주보》에 나타는 구호는 3월 20일자 94호에 '투표는 국민의 의무', 4월 17일자 96호 '五월 十일은 총선거의 날. 투표장으로 투표장으로 총진군! 투표시간은 오전 七시부터 오후 七시까지', 5월 1일 97호 '때는 왔다! 시호시호부재래. 五월 十일! 총선거의 날. 투표장으로 독립문으로 총진군!', '신성한 한표를 진정한 애국자에게!'가 있다.

은 우익이 해방 직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었다. 해방 직후 민주주의 담론의 주류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개 혁 열망을 반영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담론의 주류였 다는 것은 공보부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1946년 3월 미군정 공보국 여론조사계의 리차드 로빈슨(Richard D. Robinson) 중위는 한국인 대부분이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기를 바라며, 농지 국유화, 산업 국 유화 등을 원한다고 지적하고, 공산주의의 이상이 대다수 한국인들 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의 믿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므로 미군정이 대민홍보를 실시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떠한 경제체제에도 적용이 가능한 사회적 정치 적 조직체(organism)로 설명하되. 사람들이 미군정이 민주주의를 사 회주의, 공산주의와 모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517) 즉 당시 사회개혁, 경제개혁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해 대변되었기 때문에, 미군 정이 홍보하는 민주주의가 한국인의 여론과 배치됨으로써 미군정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이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지주 출신이 주를 이루던 우익은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계획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유가 아닌 국가의 경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한편, '진보적 민주주의'는 결국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숨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독재이며, 좌익은 소련을 조국으로 삼기 때문에 독립국을 없애서 남의 노예로 만들려는, 즉 민족이 없는 매국노이자 민족의반역자라는 것이었다.518) 우익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 독재 공산

^{517) 〈}Subject: Suggested MG public relations policy〉 194년 3월 18 일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

^{6)》407~410}쪽

⁵¹⁸⁾ 김 정, 2000 〈해방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 《역사연구》 7 호 역사학연구소, 124~129쪽

주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항하는 반공 민주주의를 외침 으로써 당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던 좌익에 타격을 가하고자 했 다.

이처럼 해방 직후 우익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항하여 반공 민주주의를 주장했지만, 이는 전체 민주주의 담론의 일부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정책이 단독정부 수립으로 확정되면서, 공보원은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고 소련은 위성국가를 설치하려 한다는 체제 선전을 통해 분단을 설득하려 했으나, 남북협상으로 단독정부수립 논리가 위협을 받자, 선거를 반대하는 것은 나라를 소련 체제에 팔아먹는 것이고 남북협상파는 매국노에 불과하다는 우익의 논리, 즉 반공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로써 미군 점령이 끝나가는 시점에, 대의제를 지칭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 외에 민주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공백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는 향후 '일 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등에서 보이듯이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한편 북한의 소련군 사령부는 5.10 선거를 앞두고 미군정의 선전과 유사한 논리로 정반대의 내용을 선전했다. 미군정이 소련은 공산주의 위성국가를 만들 뿐이며 선거를 반대하는 자는 좌익과 민족주의자를 막론하고 모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라는 단순한 도식을 앞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군 또한 미국에 대한 비난과 이승만, 김성수 등 우익에 대한 비난을 선전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일 뿐이며 선거를 찬성하는 자는 반동, 친일분자들 뿐이라는 도식화된 메시지를 선전한 것이다. 북한 지역 소련군사령부의 한글 기관지《조선신문》은 5.10 선거를 '단선'이라 칭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이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삼으려는 '침략주의적 야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족의 반역자리승만, 김성수 등을 비롯한 한 줌도 못되는 반동, 친일분자들'의 지

지 아래 무력으로 선거를 강행하여 '단일 조선 인민의 골육을 분리 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519)

또한 《조선신문》은 미군이 선거를 원조할 것이라는 서울 라디오 방송을 인용하며 5.10 선거가 미제국주의자를 위한 선거라고 선전했다. 이 기사는 '미군정 고급관리들'이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며, 이는 '월가(街)대표자들이 남조선을 자기들의 제49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오며 무기를 노출한 미국 군함들이 남조선 항구를 통행하고, 남한 공중에는 미국 폭격기들이 지나다녀 남한에 미국 자동총수들이 활보하고 있으며, '파씨스트 청년들이 자원한 민병'과 경찰대가 이에 가담했다면서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요 '자유'의 실체라고 비난했다.520)

《조선신문》 의 삽화들은 미국과 5.10 선거를 지지하는 우익에 대한 소련의 선전 메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48년 5월 6일 《조선신문》 은 '남조선 반동분자들은 「단선」호박을 쓰고 미국 도야지굴로 들어간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승만이 호박을 쓰고 달러가 그려진 돼지의 입으로 들어가는 삽화를 게재했다.521) 또한 5월 8일의 삽화는 '米國式 「自由」선거'라는 제목으로, 미군들이 담배를 피며 총을 들고 일렬로 서있는 가운데 한국인이 선거 장소로들어가는 그림이다.522)

⁵¹⁹⁾ 김선호, 2000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대학교 출판부, 141쪽; 〈全朝鮮人民은 南朝鮮 「單選」을 반대하 여 鬪爭한다〉 《조선신문》 1948년 05월 8일

^{520) 〈}米國兵의 「援助」를 받는 南朝鮮選擧情況〉 《조선신문》 1948년 5월 8일

^{521) 〈}호박을 쓰고 도야지 굴로〉 《조선신문》 1948년 5월 6일

^{522) 〈}米國式 「自由」선거〉 《조선신문》 1948년 5월 8일



그림 2.〈호박을 쓰고 도야지 굴 로〉《조선신문》1948년 5월 6일



그림 3. 〈米國式 「자유」선거〉 《조선신문》1948년 5월 8일

요컨대 공보원의 《세계신보》와 소련군의 《조선신문》이 강조한 것은 각각 소련은 독재공산주의, 미국은 미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세계신보》가 소련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독재요, 그에 따른 위성 국가의 수립이라고 강조했다면, 《조선신문》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제국주의요, 무력에 의한 강압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 모두 5.10 선거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한국인은 미국과 소련의 체제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한국인은 소련의 독재공산주의 또는 미제 국주의에 기만당할 것인지의 여부로 바라보았다. 국가 수립의 문제가 냉전 이데올로기의 해석 속으로 잠식되면서, 남북한 모두 자신의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공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523)

⁵²³⁾ 한모니까는 북한과 남북분단에 대한 연구를 제도적 연구뿐만 아니라 심성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제도가 인간의 심성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교육과 선전선동이 인간의 심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파악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952년부터 1956년 사이에 발행된《개성신문》의 감정어를 분석하여, 북한이 개성, 개풍, 장단, 판문 등 '신해방지구'의 주민들을 어떻게 감정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개성신문》이 선전한 '북한 인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표출해야하는 표준화된 공적 감정을 분석한 것이다. 분

5월 10일 선거는 미군정의 집계로 90% 이상의 투표율로 종료되었다.524)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하지의 성명들이 《세계신보》와 《농민주보》에 모두 게재되었다.525) 하지는 공산주의자들의 선거반대와 테러에 대해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투표자들은 공산주의자나 선동가의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고선언했다.526) 또한 '공산계열의 가진 선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등록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조선 국민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그 정부를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시한 것'이라는 마샬 국무장관의 성명서가 실렸다.527) 이처럼 미국과 미군정은 높은 투표율을 근거로 남한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정부를 원하며,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석 결과 중 하나는 북한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인간형이 미제·이승만 정권과 싸우는 투사였고, 1950년대 중후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는 반혁명과 싸우는 투사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1948년 5.10 선거를 전후하여 《조선신문》에 나타나는 미제국주의와 이승만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세계신보》에 나타나는 소련, 북한, 남북협상 지지자들에 대한 적개심은 남북의 '표준화된 공적 감정'의 단초로 볼 수있다. 즉 남북의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은 5.10 선거 전후로 시작해 한국전쟁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한모니까, 2018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신해방지구' 『개성신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63~274쪽, 294쪽

^{524) 〈}投票率 90.8% 棄權者는 極히 少數〉 《자유신문》 1948년 05월 12일

^{525) 〈}조선총선거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승리다. 일반국민의 건국열에 감격하-지중장 성명〉 《농민주보》98호 1948년 5월 15일; 〈General Hodge Congratulates Voters in South Korea〉 《World News》 No.47 week ending 1948.5.22.

^{526) (}Korea's Fist Election an Overwhelming Success) (World News) No.47 week ending 1948.5.22.

^{527) 〈}민족의 소원을 성취. 국회의원 총선거 완료. 투표률은 九0%를 돌파〉, 〈조선민주선거의 성공을 축하. 「마-샬」미국무장관 성명서〉 《농민주보》 98호 1948년 5월 15일

미국과 미군정은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선언했지만, 선거를 감시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자유롭지 못한 선거 분위기를 지적하며 선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528)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이자시리아 대표 야신 무길(Yashin Mughir)은 5월 13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공보를 통해 선거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향보단 단원들을 투표소 안팎에서 목격했고, 경찰 및 청년단원들이 투표소 안이나 주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비밀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그는 이 선거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높은 투표율에 도달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었지만 이 선거의 효율성을 찬양하는 데에는 신중하고 유보적이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529)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무길의 성명에 대해 국무부에 보고하면서, 이 성명은 무길이 발표했지만 실제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수석비서관 슈미트가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슈미트와무길, 밀너, 엥거스, 패터슨, 잭슨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내의 공산주의자 그룹이라고 칭했다.530) 무길의 성명서는 필리핀 대표 루나에의해 공격을 받았다.531) 5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공보 63호는

⁵²⁸⁾ 김득중, 1994 앞의 논문, 43쪽

^{529)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언론 발표 59호 - 무길의 언론 연설 (UNTCOK Press Release No. 59- Press Statement by Yashin Mughir, Syria)〉 1948.5.13. 《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2(대한민국 사자료집)》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pu_002_1320

^{530) 501.}BB-Korea/5-1348 From Jacobs to Secretary of State 〈무 기르 발언에 대한 코멘트 (Comments on Mughir statement)〉 1948.5.13. 《UN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국무부문서 2(대한민국사자료집)》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ps_002_1510 531) 하용운, 1994, 하용운, 1994 〈UN 한국임시위원단(UNTCOK)연구 -5.10선거기의 역할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성사학》 Vol.7 한성사학회, 199쪽

무길이 공보 59호가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임을 선언했다고 발표했지만,532) 제이콥스가 무길의 뒤에 슈미트를 비롯한 공산주의자 그룹이 있다고 본 것과 같이 이는 무길 개인의 입장은 아니었다. 오히려이는 5.10 선거 이전부터 존재했던 선거의 의미를 둘러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분열을 반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반공주의 선전의 강화와 공보원의 기능 전환 모 색

5.10 선거 이후 공보원은 안정적이고 생존 가능한 정부를 건설할 임무를 지닌 국회를 지지·장려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한 1948년 초부터 새로운정부가 수립되는 시기까지 일지를 작성하는 등 공보에 사용할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공보원의 조사분석부가 국회의회의에 참석했다.533) 《세계신보》를 위해 공보원에 제공된 국회와정부 기구들에 관한 소식은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도 제공됨으로써《세계신보》와 라디오의 공보가 서로 보완되었다.534)

^{532) 501.}BB-Korea/5-1548 From Jacobs to Secretary of State 〈무 기르 발언 (Mughir's statement)〉 1948.5.15. 《UN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국무부문서 2(대한민국사자료집)》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ps_002_1580 533)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May 1948 To 31 May 1948> 1948.6.15.;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June 1948 To 30 June 1948> 1948.7.15.

^{534)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 -

국회에 대한 지지와 견고한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공보정책에 따라 《세계신보》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세세히 전달하고, 미국 및 세계 국가들의 대한민국 승인 소식을 보도했다. 《농민주보》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임을 강조하고, 국회소집 전후로 북한 지역으로부터 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오고 있다며, 이들은 '불원간 중앙정부를 세우게 된 이때 독립을 갈망하여 남조선으로 너머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535)

^{1981) (}Series: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File: 18 Military Government - Korea, Office Civil Information)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July 1948 To 31 July 1948〉 1948.8.15.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이하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July 1948 To 31 July 1948〉 1948.8.15.로 표기)

^{535) 《}세계신보》는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가 소집된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히 전했고, 헌법이 완성되어 새로운 독립, 민주국가가 수립되었음을 알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8.15 기념식 행사 보도로 축하 분 위기를 전달하는 한편 미군정에서 한국정부로 권력과 재산을 이양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예고되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대한민 국을 승인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영국도 곧 승인할 것이라며 신생국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시사했다. 《농민주보》는 북한동포에게 유엔결의 하 자유분위기 속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중대표를 선출해 국회로 보 내달라는 '북한동포에게 고하는 결의문'을 게재했다. 〈National assembly in historic meeting \ \(\text{World News} \) No.49 week ending 1948.6.5.; (Constitution Becomes a reality), (An Outline of the new national constitution of Korea \ \(\begin{aligned} \text{World News} \end{aligned} No.55 week ending 1948.7.17.; Korea's new government assures full authority \(\text{World News} \) No.60 week ending 1948.8.21.; Korea, taking over government, becomes a soverign power, (Important points in Liberation day addresses) 《World News》 No.61 week ending 1948.8.28.; 〈정부는 불원간 수립된다. 최초국회 五월 삼십 一일 소집. 국회선거위원회 발표〉. 〈국 회소집에 「하-지」중장 포고〉 《농민주보》 99호 1948년 5월 29일;

이와 더불어 공보원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비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먼저 북한의 송전 중단의정치적 목적과 미국의 남한 경제원조가 대비되었다. 북한은 1948년 5월 14일 송전 댓가 지불 문제로 남한으로의 송전을 중단했다.536)《세계신보》와 《농민주보》는 모두 미국과 미군정의 전력 대가지불 노력을 보도하고, 북한의 송전 중단은 남한의 경제를 건설하기위해 새로이 선출된 대표들을 사보타주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537) 반면 미국은 남한의 경제부흥을 위해 육천만 달러의 예산을원조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정부를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다만 '만일 불행히도 남조선이 공산주의 지배 하에 들어갈 때에는이 계획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원조의 조건을 명시했다.538)

[〈]의회쾌속도로 진행. 헌법초안 불원완성. 국횟법 초안은 본회의 통과〉, 〈자주독립 완수를 三천만 동포에 서약. 이승만 의장 개회식사〉, 〈국회의 책임 중대. 「하-지」중장 축사〉, 〈사명달성을 확신. 「듼」 군정장관 축사〉 《농민주보》 100호 1948년 6월 12일; 〈국회에 대표 보내주오. 북한동포에게 고하는 결의문〉, 〈헌법초안 상정토의. 국회의 업무 본격화. 《농민주보》 101호 1948년 6월 26일

^{536)〈}電力代償支拂問題로 以北送電遂斷絶〉 《조선일보》 1948년 5월 15일

^{537) 〈}Electric power from North Korea cutoff〉 《World News》 No.47 week ending 1948.5.22.; 〈Soviet retaliation causes strict limit on electric power〉 《World News》 No.49 week ending 1948.6.5.; 〈북조선당국의 모략과 질투. 남조선에 송전을 정지. 전력댓가 주어도 싫다고〉 《농민주보》 98호1948년 5월 15일; 〈전력문제해결책 협의와 즉시 전력공급을 요청 「하-지」중장 소련당국에 서한〉 《농민주보》 99호 1948년 5월 29일; 〈전력댓가 받어가는 동시에 어서 전력 보내도록. 「하-지」중장 소련군사령관에 서한〉, 〈소련측 회한. 전력문제 교섭은 인민위원회와 하라〉 《농민주보》 101호 1948년 6월 26일

^{538) 〈}금년도 남조선 원조계획. 六천만 「딸라」예산〉 《농민주보》 99호 1948년 5월 29일; 〈세계평화를 희망한다면 조선의 남북통일을 방해마라. 트루먼대통령 소련의 침략 정책 비난〉 《농민주보》 101호 1948년 6월 26일

역선전의 초점은 북한이 8월 25일 북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송전 중단 문제에서 선거 문 제로 변하였다. 《세계신보》는 만화와 사설로 이 선거를 비판했 다.539) 만화는 선거관리자에게 자신의 의사가 노출되어 주인공이 당 황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북한의 선거를 비판했고, 사설은 문답형식 을 통해 비판을 가하였다.

사설은 남한의 5.10 선거와 북한의 8.25 선거를 비교하며 북한 선거가 비민주적인 선거라고 규정했다. 사설은 8.25 선거가 공산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헌법 하에 실시되며, 단일후보자와 흑백투표함을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5.10 선거가 북한 전재민 백만 명의 유권자를 포함한 반면 북한 선거는 남한의 특수한 사람들의 대표자만을 포함하고, 공산주의 독재 하에 있는 한반도 인구의 1/3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통일로 가는 단계로서의 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외의 민주국가들은 이를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은 북한과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민국을인정할 것이라는 징조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540)

이처럼 《세계신보》는 북한의 단일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북한의 선거가 비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를 남한의 복수후보자,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 하의 민주주의 선거와 비교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군정이 선거의 절차를 민주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반면, 북한은 선거의 결과를 중심으

s》No.59 week ending 1948.8.14; 〈Some questions and answers (an Editorial)〉 《World News》No.61 week ending 1948.8.28

⁵⁴⁰⁾ 한편 이 시기 《자유신문》의 헤드라인은 연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장식하고 있었다. 《세계신보》가 북조선의 선거와 남한의 5.10 선거를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에집중했던 반면 《자유신문》은 수립된 정부를 향후 어떻게 만들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 내의 고민을 전달하고 있었다.

로 민주주의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 최초의 보통선 거인 1946년, 47년 도·시·군, 면·리 인민위원 선거는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 것인가' 즉, 선출된 인민위원의 정당별 구성과 사회적 구성을 중시했다. 강원도 인제군 면당부에서 노동당원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자, 군당은 민주당, 무소속, 여성이 모두 적절히 추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비율을 노동당원 40%, 민주당원 10%, 비당원 50%로 할 것을 제시했고, 결국 많은 후보자들이 노동당원에서 비당원으로 교체되었다. 상급당은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까지 모두 포괄하여 인민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전선적 입장을 반영하려한 것이다. 공개투표라는 특성으로 반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선거 결과 출신성분으로는 농민·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당적은 통일전선적으로 구성되으며, 여성도 인민위원이 되었다.541)

북한이 1948년 8.25 선거를 앞두고 선거원에게 나누어 준 선전 자료에서도 선거로 선출된 자들의 구성을 중심으로 남한의 선거를 비판하고 북한의 선거를 옹호했다. 8.25 선거 선전원들에게 배포된 선전물은 어떤 나라의 정권기관이나 모든 인민층이 비례에 따라 대표를 참가시키는 것이 정의의 요구이므로, 조선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이 정권기관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련과 새 민주주의 국가들만이 참으로 인민정권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정반대를 보여주는 것이 남조선의 선거 결과로 수립된 국회로, 구성원은 지주, 자본가, 친일과, 사무원, 문화인, 종교인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542) 즉미군정은 선거의 절차를 근거로 남한 선거가 민주주의적이며 북한

⁵⁴¹⁾ 한모니까, 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19~227쪽

^{542) 〈}Item #115 조선최고인민회의 選擧宣傳 提綱(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 1948,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Series: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9)

은 비민주주의적이라고 선전했고, 북한은 선거 결과를 근거로 북한 선거가 민주주의적이며 남한의 선거가 비민주주의적이라고 선전했다.

《세계신보》는 북한 선거의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의 한국인 5만 명이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543) 이 기사는 북한의 소련 당국이 미국식 민주주의 사상을 갖거나 반공산주의 행동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색출하였다고 보도하고, 이들이 강제 이주되었다고 시사했다. 한편같은 호 《세계신보》는 태극기가 한국의 애국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태극기의 역사, 의미, 상징을 통해 소개하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의 선동적인 빨간색이 순수한 흰색의 태극기를 대체하였다고 비판했다.544)

이처럼 대한민국 수립 홍보는 북한의 선거 및 소련 비판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북한의 선거는 비민주주의적일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단계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소련은 사상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로써 세계 각국 및 유엔은 남한을 인정할 것임을, 그리고 애국자의 정통성은 남한 정부에 있음을 홍보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세계신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반대 움직임이 커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와 러시 아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유고슬라비아 수상 티 토는 소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며 사실상 러시아와 코민포 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옵셔버의 의견을 기사화했 다.545) 또한 같은 호에 공산주의자들이 핀란드 총선 역사상 최악의

^{543) (}Russians deport 50,000 North Koreans to a new 'Siberia' on Karafutp Island) 《World News》 No.59 week ending 1948.8.14

^{544) (}What tea kuk ki means to patriotic koreans) (World News) No.59 week ending 1948.8.14

^{545) (}Yougoslavia and soviet communists are breaking) World News) No.55 week ending 1948.7.17

참패를 맞았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지배하는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패배한 첫 선거라고 소개했다.546) 소련이 베를린에서 선거를 1년 늦추기로 했다는 기사는 그 이유가 소련이 공산주의자의 선거에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547) 그리고 수백 명에 달하는 체코 관리와 시민들에 뒤이어 체코의 고위군사 관료가 독일의 미국 점령지역으로 도착했다고 보도했다.548) 이처럼 《세계신보》는 유고슬라비아 수상과 러시아의 갈등, 핀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선거 패배, 선거 승리에 대한 소련의 자신감 상실, 체코 관리와 민간인의 탈출 소식을 통해 유럽에서 소련의 지배력과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선전했다.

다른 한편으로 공보원은 5.10 선거 이후 공보원의 기능 전환을 모색했다. 1948년 5월 3일 공보원장은 조사분석부장, 출판과장, 생산물의 프로그램 계획 담당자 등을 비롯하여 공보원 지부장들에게 5.10 선거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공보원의 프로그램에 관해 비망록을 보냈다.549)

이 비망록은 미래의 한국정부가 현재의 공보원 활동을 요청하거나 묵묵히 따라주기를 희망하면서도 현재의 활동 중에서 강연반 활동 과 《세계신보》 발간은 8월이나 9월안에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보 았다. 그리고 이제 공보원 활동의 중심은 공보원 지부 강화에 두어 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 계속 활동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546) (}Communists in Finland suffer worst defeat) (World News) No.55 week ending 1948.7.17

^{547) (}Soviets refuses to permit Germans to hold election) 《World News》 No.62 week ending 1948.9.4

^{548) 〈}Officer flees Czech homeland〉 《World News》 No.62 week ending 1948.9.4

^{549)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의 부록문서, From James L. Stewart, Director, OCI To Mr. Coucher, Mr. Clark, Mr. Busick, Mr. Colgan, Mrs.Croucher, All Branch Managers, OCI, 〈inclosure #12 Future Activities of OCI〉 1948.5.3

위해서는 공보원 지부를 지역 센터(community center)로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공보원 본부와 지부에 한국인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공보원의 서울 본부에 반드시 한국인을 고문으로 참여시키거나 한국인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만들고, 공보원지부가 지역사회의 한국인들, 즉 민간 그룹, 예술가 그룹 및 단체들과의 공식적인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보원장의 판단은 정부가 수립되면 한국 정부와 미국의 관계에 따라 공보원이 더 이상 한국인 대중을 대상하는 미국 선전기구로 존재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공보 방법인 강연반과 《세계신보》는 폐지하되, 공보원지부의 기능을 지역센터로 전환하고, 한국인과의 협력을 통해 공보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기를 높임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공보원의 존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사회에서 공보원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한국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공보원장은 1948년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된 공보원 지부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대상을 열거했다. 이는 교육 기관들, 새로 성립된 국회, 문화 조직들, 기업가들(business group), 체육 단체들(sports activities),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한국인을 도우려고 하는 지역 단체들이었다. 또한 그는 공보원이 최대한 비정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는 주요 한국인들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50)

한편 공보원 조사분석부장은 향후 국무부 산하에서 반드시 시행될 교수, 학생, 인물 교환 및 문화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문정

^{550) 〈}OCI Branch Managers' Meeting Held in Seoul, Korea, 10 and 11 June 1948〉 1쪽

판(Cultural Officer)을 채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공보 프로그램이 국무부 산하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공보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국무부의 국제공보·교육교환국(OIE, Office of International and Educational Exchange)과 공보 문화 프로그램 (information and cultural program)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551)

공보원장이 제시한 한국인 협력 대상에서 보이듯이 이제 공보원은 여론 주도층, 지식인층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 갔고, 이는 향후 국무부 주도 하에 본격화될 공보·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정부 수립 전후로 논의된 공보원의 기능 전환은 기존의 공보 활동이 직접 전체 대중에게 도달하는 것을 지향하던 것에서 점차 지식인, 여론 형성층을 매개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살펴본 강연반 폐지와 《세계신보》 폐간에 대한 공보원장의 제안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중에서 강연반은 폐지하되 지부에서 각자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도록 하였다.552) 《세계신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49년 3월 문서는 1949년 1월 1일 미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한 이후 국무부가 기존에 육군부가 수행했던 공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한뒤 있었던 변화로 "World News Digest"의 폐지를 들었다.553) 그

^{551)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 1948의 부록문서 From R. R. Busick, Chief,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OCI To Stewart, Director, OCI 〈inclosure #13 Future of OCI Activities〉 1948.5.6

^{552)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1 June 1948 To 30 June 1948) 1948.7.15.

^{553) 1949}년 1월 미국의 한국 승인 이후 트루먼 미대통령은 미 육군부가 담당하던 공보 교육 프로그램을 미 육군부에서 국무부로 이관하라는 집 행명령을 내렸지만, 1949년 회계연도까지는 육군부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되었다. 1950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49년 7월부터 국무부가 전적으로 공보와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고, 1949년 7월 주한미

러나 이후 1949년 7월자 문서를 보면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출판물들 중 하나로 "World News"가 언급되었다.554) 이러한 문서의 차이와 USIS가 발행한 《세계주보》와 《세계신보》 발행 호수의 연속성으로 보았을 때, USIS가 공보활동을 담당한 이후 《세계신보》는 정간 또는 폐간되었다가 《세계주보》로 변경되어 격주 발행된것으로 보인다.555) 이처럼 정부 수립 이후 강연반과 《세계신보》는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이 공보 활동을 담당하던 때보다는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한편 《농민주보》의 폐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1948년 7월 1일 군정청 공보부의 미국인 고문이 모두 공보원이나 미24군단으로 물러남에 따라 공보원에서는 《농민주보》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

대사관은 미국공보원의 직원, 기구, 업무를 거의 그대로 인수받아 USIS 로 개편했다. OCI(Office of Civil Information)는 USIS(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로 변경되었지만 한국어 명칭은 미국공보원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1948년 4월 남대문로에 설치된 미국공보원 미국문화 연구소의 영어명칭으로는 USIS 설치 이후로도 OCI가 사용되었다. (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eries: Reco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1938-53) Lot 52-367, Entry 1559, Box 152,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Korea Prepared by POS/J, 1949.3.9. 12쪽 (이하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Korea〉1949.3.9. 로 표기); 〈美國公報院 文化研究所 設置〉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 〈OCI 도서를 대 여〉 《자유신문》 1948년 9월 27일; 장영민, 2004 〈정부 수립 이후 (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 연구》 2004년 겨울 호 제31집, 285~286쪽

^{554) (}RG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eries: Reco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1938-53) Lot 52-367, Entry 1559, Box 152, From W.J.Convery Egan-IMP To The Director OCI, 〈Subject: Survey Report on USIS in Korea〉 1949.7.23. 9쪽

^{555)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Kore a〉1949.3.9. 11쪽, 23쪽.

인지 논의했다. 《농민주보》를 《세계신보》와 통합하여 발행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것이 한국인들에게서 농촌 신문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정책적 견지에서 현명한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이 안은 보류되었다. 이에 《농민주보》가 발행되기 전에 공보원이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미국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조정되었다. 현재 《농민주보》는 1948년 6월 26일자 《농민주보》 101호까지 남아있다.556)

1949년 7월 주한미대사관 산하에 설치된 USIS(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는 소련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인들이 안정적이고 독립된 민주 국가의 필수적인 기초인 건전한 경제와 교육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을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공보 및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인들이 민주적 삶의 기본 관념과 철학에 완전히 친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임무를 규정했다.557) USIS는 공보원의 유산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차용하는 한편 민주적 삶의 기본 관념과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 지도층, 즉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요컨대 트루먼 독트린 이후 공보부 주간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미소의 대립은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 주의의 대립으로 구체화되어 선전되었다.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자, 공보원은 이를 비협조적인 소련에 맞서 남한의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방안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은 이를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단독정부 수립의 문제로 인식했다. 당시 서울지역 여론 지도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의 총선거안과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과반을 넘었다. 이

^{556) 〈}Report of Activities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1 July 1948 To 31 July 1948〉 1948.8.15.; 〈公報部運營 獨自的으로〉 《동아일보》 1948년 7월 4일 557) 위의 문서, 12쪽

에 《세계신보》는 한국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논조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며, 독자가 한국 문제를 통일정 부 수립 대 단독정부 수립이 아닌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문제로 해석하도록 유도했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가 남한 지역만의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세계신보》는 북한이 소련의 괴뢰정부라고 비난하고, 본격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선거인 등록 홍보가 시작되면서, 투표는 통일정부·국민정부·민주주의 정부와 공산주의 괴뢰정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로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가하면서 대중들이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있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게 되자, 공보원은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자는 공산주의 괴뢰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투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미를 넘어, 투표 여부가 개인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국가 수립 문제에 대한 미군정 선전의 초점은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강조하던 것에서 점차 반공주의 정부 수립으로 옮겨갔고, 5.10 선거를 거치며 미군정기 점령 당국이 선전한 민주주의의 내용은 대의제와 반공주의였다.

결론

이상으로 미군정청 공보부의 《주간신보》와 《농민주보》, 주한미 군사령부 공보원의 《세계신보》의 논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 해 미군정기 점령군의 선전 담론을 추적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남한에 상륙한 직후 미군정은 국내 여론이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미국의 대한정책에 유리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일찍이 여론을 재 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점령 당국은 여론을 재편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직접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배포했다. 특 히 미군정청 공보부가 발행하는 주간신문《주간신보》와 《농민주 보》는 국내 현안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 및 미국의 대한정책을 적 극 선전했다.

점령 당국은 보도 주체로써, 신문 기사 주제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당국의 입장과 관점을 투영했다. 미군정은 국내 언론 동향, 여론 조사 동향, 신문기자 회견에서의 질문 등을 고려하여 기사주제를 선별했다. 또한 이 신문들은 주간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주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귀결을 좇는 보도 방식이 아닌, 그에 대한 점령당국의 해설과 분석 위주의 보도 방식을 취했고, 사안들은 미군정의 관점에서 재해석·재가공 되었다. 즉, 주간간문은 단순히 매일의 속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현안을 점령당국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재현하여 이를 '사실'로 만드는 역할을담당했고, 점령 당국은 이를 통해 국내 정세와 여론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해방 직후부터 1946년 하반기까지 미군정은 미 국무부 정책과도 괴리를 보이며 점령 통치를 위한 선전에 집중했다. 해방 이전부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일환으로써 대한정책을 수립했고, 구체적으로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계획했고,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영·소는 조선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의 실시를 한국 문제의 해결책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정 주간신문의 미국의 대한정책 보도는 정부 수립의 단계와 절차에 대한 설명보다 한국인이 당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 던 문제, 즉, 신탁통치 유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시 독립에 대 한 한국인의 열망을 파악하고 있던 미군정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 정을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이 소식이 남한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미군정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더 민감했다.

제1차 미소공위 결렬 후 한국인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은 미국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국무부는 1946년 6월 미군정이 남한에서 일련의 정치·사회적 개혁을 실시하여 한국인의 지지를 획득한 뒤 미소공위를 재개시킨다는 새로운 대한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홍보할 것을 미군정에 지시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새로운 대한정책이 제시하는 남한의 사회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점령정책 자체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던 미군정은 군정에비판적인 의견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946년 8월 말부터 미군정은 좌익에 대해 본격적인 역선전을 시작했고,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의 전모를 보도하지 않은 채 이를 좌익과 소련에 의한 선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실체가 없는 여론으로 간주했다. 즉,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은 미국의 새로운 대한정책을 따를 수 없었던 미군정의 입장, 조선 공산당의 신전술, 군정 정책 실패로 인한 남한 대중의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었으나, 미군정은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을 좌익, 북한, 소련과 연결하거나 이들의 선동에 기만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 틀을 홍보했다.

1946년 하반기, 한국인들이 미소공위 속개가 정부 수립의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점차 미소공위 재개에 대한 여론이 무르익어갔다. 1946년 말 미소공위 재개 교섭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미군정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한국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선전을 시작했다. 미군정은 신탁통치 실시 여부라는문제에서 벗어나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의 국제적 규정력과 조선임시정부 수립의 구체적인 절차를 대중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본격화되자,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의 성명서가 공보부 주간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실리기 시작했고, 이제 미군정 한국인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입각한 조선임시정부 수립 절차가 아니라 국제 냉전 하 미국의 대한정책이었다. 공보부 주간신문은 조선에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재정 원조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 조선에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아직 미국의 대한정책은 미소협조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위가 개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이 사실상 한국문제의 단독 처리 방침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변한 미국의 대한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 기구, 매체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1947년 5월 30일 미국 선전기구로 수립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이 설립되어, 미군정의 공보 기구는 주한미군정청공보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으로 이원화되었다.

공보원은 1947년 6월부터 주간신문 《세계신보》를 발행하기 시작했고다. 1947년 7월, 워싱턴과 미군정이 모두 한국 문제에 대해사실상 미소협조 페기와 단독행동 방침을 결정하자, 《세계신보》는

한국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이는 독자가 한국 문제를 통일정부 수립 대 단독정부 수립이 아닌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문제로 해석하도록 유도했다.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가 남한 지역만의 선거를 결정하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공보원은 북한은 소련의 공산주의 위성국가라는 비판을 시작하는 한편, 한국인 여론이 분단을 우려하자, 미국의 대한정책은 통일정부의 수립이라고 선전했다. 비록 남한지역만의 선거일지라도 이는 단독정부 수립이 아니라 통일정부 수립의 첫 단계라는 것이었다. 1948년 3월 선거인 등록 홍보 시에도 선거는 통일의 첫 단계로 묘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보원은 선거인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의 성격(대의제)과 내용(농지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5.10 선거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라는 선전 논리는 남북협상의 개최로 위기를 맞았다. 특히 1948년 4월 30일 남북연석회의가 단독선거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천명하면서, 미군정은대중들이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선거를 반대하게 될까 우려했다. 따라서 남북협상은 선거 반대를 조장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술이며, 남북협상을 지지하여 선거를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동시에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가라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 즉, 남북협상 이전에는 남한만의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는 통일정부 수립의 첫 단계라는 것을 강조했으나 남북협상이 실시되어 대중들이 통일정부 수립의 가능성에 기대를 갖자,선거의 명분은 북한처럼 소련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지 않기 위한것으로 변화했다.

요컨대 트루먼 독트린 이후 《농민주보》는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라는 정부의 성격을 국가 수립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기 시작 했고, 1947년 7월부터 《세계신보》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양상을 선전하며 한국 문제를 국제 냉전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했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 결정 전후부터 《세계신보》는 북한 체제 비판을 시작하면서도 한국인의 여론을 의식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강조했으나, 남북협상 이후에는 북한 체제 비판이 심화되는 동시에 공산주의 위성국가를 세우지 않는 것을 국가 수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미군정의 신문들은 이후에도 반공주의 선전을지속하며 신생국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점령 직후부터 미국은 미군정이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홍보할 것을 지시했으나, 미군정의 민주주의 선전은 사실상 미군정이 시기마다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수사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가까웠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시기별로 그 내용과 강조점이 변화했다.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전후 민주주의는 의사 발표의 자유를 의미했지만, 10월 항쟁 이후 친일경찰·친일파·노동 등에 대한 미군정의 개혁불가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과도입법의원을 창설하기 위해 입법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삼권분립과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의미로 선전되었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으로 대한정책을 변경하면서부터 민주주의는 선거를 의미했다. 5.10 선거 선전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반공과 연결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미군정의 홍보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긍정적 측면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련의 부정적 측면과 대비시킴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전체주의와 대비되었고, 트루먼 독트린 이후 자유사회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과 조선 재정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독일에 대한 소련의경제적 야심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부터는 소련이 조선을 공산화하려하며 북한은 소련의 괴뢰정부임

을 언급함으로써 남한만의 선거와 분단을 설득했다. 즉, 점령기간 동안 홍보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의미는 미군정 점령정책을 정당 화하기 위한 수사, 대의제 민주주의, 반공이었다. 민주주의의 내용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반공 외에는 공백으로 남아있었고, 이는 향후 한 국 정부의 민주주의론,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전파 등으로 채워지 게 되었다.

이상의 점령당국의 주간신문 논조를 분석한 결과, 점령기 미군정 주간신문은 식민지 잔재 청산과 통일독립국가 수립이라는 의제를 냉전 하의 체제대립·이데올로기 대립 의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해방 직후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문제는 식민지 잔재 청산과 통일독립국가 수립이었지만, 미군정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임을 신문을 통해 선전함으로써 한국인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해방 직후 한 국인의 인식 틀이 '애국자 대 친일과, 통일 대 분단'이었다면, 미군 정은 공보부의 신문을 통해서 '미군정의 정책=민주주의 대 친일잔재 청산 요구=미군정 반대=좌익=북한=소련'의 인식 틀을 선전했고, 공 보원의 신문을 통해 '미국=민주주의=경제 발전=통일국가=애국자 대 소련=공산주의=소련의 경제 약탈=위성국가=매국노'라는 인식 틀을 홍보했다. 그리고 이 틀을 벗어나는 남북협상을 후자와 연결하여 선 전했다.

본고는 점령당국이 남한 정세와 여론에 대응하여 미군정의 입장을 공보기구의 주간신문을 통해 유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주간신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미군정기 점령군의 선전담론을 추적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점령기 미군정 공보 활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점령기 미군정 공보활동의 성격은 식민지 잔재 청산과 독립국가 수립의 문제를 냉전 하의 체제대립·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귀결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군정의 주간신문만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미군정 신문 보도의 논리와 그 역할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군정 공보 활동 전반 속에서 이를 파악해야 하고, 더 나아가 특정 현안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와의 심층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미군정 공보 활동이 한국인의 냉전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 틀이 이후 어떻게고착되고 재생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독일·일본 등 기타 점령지에서 수행한 공보정책 및 공보 활동과의 비교를통해,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되는 미군정 공보 활동의 특수한성격과 국제 냉전에 따른 보편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도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참고문헌

Ⅰ. 자료

1. 해외수집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

RG554,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WII, U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G319, Historical Manuscript Files, 1943 - 1948 [Entry NM3 488]

《주간신보》

: RG 407,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Entry 368, Special Reports-Korea, Box 2086, Public Health & Welfare- Korea, 1951; Public Press "Chukan Digest" to Public Press "Farmers' Weekly No.70" (4 of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농민주보》

: RG407,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시리즈 하의 〈7 Public Press - Korea, "Farmers' Weekly"〉 파일

《주간신보》

: RG407,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시리즈 하의 〈2 Public

Press "Farmers Weekly" 1947 <농민주보> (1946. 8/31, 12/7, 12/28, 1947. 1/4, 1/8, 1/25, 2/1, 2/8, 2/22, 3/1, 3/8, 3/15, 3/22, 3/29, 4/5, 4/12, 4/19, 4/26), <주간신보>(1946. 8/14, 8/21, 11/13, 11/20, 11/27, 12/20, 12/27, 1947. 1/20, 2/14, 2/21, 2/28, 3/7, 3/14, 3/21, 4/1), 세계신기록의 서 선수. 뽀스톤 마라손 대회에서 우승 외〉파일

《세계신보》

: RG554,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WII, U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시리즈 하의 (Newspaper: "The World News" (in Korean w/translations), June - Dec. 1947》과일

: RG407,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시리즈 하 〈11 World News - Korea〉

: 질레트 문서(Gellette Papers)

: RG407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54) 시리즈 하의 〈18 Military Government - Korea, Office Civil Information〉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Ⅱ)

RG 59, Reco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1938-53) Lot 52-367, Entry 1559, Box 152

2. 간행물·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대한민국사》1, 2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2(대한 민국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UN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국무부

문서 2(대한민국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The Far East Volume WII》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The Far East, Volume VI》

이길상 편, 1990 《미군정 활동 보고서》 1~4권, 서울원주문화사 정용욱, 이길상 편, 1995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다락방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

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89 《주한미군 정보일지 부록》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주한미군 주간정보요약》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0-2001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미군정기 군정단· 군정중대 문서》 4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17》 친일반민족행위진사규명위원회

《주한미군사》 1권, 2권, 1988 돌베개 간행

3. 신문

《매일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한성일보》《민중일보》 《독립신보》《중외신보》《자유신문》《조선신문》

Ⅱ. 연구성과

1. 단행본

- 고지훈, 2019 《첩보한국현대사》 앨피
- 권헌익, 2013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 기광서 외, 2019 《한국현대사 1-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푸른역사
- 김민환, 1991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_____, 2001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
- 김상숙, 2016《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10월 항쟁》돌베 개
- 김선호, 2000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 대학출판부
- 김성호, 2014 《한국방송기자 통사》 21세기북스
- 김인걸 외 편저, 1998 《한국현대사강의》 돌베개
- 김영희, 2010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커뮤니케 이션북스
- 기시 도시히코·쓰치아 유카 엮음, 김려실 옮김, 2012 《문화냉전과 아시 아》 소명
- 박찬표, 199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2 《신편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 서중석, 2004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 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 안 진, 1996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새길
- 유선영, 박용규, 이상길 외, 2007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 재단
- 이혜숙, 2008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해방 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선인
-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파 정책 을 중심으로》 서울대 출판부

정진석, 2005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정해구, 1988 《10월 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한모니까, 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마크 게인, 까치편집부 역 1986 《해방과 미군정》 까치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1987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크리스토퍼 심슨, 정용욱 역 2009 《강압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심리전, 1945 ~1960》 선인

리차드 로빈슨, 정미옥 역 1988 《미국의 배반》 과학과 사상

요시미 순야, 2002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산처럼

요시미순야, 안미라 역 2006 《미디어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Ada E. Leeke, *When Americans Came to Korea*, Pine Hill Press, 1991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Battle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Masuda Hajimu,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Odd Arne Westad,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7

Walter L.Hixson,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Palgrave Macmillan, 1998

2. 논문

강인구, 1995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한국사연구》90 한국사연구회,

- 강혜경, 2002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5-1953년)》숙명여자대학 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고바야시 소메이(小林 聰明), 2010《한국 통신검열 체제의 형성》 히토츠 바시(一橋)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__, 2007 〈미군정기 통신검열체제의 성립과 전개〉 《한 국문화》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고지훈, 2008 〈정판사사건 재심청구를 위한 석명서〉《역사문제연구》20 역사문제연구소
- 권헌규, 2016 〈노동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미군정의 '노동개혁'과 '냉전적 변형'〉《사회와 역사》 112권 한국사회사학회
- 권헌익, 2015 〈냉전의 문화사와 한국〉《한국냉전학회 창립 국제학술대 회 '한국의 냉전연구'》 발표문
- 김 균, 2000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한국 언론학보》 44-3 한국언론학회
- 김균, 원용진, 2000 〈미군정기 대남한 공보정책-"미국을 심어라"〉 《미 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 김득중, 1994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成大史林》10 성균관 대학교 사학회
- 김무용, 1997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과 당면과제〉 《역사 연구》 제5호 역사학연구소
- 김민환, 1995 〈미군정의 언론정책〉《언론과 사회》 1995년 여름 제8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김보미, 2012 《미군정기 여론조사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서울대학 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복수, 1991 《미군정의 언론정책과 한국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봉국, 2018 〈해방 직후 민주주의 공론장의 안과 밖〉《감성연구》1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김영희, 2000,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 경향-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의정 서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한국언론학회

_____, 2005 〈미군정기 농촌주민의 미디어 접촉 양상〉 《한국언론학 보》 49권 1호, 한국언론학회 ____, 2005 〈미군정기 미디어 접촉의 성격과 영향〉 한국언론학회 광 복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김인식, 2008 〈「8월테제」의 '진보적 민주주의'국가 건설론〉《한국민 족운동사연구》5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김 정, 2000 〈해방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 《역사연구》 7호 역사학연구소 김정인, 2013 〈해방 전후 민주주의'들'의 변주〉 《개념과 소통》 12호, 한 림대 학교 한림과학원 김진경, 2016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단독정부 수립과정 보도 태도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학재, 2011 〈정부수립 전후 공보부·처의 활동과 냉전 통치성의 계 보〉《대동문화연구》7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 연구원 김한상, 2011 〈1945~48년 주한미군정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영화선전: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미국 사연구》 제34집 미국사학회 ____, 2013 〈주한미국공보원(USIS) 영화의 응시 메커니즘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와 가시화하는 힘의 과시-> 《역사문제연구》 30 역사문제연구소 박승관, 강현두, 조항제, 박용규, 1996 (해방 50년: 한국언론과 사회변동)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수현, 2009 〈미군정 공보기구 조직의 변천 (1945.8-1948.5)〉 서울대 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 2010 〈미군정 공보기구 조직의 변천(1945.8-1948.5)〉《한국사 론》5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1992 〈미군정기 중간파 언론- 설의식의 《새한민보》를 중심으 로〉《한국언론정보학보》2호 한국언론정보학회 _____, 2000 〈한국 초기 방송의 국영화 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언론

- 학보》 44-2 한국언론학회
- _______, 2005 〈미군정기 방송의 구조와 역할〉 한국언론학회 광복60주년 기념 학술회의
- ______, 2014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 (1945~1950)〉 《한국언론학보》 Vol.58(1) 한국언론학회
- 서중석, 2000 〈냉전체제와 한국 민족주의의 위상〉 《한국독립운동사연 구》 제1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성한표, 2012 〈9월총파업과 노동운동의 전환〉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 송재경, 2014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적 동향 (1945~19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안진이, 2006 《미군정의 문화정책과 시각문화, 1945~1948》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석사학위논문
- 양동숙, 2010 〈해방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화 활동 연구〉 《한 국민족운동사 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우수진, 2013, 〈미국연극의 번역공연과 아메리카의 상상〉 《한국극예술 연구》39, 한국극예술학회
- 유종원, 김송희, 2005 〈미군정기 지역언론 특성에 관한 연구-광주지역 신문을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제5권 2호, 한국지역언론학회
- 유혜경, 2008 〈미군정시기 노동운동과 노동법〉 《노동법학》 26호 한국 노동법학회
- 윤덕영, 1995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역사와 현실》16 한국역사연 구회
- 임유경, 2009 〈조소문화협회의 출판·번역 및 소련방문 사업 연구-해방기 북조선 문화·정치적 국가기획에 대한 문제제기적 검토〉《대동문 화연구》6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강수, 2003 〈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숙청 논의 연구〉 《역사학연구》

- 20호 호남사학회
- 이규성, 2005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요인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정치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동원, 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임나영, 2008 《1945-1948 우익청년단 테러의 전개 양상과 성격》서울대 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장세진, 2015 〈치안과 정치 사이에서-해방기 빈곤 대중의 존재론〉 《현대문학 의 연구》 56호 한국문화연구학회
- 장영민, 2001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16 한국근현대사학회

- ________, 2011 〈한국전쟁기 주한 미국공보원의 선전 활동-인쇄매체를 중심으로〉《한국근현대사연구》 57, 한국근현대사학회
- ______, 2014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방송'의 변화와 그 원인(1953~1973)〉《한국근현대사연구》68 한국근현대사학회
- ______, 2014 〈한국전쟁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방송' 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90, 부산경남사학회
- _______, 2018 〈미군정의 라디오 방송관리〉 《한국근현대사연구》87 한 국근현대사학회
- 정근식, 최경희, 2011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질문과 과제- 식민지 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 (1945~1952)〉 《대 동문화연구》제74집 대동문화연구원
- 정다운, 2005 《주한미군의 선전활동과 「농민주보」》 서강대학교 사학

과 석사학위논문 정용욱, 1994 〈미국 국립문서관 소재 '노동'관련 자료〉 《역사와 현실》 Vol.11 한국역사연구회 ___, 2003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론과 공작을 중심으로-〉《역사비평》 62, 역사문제연구소 ____, 2003 〈6·25전쟁기 미군의 삐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_____, 2015 〈1947년 웨드마이어 특사의 방한, 단정안 현실화의 획기〉 《역사비평》 2015년도 8월호 역사비평사 정진석, 1991 〈한일합방으로 민족언론 자취감춰 매일신보는 총독부기관 지로 전락-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의 사람들: 기획연재 - 인물로 본 한국언론 100년 (6)〉 《신문과 방송》 제252호, 서울언론진흥재단 _____, 1995〈해방언론 50년사-1.해방공간의 언론〉《신문과 방송》 1995년 1월호 한국언론재단 ____, 2010 〈해방공간의 언론인들(상)〉 《신문과 방송》 472호 한국 언론진흥재단 조민지, 2015 〈1947년 하반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현지조사와 지방 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조혜정, 1998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영화연구》 14 한국영화 학회 ____, 2011 〈미군정기 뉴스영화의 관점과 이념적 기반 연구〉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6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차재영, 1994 〈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 《언론과 사회》 5 사단 법인 언론과 사회 _____, 2018 〈선전으로서의 도서번역. 미군정기 미국 도서 번역활동의 전개와 의미〉 《한국언론학보》 62, 한국언론학회 ___, Media Control and Propaganda in Occupied Korea. 1945-1948: Toward an Origin of Cultural Imperialism, University of Illinois (Communication), 1994 채 백, 2016 〈친일 청산에 대한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의 보도 태도〉《한국언론정보학보》79, 한국언론정보학회

최요섭, 2005 《1947~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서울

- 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묵, 1996 〈미군정의 식량생산과 수급정책〉 《역사와 현실》22, 한 국역사 연구회
- 최 준, 1965 〈韓國新聞解放20年史(1)〉 《관훈저널》 9, 관훈클럽
- 최흥조, 1978 〈정치파동·국민방위군사건과 그 패기〉 《한국언론비화 50 편- 노기자들의 직필수기》 한국신문연구소
- 하용운, 1994 〈UN 한국임시위원단(UNTCOK)연구-5.10선거기의 역할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성사학》 Vol.7 한성사학회
- 한모니까, 2018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신해방지구' 『개성신 문』분석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35, 이화여자대학교 한 국문화연구원
- 황병주, 2018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동북아 역사논총》59호 동북아역사재단
- 허 은, 2004 《미국의 대한문화활동과 한국사회의 반응》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허 종, 2017 〈1946년 대구공동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대구사학》 Vol.126 대구사학회

[Abstract]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and Propaganda
Discourse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During
its Occupation of Korea: A Study of Weekly
Newspapers Published by DPI, USAMGIK and
OCI, USAFIK

Park Suhyu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zes weekly newspapers that were published by US military government(MG) during its occupation of Korea. Specifically, it examines how *The Chukan Digest* and *The Farmers' Weekly* put out by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 USAMGIK), as well as *The World News*, put out by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s 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 USAFIK), served as propaganda on US policy toward Korea and the question of establishing a state in Korea, and traces this propaganda discourse.

Previous research on US public information policies and campaigns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have focused on how the US's public information policy towards Korea changed to closely reflect US policy towards Korea, and revealed how the public information agencies and campaigns

on the ground in Korea during the time of US military occupation were affected by these changes. Because early in its occupation of Korea the US's public information policy toward Korea adhered to comprehensive guidelines, the activities of USAMGIK'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ere more directly linked to South Korea'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the public opinion of Koreans than to promoting US policy toward Korea. However, when the US decided to withdraw from collabor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to take Korean question into its own hands,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carried out propaganda regarding the US's policy toward Korea and the US itself.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that has shown that changes in the US's policy towards Korea swayed MG's public information policies, as well as public information agencies and their pursuits, this dissertation traces the messages that were published in official MG media, that is, the changes in propaganda discourse. By examining how the newspapers published by the occupation authority throughout the period of US occupation of Korea mediated Washington's policies and the reality in South Korea and propagandized US policy toward Korea,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how the US reshaped public opinion in Korean society, which in the wake of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desired to colonial vestiges and establish eradicate а new autonomous country, into a mentality of cold war logic. As a process of discerning how Koreans went from believing that

post-colonial reforms and establishing a unified Korean state to be the first step following independence to three years later believing that it was possible to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government under the US-Soviet Cold War order,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illustrates the process by which the 'Cold War' and 'cold war mentality' were formed.

This dissert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chapter reviews the nature of the public information agencies and the media they put out, while chapters two and three analyze the messages that appeared in these papers, as well as their propaganda discourse. Chapter one reveals how, following changes to US policy toward Korea, MG's public information agency was split into two separate agencies,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on May 30, 1947. Moreover, it covers how though from the start of US troops being stationed in Korea in September 1945, those who lead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for MG were career soldiers with no knowledge of the fields of public relations or propaganda, once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was established, propaganda specialists from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began to lead the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of MG, following the policy guidelines of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War.

Along with my analysis of the public information agencies and actors,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dissertation I look at three newspapers that were published by these agencies: *The Chukan Digest, The Farmers' Weekly*, and *The World News*. By analyzing the publication objectives, audience,

page layout, quantity published, distribution range, as well as subjects of articles in each of the three papers, I shed light on the MG's objectives for publishing these papers and explicate the nature of the media. According to my analysis, by keenly countering the tone of Korean newspapers and actively promoting a logic that challenged criticism of the MG, The Chukan Digest played the role of safeguarding urban readers—particular readers in Seoul—from the discourses that appeared in privately managed newspapers. The Farmers' Weekly, a newspaper published in Hangeul and distributed in rural areas, communicated MG's positions on pressing issues every last farmer, promoting awareness communities. Whereas the nature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s The Chukan Digest and The Farmers' Weekly was that of conveying US policy on Korea, MG's positions on pressing issues to the Korean people, and challenging the discourse critical of MG, the paper put out by the Office of The World News, propagandized Civil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communism, and the positive role of the US, thus encouraging Korean readers to interpret Korea's problems in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OCI.

Chapter two examines the propaganda messages and propaganda discourse in the weekly newspapers put out by the DPI, *The Chukan Digest* and *The Farmers' Weekly*. In doing so, it reveals that between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nd late 1946, MG exhibited a vast discrepancy with US State Department policy and focused primarily on promoting their occupational rule. The Moscow Conference held in

December 1945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and that a four-state (US, UK, China, USSR) trusteeship of up to five years would be necessary. Rather than immediately reporting this decision in Korea, MG, which had already been picking up on Koreans' desire for independence, was more concerned with what effect this news might have on the state of affairs in South Korea, as well as what effect it would have on its own position in Korea. Accordingly, reports from MG on US policy toward Korea focused on the problem which Koreans felt most sensitive about, that is, the problem of whether there should be a trusteeship present or not, rather than explaining the steps and procedures for setting up a united government of their own. Moreover, in June of 1946, directly following the breakdown of the 1st US-Soviet Joint Commission, the US established new policies towards Korea centered on social reform within South Korea, and though they instructed MG to enact and promote this, MG expressed their skepticism on this and instead bolstered their counterpropaganda against the political left. Unable to win the support of the Korean people on their occupation policy alone, MG responded by warding off criticism of the MG. In particular, though the Daegu October Incident of 1946 arose as a result of complex interplay between MG's stance that it was unable to follow US policy for social reform in South Korea, new tactics by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and the fury of the South Korean masses due to the MG's policy failures, MG linked all the press that criticized them as being connected to leftists, North Korea, or the Soviets, or formed a propaganda

discourse that considered those who criticized them as having been deceived by pernicious propaganda.

Chapter three analyzes the propaganda messages and propaganda discourse of *The World News*, a weekly paper published by the OCI. Because while The World News was in circulation The Chukan Digest was discontinued and The Farmers' Weekly had started to be published biweekly, I examine The Farmers' Weekly in addition to The World News. As the Korean question passed into the hands of the UN, The World New propagandized the Korean question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old War. But public opinion surveys from the time show that Koreans were most concerned about the division of Korea. Accordingly, when in February of 1948 the Little Assembly decided to hold an election for a constitutional assembly in only the southern half of Korea,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stressed that even if there were to a be an election held only in South Korea, that this was the first step toward a unified Korean government. That is, the OCI publicized the upcoming election as being part of the process to establish a democratic and unified government. However, when Korean the North-South Conference of April 1948 made the public looked forward to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unified government, the justification for the election changed into being for the sake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state so that the Soviet Union could not set up a puppet state government in Korea. In addition, those who supported the North-South Conference and opposed the election were designated as being traitors who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a Soviet Union satellite

state. That is, the democracy advocated for by the MG ahead of the May 10th election in 1948 in fact referred to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nti-communism.

Directly following liberation from Japan, democracy was used to signify a system oriented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post-colonial, autonomous, and independent Korean state, not a choice between Soviet style democracy or US style democracy. However, during MG occupation, the essence of democracy amounted to nothing more tha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nti-communism. Through an analysis of the media put out by MG during its occupation, this dissertation sheds light on the process by which the project of establishing a post-colonial and autonomous independent state directly following liberation from imperialism shifted into on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nti-communism, characterizes this as the 'cold war mentality' promoted by MG. In addition, it discusses how such cold war mentality became the foundation upon which democracy grafted with anti-communism would come to emerge in South Korean society.

Keyword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Office of Civil Information, *The Chukan Digest, The Farmers' Weekly, The World News*, propaganda, public information, Cold War, cold war awareness, democracy, anti-communism

School ID #: 2009-30801